

도시연구

Korean Journal of Urban Studies

2026

통권 제29호

기획논단 | 도시와 산업정책: 전환기 도시경제의 지속가능성 탐색

| 관광산업의 지역별 회복력 분석

김아진·윤태환

| 인천의 도시 상권 구조가 관광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고현종·장예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인천지역 점포의 진입과 퇴출

옥우석·박한진·김민우·박동훈

일반논문

| 공간 다이어트(Diet)를 위한 “도시비만지수(UOI)” 제안과 정책적 함의

권용석

| 베를린 도심부 ‘기억의 장소’의 재맥락화와 문화자본으로의 전환

정성윤·김수진

| 인천의 도시 정체성은 박물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정지은·손동혁

| 청년의 가구소득이 여가활동을 매개로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차이

김지민·오다은

| 리빙랩 기반 문화도시 활성화 전략 연구

강보라·배영현

| 노년기 건강 궤적의 생애주기적 영향요인 분석

도화정

| 지역 가치 제고를 위한 대학의 역할

이수연

|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행태 실증 분석

안다운·이경환

서평

| 유산을 넘어 콘텐츠로: 과거로부터의 선물과 도시의 미래

서봉만

도시연구

『도시연구』는 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도시정책연구 전문학술지로 2020년 11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본지의 발간 목적은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국내외 도시정책 연구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선정·수록함으로써 도시정책 연구의 학문적 체계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본지는 도시정책 연구의 중요 이슈를 진단하는 ‘기획논단’과 다양한 도시연구 성과를 수록한 ‘일반논단’, 최신 도시연구 논저에 대한 ‘서평’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도시정책 관련 연구자와 시민들이 손쉽게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수록논문을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도시연구

Korean Journal of Urban Studies

2026

통권 제29호

권두언

급격한 경제·사회적 전환은 도시의 구조와 기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기후 위기, 저출생과 고령화, 기술 발전과 소비 패턴 변화, 저성장 시대 등은 도시가 직면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전환기 사회의 산업정책은 산업의 집적과 혁신 생태계 형성,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경제의 성장 경로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도시공간은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산업과 도시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전환기 도시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오늘날 도시정책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도시연구』 통권 제29호의 기획주제는 「도시와 산업정책: 전환기 도시경제의 지속가능성 탐색」입니다. 이번 기획은 산업정책과 도시공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도시경제의 구조 변화와 회복력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실증 분석에 기초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상권 구조의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도시경제의 새로운 과제와 대응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획논문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관광산업의 지역별 회복력 차이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Bruneau 등의 4R 회복력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전국 17개 시·도의 회복력 특성을 비교한 결과, 지역별로 상이한 회복 경로가 나타났으며 동일 지역 내에서도 회복 역량이 단일한 방식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지역의 회복력을 단순한 경제 회복이 아닌 다차원적 역량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획논문은 인천광역시 15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상권 구조와 관광 인프라가 관광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 상권 규모의 집적 효과가 관광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의 관광 수요가 서로 다른 공간적 특성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정책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상권 구조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획논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인천지역 점포의 진입과 퇴출, 그리고 회복 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분석 결과 신도시 지역은 경제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과 신규 진입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원도심은 충격 흡수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도시 내부에서도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적 회복 양상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지역경제 정책이 보다 세밀한 공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호에는 도시와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를 다룬 8편의 일반논문이 수록되었습니다. 도시축소 시대의 공간 관리 전략을 모색한 도시비만지수 연구를 비롯하여, 베를린의 기억공간과 문화자본, 한국이민사박물관을 통한 도시 정체성 형성,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과 여가활동,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 전략, 건강 불평등의 생애주기적 요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대학의 역할, 그리고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행태와 보행환경 문제 등 다양한 연구들이 수록되었습니다. 이들 연구는 도시를 경제적 공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문화·복지·교육·교통 등 다양한 차원에서 조망하며, 도시가 직면한 복합적인 과제에 대한 학술적 통찰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호에는 이창근의 『K-헤리티지, 매력 도시 디자인』(2026)에 대한 서평 「유산을 넘어 콘텐츠로: 과거로부터의 선물과 도시의 미래」가 수록되었습니다. 해당 서평은 문화유산을 콘텐츠와 관광, 도시브랜딩을 연결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재해석한 저서의 문제의식을 검토하고, 문화유산과 도시의 미래를 둘러싼 정책적·산업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통권 제29호는 『도시연구』가 온라인 발행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호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연구』는 연구성과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학술출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ESG 경영방침에 따라 종이책 발간을 종료하고 온라인 중심의 발행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연구원 홈페이지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DBpia 등을 통해 보다 폭넓게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시연구』는 창간 이래 도시와 지역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진단하고, 학술적 논의와 정책적 실천을 연결하는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현상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도시정책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정책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통권 제29호가 전환기 도시경제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도시연구』 편집위원장 이 왕 기

목 차

I 기획논단 도시와 산업정책: 전환기 도시경제의 지속가능성 탐색

- 관광산업의 지역별 회복력 분석: 4R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김아진·윤태환 13
- 인천의 도시 상권 구조가 관광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고현종·장예원 37
 - 읍면동 단위 내·외국인 관광객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인천지역 점포의 진입과 퇴출 옥우석·박한진·김민우·박동훈 67

I 일반논문

- 공간 다이어트(Diet)를 위한 “도시비만지수(UOI)” 제안과 정책적 함의 권용석 97
- 베를린 도심부 ‘기억의 장소’의 재맥락화와 문화자본으로의 전환 정성윤·김수진 119
- 인천의 도시 정체성은 박물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정지은·손동혁 147
 - 한국이민사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 청년의 가구소득이 여가활동을 매개로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차이 김지민·오다은 173
- 리빙랩 기반 문화도시 활성화 전략 연구: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강보라·배영현 199
- 노년기 건강 궤적의 생애주기적 영향요인 분석: 도화정 227
 - 아동기와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중심으로
- 지역 가치 제고를 위한 대학의 역할: 지역별 RISE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이수연 253
-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행태 실증 분석: 서울시 홍대입구역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안다운·이경환 273

I 서평

- 유산을 넘어 콘텐츠로: 과거로부터의 선물과 도시의 미래 서봉만 296
 - 『K-헤리티지, 매력 도시 디자인』, 이창근, 2026, 미다스북스

I 『도시연구』 휘보

- 『도시연구』 발간연혁 303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활동 307
- 『도시연구』 학술행사 보고 308

I 『도시연구』 규정

-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311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318
- 『도시연구』 논문심사 규정 320
- 『도시연구』 연구윤리 규정 325

I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333

기획논단

| 관광산업의 지역별 회복력 분석:

4R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김아진·윤태환

| 인천의 도시 상권 구조가 관광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읍면동 단위 내·외국인 관광객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고현종·장예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인천지역 점포의 진입과 퇴출

옥우석·박한진·김민우·박동훈

관광산업의 지역별 회복력 분석: 4R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김아진 동의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박사수료, 부산연구원 문화·복지연구실 연구원

윤태환 동의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 교신저자(E-mail: thyoon@deu.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나타난 국내 관광산업의 지역별 회복력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Bruneau et al.(2003)의 회복력 측정 지표 4R, 신속성, 강건성, 자원동원성, 대체성 지표를 중심으로 국내 17개 시도의 지역별 지수를 산출하고 Z-score로 전환하여 하현상·이석환(2016)의 연구의 회복력 경로 중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회복력 경로에서 Path 1은 신속성과 대체성 지수가 Path 3는 자원동원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지역별 경로 분류에서 동일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수별로 상이한 경로에 속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회복역량이 단일 전략으로 설명되기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회복력 경로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정책적 요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하며, 향후 사례연구와 회귀분석을 통한 후속 연구 보완이 필요하다.

주제어: 코로나19, 관광산업, 지역별 회복력, 4R 프레임워크, 회복경로

An Analysis of Regional Resilience in the Tourism Industry: Applying the 4R Framework

Kim, Ah-jin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Hotel & Convention Management, Dongeui University

Researcher, Department of Cultural Welfare Research, Busan Development Institute

Yoon, Tae-Hwan

Professor, Department of Hotel & Convention Management, Dongeu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regional disparities in the resilience of the Korean tourism industr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y applying the 4R resilience framework (Rapidity, Robustness, Resourcefulness, and Redundancy) proposed by Bruneau et al. (2003), we calculated the resilience indices for provinces across Korea. These indices were converted into Z-scores to categorize the regional recovery patterns into three distinct resilience trajectories based on the framework of Ha and Lee (2016).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resilience paths, Path 1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Rapidity and Redundancy, while Path 2 and Path 3 were characterized by Resourcefulness and Robustness, respectively. Second, the analysis revealed that even within the same region, different indices often followed divergent paths, suggesting that resilience capacity cannot be addressed through a single uniform strategy. Despite these insights,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in identifying specific policy factors that influence resilience trajectories. Future research should complement these findings through case studies and regression analyses to elucidate the critical determinants of regional resilience disparities.

Keywords : COVID-19, Tourism Industry, Regional Resilience, 4R Framework, Recovery Path

I. 서론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 중에서도 특히 관광 분야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Mariolis et al. 2021).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례 없는 관광 위기로 이 기간 동안 관광객 유입이 거의 중단되었으며, 관광사업체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백신 개발과 함께 코로나19가 관리 가능한 감염병으로 인식되면서 국제 이동 제한 조치가 폐지되었고, 항공·크루즈 등 국제 관광 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관광산업이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관광객 수와 관광사업체 매출액 등 통계수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인 2020년에는 관광객 수치가 급락하였으며, 코로나19가 회복 국면에 진입한 후인 2024년부터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치로 거의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2025)에 따르면 국내 입국 외래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약 1,637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약 1,750만 명의 93.5%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 2025년에는 1,870만 명을 돌파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국민 해외관광객 또한 2024년에는 약 2,872만 명으로 2019년 약 2,871만 명의 99.4% 수준이었으며 2025년에는 약 2,958만 명으로 높은 회복세를 보였다. 관광산업 매출액 역시 2024년에는 27조 6,011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액 26조 8,138억 원을 상회하여 회복하였다. 특히 관광숙박업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관광산업의 회복을 이끌었으며, 이어서 여행업, 국제회의업 순이었다. 지역별 매출액 비중은 서울이 39.2%로 가장 많았고, 강원 13.2%, 경기 9.5%, 제주 8.9%, 부산 7.2% 순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5).

국내 관광산업은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약 5여 년의 시간동안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거쳤다.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충격을 완화하며 본 성장궤도로 복귀하는 일련의 과정을 회복력(resilience)이라고 한다. 회복력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물리학, 공학, 경제학, 도시계획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관광 분야에서도 다수 이루어져 왔다. 관광 분야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관광산업의 회복력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김재영 외(2021)가 코로나19 이후 국내 관광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측정 지표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하였고, 김도훈 외(2022)는 ARIMA 모형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외래관광객 수요예측을 세 가지 회복 시나리오로 제시하였다. 권장욱(2025)은 코로나19 이후 여행업의 회복력을 4가지 지수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전체 관광수요와 산업 측면에서 회복력을 분석하였으며, 지리적인 측면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하는 양상이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위기 상황에 따른 회복력은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회복력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임석희·송주연(2022)은 회복력이 지역에 내재된 주체들의 역량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지역의 회복 속도 차이는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역의 경기 위축과 회복을 반영하기 때문에 큰 함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Martin et al.(2016)은 부정적 상황으로 인한 지역의 회복력 차이가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회복력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지역별 불균등한 발전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떠한 경제 위기 못지않으므로 그 충격이 도시와 지역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도시 및 지역경제의 대응 차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의 중장기적 성장경로와 국토 공간의 불균등한 지역발전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임석희·송주연 2022).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회복력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시점부터 최근까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에서의 지역별 회복력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Bruneau et al.(2003)이 제안한 회복력 측정 지표 4R 프레임워크인 신속성(Rapidity), 강건성(Robustness), 자원동원성(Resourcefulness), 대체성(Redundancy)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적 회복력의 차이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 시점인 2019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통계데이터인 2024년까지의 지역별 지수를 산출하여 회복력 경로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 회복력 추세를 분석하고 지역별 차이와 지역 관광산업의 내재된 역량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관광산업에서의 회복력(resilience)의 개념과 선행 연구

회복력(resilience)은 라틴어로 ‘resiliere’ 또는 ‘resilio’로 ‘되살아나다’, ‘원래대로 되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영어 발음 그대로 ‘레질리언스’, ‘리질리언스’로 부르기도 하며, ‘회복력’, ‘회복가능성’, ‘회복탄력성’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하현상 외 2014), 본 연구에서는 ‘회복력’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회복력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Holling(1973)으로 “생태학적 시각에서 자연적 및 인위적 재난이나 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했을 때, 해당 충격을 흡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회복력을 정의하였다.

하현상 외(2014)는 회복력을 “사회환경시스템의 하부체계들이 충격을 흡수하고 재조직화를 통하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회복력은 공학, 생태학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시계획학, 심리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폭 넓은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재난, 전염병 등으로 삶의 현상이 위협받는 상황에 더욱 잘 적용될 수 있다(Cutter et al. 2008; Burton 2012).

관광산업에서 회복력은 관광지, 관광조직, 지역사회가 충격과 위기를 견뎌내고 적응하며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코로나19가 사회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학계와 실무에서 회복력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진행된 관광 분야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Sharma et al.(2021)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관광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회복력 기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그는 포괄적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대응, 기술 혁신, 지역적 소속감, 소비자 및 직원의 신뢰 4가지 요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Gera and Kumar(2023)는 코로나19 동안 관광객의 심리적 반응, 기업 및 정부의 협력, 커뮤니케이션 및 혁신이 팬데믹 이후 관광지의 생존, 회복 및 회복력에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국내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복탄력성 연구(이윤주·이애주 2016; 김정남 2017; 박민희 2019; 조원섭·박슬기 2020)가 주를 이루었으며, 관광산업 전체의 거시적인 회복력을 다룬 연구는 일부 이루어졌다. 김도훈 외(2022)가 계량 경제학 모델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회복 이후 방한 외래관광객 유입 추이를 ARIMA 분석을 활용하여 회복탄력성을 수치화하였는데 과거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 개입 모형을 설정하고 각 위기의 개입 효과에 따른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MERS, SARS 순으로 방한 외래관광객에 대한 충격이 크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김재영 외(2021)는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력을 구성하는 차원으로 4R을 제시하고 산업, 사회, 경제적 관점으로 AHP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으며, 권장욱(2025)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여행업의 회복력을 4R 지표별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2. 회복력의 측정 지표 4R

지역사회의 회복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속성(attribute)으로 이는 회복력의 질적인 측면(quality)을 결정한다(Norriss et al. 2008; 하현상 외 2014). 회복력의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프레임워크는 Bruneau et al.(2003)이 제시한 4R로 신속성(Rapidity), 강건성(Robustness), 자원동원성(Resourcefulness), 대체성(Redundancy)을 의미한다. 4R은 2000년부터 지진에 대한 지역사회 회복력을 측정하기 위해 MCEER(Multidisciplinary Center for Earthquake Engineering Research)과 연구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념화되기 시작하여 Bruneau et al.(2003)과 Tierney and Bruneau(2007)에

의해 개념이 정립되었으며, 4R 회복력을 단순히 충격 후의 복구로 보지 않고 시스템이 충격을 흡수하고 신속하게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다차원적 역량으로 정의했다.

국내에서도 4R을 활용하여 회복력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는데, 김동현 외(2020)는 국가 기반시설 계획단계에서 회복력을 4R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주민지(2023)는 지역사회 재난 리질리언스 구성요소와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4R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관광 분야에서 4R의 활용하여 회복력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재영 외(2021)가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력을 구성하는 차원으로 강건성, 대체성, 자원동원성, 신속성을 제시하고 산업, 사회, 경제적 관점으로 각각 측정문항을 구성하여 AHP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외적 충격에도 손상 없이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인 강건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며, 이어서 기술적·인적·재무적 정보·자원을 조직화하여 활용하는 능력인 자원동원성으로 나타났다. 권장욱(2025)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여행업의 회복력을 분석하기 위해 Tierney and Bruneau(2007)가 제시한 네 가지 하위 요인인 신속성, 강건성, 자원동원성, 대체성 4가지 지수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조사」에서 제공하는 여행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각 지수별로 나타난 회복력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4R의 개념에 대해 ‘신속성(rapidity)’은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능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는 역량으로 특히 급진적 재난 상황에서 많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였다(하현상 외 2014). Bruneau et al.(2003)은 “손실과 향후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우선순위를 충족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신속성으로 정의하였다. Norris et al.(2008)은 신속성을 “자원이 얼마나 빠르게 확보 가능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역량”으로 보았다. 신속성은 재난 발생 후 대비 단계부터 재난 발생 이후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구를 실시하는 등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강건성은 대부분 “시스템 및 시스템의 하위 요소와 다른 분석단위가 재난의 힘에 의해 중대한 기능 저하나 상실 없이 견디는 능력”으로 정의한다(Bruneau et al. 2003; 하수정 외 2014; 하현상 외 2014; 하현상·이석환 2016; 주민지 2023). Howell(2013)은 강건성이 충격과 위기를 흡수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신뢰성의 개념을 내포한다고 보았다. 강건성이 높다는 것은 충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건성이 높다면 위기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충격으로 지역사회 시스템이 최저 수준에 이르는 시간이나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높은 강건성은 피해 규모를 줄여주기 때문에 복구 단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어 빠른 복구가 진행되도록 한다. 재발을 방지하고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복구 단계에서도 강건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하현상 2013).

자원동원성은 문제를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자원, 재원, 정보 등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동원하여 해결해 나가는 역량으로 정의되어 왔다(Bruneau et al. 2003; Norris et al. 2008; Ho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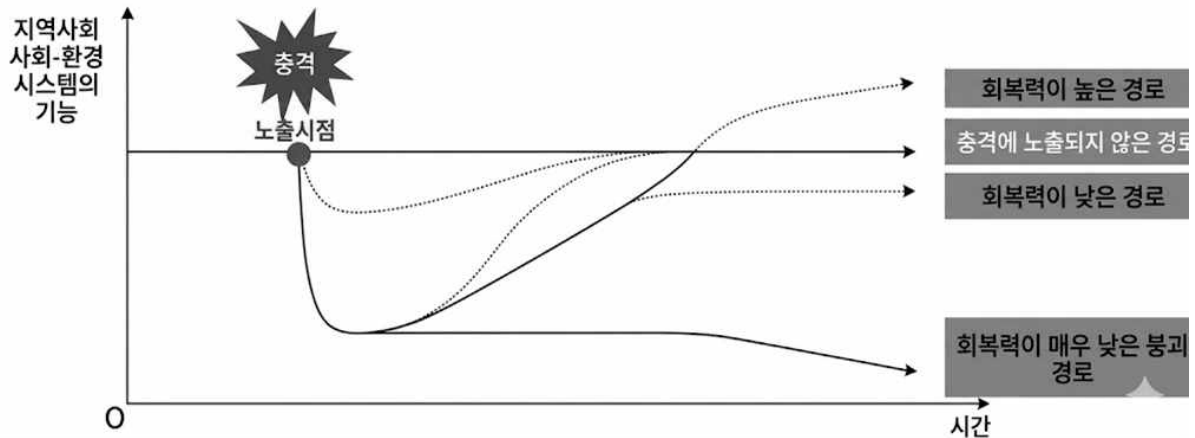
2011; Howell 2013; 하현상 외 2014; 하현상·이석환 2016). 자원동원성은 각종 자원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배치하여 원활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하현상·이석환 2016) 신속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개념이다. 자원동원성은 재난의 위험이 존재하거나 충격이 발생했을 때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재난 시스템의 다양화와 여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초점을 맞추는 대비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며, 특히, 대응 단계와 복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체성은 ‘시스템이 중대한 기능 저하나 상실 발생했을 경우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역량’으로, 잉여와 다양성이라는 속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Bruneau et al. 2003; Norris et al. 2008; 전대욱 2015). 대체성은 핵심 인프라와 제도의 다양화 또는 중첩을 통하여 재난 발생에 대비한 여분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예방과 대비의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예방 단계에서의 대체성은 대비나 복구 단계에서의 내구성과 자원동원성을 제고시키는 핵심적 역량이 되는 한편, 대응 단계의 신속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등 4R의 다른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대체성은 지역사회 재난 시스템의 다양화와 여력 확보로 기능 파괴를 최소화하여 복구 활동을 더욱 용이하게 만든다(하현상 2013).

Bruneau et al.(2003)은 4R 중 신속성과 강건성은 회복력 향상 조치를 통해 달성되어야 할 최종목적으로 자원동원성 및 대체성은 회복력이 향상될 수 있는 수단과 조치들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하현상·이석환(2016)은 지역사회가 이들 네 가지 구성요소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의 회복력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지역사회 시스템이 높은 회복력을 갖추고 있다면 충격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고, 충격에 노출되더라도 강건성이 높다면 시스템이 많이 저하되지 않을 것이며, 강건성이 약하여 시스템이 저하되더라도 신속성, 자원동원성, 대체성이 높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시스템이 4R을 잘 갖추고 있어서 회복력이 높다면 위기에 대한 대응과 복구가 빠를 뿐만 아니라 향후 혁신을 통하여 더 발전된 사회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하현상·이석환(2016)이 지역사회 회복력의 구성요소인 4R의 효과로 ‘회복력이 높은 경로’, ‘회복력이 낮은 경로’,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 경로’ 3가지로 나타낼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1] 지역사회 회복력 구성요소(4R)의 효과



출처: 하현상·이석환(2016, 108)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Ⅲ.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설계

회복력의 경우 정성적, 정량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김영근(2018)은 정량적 연구의 경우 취약지역과 취약 원인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회복탄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회복력에 대한 정량적 연구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한다. 첫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조사」의 2015~2024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10개년 간 관광사업체 매출액 추이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위기 시점에 실제로 매출액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분석한다. 두 번째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회복력의 4R 지표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여행업의 회복력을 분석한 권장욱(2025)의 연구에서 제시한 지수 산출식을 활용하여 지역별 회복력 지수를 도출한다. 세 번째로 하현상·이석환(2016)이 제시한 회복력의 경로 3가지 중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도출된 지역별 회복력 지수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한다.

2. 분석자료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조사」는 2006년부터 조사·발간되었으며, 관광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학계 및 연구소의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관광진흥법」상 등록·허가·신고·지정된 관광사업체 및 관광산업 특수분류의 핵심관광산업으로 분류된 사업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조사」 2015~2024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중분류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의 업종별 분석이 아닌 대분류의 관광사업체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지역 단위 관광 생태계 전반의 거시적 회복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표 1] 관광사업체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광 사업체	여행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전문 및 종합휴양업,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유희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희업,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게도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출처 : 국가통계포털(www.kosis.co.kr)

3.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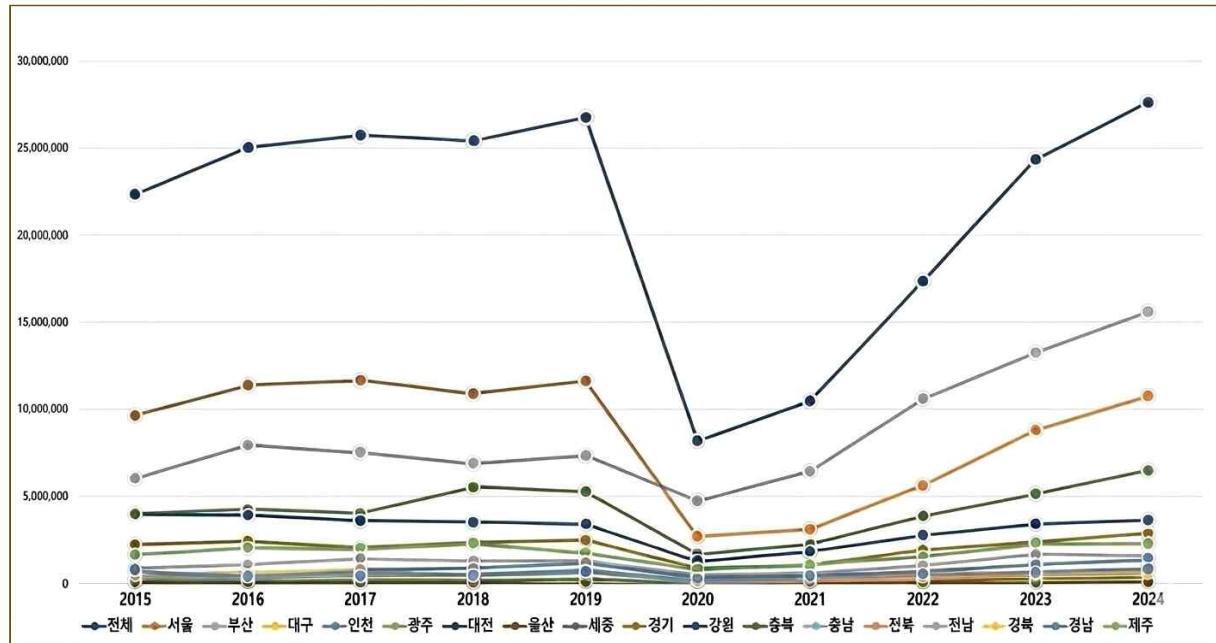
1) 분석의 시기 설정

관광사업체 매출액은 해당 업체가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 판매를 통해 얻는 총수입을 의미하며, 이는 관광산업의 경제적 성과와 중요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다. 관광사업체 매출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관광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사업체의 매출액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5~2024년 10년 간의 관광사업체 매출액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2]와 같이 관광사업체의 매출액은 2015년부터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2월에 국내 대규모 유행이 시작된 이후 매출액이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하여 2023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치를 근접하게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2024년에는 2019년 수치를 상회하여 회복하였다. 전체적으로 하현상·이석환

(2016)이 제시한 회복력 경로 중에 충격을 받기 전 시점보다 다소 높게 회복하여 회복력이 높은 경로에 해당하였으며, 지역별로 회복력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관광사업체 연간 매출액 추이(2015~2024년)



2) 분석방법

(1) 지역별 관광회복력 4R 지수 산출

최근 10개년의 자료를 통해 관광사업체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급격하게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하락 이후 다시 회복하는 추세를 분석하고자 하므로 4R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지수별 분석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부터 최근 데이터인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지표는 [표 2]와 같이 권장욱(2025)의 연구에서 제시한 관광산업 여행업의 4R 산출계산식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권장욱(2025)의 측정 지표는 본 연구와 같은 시기인 코로나19 전후 시기인 2019~2023년 동안 같은 「관광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확장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활용하였다. 권장욱(2025)의 연구는 관광업종 중 여행업의 회복력을 4R 지수별로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것이 차이점이다.

[표 2] 지역별 관광사업체 회복력 지수 세부 측정 지표 구성

항목	측정 지표	측정 방법
신속성 (rapidity)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사업체 수의 증가율 매출액의 증가율 종사자 수의 증가율
강건성 (robustness)	상대적 사업체 수 상대적 매출액 상대적 인력 수준	지역 사업체 수 / 전국 사업체 수 지역 매출액 / 전국 매출액 지역 종사자 수 / 전국 종사자 수
자원동원성 (resourcefulness)	재무자원 인적자원	평균 시설투자비(1개소당) (인력 채용 - 퇴직) / 총 종사자 수
대체성 (redundancy)	기술적 대응 고객 수요	온라인 거래실시 사업체 수 연간 이용객 수

주 : 권장욱(2025)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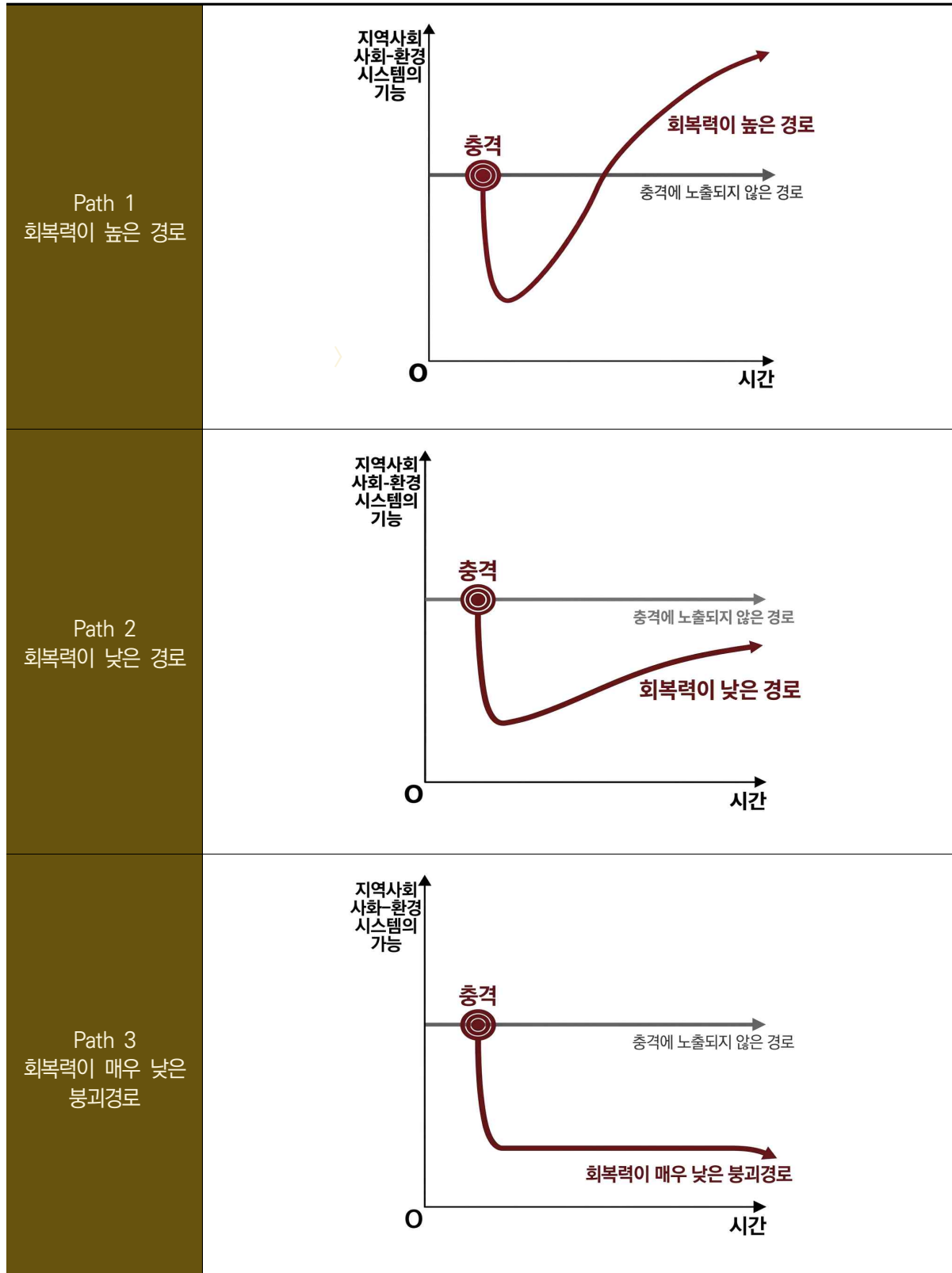
신속성은 빠른 시간 안에 손실을 회복하는 역량으로 측정 지표는 회복 여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로 구성하였다. 강건성은 외부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능력으로 전국과 대비하여 지역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상대적 사업체 수, 상대적 매출액, 상대적 인력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자원동원성을 측정하기 위한 재무자원은 평균 시설투자비를 가지고 측정하였고, 인적자원은 채용 인력과 퇴직 인력, 총 종사자 수를 가지고 인력의 충원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대체성은 기술적 대응과 고객 수요로 구성하였으며, 기술적 대응은 온라인 거래실시 사업체 수로 고객 수요는 연간 이용객 수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세부 측정 지표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Z-score로 표준화한 후, 항목 내 지표들의 산술평균을 산출하여 항목별 지수를 도출하였다. Z-score는 각 지표의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였으며 동일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Z = \frac{X - \mu}{\sigma} \quad X : \text{관측값} \quad \mu : \text{평균값} \quad \sigma : \text{표준편차}$$

Z-score의 값이 양수(+)이면 해당 데이터값이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수(-)이면 해당 데이터값이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0에 가까울수록 해당 데이터값이 평균과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절대 값이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절대 값이 2 이상이거나 3 이하이면 해당 데이터는 이상치로 간주될 수 있다.

[표 3] 관광회복력 경로 설정



(2) 지역별 관광회복력의 경로 설정

지역별 관광회복력의 4R 지수를 가지고 지역별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하기위해 회복력의 경로를 선행 연구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하현상·이석환(2016)의 지역사회 회복력의 구성요소인 4R에 따라 ‘회복력이 높은 경로’, ‘회복력이 낮은 경로’,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 경로’로 설정하였다. 원점으로 회복하는 경우는 공학적 회복력의 개념과 일치하는 상황으로 사회경제시스템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이므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하현상·이석환(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회복력이 매우 높은 경로인 Path 1, 회복력이 낮은 경로인 Path 2,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경로인 Path 3으로 분류하였다. 회복력 지수가 등락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로 분류는 2019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가장 최근인 2024년 수치와 비교하였다. 2019년 대비 2024년 수치가 상회하는 경우는 회복력이 높은 경로 Path 1으로 설정하며, 2019년 수치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충격 이후 반등하여 점차 회복하여 2024년 수치가 2019년의 절반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는 회복력이 낮은 경로 Path 2로 설정하였다. 2024년 수치가 2019년의 절반 이하인 경우는 회복하지 못하고 더욱 하락하며 침체되는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경로 Path 3으로 설정하였다.

지역별로 2019~2024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4R 지수 값을 산출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치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인 2024년 수치를 비교하여 Path 1, 2, 3 중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으며, 종합하여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지역별 관광회복력 4R 지수 분석

1) 신속성 지수

신속성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손실을 복구하는 역량으로 하현상(2014)은 급진적 재난상황에서 특히 많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였다. 신속성 지수는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지역별 신속성 지수는 2019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이 양(+)의 값을 보였으나,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2년 기간에는 모든 지역이 음(-)의 값으로 전환되며 큰 하락을 보였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인 2023년에는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다시 양(+)의 값으로 반등하며

신속성이 크게 개선되는 V자형 회복 형태를 보였다. 2024년에는 대다수 지역이 2019년의 지수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여 신속성 지수에서는 회복력이 매우 높은 양상을 보였다.

회복력 경로별로 지역을 분류한 결과, 충격 이전보다 더 높은 상승을 기록한 회복력이 높은 경로인 Path 1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총 13개 지역이 해당되었다. 이 중에서도 세종, 인천, 광주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 회복력이 높게 나타났다. 회복력이 낮은 경로인 Path 2에 해당하는 지역은 울산, 충남,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의 경우 2019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코로나19 이후 2020~2021년에 급격하게 하락한 후 점진적으로 회복하였으나 2024년에 2019년의 절반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그쳤다. 충격으로 낮아진 다음 다시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 경로인 Path 3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전으로 나타났다.

[표 4] 지역별 신속성 지수 분석

지역	연도						경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	0.946	-0.959	-0.770	-0.344	0.179	0.948	Path 1
부산	0.257	-0.833	-0.755	-0.642	0.927	1.045	Path 1
대구	0.559	-0.257	-0.967	-0.412	0.242	0.835	Path 1
인천	0.306	-0.207	-0.500	-1.041	0.245	1.197	Path 1
광주	0.900	-0.953	-1.047	-0.275	0.264	1.111	Path 1
대전	1.037	-0.416	-0.958	-0.446	0.460	0.323	Path 3
울산	1.218	-0.479	-0.657	-0.579	-0.080	0.578	Path 2
세종	-0.209	-0.857	-0.775	-0.478	0.743	1.576	Path 1
경기	0.475	-0.613	-1.007	-0.272	0.322	1.094	Path 1
강원	0.110	-1.380	-0.413	-0.133	0.926	0.891	Path 1
충북	0.149	-1.407	-0.246	0.450	0.350	0.704	Path 1
충남	0.711	-1.115	-0.638	-0.163	0.648	0.556	Path 2
전북	0.561	-1.096	-0.421	-0.269	0.438	0.787	Path 1
전남	0.458	-1.032	-0.431	-0.406	0.568	0.844	Path 1
경북	0.135	-1.336	-0.699	0.382	0.528	0.990	Path 1
경남	0.451	-1.022	-0.468	-0.419	0.388	1.071	Path 1
제주	0.871	-1.069	-0.787	-0.495	0.718	0.762	Path 2

2) 강건성 지수

강건성 지수는 외부 충격에 얼마나 잘 버티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상대적 사업체 수, 상대적 매출액, 상대적 인력 수준을 가지고 산출하였다. 신속성 지수가 뚜렷한 V자형 반등을 보인 것과 달리 강건성 지수는 지역별로 회복의 시점과 방향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2024년에 일부 지역은 충격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대다수의 지역은 여전히 침체가 심화되는 회복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시기별로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며, 특정 시기에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이 반복되는 특성을 보였다.

회복력 경로별로 지역을 분류한 결과, Path 1에는 부산,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등 8개 지역이 해당되며,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은 수치를 회복하는 등 회복력이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세종은 2019~2021년까지 음(-)의 값이 나타났으나 2023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24년에는 1.41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인천은 2022년에 -1.242로 가장 낮은 강건성 지수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 0.528로 높은 회복력을 보였다. Path 2에 해당하는 지역은 광주 1개 지역으로 충격 이전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며 2019년 수치에 근접하게 회복하였다. 한편, Path 3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8개 지역으로 충격 이전 수치보다 하락하여 붕괴경로를 나타냈다. 서울은 2019년에 양(+)의 값을 보였으나, 2020년부터는 음(-)의 값을 유지하다가, 2024년에 다소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대구, 대전, 울산은 2019~2020년 양(+)의 값을 유지하다가 2021년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났다.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의 경우 양(+)의 값과 음(-)의 값이 반복되며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났다.

[표 5] 지역별 강건성 지수 분석

지역	연도						경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	1.583	-0.439	-0.675	-0.248	-0.533	0.312	Path 3
부산	-0.976	0.322	0.036	-0.762	0.824	0.556	Path 1
대구	0.858	0.373	-0.348	0.151	-0.615	-0.420	Path 3
인천	-0.424	1.025	0.278	-1.242	-0.164	0.528	Path 1
광주	0.956	-0.507	-1.114	-0.017	-0.055	0.736	Path 2
대전	0.832	0.932	-0.402	-0.530	0.086	-0.918	Path 3
울산	1.060	0.937	-0.053	-0.252	-0.684	-1.007	Path 3
세종	-0.656	-0.656	-0.656	-0.047	0.599	1.415	Path 1
경기	-1.427	0.628	-0.320	0.260	0.243	0.292	Path 1
강원	-1.445	-0.309	0.822	0.598	0.446	-0.112	Path 1
충북	-0.605	-0.682	1.023	0.914	-0.288	-0.363	Path 1
충남	-0.091	-0.844	0.143	0.278	0.768	-0.254	Path 3
전북	0.127	-0.207	0.209	-0.175	0.314	-0.267	Path 3
전남	-0.203	0.036	1.039	-0.625	0.216	-0.464	Path 3
경북	-1.543	-0.056	0.320	1.203	0.102	-0.026	Path 1
경남	-0.886	-0.262	1.050	-0.133	-0.042	0.274	Path 1
제주	-0.013	0.597	-0.011	-0.094	0.284	-0.764	Path 3

3) 자원동원성 지수

자원동원성은 위기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찾는 역량으로 평균 시설투자비와 인력 채용 및 퇴직 수, 총 종사자 수를 가지고 산출하였다. 자원동원성 지수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침체 양상을 보였다. 2019년에는 모든 지역이 높은 양(+)의

값을 기록하며 자원동원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2020년부터 모든 지역이 음(-)의 값으로 전환된 후, 2023년까지도 일부 지역이 음(-)의 값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복력 경로별로 지역을 분류한 결과, Path 1에 해당하는 지역은 부산, 대전 2개 지역으로 초기 하락 이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부산은 2020년에 음(-)의 값을 기록한 이후 2023년에 양(+)의 값으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에는 2019년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며 뚜렷한 반등을 나타냈다. 대전 역시 2023년까지 음(-)의 값을 유지하다가 2024년에는 1.066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매우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Path 2에 해당하는 지역은 경기 1개 지역으로 2020년 급락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3년에는 양(+)의 값을 회복하였으며, 2024년에는 2019년 수치에 근접하게 회복하였으나 2019년 수치까지는 회복하지 못하였다. 한편 Path 3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등락이 반복되며 불안정한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2024년 수치가 2019년 수치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6] 지역별 자원동원성 지수 분석

지역	연도						경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	1.215	-1.556	-0.079	-0.085	0.159	0.346	Path 3
부산	0.297	-1.168	-0.606	-0.059	0.711	0.824	Path 1
대구	1.050	-1.305	-0.208	-0.355	0.459	0.358	Path 3
인천	1.182	-1.394	-0.444	0.092	0.094	0.469	Path 3
광주	0.565	-1.190	1.053	-0.388	0.085	-0.124	Path 3
대전	0.688	-1.084	-0.162	-0.162	-0.345	1.066	Path 1
울산	1.691	-0.967	-0.171	-0.202	0.000	-0.351	Path 3
세종	1.110	-1.124	0.124	0.237	-0.331	-0.017	Path 3
경기	0.793	-1.512	-0.032	-0.704	0.689	0.766	Path 2
강원	1.510	-1.071	-0.096	-0.663	0.200	0.120	Path 3
충북	1.165	-0.661	0.133	-0.648	0.094	-0.083	Path 3
충남	0.987	-1.316	-0.323	0.568	0.166	-0.083	Path 3
전북	0.908	-0.577	0.255	-0.369	-0.258	0.041	Path 3
전남	1.417	-1.154	-0.187	-0.174	-0.013	0.111	Path 3
경북	1.012	-0.924	-0.551	0.464	-0.048	0.047	Path 3
경남	1.199	-1.341	-0.400	-0.275	0.461	0.357	Path 3
제주	1.168	-1.502	-0.326	-0.348	0.549	0.459	Path 3

4) 대체성 지수

대체성은 위기로 인한 기능 저하나 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역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사업체 수와 연간 이용객 수를 가지고 산출하였다. 대체성 지수는 신속성

지수와 유사한 V자형 반등을 보였으며, 2024년 기준 대다수 지역이 2019년 지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여 회복력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회복력 경로별로 지역을 분류한 결과, Path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2개 지역으로 급격한 하락 이후 빠르게 반등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2020~2021년에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2년부터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에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 Path 2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전, 세종, 제주 3개 지역으로 충격 이후 하락하다가 다소 반등하여 2024년 수치가 2019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회복하였다. Path 3에 해당하는 지역은 광주, 울산 2개 지역으로 2019년에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충격 이후 급격히 하락한 후 점차 회복세를 보였으며, 2024년에는 2019년 대비 매우 낮은 수치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회복 수준을 보였다.

[표 기] 지역별 대체성 지수 분석

지역	연도						경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	0.603	-0.732	-0.892	-0.485	0.149	1.356	Path 1
부산	-0.060	-1.216	-0.979	0.231	0.758	1.267	Path 1
대구	0.680	-0.919	-1.421	0.018	0.555	1.086	Path 1
인천	0.555	-1.069	-0.870	-0.434	0.514	1.304	Path 1
광주	1.387	-1.318	-0.356	-0.629	0.450	0.466	Path 3
대전	0.711	-0.948	-1.082	0.484	0.128	0.707	Path 2
울산	1.231	-1.064	-1.019	0.037	0.502	0.313	Path 3
세종	1.210	-1.110	-0.713	-0.369	0.203	0.778	Path 2
경기	-0.099	-1.200	-0.752	-0.130	0.959	1.222	Path 1
강원	0.044	-1.200	-0.554	-0.026	0.966	0.770	Path 1
충북	0.013	-1.539	-0.384	0.154	1.073	0.683	Path 1
충남	0.245	-1.304	-0.860	-0.023	0.894	1.049	Path 1
전북	0.042	-1.041	-0.917	0.207	0.608	1.101	Path 1
전남	0.130	-0.974	-0.182	-0.133	0.462	0.697	Path 1
경북	-0.457	-1.301	-0.665	0.647	0.510	1.266	Path 1
경남	0.055	-1.367	-0.940	0.391	0.613	1.249	Path 1
제주	0.870	-1.898	-0.103	0.561	0.133	0.436	Path 2

2. 지역별 관광회복력 경로 분석

4R 지수별로 회복경로를 보면 Path 1은 신속성 지수에서 13개 지역, 대체성 지수에서 12개 지역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되어 위기 발생 시 빠른 대응과 더불어 대체 수단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의미한다.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경로인 Path 3은 자원동원성 지수에서 14개 지역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 해당되었다. 종합하자면 신속성 지수와 대체성 지수에서의 회복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원동원성 지수에서는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경로를 나타내는 등 지수별로 뚜렷하게 회복 경로의 특징을 보였다.

지수별 경로 분류에서 3개 이상의 지수에서 Path 1에 해당된 지역은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으로 충격 이전의 수치를 상회하여 회복력이 매우 뛰어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Path 3에는 울산이 3개 이상의 지수에서 해당되어 충격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붕괴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8] 지역별 관광회복력 경로 분석

구분	신속성 지수	강건성 지수	자원동원성 지수	대체성 지수
Path 1 〈회복력이 높은 경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3개)	부산,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8개)	부산, 대전 (2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2개)
Path 2 〈회복력이 낮은 경로〉	울산, 충남, 제주 (3개)	광주 (1개)	경기 (1개)	대전, 세종, 제주 (3개)
Path 3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경로〉	대전 (1개)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8개)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개)	광주, 울산 (2개)

V.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국내 관광산업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과 함께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관광산업의 회복 추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보다 시사점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Bruneau et al.(2003)이 제안한 회복력 측정 지표 4R, 즉 신속성, 강건성, 자원동원성, 대체성 지수를 가지고 국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산출된 지수를 가지고 하현상·이석환(2016)의 연구에서 제시한 회복력 경로 3가지 중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분석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관광산업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우선 2015~2024년 10년간의 관광사업체 매출액을 가지고 코로나19가 실질적으로 국내 관광산업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관광사업체 매출액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인 2023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근접하게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4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2019년 수치를 상회하였으며, 지역별로 회복력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권장욱(2025)의 연구를 참고하여 4R 지수별로 지역의 회복력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Z-score로 전환하여 세부 측정 지표를 상호 비교하였다. 신속성 지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락하였다가 종식된 2023년에 반등하며 크게 수치가 상승하는 V자형 회복패턴을 보였으며, 강건성 지수의 경우 일부 지역은 충격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상당수 지역은 여전히 침체가 심화되는 회복의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자원동원성 지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대체성 지수는 신속성 지수와 유사하게 V자형 반등을 보였으며, 대다수 지역이 2019년보다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여 강한 회복력을 보이는 등 각 지수별로 상이한 특성을 나타냈다.

지수별 관광회복력 경로유형 분석 결과, 회복력이 높은 경로인 Path 1에서는 신속성 지수와 대체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으며,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경로인 Path 3에는 자원동원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위기 발생 시 빠른 대응과 대체 수단 확보능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자원을 동원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은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회복력 경로 분류에서 해당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3개 이상의 지수에서 공통적으로 Path 1에 해당된 지역은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으로 이들 지역의 회복력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Path 3에는 울산이 해당되어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 지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단일 지표 또는 단편적 분석에 집중한 것과 달리 다차원 지표를 통합하여 지역 회복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경로 유형으로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확장을 도모하였다. 기존의 단편적인 관광 통계에서 벗어나 4R 프레임워크를 관광산업 데이터에 적용하였으며, 지역 간 회복 양상을 단순한 수준 차이가 아니라 회복력의 경로로 유형화함으로써 회복력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규명하고 보다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신속성, 강건성, 자원동원성, 대체성이라는 다차원 지수를 통해 회복역량을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지표에 강점을 가지더라도 다른 지표에서는 취약할 수 있는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일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수별로 상이한 경로에 속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회복역량이 단일 전략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역 회복력이 단순한 회복 속도가 아니라 구조적 안정성, 자원 활용 능력, 대체 가능성 등이 결합된 복합적 개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회복력 개념을 정태적 수준 비교가 아닌 동태적 변화 과정으로 접근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회복 패턴 분석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표한 「관광산업조사」의 6개년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례 없는 관광위기인 코로나19의 발생 이전과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한 이후의 시점을 비교 분석하여 충격으로 인한 하락과 회복의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실무적 의의는 지역별 관광 회복력 경로의 구조적 차이와 원인을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지역별 관광 회복력 경로 분석 결과는 팬데믹이라는 동일한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보유한 기초 인프라와

산업 구조에 따라 회복의 경로가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특히 이러한 회복경로의 차이는 각 지역의 관광산업의 구조, 대도시 인프라, 그리고 지자체 정책 대응 역량 등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와 이질적인 회복 매커니즘은 지수별 취약성을 보완하는 맞춤형 지역 관광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수별 경로 분류에서 3개 이상의 지수에서 Path 1에 해당된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지역은 우수한 접근성과 다양한 대체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위기 발생시 빠르게 비대면·스마트 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두터운 배후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외부 충격을 빠르게 흡수하고 수요를 창출해 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지역은 이미 형성된 우수한 인프라를 가지고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도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민간 중심의 관광벤처 육성, 위케이션 및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등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선도적 투자가 요구되며, 혁신 모델을 타 지방도시로 확산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이 요구된다.

반면, 3개 이상의 지수에서 Path 3에 해당되어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경로로 나타난 울산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성으로 인해 위기 시 관광 생태계를 떠받칠 유연한 자원동원과 대체관광 기반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되므로 산업관광, 해양레저 등 지역 고유의 산업 구조와 결합한 대체 관광 자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관광 생태계의 회복력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충격을 견뎌내는 힘과 유연하게 대안을 찾는 역량의 복합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역별 회복 경로의 구조적 원인을 직시하고, 지방도시와 광역권의 이분법을 넘어 산업적 특성과 위기 대응 역량에 최적화된 회복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술적, 실무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자료의 한계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지표 중심의 분석으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관광산업의 회복여부를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수치를 기준으로 2024년 수치와 비교 평가하여, 기준 시점 효과(Base effect) 발생의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통계적 지표를 통해 거시적인 회복 경로를 제시하였으나, 각 경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정책 요인이나 지역별 특수 환경을 규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의 구체적인 사례연구와 회귀분석 등을 통해 회복력 격차를 유발하는 결정적 요인을 심층 규명하는 정성적 연구를 추가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에 시계열 자료를 더욱 확보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권장욱. 2025.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여행업의 회복력 분석: 2019~2023년 관광산업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관광진흥연구 13(1): 203-220.
- 김도훈·임창식·김남조. 2022. 「코로나19 이후 방한 외래관광자 수요예측: 개입 ARIMA 분석 및 회복탄력성을 활용하여」. 관광학연구 46(7): 75-96.
- 김동현·박두희. 2020. 「국가기반시설의 회복력 평가를 위한 4R 프레임워크 기반 정량적 평가 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2): 104-112.
- 김영근. 2018. 「도시의 재해회복력 평가모델 구축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재영·강연실·조부연. 2021.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력 평가지표 개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9(2): 3-13.
- 김정남. 2017. 「항공사 아웃소싱 직원의 회복탄력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근무지유형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19(1): 158-174.
- 박민희. 2019. 「항공 객실승무원의 회복탄력성,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간의 영향 관계 연구」. 동북아관광연구 15(2): 27-46.
- 문화체육관광부. 2015~2024 각 연도. 관광산업조사.
- 이윤주·이애주. 2016. 「호텔직원의 감성지능이 회복탄력성과 집단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조직정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0(10): 171-187.
- 임석화·송주연. 2022.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지역 고용의 충격과 회복탄력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5(1): 1-23.
- 전대욱. 2015. 「지역사회 복원력 측정 모델의 타당성 검토」. 지방행정연구 29(1): 201-224.
- 조원섭·박슬기. 2020. 「호텔종사원의 DISC 행동유형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Tourism Research 45(1): 249-263.
- 주민지. 2023. 「지역사회 재난 리질리언스의 구성요소와 관계에 관한 연구: 국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대한 근거이론의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하수정·안예슬·김태환. 2014. 「도시 회복력 평가 지표의 개발과 적용」. 국토연구 81: 133-151.
- 하현상. 2013. 「재난관리 조직의 네트워크 효과와 탄력성」. 한국행정논집 25(4): 1055-1082.
- 하현상. 2014. 「지역사회 복원력의 구조적 관계 분석」. 지방정부연구 18(2): 241-268.

- 하현상·이석환. 2016.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제고를 위한 공공마케팅에 대한 탐색적 고찰과 행정학적 제언」. 한국자치행정학보 30(2): 101-137.
- 하현상·김종범·조경호·이석환·최진식·전대욱. 2014. 「지역사회 재난 리질리언스 연구의 비판적 고찰과 행정학적 제언」. 지역발전연구 23(2): 409-464.
- Bruneau, Michel et al. 2003. "A Framework to Quantitatively Assess and Enhance the Seismic Resilience of Communities." *Earthquake Spectra* 19(4): 733-752. (DOI: <https://doi.org/10.1193/1.1623497>)
- Burton, Christopher G. 2012. "The Development of Metrics for Community Resilience to Natural Hazard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Dissertations.
- Cutter, Susan L. et al. 2008. "A place-based model for understanding community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8(4): 598-606. (DOI: <https://doi.org/10.1016/j.gloenvcha.2008.07.013>)
- Gera, Shweta and Ankit Kumar. 2023. "Sustainable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Sit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5(1): 12-28. (DOI: <https://doi.org/10.1002/jtr.2552>)
- Holling, Crawford S. 1973.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4: 1-23. (DOI: <https://doi.org/10.1146/annurev.es.04.110173.000245>)
- Howell, Nicholas R. 2011.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Resili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8: 210-225. (DOI: <https://doi.org/10.1007/s10464-011-9430-z>)
- Howell, Nicholas R. 2013. "Measuring the Impact of Cultural Capital on Disaster Recovery." *Disasters* 37(1): 45-62. (DOI: <https://doi.org/10.1111/j.1467-7717.2012.01298.x>)
- Mariolis, Theodore et al. 2021. "The Sraffian Multiplier for the Greek Economy." *Journal of Economic Structures* 10(1): 1-18. (DOI: <https://doi.org/10.1186/s40008-021-00234-y>)
- Martin, Ron. 2018. "Shocking Aspects of Regional Development: Towards an Evolutionary Understanding of Resilience." *Regional Studies* 52(11): 1530-1545. (DOI: <https://doi.org/10.1080/00343404.2018.1476255>)
- Martin, Ron et al. 2016. "How Regions React to Recessions: Resilience and the Role of Regional Economic Structure." *Regional Studies* 50(4): 561-585. (DOI: <https://doi.org/10.1080/00343404.2015.1135236>)
- Norris, Fran H. et al. 2008. "Community Resilience as a Metaphor, Theory, Set of Capacities,

and Strategy for Disaster Readi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1): 127-150. (DOI: <https://doi.org/10.1007/s10464-007-9156-6>)

Sharma, Gaurav et al. 2021. “Reviving Cultural Resources in the Post-Pandemic Era.” *Sustainability* 13(9): 4500-4520. (DOI: <https://doi.org/10.3390/su13094500>)

Tierney, Kathleen and Michel Bruneau. 2007.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Resilience: A Key to Disaster Loss Reduction.” *TR News* 250: 14-17.

인천의 도시 상권 구조가 관광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읍면동 단위 내·외국인 관광객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고현종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 수료

장예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정책기획부 연구원, 교신저자(E-mail: jyw024@kribb.re.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15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상권 구조와 관광 인프라가 내·외국인 관광 성과(방문객, 소비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공 통계와 민간 빅데이터(상권 정보, 통신 유동인구, 카드 소비)를 결합하고 공간자기상관성을 진단하여 공간오차모형(SEM)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상권 규모(총사업체 수)는 모든 관광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여 상권 집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내국인 관광 수요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 반면, 외국인 관광 수요는 숙박·쇼핑과 같은 목적형 관광 수용태세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셋째, 내국인 관광 소비에서는 상권 다양성이 부(-)의 영향을 보여 특화된 상권 구조가 관광 소비 창출에 유리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넷째, 외국인 관광 수요는 인접 지역 간 강한 공간의존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정책이 단편적 상권 지원을 넘어 관광 수요 유형에 따른 인프라 배분과 지역 간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 관광 공간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인천광역시, 도시 관광, 상권 구조, 관광 성과, 공간회귀분석

The Impact of Urban Commercial District Structure on Tourism Performance in Incheon: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ists at the Administrative Dong Level

Ko, Hyeon-Jong Ph.D. Candidat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ungkyunkwan University

Jang, Ye-Won Researcher, Department of Policy Planning, Korea Bioinformation Cente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Abstract

This study employs GIS-based spatial analys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ourism infrastructure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regional tourism performance. Data collection integrated the current conditions of tourism infrastructure in the Incheon area, visitor influx, expenditure data, and administrative boundary maps. Preprocessing was conducted at the administrative dong level to facilitate GIS spatial analysis using QG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TATA. The results from the GIS spatial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 that public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cultural facilities had a positive impact on visitor numbers but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expenditure. In contrast, accommodations, restaurants, and shopping facilities emerged as key factors with a positive impact on both visitor numbers and expenditure. Notably, the number of tourist sites had a negative impact on both visitor numbers and expenditure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nclude the exclusive use of data from 2023, which prevented an adequate reflection of changes in tourism phenomena over time. Second, the analysis was limited to administrative dongs in Incheon, restricting its generalizability to other regions. Future research should address these limitations to conduct more comprehensive and dynamic analyses.

Keywords : Incheon Metropolitan City, Urban Tourism, Commercial District Structure, Tourism Performance, Spatial Regression Analysis

I. 서론

현대 도시에서 관광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공간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공공정책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관광 목적지의 경쟁력은 자연적 매력물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으며, 관광객의 이동과 체류, 소비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목적지 정책 및 기획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Ritchie and Crouch 2003). 특히 지방분권화 이후 지자체는 관광 인프라 구축, 용도지역 지정, 상권 활성화 등 공급측 행정 개입을 통해 관광 수용태세를 능동적으로 형성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따라서 도시 내 상권 구조와 인프라 분포는 단순한 시장 자원의 산물이 아니라, 지자체의 공간 행정과 자원 배분이 축적된 정책적 결과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 공간에서 경제활동과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도시 내부의 공간적 불균형 구조를 형성한다(Friedmann 1966). 특히 관광 활동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역 간 상호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현상은 ‘모든 것은 서로 관련되지만 가까운 것일수록 더 강하게 관련된다’는 공간의존성 원리로 설명된다(Tobler 1970). 본 연구의 대상인 인천광역시도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이자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관광 관문 도시로서(김성환 2017) 이러한 공간적 불균형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연구 대상이다.

특히 인천시는 원도심,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농촌 및 도서 지역 등 이질적인 특성이 혼재된 복합적 도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읍면동별 관광객 유입 및 소비 행태가 뚜렷하게 차별화되어 나타난다(고현종 2025). 즉, 일부 지역은 방문객은 많으나 실질적인 소비가 저조하고, 다른 지역은 특정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편재성은 지자체의 상권 규제 및 인프라 공급 정책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진단해야 할 행정학적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도시 상권 구조는 관광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15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상권 구조와 관광 인프라의 공간 분포가 관광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읍면동 단위 상권의 미시적 구조(업종 비중, 새년 다양성 지수)와 거시적 집적 규모(총사업체 수)가 관광 성과(방문객 수, 소비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대중교통 접근성 및 핵심 관광 자원 등 관광 인프라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상권 구조가 관광 성과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관광 목적지 선택과 소비 형성 과정에서 상권 구조의 역할을 규명한다.

셋째,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 모형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관광객 유형에 따른 상권 구조의 영향 차이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관광 수용태세 배분 및 관광 공간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분석의 공간적 단위, 분석 방법론, 그리고 정책적 접근 시각에서 기존 선행 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분석단위의 정밀성 측면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시·군·구 단위의 광역적 분석에 그쳐 지역 내 미시적 격차나 공간적 불균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김현지·최정원 2023; 윤동환·한승훈 2020). 반면 본 연구는 주민 생활권의 기초이자 상권이 형성되는 읍면동 단위를 분석의 공간적 단위로 설정하여 대도시 내 복합적 지역 구조에 따른 관광 성과의 이질성을 세밀하게 포착하였다.

둘째, 방법론적 엄밀성 확보를 위한 공간계량모형의 적용이다. 기존 연구들은 개별 시설의 효과 분석에 집중하거나 관측치 간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일반선형회귀에 머물러, 인접 지역 간 공간적 파급효과를 통제하지 못하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었다(고현중 2025; 김흥렬 2017). 본 연구는 관광 수요의 공간의존성 이론을 바탕으로 잔차의 공간자기상관성을 사전 진단하고 공간회귀분석을 적용함으로써 추정의 강건성을 제고하였다(Anselin 1988).

셋째, 성과 지표의 다차원성 및 공공데이터의 객관적 활용이다. 기존 연구가 설문조사 기반의 주관적 만족도나 단일한 방문객 수 관찰에 치중했다면 본 연구는 소상공인 상권 데이터와 통신·카드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행정적 수용태세의 경제적 성과를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단순한 현상 분석을 넘어 지방정부의 공간 행정과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1. 도시관광정책과 관광수용태세의 행정적 형성

현대 도시 발전 과정에서 관광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공간 재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공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자연적 매력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통적 관광과 달리, 도시관광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상업 생태계와 물리적 기반시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정부의 공급 측 정책 개입에 의해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도시 내 관광 인프라와 상권 구조는

단순한 시장 원리의 자율적 산물이 아니라, 공공재원과 도시계획이 투입되어 형성된 관광수용태세의 행정적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Ritchie and Crouch 2003). 다만 관광수용태세의 전통적 정의가 안내 시스템, 현대 서비스 등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기능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이를 지방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성한 공급측 관광 지원 환경으로 구체화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도시 상권은 관광객의 체류를 지원하는 수용 기능뿐만 아니라 상권 그 자체로 방문의 목적이 되는 관광 매력물 또는 목적지 속성으로서의 다각적 기능을 수행한다(Dwyer and kim 2003). 따라서 읍면동 단위 상권 구조는 관광객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수용 기반인 동시에 지자체의 용도 관리와 특화 정책을 통해 형성된 핵심적인 목적지 매력물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학적 접근을 뒷받침하는 핵심 이론은 관광 목적지 경쟁력 모델이다. 이 이론은 성공적인 관광 목적지는 핵심 자원과 매력물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관광객의 이동과 체류, 소비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지원 요인과 목적지 정책 및 기획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Dwyer and Kim 2003; Ritchie and Crouch 2003).

본 연구는 관광 목적지 경쟁력 모델을 도시관광 행정의 관점에서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포함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의 대중교통 인프라와 박물관, 문화재 등의 집객 시설은 시장기제만으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영역이며, 지방정부의 투자와 관리가 중요한 대표적 지원 요인이다. 또한 숙박업, 음식업, 소매업 등 민간 상업 생태계 역시 시장을 통해 형성되지만, 그 입지와 업종 구성은 지자체의 용도지역 지정,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광특구 운영 등 규제와 진흥 행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따라서 읍면동 단위의 상권 구조와 인프라는 지자체의 공간 배분 정책이 축적된 수용태세라 할 수 있다.

관광객의 목적지 선택 기제를 설명하는 배출-흡인 요인 논의는 이러한 행정적 수용태세가 내·외국인 집단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완적으로 설명한다.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배치한 교통망과 거점 상업시설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외부 관광객의 유입을 견인하는 흡인 요인으로 작용한다(Dwyer and Kim 2003). 특히 공간에 대한 정보 비대칭과 이동 제약이 큰 외국인 관광객일수록 숙박, 쇼핑, 교통과 같은 제도화된 관광 수용 기반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Lew and McKercher 2006; McKercher and Lau 2008). 이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간의 공간적 유입 및 소비 패턴 차이가 행정적 수용태세의 흡인력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강력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도시 관광 공간의 다기능성과 공급측 개입에 주목한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규명해 왔다. 국내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관광 수용태세가 관광객의 만족과 행동 의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도시재생 및 인프라 확충 등 행정적 지원이 도시 관광 활성화를 견인함을 실증하였다(고현종 2025; 김태현·김주리 2017; 이정은·오홍철 2017). 국외 연구에서는 목적지 발전 단계에 따라 정부가

인프라 투자 및 법제 정비 등 강력한 공급측 개입을 통해 수용 역량을 능동적으로 확장해야 함을 주장하였다(Kubickova and Martin 2020). 또한, 도시 관광은 고립된 특정 명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주거, 상업, 여가 기능이 중첩된 복합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인프라 구축과 같은 공급측 정책 수단이 관광 성과 창출의 핵심 조건으로 작동한다(Hayllar et al. 2008).

이상의 논의는 본 연구의 설계와 분석 방향을 논리적으로 지지한다. 기존 연구가 주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지각된 수용태세와 주관적 반응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읍면동 단위의 객관적인 소상공인 상권 구조와 인프라 데이터를 관광수용태세의 공급측 핵심 변수로 조작화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즉, 관광 인프라와 접근성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상권 구조가 관광 성과(방문,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를 비교하는 본 연구의 시도는 향후 도시관광정책이 단순한 수요 촉진을 넘어 공간 인프라 투자와 행정자원의 전략적 배분 문제를 보다 정교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다.

2. 도시공간의 집적구조와 상권 기능 분화

도시공간에서 상권의 물리적 규모 확대와 기능적 집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통적인 집적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Krugman 1991; Marshall 1890). 이 이론은 특정 공간에 상업 및 서비스 기능이 밀집할수록 투입요소의 공유와 수요의 누적적 집중이 발생하여 개별 점포 수준에서는 얻기 어려운 외부경제 효과가 창출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사업이나 특화거리 조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상권의 절대적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소비 창출에 유리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Glaeser et al. 2001). 그러나 상권의 성과는 단순한 규모 확대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상권 내부의 질적 구조와 기능적 배분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거시적 규모 확장을 넘어선 상권 내부의 질적 구조와 기능적 배분은 다양성과 전문화의 긴장 관계로 이론화할 수 있다. 도시 활력의 원천을 이질적 기능의 혼재에서 찾은 Jacobs의 다양성 이론은 상이한 업종과 서비스의 결합은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체류시간의 연장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 있다(Jacobs 1961; 1969).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성 논리를 적용하여 정보이론에서 유래한 섀넌 다양성 지수(Shannon Index)를 통해 상권 내 업종의 융복합 정도를 계량화하였다. 이 지수는 단순한 점포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닌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적 분포 수준을 측정한다(Shannon 1948). 따라서 이는 지자체의 용도지역·지구제 운영이나 소상공인 입지 관련 정책이 획일적 상권 조성을 지양하고 복합적 기능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유용한 분석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단순한 업종 혼재보다 명확한 목적성이 있는 기능적 분화가 성과 창출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업종 다양성과 공간적 집적 특성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목적성을 띠는 특화된 군집이 상권 활성화 및 지출 증대에 유리함을 제시하였다(임하나 외 2017; 정은애·성현곤 2016). 국외 연구도 관광 목적지에서 다양한 업종의 공존이 긍정적 기능을 갖지만 소비의 집중은 핵심 관광 시설을 중심으로 한 특화 상권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한다(Yoshimura et al. 2022). 아울러 관광 수요의 집중이 상권의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숙박 및 쇼핑 중심의 관광객 지향적 목적형 상권으로 상권 구조를 재편하는 투어리스트피케이션 현상도 보고되고 있다(Cheung and Yiu 2024).

이러한 기능적 분화에 관한 선행 연구의 발견은 본 연구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관광객 유입이 상권을 주민 중심의 근린생활 상권과 관광객 중심의 목적형 상권으로 재편한다는 공간 분화의 논리는 도시 관광 성과가 상권 기능의 차등적 분화 수준과 밀접하게 연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도시 상권의 기능 분화는 순수한 시장 메커니즘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지자체의 규제 및 진흥 행정이 개입된 산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관광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지자체의 상권 관리는 맹목적인 업종 다양성 확보나 일괄적인 보조금 지원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책 설계 시 타깃 방문객의 소비 특성을 반영하여 체류 및 고부가가치 지출을 유도하는 목적형 특화 상권과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상권을 구분해 맞춤형으로 육성하는 세밀한 공간정책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3. 관광 성과의 공간적 불균형과 공간의존성

관광산업은 본질적으로 지리적 입지와 공간적 환경에 크게 의존한다. 지리학 제1법칙에 따르면 ‘모든 것은 서로 관련되지만 가까운 것일수록 더 강하게 관련된다’고 보고 있다(Tobler 1970). 이러한 공간적 의존성 이론은 관광객의 이동과 소비가 단일 행정구역 내부에 고립되지 않고 인접 지역으로 파급되는 구조를 설명한다. 더불어 특정 거점에 자본과 인프라가 집중될 때 중심과 주변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중심-주변부 이론은 도시 내 관광성과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석하는 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Friedmann 1966).

지자체의 관광정책과 상권 인프라 투자는 엄격한 행정경계(읍면동) 내부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닌 인접 지역에 정책적 외부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간계량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Anselin 1988). 전통적인 최소자승법(OLS)은 각 관측치가 상호 독립적이라는 가정에 기초하므로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경우 추정의 편의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분석 대상인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은 정보 접근성과 이동 방식이 상이하므로 공간적 의존성 역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간회귀분석은 개별 상권의 미시적 구조뿐 아니라 모형에 명시되지 않은 거시적 관광 마케팅이나 광역적 도시환경 등 미관측 지역 특성이 인접 읍면동 간에 공유되며 관광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책적 현실을 보다 적절하게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

공간적 의존성과 파급효과에 주목한 선행 연구들은 관광 성과 분석 시 공간계량모형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내 연구에서 지역의 관광 성과 영향요인이나 관광 공간의 정책 확산이 인접 지역 및 상위 정부 정책 환경과 수평·수직적 상호작용함을 실증하였다(오정민·이상호 2023; 유윤희·이희찬 2019). 국외 연구 역시 인접 지역의 관광 매력도와 인프라 연결성이 해당 지역의 관광 성과에 유의미한 공간적 파급효과를 미침을 공간계량모형을 통해 입증하였다(Romão and Nijkamp 2018; Yang and Wong 2012).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본 연구의 분석 체계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공간자기상관성 및 공간회귀분석을 수행한 이유는 도시 관광 성과가 개별 읍면동 단위의 파편적인 상권 노력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우며 인접 지역과 공유하는 광역적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 분석 틀은 지자체의 관광 행정이 일률적이고 미시적인 상권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거점과 주변부 간 연계를 강화하며 인프라의 중복 투자를 줄이는 통합적 관광 공간 정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학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III. 연구설계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도시 상권 구조가 관광 성과에 미치는 공간적 영향을 실증하기 위하여 2025년 기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공간적, 시간적 범위와 자료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분석의 공간적 단위는 인천광역시 관내 156개 읍면동(1개 읍, 19개 면, 136개 동) 전체로 설정하였다. 읍면동은 주민의 일상적 생활권이자 소상공인 상권이 형성되는 기초적인 공간 단위이며, 관광객의 미시적인 방문 및 소비 행태와 상권의 구조적 특성을 매칭하여 공간적 파급 효과를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석 단위이다.

시간적 범위는 단기적 계절성에 따른 통계적 왜곡을 통제하고 구조적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2025년 1년 간 단면 데이터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관광 성과는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데이터랩을 활용해

구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읍면동별 방문객 유입은 통신사 데이터, 관광 소비액은 카드사 가맹점 매출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특히, 한국관광데이터랩의 방문자 산출 기준은 일상생활권(거주, 통근, 통학 등)을 벗어난 비일상적 목적의 체류자만 엄격히 선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일자리 배후상권의 직장인 소비나 현지 거주민의 일상적 지출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순수 관광 목적의 부가가치 지표로서 방법론적 타당성을 지닌다. 아울러 독립변수인 상권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상권) 정보 원자료를 수집해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관광 성과는 양적 수요(방문객)와 경제적 파급효과(소비액)로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데이터랩 빅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25년 기준 인천시 읍면동별 내·외국인 방문객 유입 현황은 KT 이동통신 모바일 데이터를, 관광 소비액 현황은 BC카드 및 신한카드의 가맹점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출하여 종속변수를 구축하였다.

독립변수인 상권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상권) 정보 원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당 데이터를 읍면동 단위로 집계하여 상권의 거시적 규모(총사업체 수)를 비롯하여 음식점, 소매업, 문화·스포츠업, 숙박업 등 업종별 분포 비중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권의 융복합 정도를 나타내는 새년 다양성 지수(Shannon Index)를 도출하였다.

통제변수인 관광 인프라 및 접근성 지표는 인천데이터포털의 개방 데이터를 통해 수집하였다. 대중교통 인프라(지하철역, 버스정류장)와 지역 내 핵심 집객 매력물(관광지, 문화재, 쇼핑시설, 박물관·미술관)의 위치 좌표 데이터를 확보한 후 이를 읍면동 단위로 카운트하여 외생적 관광 유인 인프라 환경을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간자기상관 검정 및 공간회귀분석에 활용할 공간가중행렬을 구축하기 위하여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의 2025년 2분기 기준 인천광역시 센서스용 행정구역경계(읍면동) 공간 폴리곤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모든 속성 데이터는 QGIS의 공간 결합 기능을 통해 156개 읍면동 경계 지도에 병합되어 최종 분석 데이터셋으로 구축되었다.

[표 1] 분석자료 구성 및 자료 출처

구 분	내 용	출 처
2025년 인천시 방문객 및 소비액 현황	방문객 현황(KT 통신사) 소비액 현황(BC카드, 신한카드)	한국관광데이터랩
2025년 업종별 비중 및 상권 구조 지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 및 상권 정보 (음식업, 소매업, 문화 및 스포츠업, 숙박업, 상권 다양성)	공공데이터포털
관광인프라 현황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관광지, 문화재, 쇼핑시설, 박물관·미술관	인천데이터포털
공간경계자료	2025년 2분기 인천시 센서스용 행정구역경계(읍면동) 지도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 자료의 전처리 및 변수 구축

본 연구는 수집된 다기종의 비공간 속성 데이터(관광 성과, 상권 구조, 접근성 인프라 등)를 공간계량모형 및 시각화 분석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데이터 전처리 및 공간 병합 과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비공간 데이터의 공간화 및 결합이다. 한국관광데이터랩과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수집된 CSV 형태의 속성 자료와 SGIS에서 확보한 156개 읍면동 단위의 폴리곤 셰이프파일을 QGIS에서 병합하였다. 이때 각 읍면동명을 매칭시켜 1:1 공간 결합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후속 Moran's I 검정과 공간회귀분석에 활용할 분석용 공간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정규성 확보 및 결측치 보정이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방문객 수와 관광 소비액 등 종속변수와 일부 관광 인프라 변수는 지역 간 편차가 큰 우측 꼬리 분포를 보였다. 이에 선형 회귀모형의 왜도 완화를 위해 종속변수와 총사업체 수, 지하철역 수, 버스정류장 수, 관광지 수, 문화재 수, 쇼핑시설 수, 박물관·미술관 수에 대하여 $\ln(x+1)$ 변환을 적용하였다.

또한, 지하철역, 박물관·미술관, 문화재 등 해당 읍면동 내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집계 결과가 공란 또는 Null로 표시된 경우 이를 자료 누락이 아닌 시설 부재를 의미하는 구조적 0으로 간주하여 0으로 재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직관적인 공간 시각화 및 정책적 유형화를 위한 관광 성과(방문-소비) 4유형 변수 구축이다. 읍면동별 관광 성과의 구조적 특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56개 읍면동의 방문객 수와 관광 소비액 데이터를 2x2 매트릭스로 교차하여 범주형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때 집단을 분류하는 임계치로는 산술평균 대신 중앙값을 적용하였다. 이는 관광 데이터의 특성상 일부 상권에 극단적인 최댓값이 집중되어 있어 평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다수 지역이 하위 집단으로 분류되는 왜곡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각 지표가 중앙값을 초과하면 고(High), 이하이면 저(Low)로 할당하여 최종적으로 ① 고방문-고소비, ② 고방문-저소비, ③ 저방문-고소비, ④ 저방문-저소비의 4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유형화 변수는 QGIS 상에서 내·외국인 관광 성과의 공간적 편재성을 단계구분도로 시각화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읍면동 단위의 관광 목적지 성과, 상권 기반의 관광 수용태세, 관광 인프라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관광 성과 지표는 방문객과 경제적 파급효과(소비액)로 조작화하여 정규성 확보를 위해 자연로그 변환을 수행하였다. 양적 성과 지표인 국내 관광 수요($M=14.651$, $SD=0.893$)와 인바운드(외국인) 관광 수요($M=10.822$, $SD=1.397$)의 유입 수준을 비교하면 인바운드 수요의 표준편차와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목적지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의미하는 소비액 역시 국내 관광객($M=24.091$, $SD=1.285$) 대비 인바운드 관광객($M=23.128$, $SD=1.621$)의 지역 간 편차가 두드러졌다. 이는 내국인 관광 수요가 도시 전반의 근린 상업 생태계에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는 반면, 인바운드 관광객의 체류 및 지출 행태는 최솟값과 최댓값의 큰 격차에서 알 수 있듯 특정 핵심 관광 거점이나 수용태세가 우수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변 수		M	SD	Min	Max
종속 변수	내국인 방문객(로그)	14.651	0.893	12.217	18.013
	외국인 방문객(로그)	10.822	1.397	7.992	16.618
	내국인 소비액(로그)	24.091	1.285	19.879	27.717
	외국인 소비액(로그)	23.128	1.621	19.262	28.287
독립 변수	음식업 비중	0.291	0.065	0.090	0.500
	소매업 비중	0.244	0.067	0.126	0.490
	문화·스포츠업 비중	0.045	0.020	0.000	0.102
	숙박업 비중	0.043	0.102	0.000	0.543
	상권 다양성	1.832	0.153	1.188	2.027
	지하철역 수	0.660	1.080	0	8
통제 변수	버스정류장 수	41.587	37.453	0	187
	관광지 수	1.193	2.553	0	15
	문화재 수	1.053	2.649	0	16
	쇼핑시설 수	4.047	17.494	0	173
	박물관·미술관 수	0.033	0.180	0	1
	총사업체 수	853.420	630.300	32	3630

정책 개입의 주요 대상이자 핵심 독립변수인 상권의 미시적 구조는 업종별로 상이한 분포 특성을 보여준다. 상권 내 업종 비중(Share) 측면에서 음식업($M=0.291$)과 소매업($M=0.24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관광지 매력물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상업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반면, 핵심 관광 수용태세인 숙박업 비중($M=0.043$)과 문화·스포츠업 비중($M=0.045$)은 전체 상권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낮으나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 특정 읍면동에 집중적으로 밀집하는 특성을 보였다. 한편, 목적지 선택 속성의 다각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권 내 새년 다양성 지수(Shannon Index)는 평균 1.832, 표준편차 0.153(최소 1.188 ~ 최대 2.027)으로 나타나, 단일 업종에 편중된 상권부터 융복합적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다각화된 상권까지 구조적 변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관광 성과 창출의 외생적 촉진 요인이자 정책적 배분의 결과물인 물리적 접근성 및 관광 인프라 역시 지역 간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다. 버스정류장($M=41.587$)과 같은 일상적 교통 수용력은 널리 확보되어 있으나, 지하철역($M=0.660$)을 비롯하여 핵심 집객 매력물인 관광지, 문화재, 박물관 등은 대다수 읍면동에서 최솟값이 0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영과잉(Zero-inflated) 쏠림 현상을 보였다. 특히 관광 소비의 주요 유인 기제인 쇼핑시설 수는 평균 4.047개임에도 최댓값이 173개, 표준편차가 17.494에 달해 특정 앵커(Anchor) 목적지에 정책적, 자본적 투자가 철저히 편중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아울러 상권의 거시적 규모 경제를 대리하는 총사업체 수 역시 최소 32개에서 최대 3,630개까지 넓은 편차를 보였다.

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앞서 변수 간 기초적인 연관성과 다중공선성 발생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관광 성과 지표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내국인 방문객과 외국인 방문객 간에는 0.606($p<.01$)의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내국인 방문객과 내국인 소비액($r=0.746$, $p<.01$), 외국인 방문객과 외국인 소비액($r=0.378$, $p<.01$) 간에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특히 내국인 소비액과 외국인 소비액 간의 상관계수는 0.740($p<.01$)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관광객의 유입 규모가 해당 지역의 관광 소비 창출로 직결됨을 의미하며, 내국인 관광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지출 공간으로도 기능하는 공간적 동조화 현상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다만, 종속변수 간 상관계수가 모두 0.8을 초과하지 않아 변수 간의 완전한 통계적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설명변수인 소상공인 상권 구조와 관광 성과 간 관계를 살펴보면 업종별 상이한 패턴이 관찰된다. 상권 내 음식업 비중은 내국인 방문객($r=0.281$, $p<.01$) 및 소비액($r=0.237$, $p<.01$)뿐만 아니라 외국인 방문객($r=0.370$, $p<.01$)과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소매업 비중은 외국인 방문객과 음(-)의 상관관계($r=-0.301$, $p<.01$)를 보였으며 다른 종속변수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소매업

중심 상권이 관광객 유인보다는 지역 주민의 일상적 소비 공간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문화·스포츠업 비중은 내국인 방문 및 소비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숙박업 비중은 외국인 방문객과는 정(+)의 관계($r=0.245$, $p<.01$)를 가지나 내국인 수요와는 역의 관계를 나타내어 내·외국인 간 목적지 선택 속성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내국인 방문객	외국인 방문객	내국인 소비액	외국인 소비액
내국인 방문객	1			
외국인 방문객	0.606***	1		
내국인 소비액	0.746***	0.513***	1	
외국인 소비액	0.614***	0.378***	0.740***	1
주요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내국인 방문객	외국인 방문객	내국인 소비액	외국인 소비액
음식업 비중	0.281***	0.370***	0.237***	0.084
소매업 비중	-0.126	-0.301***	0.012	-0.049
문화·스포츠업 비중	0.226***	0.015	0.276***	0.135*
숙박업 비중	-0.221***	0.245***	-0.257***	-0.236***
상권 다양성	0.219***	-0.166**	0.135*	0.211***
총사업체 수(로그)	0.740***	0.381***	0.788***	0.667***
지하철역 수	0.514***	0.391***	0.362***	0.373***
버스정류장 수	0.451***	0.305***	0.372***	0.351***
관광지 수	0.172**	0.317***	0.12	0.087
문화재 수	0.199**	0.045	0.123	0.071
쇼핑시설 수	0.230***	0.181**	0.283***	0.278***
박물관·미술관 수	0.128	0.155*	0.098	0.058

주. N=156, * $p<.05$, ** $p<.01$, *** $p<.001$

상권 다양성을 나타내는 섀넌 지수(Shannon Index)는 내국인 방문객($r=0.219$, $p<.01$) 및 외국인 소비액($r=0.211$, $p<.01$)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여 이종 업종이 융복합된 상권일수록 관광 유입 및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방문객 수와는 약한 부(-)의 상관관계($r=-0.166$, $p<.05$)를 보여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상권의 다양성보다는 특정 핵심 목적지(예: 유명 관광지, 쇼핑몰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통제변수로 투입된 상권의 물리적 규모와 접근성 인프라 역시 관광 성과 창출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상권 규모를 대리하는 총사업체 수(로그)는 내국인 소비액과 0.788이라는 가장 강력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내국인 방문객($r=0.740$) 및 외국인 소비액($r=0.667$)과도 매우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 수(내국인 방문객 $r=0.514$, $p<.01$)와 버스정류장 수(내국인 방문객 $r=0.451$, $p<.01$) 등 대중교통 접근성과 쇼핑시설 수 역시 관광 방문 및 소비 전반에 걸쳐 강력한 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상권 규모가 관광 수요에 미치는 규모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단순한 규모 확대에 따른 가성회귀의 오류를 방지하고 상권 미시 구조의 순수 효과를 엄밀히 추정하기 위하여 이후 회귀모형에서 총사업체 수를 통제변수로 고정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관광 매력물인 관광지 수와 문화재 수는 대부분의 지표와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현대 도시 관광의 성과가 전통적인 유희 자원보다는 상업적 수용태세와 더 밀접하게 연동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모형에 투입될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는 대부분 0.7 이하로 나타나 심각한 다중공선성 징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중공선성 진단

회귀모형 추정에 앞서 독립변수 간 과도한 선형결합으로 인한 통계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 VIF 지수는 종속변수인 관광 성과의 종류(내·외국인 방문객 및 소비액)와 무관하게 투입된 설명변수 집합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면의 효율성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업종 비중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본 모형의 VIF 산출 결과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에 투입된 모든 변수의 VIF 값은 최소 1.106에서 최대 4.478의 범위 내에 안정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권의 융복합 정도를 나타내는 상권 다양성 지수(4.47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목적지의 핵심 수용태세인 숙박업 비중(3.718), 거시적 상권 규모를 대리하는 총사업체 수(3.042) 순으로 도출되었다. VIF 값이 10을 초과할 경우 심각한 다중공선성을 의심하며 엄격한 통제 기준인 5를 적용하여도 본 연구의 기본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는 해당 임계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이는 앞선 상관관계 분석에서 일부 변수 간 유의미한 연관성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적 상권 구조 변수와 기반시설 통제변수들이 관광 성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일정 수준의 독립적인 설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상권 내 절대적 분포를 나타내는 업종 비중 변수와 특정 업종의 국지적 특화도를 나타내는 업종 집적도(LQ) 변수를 단일 모형에 동시에 투입할 경우, 산출 공식의 중첩으로 인해 회귀계수 추정에 편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형의 통계적 안정성과 결과 해석의 명확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두 변수군을 엄격히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표 4] 기본모형의 분산팽창계수(VIF) 검정

구분		변수명	VIF
1	독립변수	상권 다양성	4.478
2		숙박업 비중	3.718
3		소매업 비중	2.596
4		음식업 비중	2.071
5		문화·스포츠업 비중	1.969
6	통제변수	총사업체 수(로그)	3.042
7		관광지 수(로그)	2.276
8		버스정류장 수(로그)	1.959
9		문화재 수(로그)	1.868
10		쇼핑시설 수(로그)	1.829
11		지하철역 수(로그)	1.248
12		박물관·미술관 수(로그)	1.106

4. OLS 회귀분석

앞서 검증된 모형의 통계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상권의 미시적 업종 구조가 관광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표 5]와 같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상권 내 업종 비중을 핵심 설명변수로 하는 기본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관광 성과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종속변수를 양적 성과(내·외국인 방문객 규모)와 경제적 성과(내·외국인 소비액) 등 4가지 지표로 세분화하여 구축하였다.

[표 5] 상권 업종 구조가 관광 성과에 미치는 영향(OLS 기본모형)

변수	내국인 방문객	외국인 방문객	내국인 소비액	외국인 소비액
음식업 비중	1.656	2.65	1.148	-1.657
소매업 비중	-0.422	-3.944	0.649	-2.904
문화·스포츠업 비중	-6.285*	-13.175**	0.396	-15.020**
숙박업 비중	0.232	3.111	-0.454	-1.419
상권 다양성	-0.037	-1.418	-2.174*	-0.929
지하철역 수(로그)	0.398***	0.552*	0.17	0.326
버스정류장 수(로그)	0.176***	0.011	0.339***	0.256
관광지 수(로그)	0.048	0.456**	0.022	0.201
문화재 수(로그)	0.069	-0.494**	-0.123	-0.162
쇼핑시설 수(로그)	0.078	0.047	0.191**	0.349**
박물관·미술관 수(로그)	0.299	1.031	0.355	-0.071
총사업체 수(로그)	0.582***	0.800***	0.926***	0.992***

주. N=156, *p<.05, **p<.01, ***p<.001

관광객 유입 규모를 종속변수로 한 방문객 모형 분석 결과 내·외국인 관광 수요의 기제가 부분적으로 상이함이 확인되었다. 내국인 방문객 모형에서는 문화·스포츠업 비중($B=-6.285$, $p<.05$)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동 단위 상권에 분포한 문화·스포츠 시설이 관광객을 유인하는 매력물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의 일상적 여가를 위한 근린생활 시설(예: 동네 체육시설, 학원 등)로 기능하여 외부 관광 수요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도시관광의 핵심 접근성 지표인 지하철역 수($B=0.398$, $p<.001$)와 버스정류장 수($B=0.176$, $p<.001$)는 내국인 방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대중교통 인프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외국인 방문객 모형의 경우, 문화·스포츠업 비중($B=-13.175$, $p<.01$)의 부(-)적 효과가 더욱 강하게 관찰된 반면, 지하철역 수($B=0.552$, $p<.05$)와 관광지 수($B=0.456$, $p<.01$)는 유입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유사한 목적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수(+)와 문화재 수(-)가 인바운드 방문객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는 두 지표의 행정적·공간적 특성 차이에서 기인한다. '관광지'는 테마파크, 대형 휴양시설 등 상업적 소비와 체류 기능이 결합된 목적지인 반면, '문화재'는 엄격한 규제로 인해 주변 상업 인프라 확장이 제한되는 보존 중심의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읍면동 단위 도시 관광 성과가 단순한 역사적·자연적 보존 자원의 존재 여부보다 숙박, 쇼핑, 대중교통 등 현대적 상권 생태계와 행정적 수용태세에 의해 창출된다는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Hayllar et al. 2008).

이와 함께 경제적 성과인 관광 소비액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을 살펴보면 상권의 고부가가치 창출 구조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내국인 소비액 모형에서는 상권 다양성 지수(Shannon Index)가 유의한 음(-)의 영향($B=-2.174$,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업종이 혼재된 일반적인 근린상권보다 특정 업종이 상대적으로 전문화된 목적형 상권이 방문객의 객단가와 소비 지출 확대에 보다 유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바운드(외국인) 소비액 모형에서는 쇼핑시설 수($B=0.349$, $p<.01$)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지출이 문화적 체험보다는 앵커 쇼핑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도시 관광 쇼핑의 공간적 집중화 현상을 방증한다.

종합적으로 4개의 모든 모형에서 공통적이고 압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은 상권의 거시적 규모(총사업체 수)가 지니는 강력한 설명력이다. 총사업체 수(로그)는 내국인 방문($B=0.582$), 외국인 방문($B=0.800$), 내국인 소비($B=0.926$), 외국인 소비($B=0.992$) 모두에서 1% 유의수준($p<.001$)으로 매우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상권의 절대적 집적 규모가 커질수록 목적지로서의 유인력이 강화된다는 도시경제학의 규모 경제 논리와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본 OLS 회귀모형은 각 읍면동을 상호 독립적인 관측치로 가정하고 있어, 관광 수요가 행정 경계를 넘어 인접 지역으로 파급되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방법론적 한계를 지닌다. 특정 핵심 상권의 방문 및 소비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공간적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를 간과할 경우 OLS 추정량은 편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OLS 모형의 잔차를 바탕으로 공간적 의존성을 진단(Moran's I)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공간계량모형(Spatial Regression)을 도입하여 추정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고자 한다.

5. 공간자기상관 검정 및 최적 모형 선정

OLS 기본 모형 추정 이후 관측치 간 공간적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정량의 편의(Bias)를 진단하기 위해 Queen 인접 가중치 행렬을 기반으로 OLS 잔차에 대한 Moran's I 검정을 수행하였다. 검정 결과 내국인 방문객(Moran's I=0.113, $p<.05$), 외국인 방문객(Moran's I=0.320, $p<.001$), 외국인 소비액(Moran's I=0.151, $p<.01$) 모형의 잔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공간자기상관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양적 성과 지표인 외국인 방문객 모형에서 공간자기상관 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인바운드 관광 수요가 특정 읍면동 경계에 머물지 않고 인접 지역과 강력하게 군집화(Clustering)되는 공간적 편재성을 지남을 실증하였다. 반면, 내국인 소비액 모형의 Moran's I는 0.065($p=.098$)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해 내국인 관광 소비는 인접 지역으로의 공간적 파급보다는 비교적 지역 내부 상권 특성에 더 의존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공간효과가 확인된 3개 종속변수에 대하여 모형 적합도(AIC) 비교 결과 공간오차모형(SEM)의 AIC 값이 다른 모형(OLS, SAR, SDM) 대비 가장 낮게 나타나 최적 모형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읍면동 단위 관광 성과가 인접 지역의 관광 수요 자체로부터 직접적인 전이 효과를 받기보다 본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미관측 지역 특성이나 거시적인 도시 환경 요인, 규제적 맥락 등이 공간적으로 상관되어 관광 성과에 외부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 진단 결과에 따라 내국인 방문객, 외국인 방문객, 외국인 소비액에는 공간오차모형(SEM)을 적용하고, 공간 의존성이 발견되지 않은 내국인 소비액에는 기존 OLS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여 분석을 전개하였다.

[표 6] OLS 잔차의 Moran's I 검정 및 최적 모형 선택

종속변수	Moran's I	p	공간자기상관	최적모형	AIC
내국인 방문객(로그)	0.113	0.016	있음	공간오차모형	233.3
외국인 방문객(로그)	0.32	0.001	있음	공간오차모형	390.034
내국인 소비액(로그)	0.065	0.098	없음	OLS	324.853
외국인 소비액(로그)	0.151	0.002	있음	공간오차모형	471.388

주. * $p<.05$, ** $p<.01$, *** $p<.001$

6. 최종 공간회귀분석 결과

최종 선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상권 구조가 관광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공간 의존성을 제어함에 따라 기존 OLS에서는 포착되지 않았던 핵심 수용태세의 영향력과 미관측 공간효과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방문객 모형에서는 내·외국인 간 목적지 선택 기제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났다. 내국인 방문객 모형(SEM)은 지하철역 수($B=0.390$, $p<.001$)와 버스정류장 수($B=0.195$, $p<.001$) 등 대중교통 인프라의 정(+)적 효과가 두드러졌다. 반면, 외국인 방문객 모형(SEM)에서는 교통 접근성의 유의성이 사라진 대신 핵심 체류 인프라인 숙박업 비중($B=4.048$, $p<.01$)과 관광지 수($B=0.477$, $p<.001$)가 강력한 유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외국인 방문 모형은 공간오차계수($\lambda=0.726$, $p<.001$)가 매우 높게 나타나 인바운드 관광 수요가 개별 상권의 자체 역량뿐 아니라 인접 지역과 공유하는 광역적 목적지 이미지나 외부 환경 맥락의 영향을 크게 받음을 시사한다.

경제적 성과인 소비액 모형에서도 유의미한 구조적 차이가 도출되었다. 비공간 모형(OLS)이 채택된 내국인 소비액 모형은 상권 다양성 지수가 유의한 음(-)의 영향($B=-2.174$, $p<.01$)을 보여, 이종 업종이 넓게 혼재된 상권보다 특정 목적형으로 전문화된 상권 구조가 내국인의 지출을 더 크게 유도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반면, 외국인 소비액 모형(SEM)에서는 쇼핑시설 수($B=0.372$, $p<.01$)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유의미한 공간오차계수($\lambda=0.319$, $p<.01$)를 동반해 외국인의 관광 소비 역시 주변 상권과 연계된 거시적 소비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전반 공통으로 관찰된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4개의 모든 성과 지표에서 상권의 규모를 대리하는 총사업체 수가 일관되게 가장 강력한 정(+)의 설명력을 보여 도시 관광에 있어 상권의 규모 효과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이 입증되었다. 이는 상권 규모와 매출액 간의 가성회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절대적 규모를 철저히 제어한 결과이며, 이러한 엄격한 통제 하에서도 숙박업, 쇼핑시설, 상권 다양성 등의 변수들이 유의미하게 도출된 것은 도시 상권의 기능적 구조 자체가 관광 성과를 견인하는 독립적 요인임을 증명한다. 다음으로, 문화·스포츠업 비중은 인바운드 관광 성과 전반과 내국인 방문 수요에 일관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읍면동 단위의 보편적 문화·스포츠 시설이 외부 관광객을 견인하기보다 지역 주민의 일상적 여가에 국한된 근린 생활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발견은 도시 관광 성과가 개별 읍면동의 미시적 업종 구성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내국인 소비액(OLS)을 제외한 3개 지표에서 공간오차모형(SEM)이 최적 모형으로 채택된 것은 관광 성과 형성이 주변과 공유하는 거시적 도시 환경 및 입지 조건 등 미관측

외생 특성에 의해 강하게 제약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내국인 관광 소비는 소비 창출 기제의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e)이 유입 성과에 비해 국지적이고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결과는 도시관광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개별 상권 단위의 질적 고도화뿐 아니라, 상권의 물리적 규모, 인프라 접근성, 그리고 인접 지역과 연계된 공간 맥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관광공간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기] 최종모형 추정 결과

변수	내국인 방문객 공간오차모형	외국인 방문객 공간오차모형	내국인 소비액 OLS 모형	외국인 소비액 공간오차모형
음식업 비중	1.673	1.848	1.148	-0.67
소매업 비중	-0.128	-0.18	0.649	-2.174
문화·스포츠업 비중	-5.659*	-10.425*	0.396	-15.494*
숙박업 비중	0.347	4.048**	-0.454	-1.126
상권 다양성	0.056	0.502	-2.174**	-0.622
지하철역 수(로그)	0.390***	0.249	0.17	0.244
버스정류장 수(로그)	0.195***	-0.095	0.339***	0.221
관광지 수(로그)	0.021	0.477***	0.022	0.144
문화재 수(로그)	0.101	-0.277*	-0.123	-0.187
쇼핑시설 수(로그)	0.082	0.052	0.191*	0.372**
박물관·미술관 수(로그)	0.349	0.193	0.355	0.076
총 사업체 수(로그)	0.523***	0.594***	0.926***	0.999***
공간오차계수(λ)	0.302**	0.726***	-	0.319**
AIC	233.3	390.034	324.853	471.388

주. N=156, * $p < .05$, ** $p < .01$, *** $p < .001$

7. 관광 성과 유형의 공간분포와 상권·인프라 중첩 분석

공간오차모형 분석을 통해 상권의 거시적 규모, 미시적 업종 구조, 그리고 접근성 인프라가 관광 성과에 미치는 통계적 영향과 미관측 공간효과의 존재를 실증하였다. 그러나 회귀계수는 변수 간 평균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 유효할 뿐 이러한 관계가 실제 도시공간에서 어떠한 지리적 패턴과 불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단위인 읍면동은 독립된 섬이 아니라 인접 지역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능하므로, 통계적 추정 결과를 지리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보완적 공간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읍면동 단위 관광 성과의 공간적 편재성과 핵심 상권 및 인프라의 지리적 중첩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QGIS를 활용한 매핑(Mapping) 분석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1) 방문-소비 결합에 따른 관광 성과 4유형의 공간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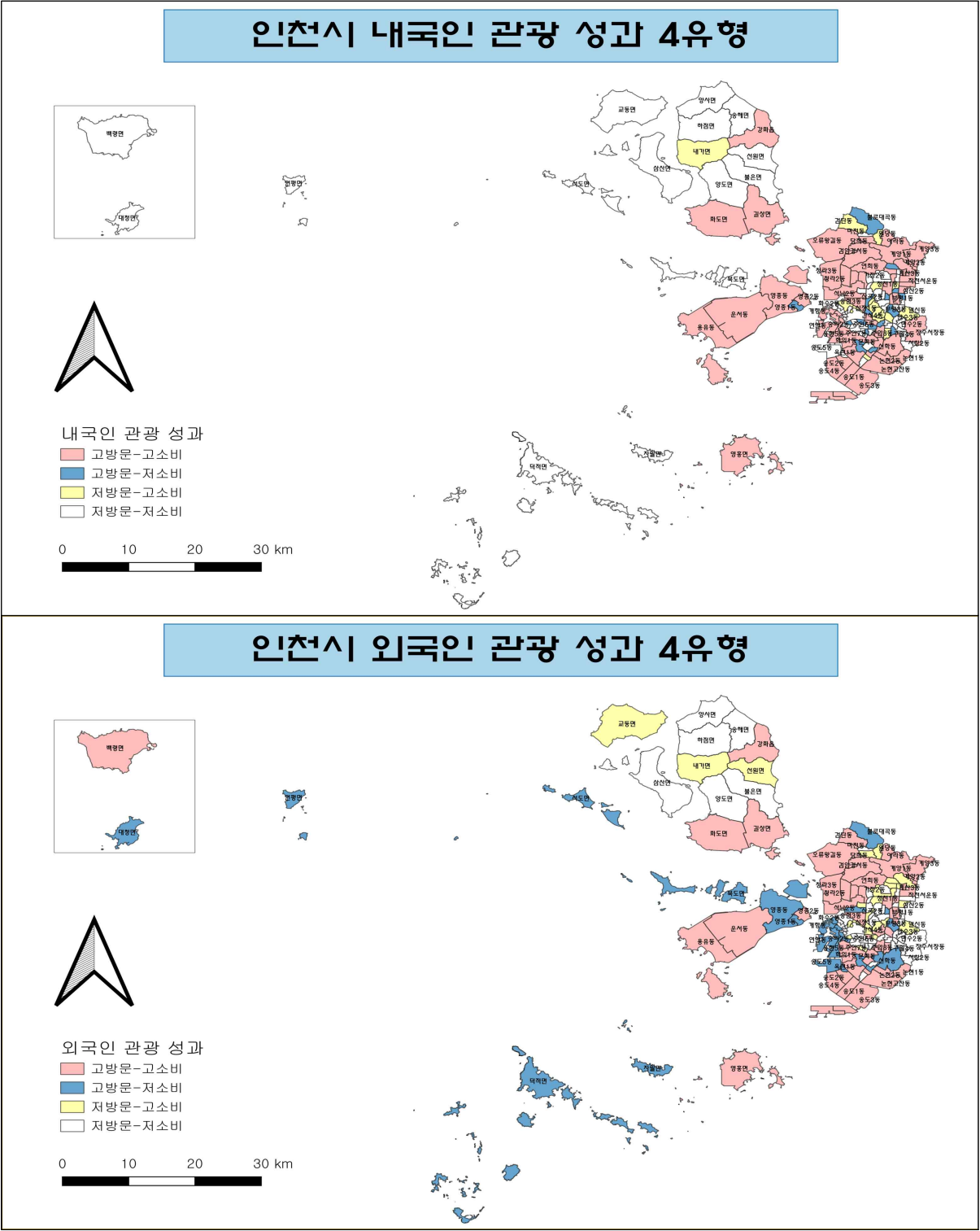
단순한 유입 규모를 넘어 목적지의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광 성과를 양적 수요(방문객)와 경제적 파급(소비액)의 2차원 결합 관계로 재구성하였다. 각 지표의 중앙값을 임계치로 설정하여 읍면동을 ① 고방문-고소비, ② 고방문-저소비, ③ 저방문-고소비, ④ 저방문-저소비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공간적 분포를 시각화하였다.

[표 8] 관광 성과에 따른 지역 유형화 구분

구 분 (156동)	고방문·고소비	고방문·저소비	저방문·고소비	저방문·저소비
내국인 (주요 지역)	62 (운서동, 송도1동, 구월3동, 용유동, 송도3동, 부평1동, 영종동 등)	16 (간석1동, 산곡4동, 도화1동, 송의2동, 부개3동, 영종1동, 계산2동 등)	16 (십정2동, 검단동, 간석4동, 구월1동, 십정1동, 내가면, 간석3동 등)	62 (서도면, 가정3동, 율목동, 송림2동, 만수3동, 산곡1동, 대청면, 연평면 등)
외국인 (주요 지역)	53 (운서동, 용유동, 영종2동, 송도1동, 송도3동, 영흥면, 송도2동, 청천2동, 논현고잔동 등)	25 (영종동, 연안동, 신포동, 개항동, 산곡4동, 연수2동, 동인천동, 석남2동, 남촌도림동 등)	26 (송의2동, 주안6동, 작전2동, 계산1동, 삼산2동, 계산2동, 주안5동, 가좌3동, 당하동 등)	52 (가정3동, 율목동, 송림2동, 만수3동, 산곡1동, 석남3동, 만수4동, 용현3동, 가좌4동 등)

분석 결과 내·외국인 관광 성과의 뚜렷한 공간적 이질성이 시각적으로 확인되었다. 내국인 관광의 경우 고방문-고소비 지역과 고방문-저소비 지역이 도시 전반 주요 교통 결절점을 따라 비교적 고르게 분산된 다핵 패턴을 보였다. 반면, 외국인 관광 성과 분포는 극단적인 공간적 편재성을 드러냈다.

[그림 1] 인천시 내·외국인 관광성과 4유형



외국인 고방문-고소비 유형은 특정 핵심 관광 거점 읍면동에 군집하여 나타났으며, 도시 외곽 대다수 읍면동은 저방문-저소비 주변부로 전락해 있는 구조적 불균형이 확인되었다. 이는 앞선 Moran's I 검정에서 외국인 방문객 모형의 공간자기상관 계수가 가장 높게 도출된 통계적 결과와 대체로 부합하며, 인바운드 관광 수요가 특정 공간에 강하게 고착화되는 현상을 시각적으로 방증한다.

특히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저방문-고소비 유형의 공간적 입지다. 방문 규모는 평균 이하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를 보이는 지역으로, 대규모 집객 시설보다는 특정 목적형 소비가 형성된 상권과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양적 팽창 위주의 관광정책에서 벗어나 상권의 질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공간적 단서라 할 수 있다.

2) 상권 수용태세 및 관광 인프라의 공간적 중첩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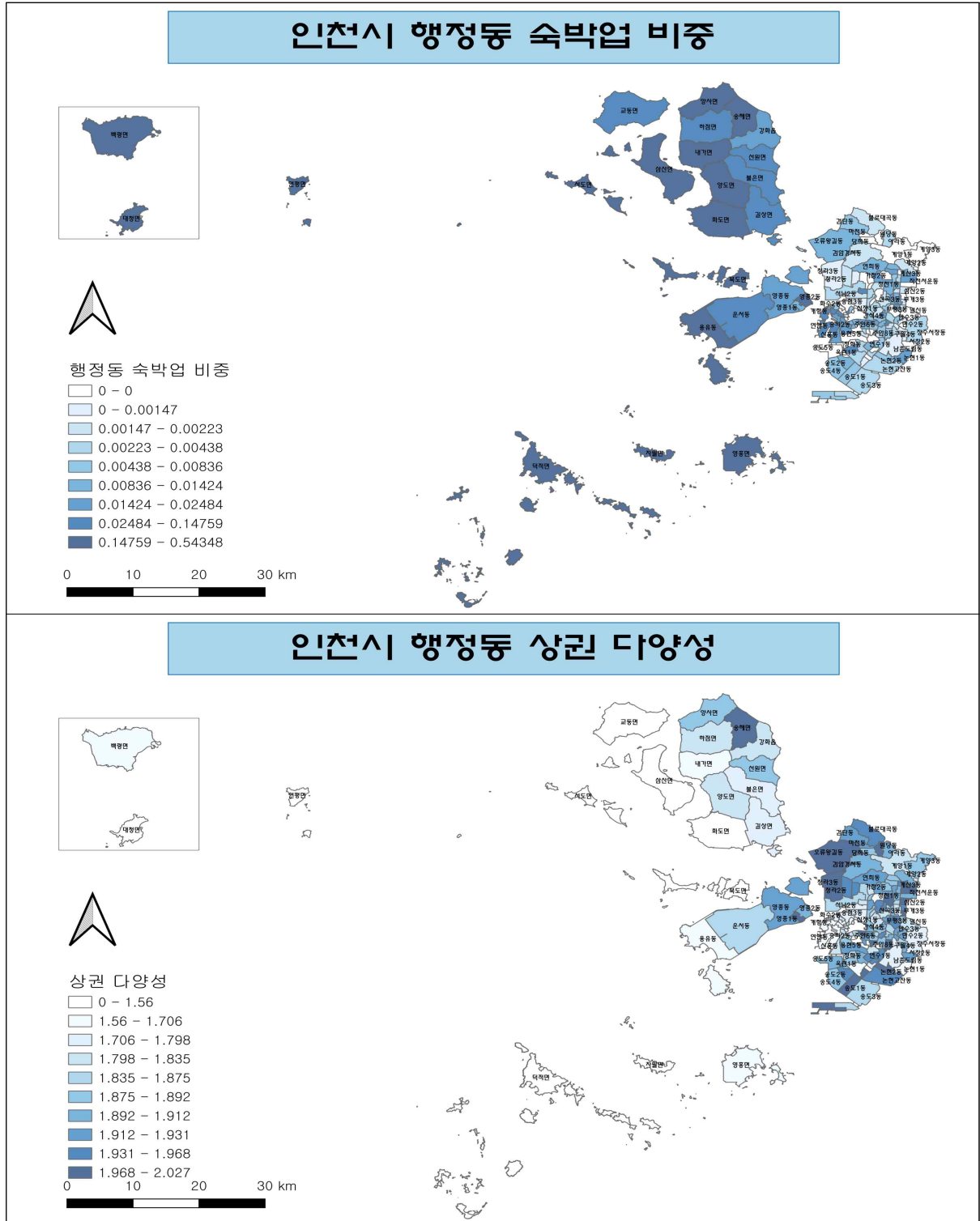
관광 성과의 4유형 분포가 어떠한 상권 구조 및 물리적 기반시설과 연동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핵심 독립변수의 공간 분포를 중첩 분석하였다.

먼저 상권 구조 측면에서 일상 소비 중심의 음식업과 소매업은 도시 전반에 넓게 산재한 반면 핵심 체류 인프라인 숙박업 비중은 특정 거점에 고도로 밀집된 형태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숙박업 밀집 읍면동 위치가 외국인 관광의 고방문-고소비 군집 지역과 지리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공간회귀분석(SEM)에서 숙박업 비중이 외국인 방문객 유입에 강력한 정(+)의 영향을 미친 추정 결과를 지리적으로 입증하는 대목이다. 이는 공간적으로 상관된 미관측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OLS에서는 숙박업 비중의 순수 효과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외국인 방문 수요는 광역적 목적지 맥락과 개별 읍면동의 체류 수용태세가 결합될 때 비로소 설명력이 명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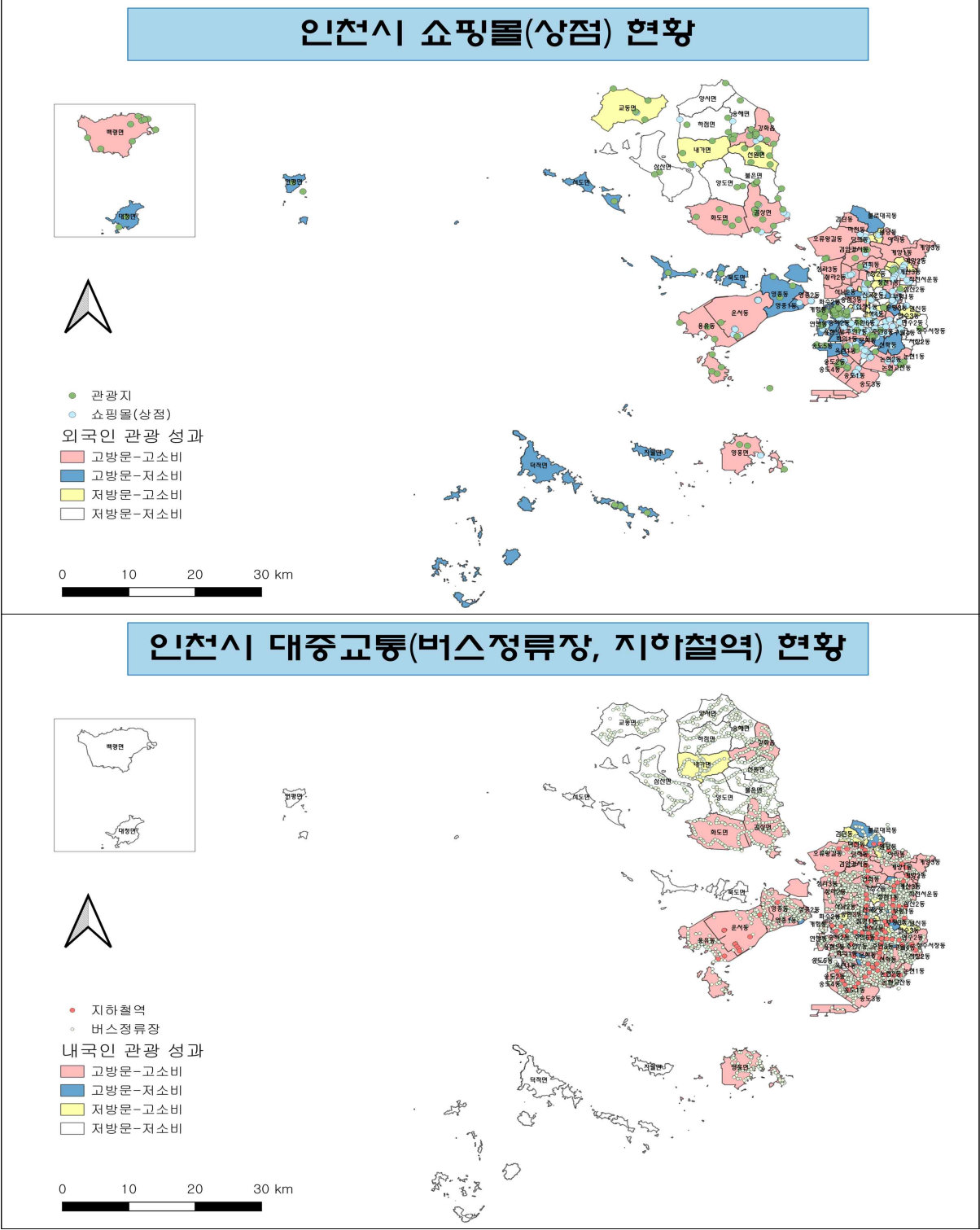
관광 인프라 측면 역시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접근성은 내국인 고방문 지역을 관통하는 선(Line)형의 네트워크로 분포하여 내국인 유입을 견인하는 핵심 기제임이 시각적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쇼핑시설과 주요 관광지의 분포는 외국인 고소비 지역에 철저히 편중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이 쇼핑 매력물이라는 특정 앵커 시설에 공간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상권의 거시적 규모를 나타내는 총사업체 수의 군집 지도는 네 가지 관광 성과 지표 모두의 핫스팟(Hotspot)과 강하게 중첩되어 도시 관광에 있어 상권의 규모 경계가 지나는 공간적 지배력을 직관적으로 증명하였다.

종합하면 도시관광 성과의 공간적 패턴은 개별 매력물의 단편적 존재만으로 설명되기보다, 상권의 절대적 규모, 체류형 수용태세(숙박), 그리고 핵심 인프라(쇼핑, 교통)가 지리적으로 결합될 때 강화되는 공간적 집적경제(Spatial Agglomeration Economy)의 산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인천시 읍면동 단위 숙박업 비중 및 상권 다양성



[그림 3] 인천시 관광 인프라(쇼핑몰, 대중교통) 공간분포 현황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관광 목적지 경쟁력 이론, 집적경제 이론, 공간의존성 이론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156개 읍면동의 상권 구조가 내·외국인 관광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사업체 수로 대변되는 상권의 절대적 규모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방문 및 소비 전반에 걸쳐 강력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상권의 집적 수준과 관광 성과가 공간적으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내국인 관광은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등 일상적 접근성 인프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외국인 관광은 숙박업 비중, 관광지, 쇼핑시설 등 체류형·목적형 수용태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 성과가 핵심 자원 자체보다 지원요인, 접근성, 관리체계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다는 목적지 경쟁력 논의와 부합한다(김태현·김주리 2017; Dwyer and Kim 2003; Ritchie and Crouch 2003).

셋째, 내국인 소비에서 상권 다양성보다 목적형 특화가 더 유리하게 나타났고, 외국인 방문·소비에서는 공간의존성이 강하게 확인되어 관광 성과가 개별 읍면동 내부 조건만이 아니라 인접 지역과 공유하는 광역적 환경과 목적지 이미지의 영향을 함께 받음을 확인하였다(유윤희·이희찬 2019; Yang and Wong 2012). 이는 도시관광정책이 단순한 관광객 유치나 개별 상권 지원을 넘어 상권 규모, 기능 분화, 접근성, 공간적 연계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공간정책으로 설계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 연구의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도시관광 성과를 개별 관광자원이나 단일 상권의 특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상권 규모, 기능 분화, 관광 수용태세, 공간의존성이 결합된 결과로 설명함으로써 기존 목적지 경쟁력 논의를 읍면동 단위의 도시공간 분석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관광 목적지 경쟁력 논의는 주로 핵심 자원과 지원요인, 접근성, 관리체계의 결합을 강조해 왔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보다 미시적인 도시공간 단위로 내려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관광 성과가 단순히 관광지 자체의 매력이나 개별 인프라의 존재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가 도시공간 내에서 상권과 기반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관리해 왔는가라는 행정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는 도시관광에서 상권 다양성 자체보다 목적형 특화와 체류형 수용태세가 일부 관광성과에 더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도시경제와 관광정책 연구에서 널리 논의되어 온 “다양성 대 특화”의 관계를 재해석하였다. 이는 관광정책 수립 시 상권을 단순한 편의 제공용 수용태세로 간주하기보다 그 자체가 고유한 색깔을 지닌 관광 목적지 상권으로 육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행정 개입은 단순한 환대 서비스 개선을 넘어 상권의 업종 구성을 통해 지역 고유의 매력을 창출하고 목적지 경쟁력을 확보하는 공간 기획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 방문과 소비에서 강한 공간의존성이 확인된 점은 관광성과가 개별 읍면동 내부 조건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인접 지역과 공유하는 광역적 환경과 목적지 이미지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완한다. 이는 관광 성과 연구에서 공간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핵심 설명 틀로 다루어야 함을 보여주며, 행정경계를 넘어서는 관광현상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관광정책은 개별 상권에 대한 분절적 지원이나 단편적 시설 확충에 머무르지 않고, 상권 규모와 거점 형성을 함께 고려하는 공간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총사업체 수가 모든 관광 성과 지표에서 가장 일관된 영향력을 보였다는 점은 일정 수준의 집적 규모를 갖춘 상권이 관광객의 방문과 소비를 유인하는 핵심 기반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소규모 사업을 분산적으로 지원하기보다 관광 수요를 흡인할 수 있는 거점 상권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자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국인과 외국인의 유입 및 소비 기제가 상이하게 나타난 만큼 관광정책 역시 수요집단별 차등 전략을 취해야 한다. 내국인에게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중심의 생활형 접근성을 개선하는 정책이 중요하고, 외국인에게는 숙박·쇼핑·관광거점 중심의 체류형 수용태세를 강화하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관광정책을 모든 집단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목표 시장의 특성과 이동 행태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공간적 파급효과가 확인된 이상, 읍면동 단위의 개별 사업을 넘어 거점-주변부 연계, 중복투자 조정, 광역 거버넌스 구축을 포함하는 통합적 관광행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 성과에서 강한 공간의존성이 나타난 것은 특정 읍면동의 정책 효과가 인접 지역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관광행정은 단일 지역의 실적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생활권 또는 권역 단위에서 교통·상권·관광 인프라를 연계하는 광역적 정책 조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도시관광정책이 단순한 수요 촉진 정책이 아닌 공간 배분과 기능 조정, 그리고 행정적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영역임을 시사한다

3.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25년 기준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특정 상권 구조가 관광 성과를 창출한 것인지, 혹은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 특성으로 인해 상권이 형성된 것인지에 대한 내생성과 역인과성 문제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이 입지한 영종도 운서동의 경우 압도적인 외지인 및 환승객의 소비 수요가 현지 상업 및 숙박 생태계 형성을 역으로 견인하고 유지하는 특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권 구조와 관광 성과는 상호 공진화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향후 연구는 패널데이터 구축 및 도구변수 적용 등을 통해 정책 개입의 시차 효과와 명확한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 대상 지역 설정에 있어 인천시 관내 모든 읍면동을 포함함에 따라 주거지 중심의 읍면동이 분석에 포함되어 추정 결과에 일부 공간적 편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관광 수요의 공간적 파급효과와 도시 전체의 거시적 상호작용을 조망하기 위해 인접 읍면동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가중행렬을 구축하였으나 주거 기능이 밀집된 지역이 포함됨으로써 관광 상권 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순수 효과가 일부 희석되었을 수 있다. 도시 관광은 지역 주민의 일상적 공간과 관광객의 소비 공간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지만(Hayllar et al. 2008), 향후 연구에서는 관광특구나 주요 관광지 배후 상권 등 관광 목적의 방문이 뚜렷한 핵심 거점 지역만을 선별하여 분석함으로써 주거 중심 지역에서 발생하는 편의를 통제하고 관광 상권만의 차별화된 메커니즘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업종 비중과 다양성, 인프라 수 등 구조적 변수에 초점을 두었으나, 지자체의 관광예산, 도시재생사업, 브랜드 전략, 서비스 질과 같은 질적·정책적 요인을 직접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책투입 변수와 질적 수용태세 지표를 결합한 혼합연구를 통해 지방정부의 관광행정 역량이 관광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고현중. 2025. 「관광기반시설의 공간 분포가 방문객 유입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28: 243-288.
- 김성환. 2017. 「도시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특성과 브랜드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태도 연구: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현·김주리. 2017. 「도시재생이 관광수용태세와 도시관광활성화 및 관광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 명동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13(4): 91-113.
- 김현지·최정원. 2023. 「역사문화 관광지의 매력속성, 지각된 가치 및 전반적 만족도와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부산시 동래구를 대상으로」. 관광진흥연구 11(4): 277-304.
- 김홍렬. 2017. 「관광목적지로서 전통시장 방문객 특성분석: 지역거주민과 외래방문객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1(5): 49-59.
- 오정민·이상호. 2023. 「도시재생 기반 관광 공간의 확산과 정책적 상호작용 분석」. 관광학연구 47(3): 11-32.
- 유윤희·이희찬. 2019. 「공간자기상관을 고려한 지역 관광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33(2): 35-46.
- 윤동환·한승훈. 2020. 「관광지 매력성, 환경책임행동, 그리고 장소애착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4(3): 33-46.
- 이정은·오홍철. 2017. 「기초자치단체의 관광수용태세가 관광객 반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MICE관광연구 17(4): 59-76.
- 임하나·성은영·최창규. 2017. 「상업시설의 다양성과 가로활력과의 관련성 실증분석: 서울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구분하여」. 도시설계 18(6): 37-49.
- 정은애·성현곤. 2016. 「서울시 소매업 동종 및 이종의 공간적 군집 특성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미용실, 슈퍼·편의점, 한식업종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51(5): 63-83.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의 관광수용태세 정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지방시대, 방한 외래관광객 지방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Anselin, Luc. 1988. *Spatial Econometrics: Methods and Model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Ashworth, Gregory, and Stephen J. Page. 2011. "Urban tourism research: Recent progress and current paradoxes." *Tourism Management* 32(1): 1-15.
- Cheung, Ka Shing, and Chung Yim Yiu. 2024. "Touristification and retail diversity: Theory and evidenc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11(1): 1-12.
- Christaller, Walter. 1966. *Central Places in Southern German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Dwyer, Larry, and Chulwon Kim. 2003. "Destination competitiveness: Determinants and indicators." *Current Issues in Tourism* 6(5): 369-414.
- Friedmann, John. 1966.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 Case Study of Venezuela*. Cambridge: MIT Press.
- Glaeser, Edward L., Jed Kolko, and Albert Saiz. 2001. "Consumer cit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1): 27-50.
- Hayllar, Bruce, Tony Griffin, and Deborah Edwards, eds. 2008. *City Spaces – Tourist Places: Urban Tourism Precincts*. Oxford: Elsevier.
- Jacobs, Jane. 1969. *The Economy of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 Jacobs, Jane.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Vintage.
- Krugman, Paul. 1991.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3): 483-499.
- Kubickova, Martina, and David Martin. 2020.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destination competitiveness: The TALC model perspective." *Tourism Management* 78: 104040.
- Lew, A., and McKercher, B. 2006. "Modeling tourist movements: A local destination analysi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2): 403-423.
- Marshall, Alfred. 1890. *Principles of Economics*. London: Macmillan.
- Mckercher, B., and Lau, G. 2008. "Movement patterns of tourists within a destination." *Tourism geographies* 10(3): 355-374.
- Ritchie, J. R. Brent, and Geoffrey I. Crouch. 2003. *The Competitive Destination: A Sustainable Tourism Perspective*. Wallingford: CABI.
- Romão, João, and Peter Nijkamp. 2018. "Impacts of innovation, productivity and specialization on tourism competitiveness – a spatial econometric analysis on European regions." *Tourism Management* 71: 114-124.

- Shannon, Claude E. 1948.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The Bell System Technical Journal* 27(3): 379-423.
- Tobler, Waldo R. 1970. "A computer movie simulating urban growth in the Detroit region." *Economic Geography* 46(sup1): 234-240.
- Yang, Yang, and Kevin K. F. Wong. 2012. "A spatial econometric approach to model spillover effects in tourism flows." *Journal of Travel Research* 51(6): 768-778.
- Yoshimura, Yuji, Yuta Kumakoshi, Salvatore Milardo, Paolo Santi, Juan M. Arias, Hidenori Koizumi, and Carlo Ratti. 2022. "Revisiting Jane Jacobs: Quantifying urban diversity." *Environment and Planning B: Urban Analytics and City Science* 49(4): 1228-1244.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인천지역 점포의 진입과 퇴출*

옥우석 인천대학교 Global Trade and Service학부 교수

박한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교신저자(E-mail: phj0604@snu.ac.kr)

김민우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 투입산출팀 과장

박동훈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연수운영팀 과장

국문초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인천 경제는 전국 평균에 비해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인천 내에서도 신도시의 구매력과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코로나19가 원도심에 비대칭적인 경제적 충격을 가져왔을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의 강도와 충격으로부터의 회복 속도가 도시 내 성장지역과 쇠퇴지역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간극을 메우기 위해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시스템이 제공하는 인허가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인천지역 점포의 진입과 퇴출, 그리고 회복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인천 내 지역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6개 주요 소비자 서비스 업종에서 많은 경우 신도시 지역에서는 ‘버티기’ 효과와 신규 진입이 모두 컸던 반면, 원도심은 지역 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신도시와 비교해 취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재난 상황에 대응한 지역 상권 또는 자영업 대책에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보다 섬세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인천, 사업체 진입퇴출, 지역내 격차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은행 인천본부 지역경제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수정·보완한 내용임.

Effects of the COVID-19 Social Distancing Policies on the Exit and Entry of Stores:

A Case Study of Incheon, South Korea

Ok, Wooseok Professor, School of Global Trade and Servic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Park, Han-jin Ph.D. Student,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Min-woo Economist, Input-Output Statistics Team,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epartment, Bank of Korea
 Park, Dong-hoon Economist, Training Team, Bank of Korea Academy

Abstract

COVID-19 has had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the GRDP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Although the pandemic was unlikely to affect all subregions equally, given that newer cities generally possess greater purchasing power and growth potential, the spatial disparities between expanding and declining areas remain underexplored. This study aims to fill this research gap by empirically assessing the effects of the crisis on store entry, exit, and resilience in Incheon, using publicly available data from the Korean Local Data Open System. Focusing on six major service sectors, our results show that in new city areas, existing firms were more likely to sustain operations and new market entries were more frequent. In contrast, older cities exhibited weaker resilience to economic shock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tailored anti-pandemic policy measures that account for spatial disparities.

Keywords : COVID-19, Social Distancing, Incheon Metropolitan City, Firm Entry and Exit, Spatial Disparity

I.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생산 및 고용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OECD(2021)는 2020년 세계 GDP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3.5%였던 것으로 추계하였다. ILO(2021)는 2021년 3/4분기에 이르러서도 전 세계에서 2019년 대비 풀타임 기준으로 약 1억 4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보았다. 이 시기 한국의 경제성장도 둔화되어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7%, 최종소비지출 성장률은 -2.2%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 수도 감소하여 -0.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국 정부는 팬데믹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계층과 업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시행하였으나, 이들은 제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선형적이거나 평균적인 접근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에 따른 충격 정도에 관한 연구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집중 지원 대상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업종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음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임석희·송주연 2022; Aum et al. 2021; Nam and Lee 2021).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으로 보고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매출 및 진입·퇴출과 관련하여 업종별, 지역별 차이는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장우현 2021; 황성수 2021; 신일순 외 2022; 이세미·유한별 2022; You et al. 2022).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의 강도와 충격으로부터의 회복 속도가 대도시 내 성장지역과 쇠퇴지역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¹⁾

본 연구는 팬데믹이 특정한 광역 지자체 내에서도 성장지역과 비성장지역, 그리고 서로 다른 업종 간에 비대칭적 충격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향후 팬데믹이 재발하는 경우 피해 지역과 업종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인천지역 점포의 진입과 퇴출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해당 정책의 영향이 신도시심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을 인천 지역으로 정한 것은 최근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보이듯,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지역의 격차 확대가 오랜 기간 지역의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는 인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성장과 원도심 쇠퇴가 동시에 진행되며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1) 이와 관련하여 흔히 많은 연구 중 하나가 윤병훈 외(2021)인데, 이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에서 쇠퇴지역의 소비회복력이 비쇠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음을 보인 바 있다.

과 원도심 간 상호작용에서 파급효과보다는 역류효과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정진원·최민아 2021). 본 연구는 팬데믹 및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대도시 내부 공간 구조별로 비대칭적 충격을 발생시키며 회복력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 바 인천은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코로나19 발생 후 이루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전개과정과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에 활용한 자료 및 분석 방법에 관해 설명한 후, 제4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사업체 진입과 퇴출의 동학에 미친 영향을 업종 및 지역별로 나누어 그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배경 및 국내외 선행 연구

1. 코로나19 확산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개

코로나19 1차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23일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red)’으로 상향하면서 학교의 개학 연기, 유연 근무제, 자가격리 등 각종 방역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3월 23일부터 초기 거리두기가 도입되었는데, 이 조치는 모임의 연기와 외출 자제 권고뿐 아니라 도서관, 박물관 등 국립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지와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행정명령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2020년 6월 28일에는 거리두기 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과거의 조치를 보완하여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8월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2차 확산이 시작되어 정부는 4단계 방역체계를 도입한 후 8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단계에서 2.5단계에 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결과 400명이 넘는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감소함에 따라 10월 12일부터 거리두기는 1단계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11월 이후 확진 사례가 다시 증가하면서 정부는 11월 7일에 도입한 5단계 방역체계에서 2단계 또는 2.5단계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였고, 또다시 카페, 음식점 등은 일부 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며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등은 집합 금지되었다. 특히 2020년 말과 2021년 초에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이 도입되어 숙박시설 예매 제한, 홀덤펍 또는 파티룸 등에서의 집합금지 정책이 시행되었다. 2021년 7월 이후 전국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면서 2021년 7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4단계 방역체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었다. 2021년 10월 30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 인원이 4,100만 명, 2차 예방접종 인원이 3,800만 명을 넘어서면서 2021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졌다.

최초 발생자 이후 인천시를 기준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개 과정은 [표 1]에 정리되어 있으며, 이러한 거리두기는 단계의 변화에 따라 [표 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진행 과정 (인천시 기준)

기간		주차	주차 개수	거리두기 단계	내용
2019	1.7.~	1주차~	54	시행전	• 코로나19 최초확진자 발생 이전
2020	1.19.	2주차		시행전	• 코로나19 최초확진자 발생(1.20.) •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도입 이전
	1.20.~ 3.22.	3주차~ 11주차	9	초기 거리두기	•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진입: 생활방역 지침 배포, 고위험시설 지정,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3단계 방역체계 도입(6.28.)
	3.23.~ 8.19.	12주차~ 33주차	22	Lv3 2 ↓ Lv4 2~2.5	• 4단계 방역체계 도입(8.28.) • 실내외 집합·모임·행사 금지 •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포장·배달만 허용 (21시~익일 5시)
	8.20.~ 10.11.	34주차~ 40주차	7	Lv4 1 ↓ Lv5 1.5	• 5단계 방역체계 도입(11.7.) • 집합·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해제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10.12.~ 11.23.	41주차~ 47주차	7	Lv5 2~2.5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집합·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재강화 • 숙박시설 주관 연말·연시 행사 금지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도입: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숙박시설 예매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등 • 4단계 방역체계 도입(7.1.)
	11.24.~	48주차~	32	Lv4 4	• 유흥시설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 제한 • 사적모임 4인까지(또는 2인)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예외 도입(8.23.~) • 각종 행사·집회·집합 금지
2021	7.11.	27주차	16	단계적 일상회복	• 다중이용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 유흥시설 등은 24시 제한) • 사적모임 인원 제한 대폭 완화 • 방역패스 의무적용 업종, 연령 확대
	7.12.~ 10.31.	28주차~ 43주차	9		
	11.1.~ 12.31.	44주차~ 52주차			

[표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구분

구분	거리두기 단계	거리두기 시행전	초기 거리두기	Lv3 2 ↓ Lv4 2~2.5	Lv4 1 ↓ Lv5 1.5	Lv5 2~2.5
2020	기간	'20 3~11주 (9개 주차)	'20 12~33주 (22개 주차)	'20 34~40주 (7개 주차)	'20 41~47주 (7개 주차)	'20 48~52주 (5개 주차)
	구분	P1	P2	P3	P4	P5
	거리두기 단계	Lv5 2~2.5		Lv4 4		단계적 일상회복
2021	기간	'21 1~27주 (27개 주차)		'21 28~43주 (16개 주차)		'22 44~52주 (9개 주차)
	구분	P5		P6		P7

2. 선행 연구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수의 연구자들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남과 동시에 업종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은 고용 지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Aum et al.(2021)에 따르면 한국에서 확진자 1천 명당 1명 증가는 2~3%의 고용을 감소시켰으며, 이때 고용 감소는 주로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했고 숙박음식점, 교육, 부동산, 운송업 등에서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Nam and Lee(2021)는 코로나19 초기 한국 노동시장에서 0.82%p 고용률 감소와 0.29%p 실업률 증가가 발생했는데, 이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대략 370,000명이 일자리를 잃고 그중 290,000명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것임을 제시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대구시, 제주도, 충청남도에서 고용률 감소가 크게 나타난 반면에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는 고용률 감소가 보이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임석희·송주연(2022)은 경제위기의 충격과 충격 이후의 회복은 한 국가 내에서도 도시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의 85개 시급 이상 도시들의 고용감소와 회복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각 지역의 전반적 고용 변동 추세는 전국 지표와 동조화되어 있지만 충격에 따른 지역별 고용 감소 정도 및 충격 이전의 고용 수준 회복시기 등에서는 상당한 차별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 간 차별성은 충격반응단계보다 백신이 개발되고 그 실체가 점차 알려져 공포가 진정된 회복단계의 회복력(resilience)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와 비수도권 도시에서 회복력이 약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Lee and Yang(2022) 또한 한국 시장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고용 감소를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고용 감소는 지역적 확산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전국 수준에서의 변화가 주원인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에게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팬데믹 초기에는 데이터 제약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다는 다른 지표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장우현(2021)은 코로나19가 신용카드 매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큰 매출 감소가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피해는 업종별, 지역별로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보였으나, 동시에 신용카드 자료는 획득에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포괄성 측면에서 완벽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정보 제약이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명시하였다. 황성수(2021)는 민간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조기경보(Early Warning Signal) 발생 비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를 비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코로나19의 피해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업력이 짧을수록, 규모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업종별,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업종인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데이터 상에서 누락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소상공인의 비중이 작음에 따라 코로나19 영향이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팬데믹이 초기를 지나 중기에 접어들면서 데이터 제약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이세미·유한별(2022)은 서울시 상권분석 빅데이터로 서울시 소상공인의 폐업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코로나19 시기 생존기간(생존율)과 가구원별 재난지원금, 영업기간, 직장인구 등은 폐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고임대료는 폐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You et al.(2022)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사업체 진입과 퇴출에 미친 영향을 전국 단위에서 분석하여 거리두기 정책이 강했던 업종(노래방, 커피숍)과 지역(서울시)에서 사업체 진입 감소(퇴출 증가)가 더 컸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 지역인 인천시에 대한 연구도 소수 진행되었는데, 김다예 외(2022)가 주요 경제지표 분석을 통하여 코로나19 기간 중 인천 경제의 주요 특징과 구조변화를 연구한 바 있으며, 신일순 외(2022)는 인천시 분석을 통하여 (i)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진입-퇴출을 통한 외연적 조정보다는 고용 감축을 통한 내연적 조정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ii) 숙박업은 폐업 측면에서,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업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 측면에서 피해가 가장 컸음을 보였다.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정책 수단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들도 다수 진행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개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특히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정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에 따르면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효과는 저소득계층에서 컸고, 식품, 필수재, 비내구재, 음식업, 대면서비스업, 가사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에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김미루·오윤혜 2020; 남재현·이래혁 2021; 홍민기 외 2021). 장우현(2021)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매출 효과를 피해업종과

기타 업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주요 피해업종에는 충분한 피해지원이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피해 및 정책 효과를 연구한 기존 연구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소상공인의 내연적 조정을 살펴보거나 업종 및 지역 간 차별성에 주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피해가 예기치 못하게 빠르고 크게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특정 업종에서는 내연적 조정과 함께 폐업 등 외연적 조정도 이루어졌을 수 있으며, 윤병훈 외(2021)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도시 내에서도 성장지역과 쇠퇴지역 간 격차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 및 회복력이 도시 내 성장지역과 쇠퇴지역 간에, 그리고 업종 간에 비대칭적 차이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You et al.(2022)은 본 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나, 해당 연구는 소수의 업종에 집중하고 있고 2019년 대비 2020년만 분석함으로써 위기 이후 회복단계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Ⅲ. 분석 자료, 가설 및 방법

1. 분석 자료

코로나19와 함께 팬데믹 시기에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인천시의 사업체 수와 진입 및 퇴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자료를 사용한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지난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함께 관리하는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시스템²⁾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의 식품, 문화, 생활 등 실생활과 밀접한 195개 업종의 사업체 인허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사업체명, 사업체 소재지 주소와 공간정보인 좌표가 제공되어 지역별 업종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인허가 일자, 폐업 일자, 영업상태 등도 제공되어 지역별 사업체 운영 현황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사업체 분석에 흔히 활용되는 국가공인통계인 전국사업체조사는 조사와 공표 사이 시차가 존재하고 1년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의성이 강한 연구나 주차별 추이 연구에 활용하기 어렵고, 2020년부터 조사기반에서 등록기반으로 조사방식을 전환하면서 2020년을 기준으로 시계열의 단절이 발생하여 본 연구를 위해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 OPEN API를 통해 제공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1일마다 변동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국내 자료 중 사업체

2) <http://www.localdata.go.kr>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므로, 전국사업체조사와 같은 전통적인 데이터의 보완자료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³⁾

다만, 최근 자주 활용되는 금융기관이나 통신회사와 같은 민간기업 제공 마이크로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의 경우에도 수집 목적 자체가 연구용이 아니므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동시에 데이터가 커서 데이터의 변칙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한계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데이터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서 사용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Vavra 2021).

본 연구에서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소비자 서비스 업종 6개(식당, 간편식, 커피숍, 숙박, 주점, 노래방)를 선정해 분석을 진행한다.⁴⁾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간편식), 숙박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일반음식점업과 휴게음식점업은 세부업종이 대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합한 후 업태의 성격에 따라 다시 식당, 간편식, 커피숍 3가지 업종으로 구분하였고,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성격이 유사하므로 주점 업종으로 데이터를 통합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업종과 이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업종은 [표 3]과 같다.

[표 3] 분석 업종

번호	업종명	세부업종명
1	식당	경양식, 냉면집, 복어취급, 뷔페식, 식육(숯불구이), 외국음식전문점(인도, 태국 등), 일식, 중국식, 탕류(보신용), 패밀리레스토랑, 한식, 호프/통닭, 횡집 등
2	간편식	김밥(도시락), 분식, 통닭(치킨), 패스트푸드 등
3	커피숍	카페, 떡카페, 전통찻집, 커피숍 등
4	숙박업	관광호텔, 여관업, 여인숙업, 일반호텔, 숙박업, 기타 등
5	주점	간이주점, 단란주점, 고고(디스코)클럽, 관광호텔나이트, 룸살롱 등
6	노래방	노래연습장

3) 본 연구와 관련하여 거시경제적 성과의 측면에서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은 사업체들이 외연적 조정(퇴출)보다는 내연적 조정(감원)을 택했다는 것은 널리 보고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사업체 수 증가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같은 정도의 고용 조정이 발생한다면 사업체 수의 증가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전국사업체조사의 17개 광역지자체별 및 산업대분류별 중장기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2년에서 2019년 사이 지역별 및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수의 연평균 로그증가율과 종사자 수의 연평균 로그증가율 간 상관관계가 0.3845로 나타나 사업체 수의 증가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또한 다른 창·폐업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진입과 퇴출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공식 신고 없는 임시 휴업, 실질적 폐업, 업종전환 등의 경우에는 퇴출을 과소평가할 수 있고, 사실상 같은 업종을 유지하면서 사업자 등록만을 갱신하는 경우 퇴출 및 진입이 과대평가될 수 있는 위험도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4) 인천광역시 산업대분류별 기업체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24.2%), 부동산업(18.39%), 숙박 및 음식점업(10.87%)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19가 인천광역시 내에서도 숙박 및 음식점업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해 해당 산업에 속하는 소비자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자료에서 확인된 2021년 12월 31일자 기준 인천 지역 및 업종별 사업체 수는 [표 4]와 같다. 신도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서구, 연수구, 중구 등 3개 기초지자체를 포함하며, 순수 원도심은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등 5개 기초지자체를 포함한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분류하였다.

[표 4] 주요 서비스업 인천 군구별 사업체 수 (2021.12.31. 기준)

구분	식당		간편식		커피숍		숙박		주점		노래방	
	개수(비중)		개수(비중)		개수(비중)		개수(비중)		개수(비중)		개수(비중)	
강화군	1,213	(5)	80	(2)	178	(4)	127	(9)	41	(3)	30	(1)
계양구	1,859	(8)	316	(9)	354	(9)	69	(5)	163	(10)	257	(12)
남동구	3,859	(17)	569	(17)	742	(18)	93	(7)	291	(18)	455	(21)
동구	431	(2)	101	(3)	70	(2)	50	(4)	9	(1)	31	(1)
미추홀구	3,197	(14)	602	(18)	489	(12)	209	(16)	366	(23)	323	(15)
부평구	3,301	(15)	471	(14)	590	(14)	186	(14)	288	(18)	368	(17)
서구	3,745	(16)	663	(19)	748	(18)	77	(6)	135	(9)	390	(18)
연수구	2,600	(11)	380	(11)	568	(14)	75	(6)	113	(7)	257	(12)
옹진군	478	(2)	27	(1)	43	(1)	159	(12)	30	(2)	26	(1)
중구	2,064	(9)	218	(6)	380	(9)	293	(22)	145	(9)	64	(3)
신도시지역	8,409	(37)	1,261	(37)	1,696	(41)	445	(33)	393	(25)	711	(32)
순수원도심	12,647	(56)	2,059	(60)	2,245	(54)	607	(45)	1,117	(71)	1,434	(65)
강화, 옹진	1,691	(7)	107	(3)	221	(5)	286	(21)	71	(4)	56	(3)
인천	22,747	(100)	3,427	(100)	4,162	(100)	1,338	(100)	1,581	(100)	2,201	(100)

인천 내 지역특성별로 6개 주요 서비스 업종의 사업체 수 변화는 큰 차이를 보였다[표 5]. 가장 먼저 식당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신도시 지역은 사업체 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진 반면, 원도심은 2019년에 비해 감소세가 더 빨라졌다. 2021년 순수 원도심에서 식당 사업체 수 증가율이 양의 값으로 돌아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성장률은 그리 높지 않아서 기저효과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신도시 지역은 식당 사업체 수 증가율이 2021년에 여전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식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발발 이전부터 인천 지역에서 전반적인 사업체 수 감소세가 관찰되었는데, 2020년 신도시 지역에서는 이러한 감소세가 오히려 역전되어 양의 성장으로 돌아선 반면, 순수 원도심에서는 과거의 감소세가 그대로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2021년까지 뚜렷하게 지속되었다. 커피숍의 경우에는 신도시 지역과 순수 원도심 모두 코로나19 이전 대비 2020년과 2021년 사업체 수 증가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순수 원도심에서 그 하락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숙박업은 신도시지역과 원도심을 비교하면, 코로나19 발발 직후인 2020년에는 신도시 지역에서는 증가율이 하락하였고, 순수 원도심은 감소 추세가 강화되는 등 일부 부정적인 효과가 관찰된다. 다만, 2021년에는 신도시지역은 강한 회복세를 보여 기저효과가 나타난 반면, 순수 원도심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옹진, 강화 등 도서지역 숙박업 사업체 수는 2021년 이후에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볼 때에는 코로나19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이들 도서지역에서 숙박업 사업체 수가 증가한 것은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인해 이들 지역에 대한 여행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점과 노래방 업종은 도서지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업체 수 증가율의 하락을 경험하였으며, 2021년 이후에도 회복이 부진하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표 5] 인천 지역특성별 주요 서비스업 사업체 수 증가율 비교

연도	2012~2019	2020	2021	2012~2019	2020	2021
	식당			간편식		
신도시지역	4.5%	6.3%	5.1%	-0.5%	1.3%	2.6%
순수원도심	-0.3%	-0.9%	0.4%	-3.4%	-3.8%	-3.3%
강화, 옹진	0.4%	2.5%	1.4%	-3.2%	-2.8%	0.0%
인천	1.2%	1.9%	2.2%	-2.4%	-2.0%	-1.1%
	커피숍			숙박		
신도시지역	15.9%	12.3%	14.2%	2.8%	0.9%	3.7%
순수원도심	15.0%	5.9%	7.4%	-2.9%	-3.3%	-4.5%
강화, 옹진	19.3%	5.9%	13.5%	3.0%	13.7%	10.3%
인천	15.5%	8.3%	10.5%	-0.3%	1.2%	1.2%
	주점			노래방		
신도시지역	0.3%	-1.7%	-1.3%	0.8%	-2.7%	-2.2%
순수원도심	0.0%	-6.0%	-0.6%	-0.6%	-4.5%	-3.0%
강화, 옹진	-2.7%	-5.3%	-2.8%	-3.1%	0.0%	-3.5%
인천	-0.1%	-5.0%	-0.9%	-0.3%	-3.8%	-2.8%

2. 분석 가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및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사업체 진입과 퇴출에 미친 영향이 업종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먼저, 주점과 노래방은 집합금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영업을 원천적으로 금지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염에 대한 우려도 이들 업종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당과 커피숍의 경우에도 주점이나

노래방보다는 덜하지만, 인원이나 영업제한 등에 따른 영업 실적 감소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편식 업종은 거리두기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에 배달 등 비대면 거래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 업종의 경우에는 국내 여행 수요의 전반적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저밀집지역 및 야외 중심의 여행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다른 한편으로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거래방식 전환이 용이한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 간의 진입-퇴출의 행태 차이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숙박, 주점, 노래방 등의 업종은 비대면 거래방식으로의 전환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반면, 커피숍, 간편식, 식당 등의 업종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커피숍이나 간편식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등 비대면 요소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 사업거래 방식의 확산이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새로운 사업 기회를 광범위하게 창출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 식당의 경우, 비대면 거래방식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 전환이나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신속한 퇴출과 진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위기 대응의 시차가 간편식이나 커피 업종에 비해 느렸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표 6].

[표 6] 주요 서비스업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가설

비대면 전환으로 인한 새로운 사업기회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의 영향	
	직접영향 큼	직접 영향 작음
큼	식당	
기존 비대면 활용	커피숍	간편식
작음	주점, 노래방	숙박

한편 코로나19는 인천 지역 내 신도시와 원도심 간에도 불균등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⁵⁾ 회복력(resilience)의 관점에서 볼 때, 도시공간적 차원에서 쇠퇴지역이 비쇠퇴지역보다 회복력이 약할

5) 그 외에 서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제과점 등 소비자서비스 업종에서 오피스 지역의 이용은 급격하게 위축되었지만, 주거지역의 이용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언론 등 매체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예: <http://scjournal.kr/news/article.html?no=21243>). 인천의 경우, 기초지자체별로 주거지역과 오피스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회복력이란 내·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최근 진화경제지리학을 비롯한 학계 및 OECD, EU 등 국제기구의 지역 및 산업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개념이다(이상호 외 2020). 대구의 경우, 쇠퇴지역이 비쇠퇴지역에 비교해 코로나19 이후 매출액 감소비율이 크고, 회복하는 데에도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존재한다(윤병훈 외 2021). 인천의 경우에도 신도시를 포함한 기초지자체와 원도심 중심 지자체 사이에는 비슷한 패턴이 발견될 것이라고 예상되나⁶⁾, 비대면 거래방식 확산에 대한 새로운 사업기회 및 진입·퇴출 비용 등의 차이로 인하여 업종 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제시한 가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설 1〉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강한 업종에서 진입은 감소하고 퇴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비대면 거래 방식 전환의 용이성이 해당 행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신도시 지역과 순수 원도심 간 불균등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위와 같은 가설을 바탕으로 사업체 진입과 퇴출, 그리고 회복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사업체별 인허가 일자와 폐업 일자를 각각 진입과 퇴출 시기로 정의하고, 2019년 1주차부터 2021년 52주차까지 각 주 말일자 기준 누적 사업체 수와 군구별 진입·퇴출 사업체 수를 계산해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⁷⁾ 누적 사업체 수는 해당 주차 이전에 인허가를 받았으나 폐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의 수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인천지역 10개 기초지자체와 2019~2021년 3개 년도 각 52주차, 총 156개 주차에 대한 패널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다. 다만, 강화, 옹진 등 도서지역과 항만 시설 중심의 동구는 주차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6개 소비자 서비스업종 사업체 수가 매우 작아 대부분의 주차에서 진입과 퇴출이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통계분석 결과의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 분석 방법

6) 지역회복력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지역의 소득수준이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2019년 기준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 1인당 GRDP는 중구(130.33백만 원), 동구(60.66백만 원), 연수구(36.59백만 원), 서구(35.11백만 원) 순으로 신도시를 포함한 3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나 신도시와 원도심 간 회복력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동구의 1인당 GRDP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신도시를 포함한 지자체와 달리 적은 등록인구수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동구는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2019년 기준 동구의 주민등록인구 수는 64,427명으로 8개 지자체 평균인 358,410명보다 현저히 적다.

7) 공공데이터 포털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인허가 취소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노래방, 주점 등의 업종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체의 자발적인 퇴출 결정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인허가 취소는 퇴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코로나19 전후 인천의 소비자 서비스업종 사업체들의 진입과 퇴출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된 이중차분법(generalized DID)을 활용하였다.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후 사업체들의 진입과 퇴출의 수를 단순 분석하는 경우, 코로나19와는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던 지역간 진입-퇴출 행태의 차이 및 계절성으로 인하여 결과의 해석에 교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기초지자체 및 주차 단위 추이 분석이므로 일반적인 회귀분석 모형을 위한 통제변수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 또는 그에 대응한 정책수단들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중차분법을 활용하고 있다(김미루·오윤해 2020; 임태경 2020; 신현재 2021; 홍민기 외 2021; 장우현 2021; 신일순 외 2022; Aum et al 2021; Lee and Yang 2022; You et al. 2022).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0년을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충격이 나타난 해로 활용하고, 최초확진자가 발생한 2주차를 기준으로 각 년도 모든 주차에 더미변수를 부여하였다. 이때 이중차분 분석에서 인과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점과 모든 지역에 대해 평행추세 가정이 성립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차와 군구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평행추세 가정이 모든 주차와 군구에 대해 성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모형에서는 시기 및 군구별로 성과변수의 선형추세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완화하는 모형을 설계한다.⁸⁾ 6개 소비자 서비스업 업종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업종별로 별도로 이중차분법 분석을 시행한 후 추정치들의 패턴을 비교·분석하였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모형 1>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⁹⁾

$$y_{it} = \beta_0 + \beta_1 YR2020_t + \sum_{k=2} \beta_{2k} I[Week_t = k] YR2020_t + \gamma X_{it} + \delta_i + \eta_t + \theta_i t + \epsilon_{it}$$

여기서 y_{it} 는 t 시기 i 군구의 진입(퇴출) 수를 나타내며, 설명변수 $YR2020_t$ 과 $I[Week_t = k]$ 는 각각 2020년, k 주차일 경우 1, 그 외인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고, X_{it} 는 그 외 통제변수 벡터, δ_i 와 η_t 는 각각 지역 고정효과, 주 고정효과를 의미한다.¹⁰⁾ θ_i 는 군구별로 성과변수의 시기별 선형 추세가 다를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한 계수이다. ϵ_{it} 는 순수 오차항이다. 여기서 주요 관심 계수는 β_{2k} 인데, 이는 2020년 특정 k 주차가 사업체 진입과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값으로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8) 데이터 기간이 2년으로 추세를 검증할 사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군구별로 상이한 시간추세를 허용하는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인과효과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평행추세 가정을 완화하는 모형을 사용하는 것은 지역별로 상이한 추세가 단기 정책 효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적 장치임을 밝혀둔다.

9) 음력 명절을 고려한 휴일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는데, 분석 결과 유의한 추정치의 개수가 다소 변화하였으나 계수의 부호는 전반적으로 유사하여 전체적인 결론은 본문에서 제시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10)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일자가 2020년 1월 20일(3주차)이므로, 해당 분석에서는 베이스로 2주차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 진입 및 퇴출의 행태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면서 변화하는지에도 관심이 있다. 따라서 위의 분석 방법을 2019년과 코로나19 발생 2년차인 2021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분석해보았다.¹¹⁾ 이 경우에는 2주차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점이 업종 간, 기초지자체 간 진입과 퇴출의 이질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비교를 위하여 같은 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2021년을 2020년이 아닌 2019년과 비교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에 비해 이 해에 얼마나 회복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기타 통제변수로는 군구별 인구수와 평균 연령을 활용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통제치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¹²⁾ 인구수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 기저에 존재하는 기초지자체별 성장 추세의 차이를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한편, 평균 연령은 젊은 세대일수록 비대면 거래방식에 더 빨리 적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업체들이 해당 지역의 사업 전망을 더 밝게 볼 것이라는 추측하에 포함시켰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재정정책이 소상공인의 진입과 퇴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와 구분하기 위해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별 더미변수 또한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¹³⁾ 1차부터 4차 더미는 각각 2020년 20~36주차, 39~53주차, 2021년 2~12주차, 13~26주차에 해당한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기술 통계량은 [표 7]과 같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영향이 인천 내 신도시 지역과 순수 원도심 지역 간에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도시 지역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한 후 삼중차분 모형을 사용하였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모형 2>는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y_{it} = \beta_0 + \beta_1 YR2020_t + \sum \beta_{2k} I[Week_t = k] YR2020_t + \sum \beta_{3i} YR2020_t Old_i + \sum \sum \beta_{4ki} I[Week_t = k] Old_i + \sum \sum \beta_{5ki} I[Week_t = k] YR2020_t Old_i + \gamma X_{it} + \delta_i + \eta_t + \theta_i t + \epsilon_{it}$$

11) 2021년 분석 시 연도 더미변수에 $YR2020_t$ 대신 $YR2021_t$ 변수가 들어간다.

12)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일부 선행 연구가 포함하고 있는 여러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역별 실업률의 경우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시군구 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나 2021년 이후로만 공표되고 있으며, (서울시에 대한 연구와 비교할 때) 인천시의 경우 본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공식률, 카드매출지수, 인구 이동량 등의 데이터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데이터의 한계로 작용하였다.

13)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일반 국민이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재정정책은 대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재난지원금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직접적인 현금지원뿐만 아니라 현물지원, 금융지원, 임대료 감면,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각 정책 별로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모든 정책의 효과를 고려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1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지원이 이루어졌고, 이후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시행된 2~4차는 선별 지원으로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정책이 해당 지원금 틀 속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이러한 정책은 모두 소상공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수요진작 및 직접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대표 정책이라 여겨 해당 정책의 지급시기를 재정정책의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여기서 Old_i 는 i 군구가 순수 원도심 지역(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에 속할 경우 1의 값을 갖고, 신도시 지역(서구, 연수구, 중구)에 속할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이외 나머지 변수는 <분석모형 1>과 동일하다. 여기서 β_{5ki} 가 주요 관심 계수인데, 이는 신도시 지역과 순수 원도심 지역 간에 나타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의 불균등한 영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활용된 주차별 사업체 진입 및 퇴출 데이터는 주차별 건수가 작은 정수 값에 집중되어 있어 OLS 기반 회귀는 분산 추정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¹⁴⁾

[표 7] 이중차분법 분석 기술통계량 요약

변수명	정의	업종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진입	주별 진입 사업체 수	식당	1,092	6.198	3.587	0	21
		간편식	1,092	0.701	0.919	0	6
		커피숍	1,092	2.102	1.710	0	10
		숙박	1,092	0.075	0.293	0	3
		주점	1,092	0.082	0.324	0	3
		노래방	1,092	0.052	0.238	0	2
퇴출	주별 퇴출 사업체 수	식당	1,092	4.926	5.991	0	110
		간편식	1,092	0.849	1.456	0	25
		커피숍	1,092	1.191	1.286	0	8
		숙박	1,092	0.117	0.352	0	3
		주점	1,092	0.150	0.858	0	16
		노래방	1,092	0.226	0.520	0	4
통제변수							
로그 인구수	월별 인구 로그값	-	1,092	12.815	0.451	11.72	13.23
평균 연령	월별 인구 평균 연령	-	1,092	41.133	1.590	38.22	43.87
재정정책	D1	-	1,092	0.109	0.312	0	1
	D2	-	1,092	0.090	0.286	0	1
	D3	-	1,092	0.701	0.256	0	1
	D4	-	1,092	0.090	0.286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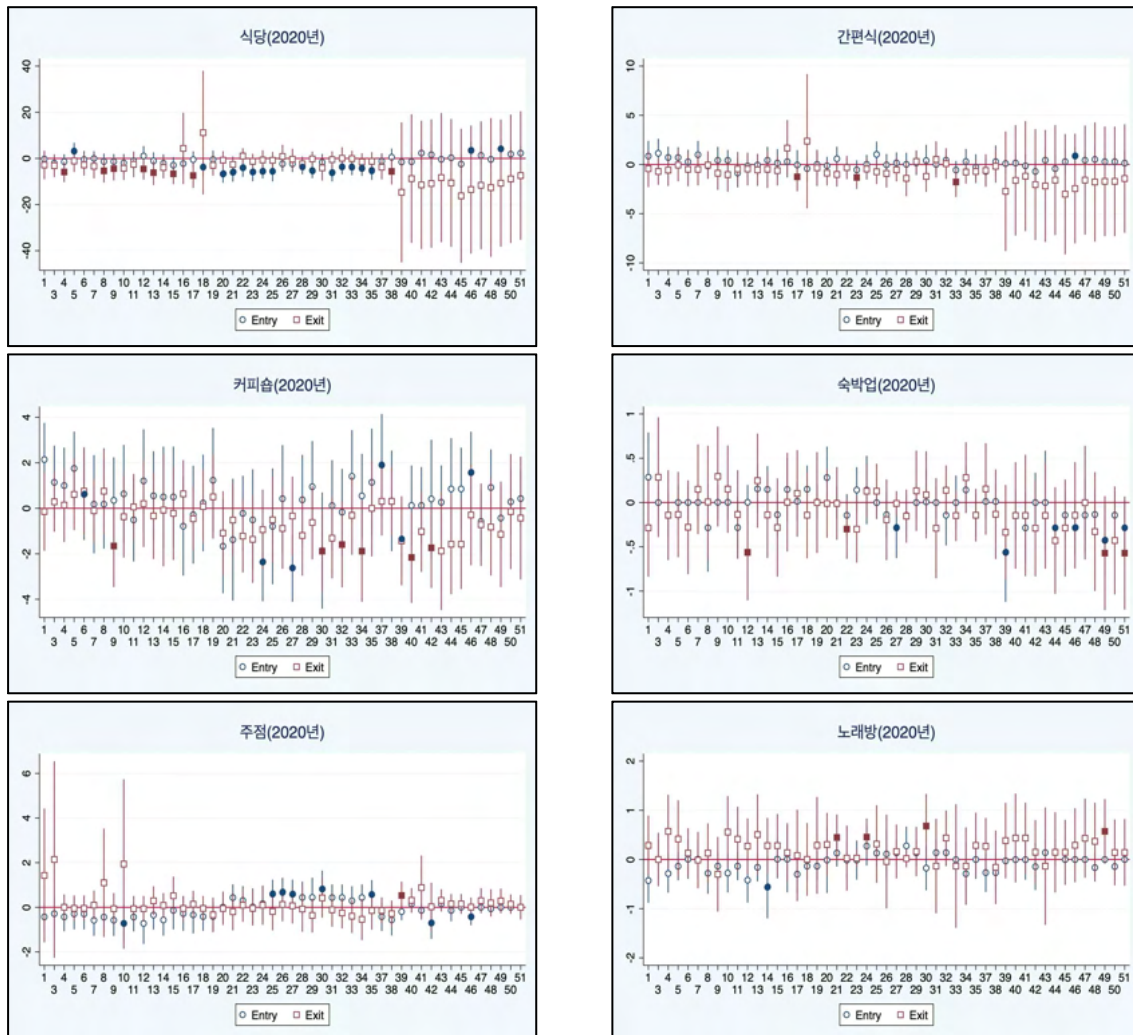
14) 공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후 분석에서 단순 OLS 기반 추정 결과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체 수와 진입 및 퇴출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점업과 숙박업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계수의 수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났다.

IV. 분석 결과

1.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천 지역 점포의 진입과 퇴출

[그림 1~2]는 2020년과 2021년에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인천 지역 점포의 진입과 퇴출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8~9]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 [표 1]에서 정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이중차분법 추정치들의 부호와 개수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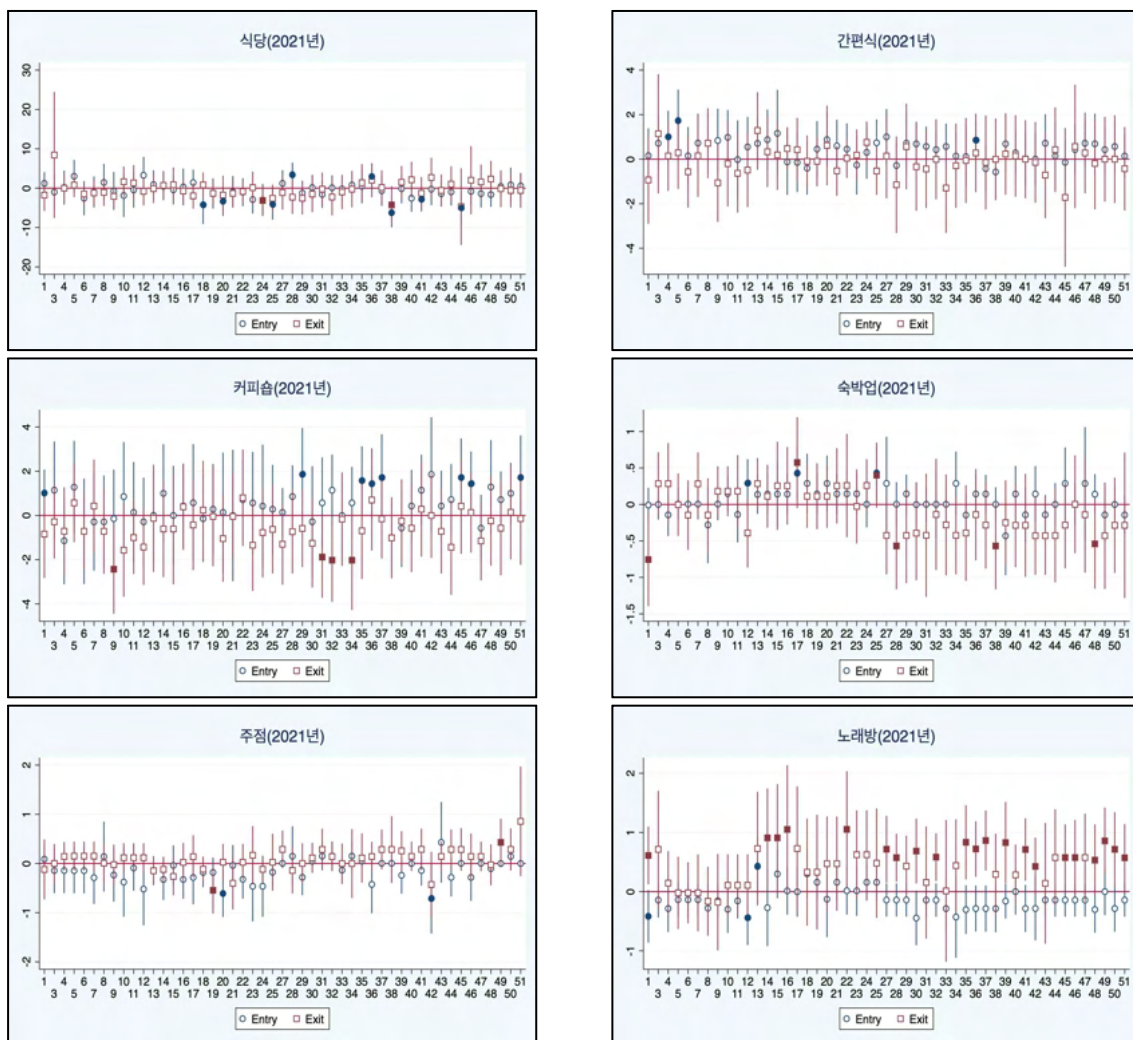
[그림 1] 주요 서비스업 진입 및 퇴출 이중차분법 추정치 (2020년)



주: 그림에서 색칠되어 있는 값은 유의수준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나타냄

[표 8]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식당업에서의 진입의 감소이다. 이 업종에서 사업체 진입의 감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초기부터 현저하게 관찰되었다. 이 업종은 식음과 관련된 대표 업종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즉각적인 충격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고, 업종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영업 제한을 강하게 예상한 예비 창업자들이 이 업종에 창업을 꺼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진입 감소 추세가 2021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해당 업종의 경우 회복력에 있어서도 다른 업종보다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그림 2] 주요 서비스업 진입 및 퇴출 이중차분법 추정치 (2021년)



주: 그림에서 색칠되어 있는 값은 유의수준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나타냄

15) 주점업의 경우, 계수의 부호는 식당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강건 표준오차를 활용하는 경우 단순 OLS 기반 회귀분석 결과에 비하여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주점업의 사업체 수, 진입 및 퇴출의 수가 식당업과 비교할 때 현저히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표 8]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의 수: 진입

연도		2020년					2021년		
거리두기		P1	P2	P3	P4	P5		P6	P7
주 수		9	22	7	7	5	27	16	9
+	식당	1			1	1		2	
	간편식				1		2	1	
	커피숍	1		1	1		1	4	3
	숙박						3		
	주점		4	1					
	노래방						1		
-	식당		13	2			3	2	1
	간편식								
	커피숍		2	1					
	숙박			1	2	2			
	주점	1			2		1	1	
	노래방		2				2	1	

[표 9]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의 수: 퇴출

연도		2020년					2021년		
거리두기		P1	P2	P3	P4	P5		P6	P7
주 수		9	22	7	7	5	27	16	9
+	식당								
	간편식								
	커피숍								
	숙박						2		
	주점			1					1
	노래방		3			1	6	10	6
-	식당	3	4	1			1	1	
	간편식		3						
	커피숍	1	2	2	1		1	3	
	숙박		2			2	1	2	1
	주점						1		
	노래방								

사업체 퇴출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퇴출의 증가보다는 감소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사업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직면하여 폐업을 택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버티기’ 전략을 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업종에 비해 비대면 거래 방식의 기존 활용도가 높아 사업체 유지가 비교적 수월했던 커피숍 업종에서 퇴출의 감소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식당 업종에서도 [표 6]에서 제시했듯이 비대면 거래 방식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면서 퇴출의 감소가 다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주목할 점은 노래방 업종의 경우 진입보다는 퇴출에서 변화가 많았는데, 2020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2021년에 퇴출의 증가가 꾸준히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업종의 경우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당시 유사한 주점 업종보다 정책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하였기 때문에 주점 업종과 같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가 지속되고 이와 동시에 비대면 거래 방식의 전환 가능성이 없어 새로운 사업기회가 보이지 않으면서 손실이 쌓여서 영업이 어려워진 사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시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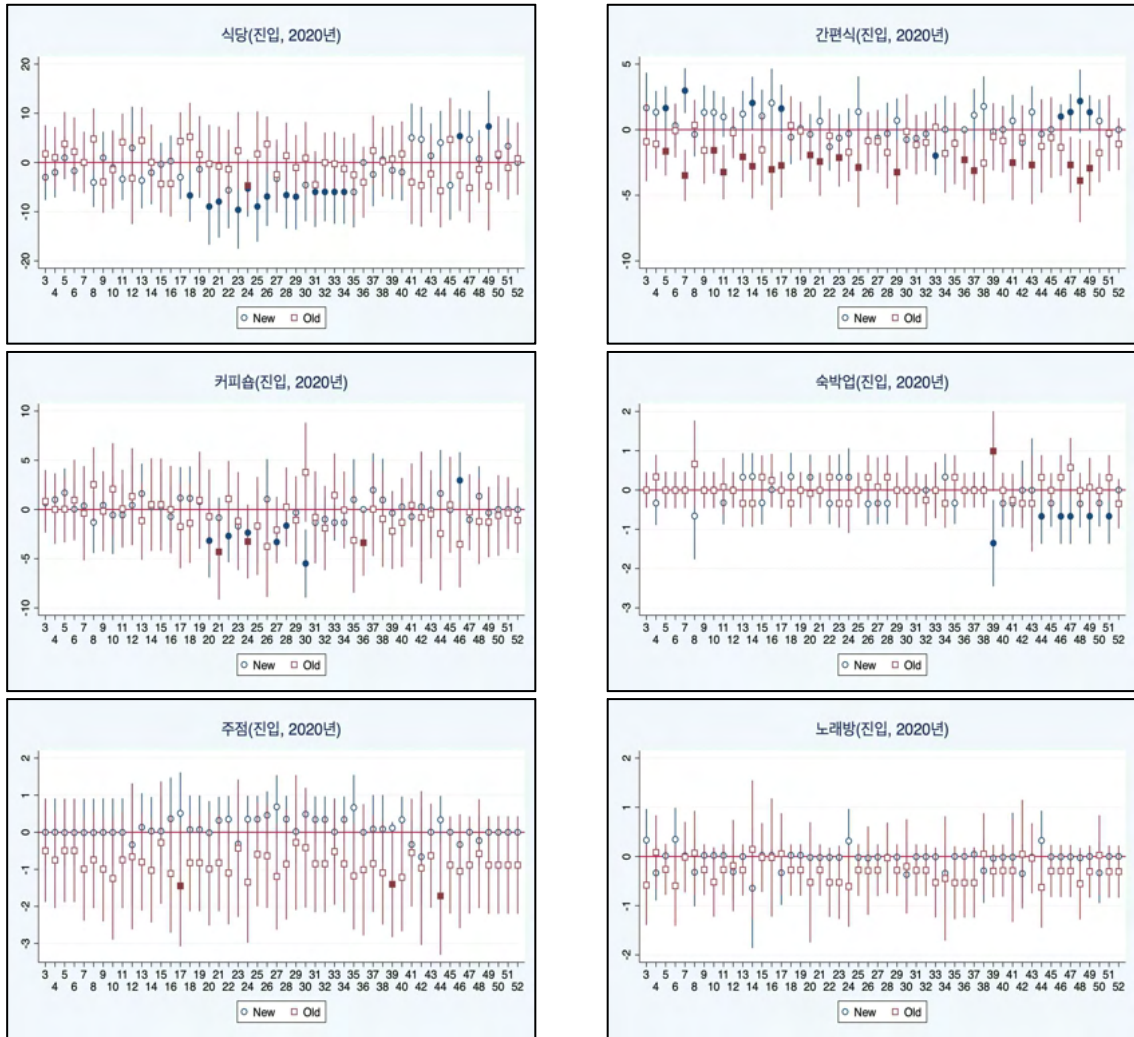
숙박업의 경우 진입에서는 특별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었던 반면에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퇴출 감소가 꾸준히 발견되었는데, 이는 해당 업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의 직접 영향이 작고 동시에 해외여행이 제한됨에 따라 우려한 것보다 저밀집 지역 및 야외 중심의 국내여행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사업체 운영 및 지속이 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진입, 퇴출, 회복력의 지역간 격차

앞에서 살펴보았던 인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중차분법 추정치는 신도시 지역과 순수 원도심 지역 간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 관련 행태의 차이를 간과한 결과일 수 있다. 두 지역의 진입과 퇴출의 행태가 상반된 방향으로 발생하였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많은 추정치들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신도시 지역 3개 기초지자체(서구, 연수구, 중구)와 순수 원도심 지역 4개 기초지자체(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를 구분하여 삼중차분 분석을 진행한 추정결과를 살펴본다.

우선 2019년 대비 2020년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 행태는 [그림 3~4]와 같다. 그림에서 파란색 원형으로 표시된 계수 값은 <분석모형 2>의 β_{2k} 를 나타내며,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계수 값은 β_{5ki} 를 나타낸다. 즉, 파란색 원형의 계수(β_{2k})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신도시 지역에 미친 영향이고, 파란색 원형 계수에 빨간색 사각형 계수를 합한 값($\beta_{2k} + \beta_{5ki}$)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순수 원도심 지역에 미친 영향이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했을 때보다 신도시 지역과 순수 원도심 지역을 나누어 추정하였을 때,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추정치의 빈도가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특히 퇴출보다 진입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순수 원도심의 경우 진입의 감소가 나타난 반면에 신도시 지역에서는 진입의 증가가 나타나 순수 원도심이 신도시 지역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주요 서비스업 진입 삼중차분법 추정치의 지역간 차이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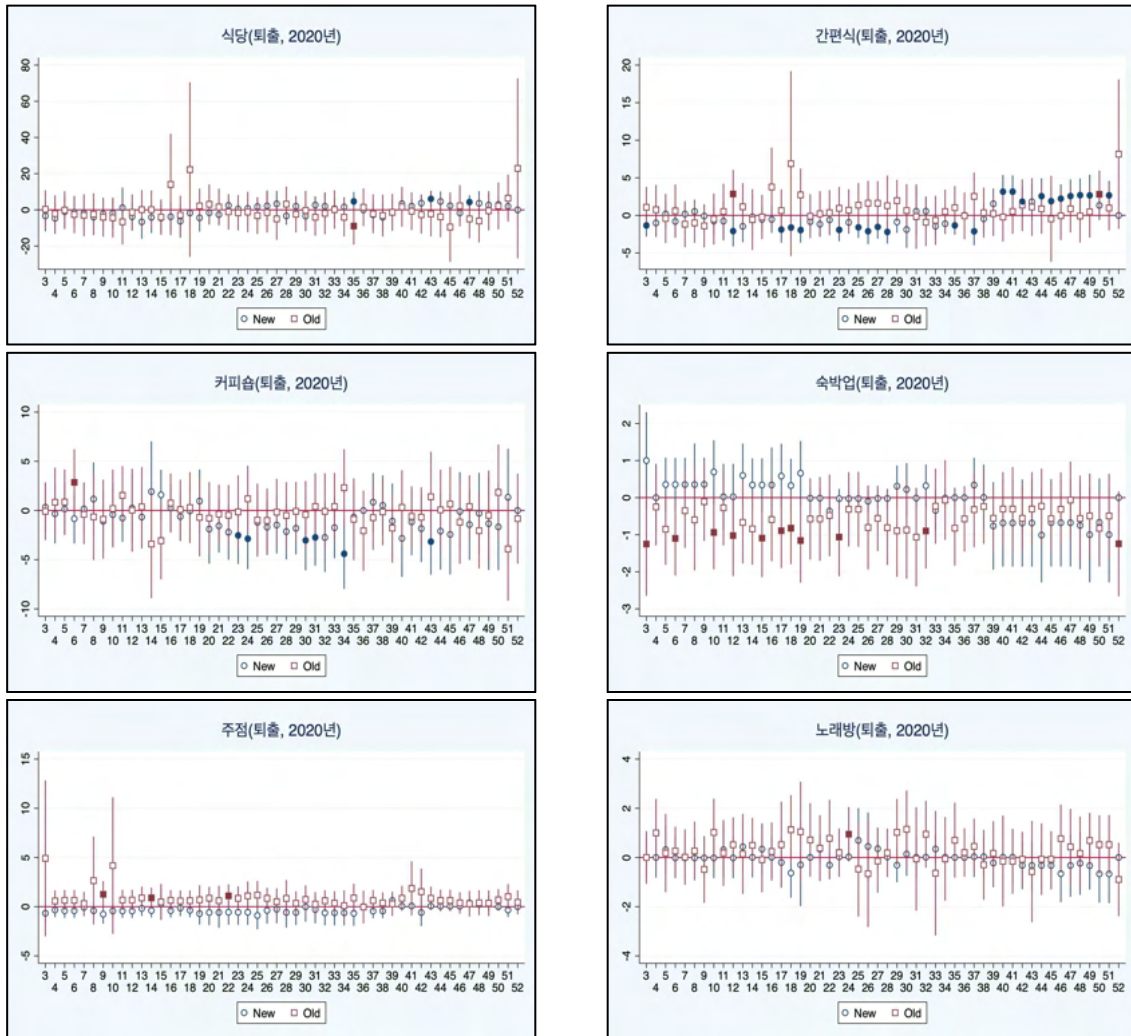
주: 그림에서 색칠되어 있는 값은 유의수준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나타냄

[그림 3~4]에서 눈에 띄는 사실은 인천 전체 지역을 함께 살펴볼 때에는 간편식 업종의 진입과 퇴출에서 별다른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지역 그룹을 나누어 살펴보니 원도심의 경우 진입의 감소가 많이 나타난 반면에 신도시의 경우 오히려 진입의 증가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접 영향을 받은 업종들에서 사업 기회가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확보된 신도시 지역에서 진입 비용이 낮고 준비 소요기간이 짧으며 비대면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창업 또는 업종전환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⁶⁾ 즉, 진입의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부정적 충격이 순수 원도심에 집중된 반면, 정진원·최민아(2021)가 발견하였던 경제성장

16) 식당 업종에서 2020년 중반부에 나타난 신도시 지역의 진입 감소는 사업체 진입 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영향이 덜 하고 비대면 활용 가능성이 더 높은 간편식 창업을 더 선호하면서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도시지역이 원도심지역의 많은 경제활동을 흡수하는 분극화효과와 유사한 효과가 팬데믹과 같은 부정적 충격의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주요 서비스업 퇴출 삼중차분법 추정치의 지역간 차이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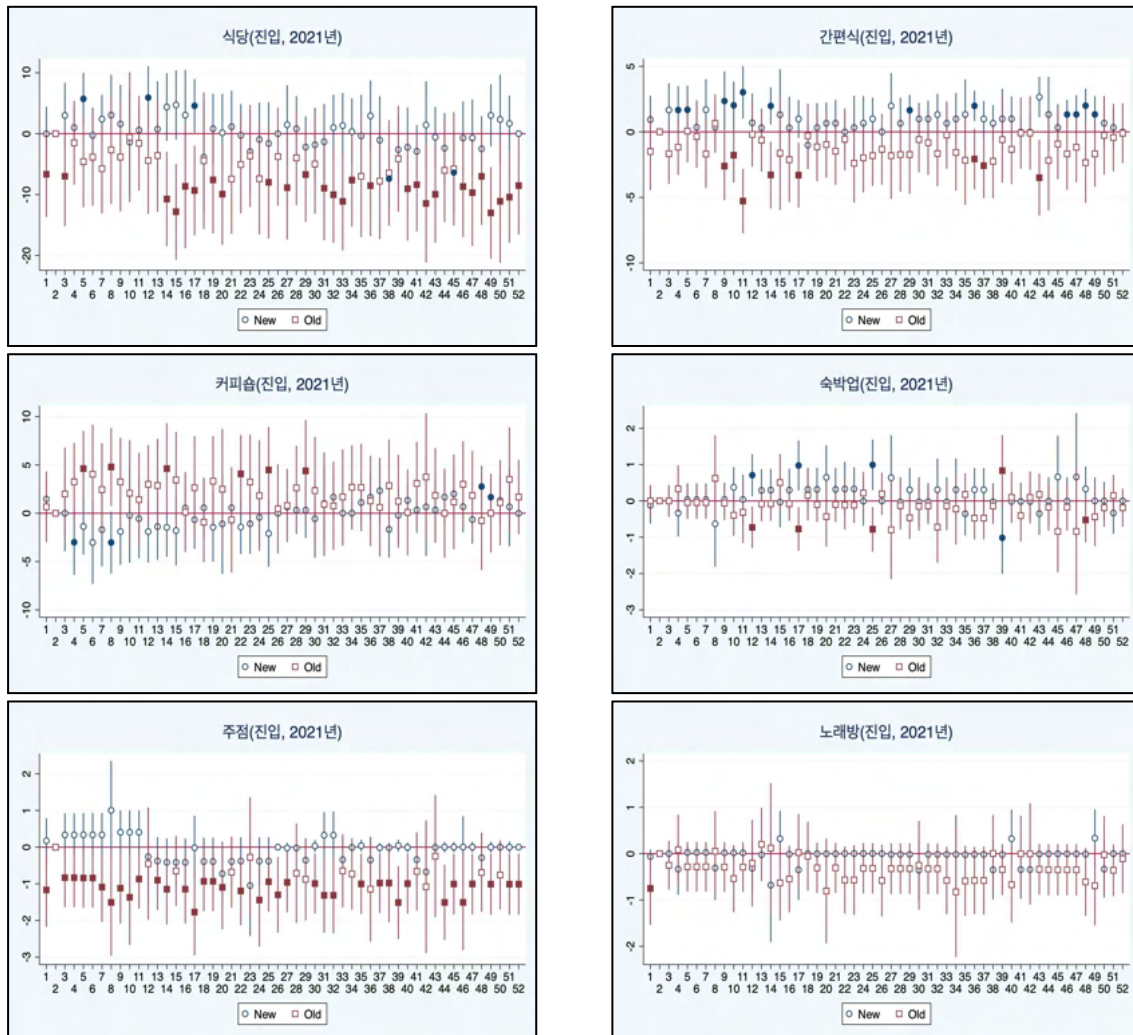
주: 그림에서 색칠되어 있는 값은 유의수준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나타냄

코로나19의 결과 신도시 지역과 원도심 지역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발생 첫해인 2020년의 진입과 퇴출의 행태뿐만 아니라,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 지역 그룹 간 차이를 회복력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림 5~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1년 동안에도 순수 원도심에서는 진입의 감소가 집중되어 있고, 신도시 지역에서는 진입의 증가가 여전히 다수 발견된다. 특히 주점 및 식당 업종에서 순수 원도심의 진입 감소가 2020년보다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이와 반면에 식당 및 간편식 업종에서 신도시의 진입 증가가 관찰되는데, 이는 2021년 들어 신도시

지역으로 신규 사업체 설립현상이 다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들어 사업전환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회복 전망이 불확실한 원도심에 진입하는 것을 꺼렸던 반면, 준비 시간을 가진 뒤 사업 전망이 상대적으로 좋은 신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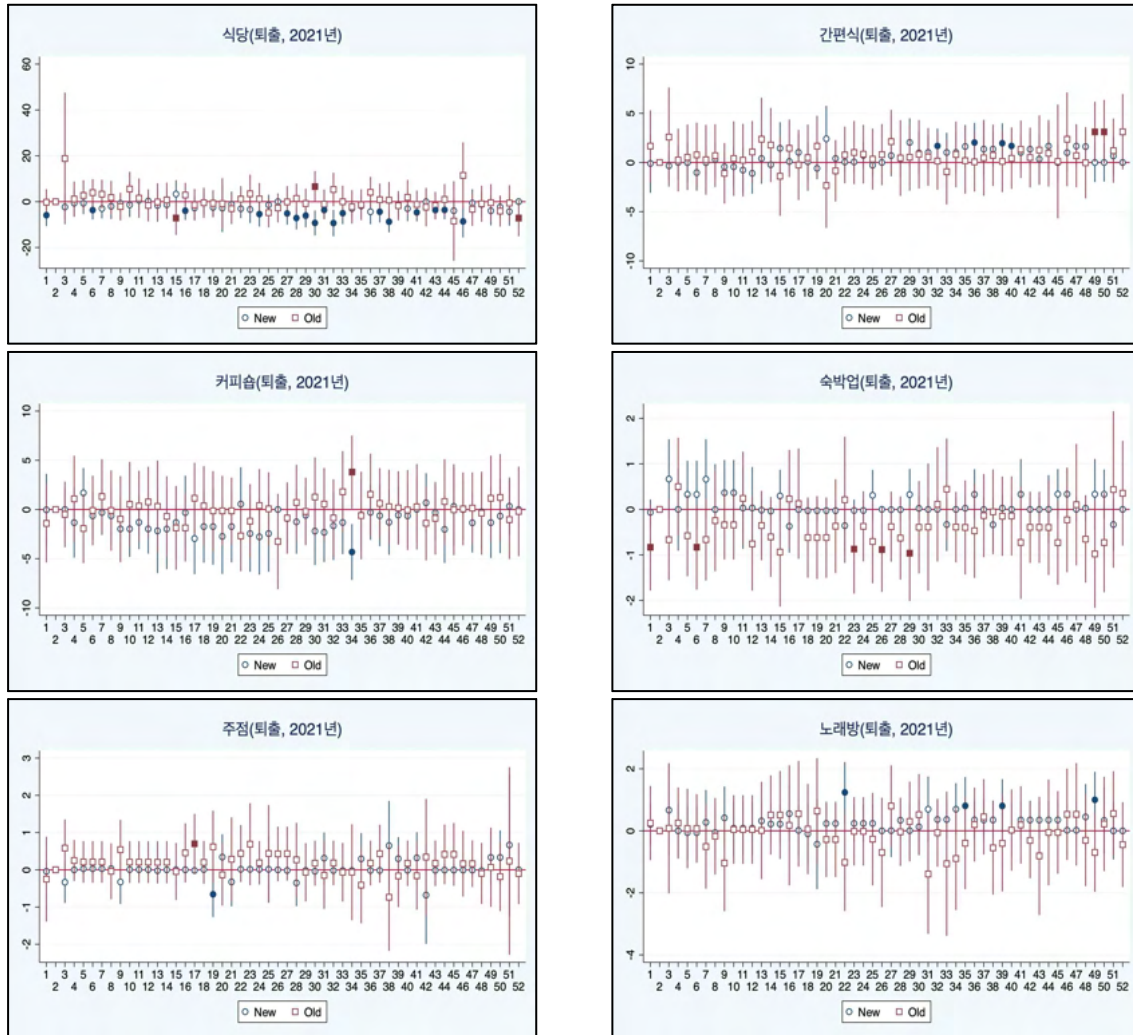
퇴출 행태와 관련해서는 인천 전체 지역을 살펴볼 때 2020년과 2021년에 발견된 숙박업 퇴출의 감소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반면, 커피숍 퇴출의 감소는 신도시 지역 중심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숙박업의 경우 수요자가 해당 지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의 구매력에 영향을 덜 받는 반면에, 커피숍은 지역 내 구매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안정적인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신도시에서만 퇴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주요 서비스업 진입 삼중차분법 추정치의 지역간 차이 (2021년)



주: 그림에서 색칠되어 있는 값은 유의수준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나타냄

[그림 6] 주요 서비스업 퇴출 삼중차분법 추정치의 지역간 차이 (2021년)



주: 그림에서 색칠되어 있는 값은 유의수준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나타냄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및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도입이 인천지역 소비자 서비스 6개 업종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중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인천 소비자 서비스 6개 업종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의 행태는 업종 간, 그리고 신도시와 원도심 간 차이가 컸다는 점이다. 지역별로 볼 때, 코로나19 발발 직후인 2020년, 신도시 지역은 원도심 지역에 비해 특히 간편식 업종에서 오히려 진입은 증가하고 커피숍 업종에서 퇴출은

감소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소비자 서비스업에서 미래 경기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고 부정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신도시 지역의 큰 잠재적 성장력과 안정적 구매력으로 인하여 ‘버티기’ 효과도 더 크게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 전환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이 지역으로 몰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반면 순수 원도심에서는 여러 업종에서 사업체의 진입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 결과로부터 원도심은 성장 잠재력이 작고 구매력이 확보되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한 부의 충격과 불확실성의 증가에 직면하여 지역 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신도시와 비교해 취약했음을 알 수 있다. 회복력의 관점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다. 2021년, 어느 정도의 적응기를 거친 후, 퇴출에서는 두 그룹 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순수 원도심의 진입 감소, 신도시 지역의 진입 증가 경향은 계속 유지되어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부터 재난 상황에 대응한 지역 상권 또는 자영업 대책에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보다 섬세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2년여간 예상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 직면하여 방역이라는 사회적 대의에 의해 희생이 불가피하였던 지역 상권과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책은 대부분 성장지역과 쇠퇴지역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가져오는 충격과 그에 대응한 회복력은 도시공간의 관점에서 성장지역과 쇠퇴지역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기존 대책이 보여주었던 평균주의적 접근으로는 이미 존재한 신도시와 원도심 간 성장 격차를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신구도심 간 격차 확대 현상을 제어하거나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원도심 지역을 표적으로 한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신구도심 간 격차 확대라는 장기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 간의 파급효과 강화를 위한 ‘근린·생활권 단위’ 계획의 수립 및 효과적 시행, 원도심 정주성 재고를 위한 정책지원, 신구도심 간 파급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산업경제정책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정진원·최민아 2021). 본 연구의 결과는 이에 더하여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장기 대책 외에, 코로나19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 충격의 효과가 신구도심 간에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비대칭적 효과가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부정적 외부 충격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단기 대응책이 마련된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신구도심 간의 격차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책의 다양한 효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원도심을 표적으로 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원도심 상권에 대한 지역화폐 캐쉬백 비율을 신도시에 비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천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피해가 경제전반에 가시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고용불안정, 소득감소를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 중 하나로 인천 지역화폐(이음카드) 캐시백 지원율을 10%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은 2020년 3월 이음카드결제액이 1~2월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역외소비를 역내소비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조승현 2020). 이렇게 볼 때, 순수히 원도심 상권의 보호만을 염두에 둔다면, 지역화폐 캐시백의 차등 적용은 해당 지역 상권에 대한 구매력을 확보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 형태에 있어 재난상황에 대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비자 서비스 업종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식당, 간편식 및 커피숍과 같은 업종들의 경우 비즈니스모델의 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적응이 가능하므로, 온라인 진출 지원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역량에 더 많은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 가치나 윤리적 기준을 도외시한다면, 주점, 노래방 등과 같이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고 집합금지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들의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 등 사업체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들 업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그 자체에 의한 피해인지, 아니면(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피해인지에 대해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국가공인통계로 살펴보기 어려웠던 사업체 진입과 퇴출의 변화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실증분석의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을 밝힐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별 실업률, 카드매출지수, 인구이동량 등 지역 상권의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통제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 대상이 사업체 수에만 국한되어 매출액 등 상권 규모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원도심지역과 신도시지역이 경제자유구역 포함 여부에 의해 단순 비교되었으며, 따라서 세분화된 상권특성별 분석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향후, 지리통계시스템 활용 및 상권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한 보다 엄밀한 분석은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김다애·박동훈·이은경. 2022. 「코로나19가 인천경제에 미친 영향 및 최근의 리스크요인 점검」. 한국은행 인천본부.
- 김미루·오윤해. 2020.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 남재현·이래혁. 2021.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득 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8(1): 63-95.
- 신일순·김현수·이은경. 2022. 「코로나19가 인천지역 소상공인에게 미친 영향 분석」. 한국은행 인천본부.
- 신현재. 202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 분석: 2차 확산 시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정책연구 6(2): 5-32.
- 윤병훈·정연우·이삼수. 202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시공간 유형별 소비회복력 분석: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20(2): 87-110.
- 이세미·유한별. 2022. 「Covid19 시기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6(3): 57-86.
- 임석희·송주연. 2022.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와 회복력의 지역적 특성: 도시 고용위기와 회복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6(3): 281-298.
- 임태경. 2020. 「준실험설계에 의한 코로나19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3). 27-46.
- 장우현. 2021.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진원·최민아. 2021. 「지역불균형 시각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과의 상호작용 분석: 인천시 중구, 연수구 및 서구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19): 187-221.
- 조승현. 2020. 「인천이음카드의 코로나19 국면 역할과 뉴노멀 시대 대안 가능성 분석」. 인천연구원.
- 홍민기·이승호·이상봉. 2021.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영향 및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문화연구원. 2021.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여행 행태 변화(2020-2021)」.
- 황성수. 2021. 「코로나19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KBM Journal 5(1): 87-111.
- Aum, S. Lee, S. Y. Shin, Y. S. 2020. "COVID-19 doesn't need lockdowns to destroy jobs: The effect of local outbreaks in Korea." *Labour Economics* 70: 101993.

- ILO. 2021. "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Eighth edition."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briefingnote/wcms_824092.pdf(accessed Nov 30, 2022)
- Lee, J. and Yang, H. S. 2022. "Pandemic and employment: Evidence from COVID-19 in South Korea." *Journal of Asian Economics* 78: 101432.
- Nam, M. H. and Lee, S. H. 2021. "COVID-19 and Employment in South Korea: Trends and Comparison with the 2008 Financial Crisis." *Seoul Journal of Economics* 34(1): 43-80.
- OECD. 2021.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1 Issue 1, OECD Publishing, Paris.
- You, M. H. Choi, Y. J. Kim, J. Y. 2022, "Impact of the COVID-19 Social Distancing Policy on the Exit and Entry of Stores in South Korea." *Korea and the World Economy* 23(1): 57~75.
- Vavra, Joseph. 2021. "Tracking the Pandemic in Real Time: Administrative Micro Data in Business Cycles Enters the Spotligh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35(3): 47-66.
-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 'S.H.O.C.K'는 무엇?" 사회공헌저널 보도자료. 2020. 5. 21. <http://scjournal.kr/news/article.html?no=21243> (검색일: 2022년 11월 30일)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시스템 <http://www.localdata.go.kr>

일반논문

- | 공간 다이어트(Diet)를 위한
“도시비만지수(UOI)” 제안과 정책적 함의
권용석
- | 베를린 도심부 ‘기억의 장소’의 재맥락화와
문화자본으로의 전환
정성윤·김수진
- | 인천의 도시 정체성은 박물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한국이민사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정지은·손동혁
- | 청년의 가구소득이 여가활동을 매개로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차이
김지민·오다은
- | 리빙랩 기반 문화도시 활성화 전략 연구: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강보라·배영현
- | 노년기 건강 궤적의 생애주기적 영향요인 분석:
아동기와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중심으로
도화정
- | 지역 가치 제고를 위한 대학의 역할:
지역별 RISE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이수연
- |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행태 실증 분석:
서울시 홍대입구역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안다은·이경환

공간 다이어트(Diet)를 위한 “도시비만지수(UOI)” 제안과 정책적 함의

권용석 경북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위원(E-mail: kwony@gdi.re.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도시압축의 필요성을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진단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로서 ‘도시비만지수’를 제안한다. 기존의 지방소멸위험지수나 압축도시 관련 지표들이 인구구조나 접근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토지이용 관점의 도시계획 수단과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지역 면적을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단순한 산식을 통해 ‘인구 대비 공간의 과잉’ 정도를 측정하는 도시비만지수를 개발하였다. 지수의 등급 기준은 도시계획 지침에서 연역적으로 도출한 이론적 기준(250/500/1,000㎡/인)과 전국 분포에서 귀납적으로 도출한 현실적 기준(300/700/1,500㎡/인)을 병행하여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 시군구의 59%(연역적 기준)가 ‘비만’ 이상으로 진단되었으며, 전국 중앙값이 적정값의 2.6배에 달해 한국 도시들의 구조적 과잉 상태가 확인되었다. 지방소멸위험지수와 교차 분석에서 소멸 고위험 지역의 75%가 도시비만 3~4등급으로 나타나 두 지수의 정합성이 검증되면서 도시비만지수는 성장관리계획, 도시재생사업, 감소형 도시유형 지정, 농촌공간계획 등 현행 압축적 공간관리 정책체계와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정책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생산가능인구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 도시지역 내 실제 이용률을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남아 향후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도시비만지수, 압축도시, 도시축소, 지방소멸, 용도지역

Propos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Urban Obesity Index” for Spatial Diet

Kwon, YongSeok Research Fellow,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the Urban Obesity Index (UOI) as a new indicator for diagnosing the necessity of urban compaction from an urban planning perspective. The index measures the degree of spatial excess relative to the population using a simple formula that divides the urban area by the working-age population. Grade criteria were established through deductive derivation from urban planning guidelines (250/500/1,000 m²/person) and inductive derivation from the distribution of 229 municipalities (300/700/1,500 m²/person) with 69% concordance, validating both approach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59% of municipalities were diagnosed with obesity or above, with national median reaching 2.6 times an optimal value.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the Local Extinction Risk Index was 0.295, confirming that the UOI captured different aspects (spatial excess) from existing indicators. The UOI can serve as a complementary diagnostic tool directly linked to Korea’s existing compact spatial management policies, including the Growth Management Plan, Urban Regeneration programs, and Rural Spatial Restructuring initiatives

Keywords : Urban Obesity Index, Compact City, Urban Shrinkage, Local Extinction, Zoning

I. 서론

압축도시(Compact City)에 관한 논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도시계획 담론으로 자리 잡아왔다(Dantzig & Saaty 1973; OECD 2012).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Urban Sprawl)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을 추구하는 압축도시 개념은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인구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김현수 2021).

최근 지방소멸 담론의 확산과 함께 압축都市는 단순히 도시 확산을 방지하는 일반적 성격의 도시관리 방안을 넘어, 과잉 공급된 공공서비스와 도시 인프라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마강래 2017).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되는 등 국가적 대응이 본격화되었다(행정안전부 2021). 이와 맞물려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立地適正化計画)’ 제도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지방소멸 위험지역을 공간적으로 압축시키는 정책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국토연구원 2024; 이승욱 외 2021).

그러나 기존의 압축도시 관련 연구들은 주로 교통 분야의 접근성이나 인구구조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유재성·이희연 2019). 이로 인해 도시압축의 동인(動因)과 그 대책이 토지이용과 같이 공간적 관계성을 직접 다루는 도시계획의 범주와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표적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이상호 2016)는 인구구조의 취약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지만, 이 지수가 높다고 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함의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도시압축의 필요성을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지정된 ‘도시지역 면적’과 이를 실제로 이용하고 부양할 ‘생산가능인구’의 관계를 통해 ‘인구 대비 공간의 과잉’ 정도를 측정하는 ‘도시비만지수(Urban Obesity Index, UOI)’를 제안한다. 이 지수는 BMI(체질량지수)의 구조적 유비(類比)를 활용하여 직관적인 이해와 정책적 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용도지역 조정이라는 도시계획의 핵심 수단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참고로 이 지수는 유사한 개념의 ‘인구밀도(Population Density)’와는 대별되는 것으로, 인구밀도는 ‘총인구 ÷ 행정구역 면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조밀하게 분포하는가라는 현상(Phenomenon)을 기술한다. 반면 도시비만지수는 ‘도시지역 면적 ÷ 생산가능인구’로, 행정청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인위적으로 지정한 계획적 의사결정(Planning Decision)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실제 함평군과 예천군은 인구밀도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비만지수 상으로는 3.2배 차이를 보인다.

II. 선행 연구 및 이론적 고찰

1. 도시비만의 개념

‘도시비만(Urban Obesity)’이란 용어는 본 연구에서 도시압축 또는 도시축소라는 처방에 상응하는 진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는 조작적 개념이다. 도시경제학에서 도시의 영역은 지가와 접근성의 함수로 이해되며, 기술 발전에 따라 접근성의 마진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하려는 속성을 지닌다(Alonso 1964). 이러한 확장하는 도시의 내부는 노후화, 슬럼화 등 다양한 도시사회적 현상을 통해 스펀지처럼 천공(穿孔)되면서 토지이용의 건전성이 훼손된다(Hollander & Németh 2011).

천공된 도시공간을 필요한 수요에 맞게 재생하고, 그만큼 확보된 공간만큼 도시공간의 외적 확산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전통적인 ‘도시성장관리’ 기법이었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 나아가 노화기로 진입하는 시점에서는 ‘도시축소(Urban Shrinkage)’의 개념이 더 적합하다(Pallagst et al. 2014). 최근에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저성장 및 산업구조의 급변, 환경 인식 제고로 인해 개발을 최소화하고, 훼손된 자연은 복원하며, 불필요한 도시공간은 재자연화하는 등의 ‘스마트 축소(Smart Shrinkage)’ 접근이 주목받고 있다(Wiechmann & Pallagst 2012; 김보형·윤철재 202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도시비만’은 도시가 수용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에 비해 도시화가 지나치게 진행되어 도시공간 내 이용 공백이 발생하고, 도시 내 기초생활서비스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시민의 이용 불편과 함께 도시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도시공간의 비효율적 이용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개념은 BMI(체질량지수)에서 ‘체중/신장’이 체격 대비 체중의 과다를 측정하듯, ‘도시지역 면적/인구’가 인구 대비 공간의 과잉을 측정한다는 구조적 유사성을 전제로 한다.

2. 압축도시 관련 정책동향

한국의 도시·국토계획 체계에서는 압축적·효율적 공간관리를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전개되어 왔다. 이를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 기존 시가지 재생, 농촌공간의 계획적 재편이라는 세 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러한 정책동향의 검토는 도시비만지수가 기존 정책체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1) 성장관리계획과 감소형 도시 유형의 신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처음으로 인구감소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으로, ‘압축적 공간 재편’을 핵심 전략으로 명시하였다(국토교통부 2019). 이를 구현하는 핵심 제도 가운데 하나인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제75조의3에 근거하며,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배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4년 ‘성장관리방안’으로 처음 도입된 후, 2021년 법률 제17898호에 의해 독립된 절(제3절)로 격상되면서 명칭도 ‘성장관리계획’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시행령 제70조의12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으로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명시하고 있어, 도시 외곽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방패’ 역할을 수행한다.

보다 주목할 만한 제도적 변화는 2023년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에서 기존 ‘성장형·성숙안정형’의 2분류 체계를 ‘성장형·성숙안정형·감소형’의 3분류 체계로 개편하여 ‘감소형’ 도시유형을 신설한 것이다(국토교통부 2023). 감소형은 직전·향후 5년간 통계청 인구가 5% 이상 감소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161개 지자체 중 77개(47.8%)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기존의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도시계획 패러다임에서 축소·적응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도시비만지수가 이러한 감소형 도시의 공간적 과잉을 정량적으로 진단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도시재생정책과 천공지역 정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년 제정, 이하 도시재생법)에 기반한 도시재생정책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부터 추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 500여 곳에 약 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였으며, 그 정책 로드맵에서 ‘저성장과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확장적 국토·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 재생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를 명시한 바 있다(국토교통부 2018).

도시재생정책은 명시적으로 ‘축소’를 표방하지는 않으나, 천공화(Urban Perforation)된 도시 내부를 정비·재생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압축도시 형성에 기여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지닌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년 시행)에 따른 빈집정비사업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년 시행)에 의한 방치건축물 정비는, 도시 내부의 유휴공간을 정비함으로써 남은 거주·활동 기능이 기존 시가지 내부에 집중되는 효과를 낳는다. 빈집 부지를 주차장·정원·커뮤니티시설 등 생활SOC로 전환하면 기존 거주지의 생활 질이 향상되어 외곽 이주가 억제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 저층주거지를 현지에서 정비하면 신규 외곽 개발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이처럼 도시재생은 내부충진(Infill) 개발을 통해 시가화 면적의 확대를 억제하며, 이는 도시비만지수의 분자(도시지역 면적)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수단과 연결된다.

3) 농촌공간정책의 거점-네트워크 전략

농촌공간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근거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기반으로, 2015년부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추진되어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 서비스를 집중 배치하는 거점-네트워크 전략이 시행되어 왔다. 이를 더욱 체계화한 것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제정, 2024년 시행)로, 한국 농촌 최초의 종합적 공간계획 법제이다. 동법은 기본방침(10년)→기본계획(10년, 시·군) → 시행계획(5년)의 3단계 계획 수립 체계와 7개 유형의 농촌특화지구 지정·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까지 5개 시범 시·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

농촌공간정책에서 거점-네트워크 전략은 소규모 분산 투자를 지양하고, 읍·면 소재지(생활권 중심지)에 서비스를 집중한 뒤 기초생활거점과 배후마을로 교통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계층적 체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농촌 영역에서의 압축적 공간관리와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가지며, 도시비만지수가 진단하는 ‘공간적 과잉’의 처방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성장관리계획(외곽 확산의 방패), 도시재생(기존 시가지의 내부충진), 농촌공간정책(중심지-배후마을 간 계층적 서비스 체계)은 각기 다른 공간적 대상을 다루지만, 인구감소 시대에 분산·확산을 억제하고 거점 중심으로 기능을 집약한다는 공통된 정책 철학으로 수렴한다. 그러나 이들 정책이 ‘어느 지역의 공간적 과잉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정량적으로 진단하는 공통의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도시비만지수는 이 세 정책의 적용 대상을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보완적 진단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V장의 정책적 함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2. 기존 도시압축 관련 지수의 검토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압축도시(Compact City)와 도시축소(Urban Shrinkage)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가 개발됐다. 이들 지표는 크게 인구 기반, 접근성 기반, 토지이용 기반, 복합 평가 지표의 네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인구 기반 지표

인구 기반 지표는 지역의 인구 재생산력과 소멸 위험을 측정하는 것으로, 인구감소 시대에 가장 먼저 주목받은 지표군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가 2014년 일본창성회의를 통해 발표한 ‘지방소멸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의 30년간 감소율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Masuda 2014). 한국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2016)가 마스다의 개념을 적용하여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개발하였다. 산식은 ‘20~39세 여성인구 ÷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진입단계,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지수는 두 변수의 비율이라는 단순한 구조와 ‘가임여성 대 고령인구’라는 강력한 상징성 덕분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지정 기준으로까지 활용되는 등 정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다만 학술적으로는 분모·분자 모두 인구 하위그룹의 비율에 불과하고, 지수가 소멸위험을 경고하더라도, ‘어느 지역의 도시지역을 얼마나 축소해야 하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도시계획적 처방과 직접 연결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2) 접근성 기반 지표

접근성 기반 지표는 주민이 일상 서비스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한다. 파리 소르본대학의 Carlos Moreno(2016)가 제안한 ‘15분 도시’ 개념은 6가지 도시사회기능(거주, 근무, 쇼핑, 의료, 교육, 여가)에 대한 접근성을 도보 또는 자전거로 15분 이내 거리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 런던교통공사(TfL)가 1992년부터 활용해 온 ‘PTAL(Public Transport Accessibility Level)’은 등가현관 빈도(Equivalent Doorstep Frequency)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을 1a~6b 등급으로 분류한다.

3) 토지이용 기반 지표

토지이용 기반 지표는 도시의 물리적 확산과 밀도, 용도 혼합 정도를 측정한다. Galster et al.(2001)은 도시확산(Sprawl)을 8가지 독립적 차원으로 정의하고, 각 차원의 Z-점수를 합산하여 복합 스프롤지수를 산출하였다. Ewing et al.(2002, 2014)이 Smart Growth America와 공동 개발한 ‘스프롤지수’는 밀도(Density), 용도혼합(Mix), 중심집중(Centering), 가로접근성(Street Accessibility)의 4 요인을 주성분분석(PCA)하여 평균 100, 표준편차 25의 척도로 변환한다.

4) 복합 평가 지표

복합 평가 지표는 인구, 접근성, 토지이용 등 다차원적 요소를 통합하여 측정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Smart Location Database’는 5D(Density, Diversity, Design, Destination, Distance to Transit)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90개 이상의 건조환경 변수를 전국 22만여 개 센서스 블록그룹 단위로 제공한다(EPA, 2021).

5) 기존 지표의 종합 비교

이상에서 검토한 국내외 주요 지표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선행 연구 압축도시 관련 지표 검토내용 요약

유형	지표명	개발자/연도	핵심 산식/측정방법	도시계획 연계성
인구 기반	지방소멸지수	마스다/2014	20-39세 여성 30년간 감소율 50%	○
	지방소멸위험지수	이상호/2016	20-39세 여성 ÷ 65세 이상	○
	인구감소지수	행안부/2021	8개 지표 가중합산	㉠
접근성 기반	15분 도시	Moreno/2016	6기능 도보·자전거 15분 접근	㉠
	PTAL	TfL/1992	등가현관빈도 = 30 ÷ 총접근시간	●
	Walk Score	2007	9개 시설 거리감쇄 합산 (0-100)	○
토지이용 기반	8차원 스프롤지수	Galster/2001	8차원 Z-점수 복합	㉠
	SGA 스프롤지수	Ewing/2002	4요인 PCA (평균100, SD25)	㉠
	토지이용 압축도	국토연구원/2021	건물밀도 × 건물복합도 (500m)	㉠
복합 평가	Smart Location DB	EPA/2011	5D 프레임워크 90+ 변수	●
	MLIT 도시구조평가	국토교통성/2014	6영역 다중지표	●

주: 도시계획연계성 기호 - ● (높음), ㉠ (중간), ○ (낮음)

6) 기존 지표의 한계와 시사점

기존 도시압축 관련 지표들의 공통적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구 기반 지표는 단순성과 상징성을 갖추었지만, 용도지역 조정 등 도시계획 수단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둘째, 접근성 기반 지표는 생활권 분석에 유용하지만, 복잡한 산식과 데이터 요구로 인해 전국적 적용이 어렵다. 셋째, 토지이용 기반 지표는 물리적 현황을 정확히 측정하지만, 대부분 ‘확산’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축소’의 필요성을 직접 진단하기 어렵다. 넷째, 복합 평가 지표는 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하지만, 데이터 구축 비용이 크고 결과 해석이 직관적이지 않아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도시계획적 수단과 직접 연결되면서도 단순성과 상징성을 갖춘 새로운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III. 도시비만지수의 설계

1. 설계 원칙: 단순성과 상징성

도시비만지수의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준거(準據)로 삼은 것은 지방소멸위험지수(이상호 2016)의 정책적 성공 사례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정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단순성(Simplicity)’과 ‘상징성(Symbolism)’이다. 복잡한 지표는 정책 활용의 문턱을 높이고 계산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두 변수의 비율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누구나 쉽게 계산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가임여성 대 고령인구’라는 상징적 대비를 통해 ‘재생산 가능성 대 부양 부담’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도시비만지수는 이러한 성공 방정식을 벤치마킹하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갖지 못한 도시계획적 수단과의 직접 연결이라는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하였다. [표 2]는 두 지수의 구조적 비교를 보여준다.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왜 위기인가(인구구조적 취약성)’를 진단한다면, 도시비만지수는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가(공간적 과잉)’를 진단함으로써, 두 지수는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의 관계에 있다.

[표 2] 지방소멸지수와 도시비만지수의 구조적 비교

구분	지방소멸지수	도시비만지수
분자	20~39세 여성 인구	도시지역 면적
분모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15~64세)
상징적 의미	재생산 가능성 vs 부양 부담	계획의 욕심 vs 실제 수요
해석 방향	낮을수록 소멸 위험	높을수록 비만 (공간 과잉)
정책 연계	인구정책 (출산, 이주)	도시계획 (용도지역 조정)

2. 지수 산식 및 자료

도시비만지수는 ‘도시지역 면적(m^2) ÷ 생산가능인구(명)’으로 정의된다.

$$UOI = \frac{\text{도시지역면적}(m^2)}{\text{생산가능인구(명)}} \quad \langle \text{식 1} \rangle$$

이 지수의 단위는 $m^2/\text{인}$ 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도시지역 면적’, 즉 ‘생산 주체 1인이 감당해야 할 도시공간의 크기’를 의미한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와 가공방법은 [표 3]과 같다.

[표 3] 분석 자료 및 가공방법

변수	출처	정의	기준연도
도시지역 면적	국토교통부 토지이용현황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면적 (㎡)	2022
생산가능인구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15~64세 인구 (명)	2022
지방소멸역지수	한국고용정보원	65세 이상 / 20~39세 여성	2022

주: 지방소멸역지수는 지방소멸위험지수의 역수로, 값이 높을수록 소멸 위험이 높음을 의미함.

3. 변수 선정의 근거

1) 분자: 도시지역 면적

도시지역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의미한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을 통해 인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공간이다. 따라서 도시지역 면적은 ‘공급된 공간’, ‘계획적 의도’, ‘잠재적 과잉’을 상징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지역 면적은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도시계획의 핵심 수단을 통해 직접 조정 가능하다는 점이다.

2) 분모: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인구로, 도시 공간을 실제로 이용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경제적 활력을 만들어내는 주체이다. 총인구 대신 생산가능인구를 사용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부양 부담의 개념을 지수에 내재화할 수 있다.

분모로 총인구가 아닌 생산가능인구를 선정한 데에는 추가적인 이론적 근거가 있다. 도시비만지수는 단순한 현황 기술이 아니라 도시계획적 ‘처방’의 필요성을 진단하는 정책 지표이다. 도시 인프라의 유지·관리 비용은 궁극적으로 조세 기반, 즉 경제활동인구가 부담하며,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동일한 도시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1인당 재정 부담은 가중된다. 총인구를 분모로 사용할 경우,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의 실질적 부양 부담이 과소평가되어 공간적 과잉의 심각성이 희석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를 분모로 사용하면 고령화 효과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같은 도시지역 면적이라도 고령화가 심한 지역이 더 높은 비만도로 진단된다. 이는 도시비만지수가 인구구조의 질적 측면까지 간접적으로 포착하게 해주는 설계상의 의도이다. 다만, 이러한 설계로 인해 도시비만지수가 고령화 효과를 혼입(confounding)할 수 있다는 점은 지수 해석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며, 향후 총인구 기반 지수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고령화 효과를 별도로 통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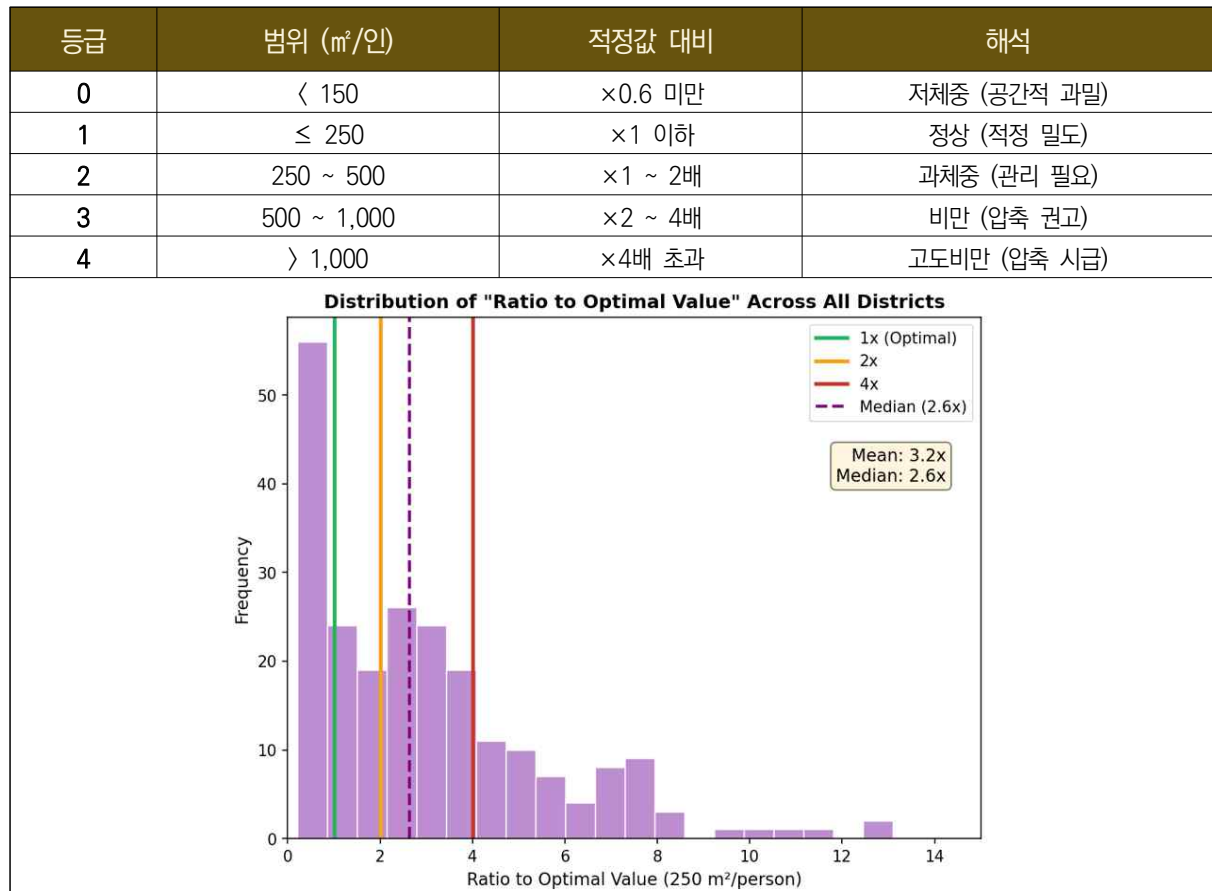
4. 등급 체계의 설정: 이중 검증 접근법

본 연구에서는 도시비만지수의 등급 기준을 연역적 접근(이론적 당위)과 귀납적 접근(경험적 현실)을 병행하여 도출하고, 양 방법의 수렴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1) 연역적 접근: 도시계획 규범에서 적정값 도출

BMI의 정상 범위(18.5~25)는 전 세계 인구 분포의 평균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사망률과 질병 발생률이 최소화되는 구간에서 의학적으로 도출된 규범적 기준이다. 마찬가지로 도시비만지수의 기준도 현실 분포가 아닌, ‘건강한 도시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적 물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1인당 시가화예정용지를 대도시 80~100㎡/인, 중소도시 100~130㎡/인, 소도시 130~160㎡/인으로 권고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시가화면적 외에 녹지지역을 포함하므로, 전국 평균 녹지 비율 약 50%를 감안하면 적정 1인당 도시지역 면적은 200~300㎡/인, 중앙값 250㎡/인으로 산출된다([표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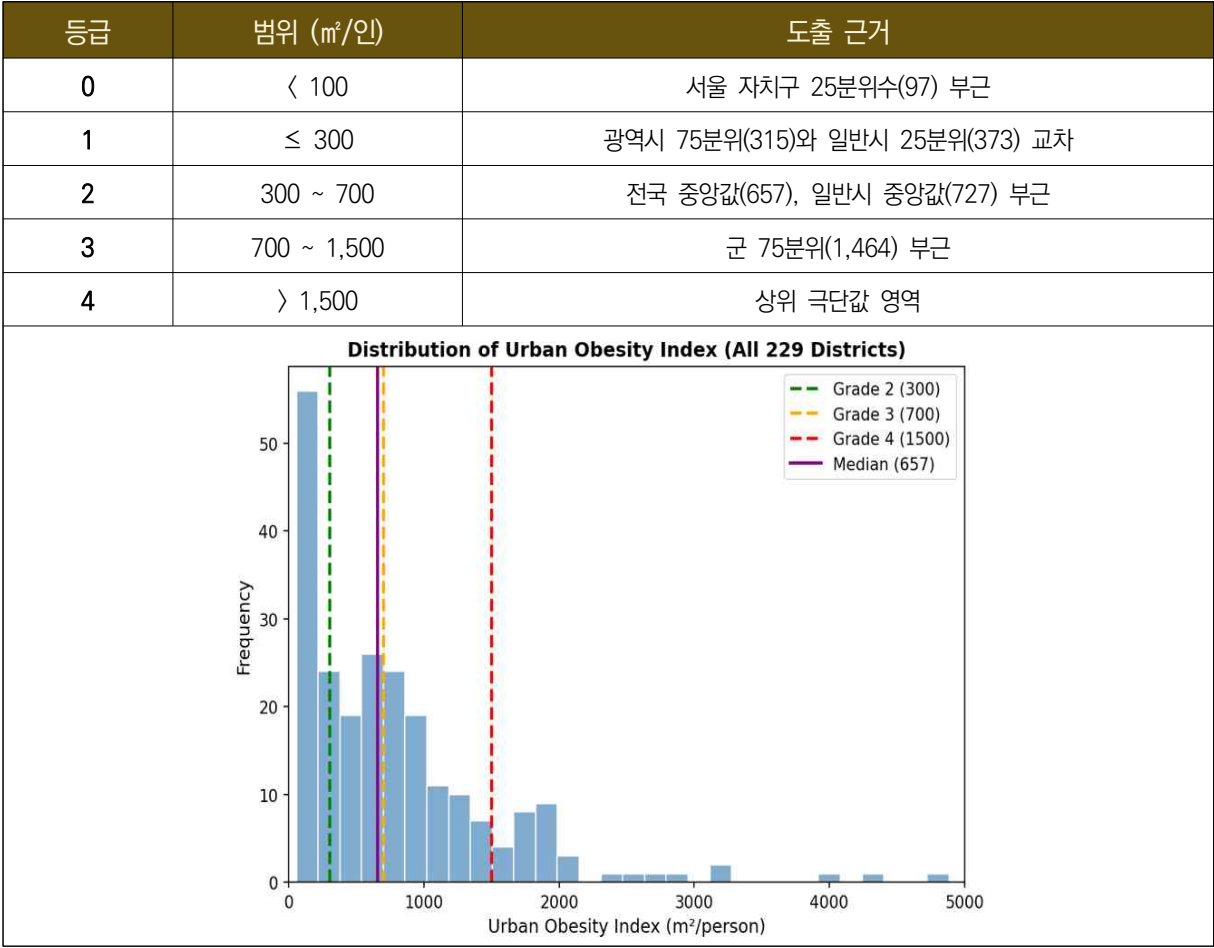
[표 4] 연역적 등급 기준 및 분포 (이론적 기준)



2) 귀납적 접근: 전국 분포에서 현실적 기준 도출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도시비만지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최소값 55.0㎡/인(서울 종로구)에서 최대값 4,887.3㎡/인(전남 신안군)까지 분포하며, 평균 803.2㎡/인, 중앙값 657.5㎡/인, 표준편차 754.2㎡/인으로 나타났다. 도시 유형별로는 광역시 자치구 181.4㎡/인(중앙값), 일반시 725.9㎡/인, 군 1,005.9㎡/인의 중앙값을 보였다([표 5] 참조).

[표 5] 귀납적 등급 기준 및 분포 (현실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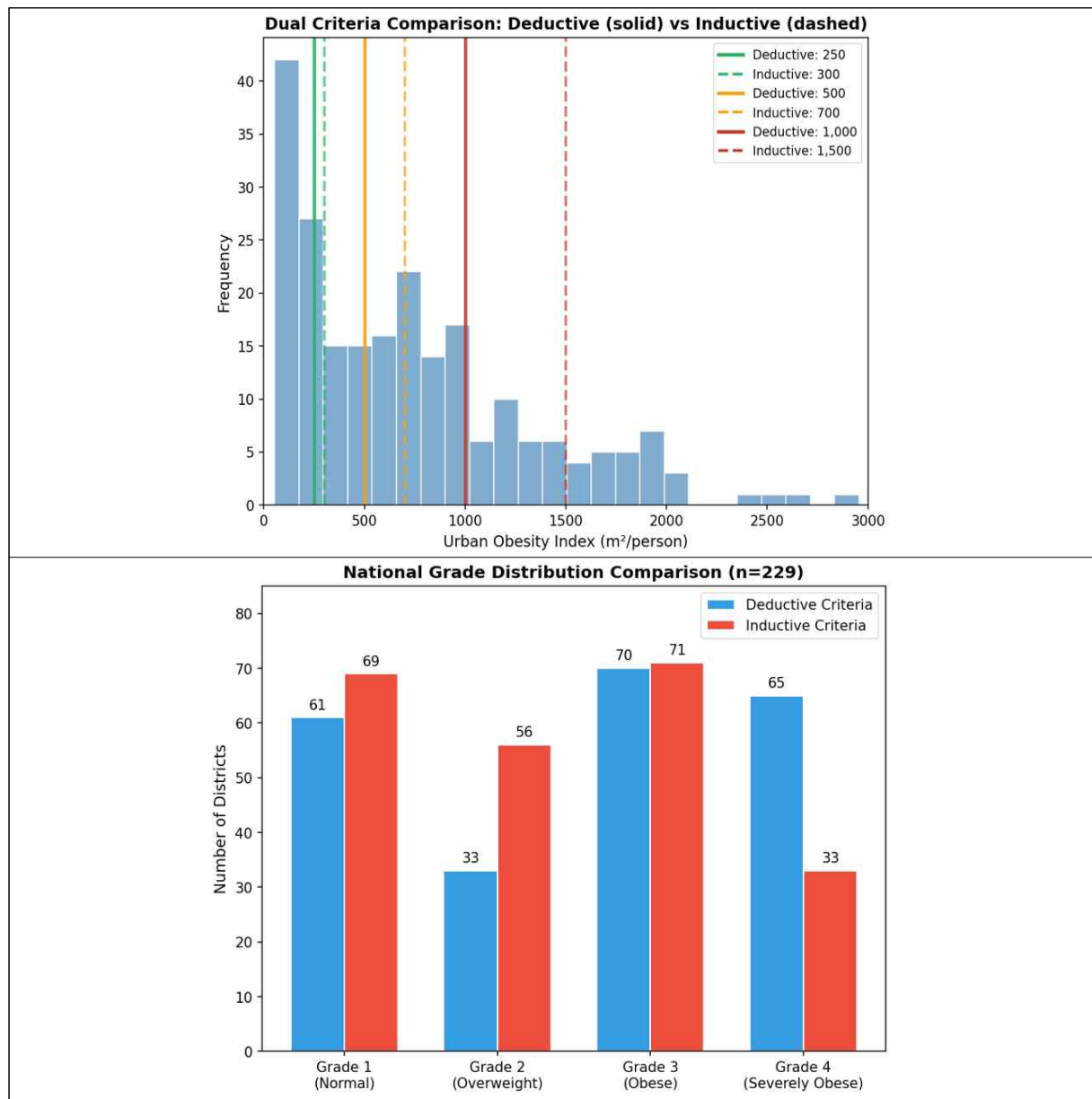
3) 두 접근법의 비교 및 수렴 검증

두 접근법의 임계값을 비교하면([그림 3] 참조), 1-2등급 간 경계는 연역(250㎡/인)과 귀납(300㎡/인) 결과가 20% 차이, 2-3등급은 같은 순서로 500 대 700으로 40% 차이, 3-4등급은 1,000 대 1,500으로

50% 차이를 보인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두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을 비교한 결과, 158개(69%)가 동일한 등급으로 판정되어 두 접근법이 상당 수준 수렴함을 확인하였다(표 6) 참조).

귀납적 기준이 연역적 기준보다 일관되게 20~50% 높게 나타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국 중앙값($657.5\text{m}^2/\text{인}$)이 이론적 적정값($250\text{m}^2/\text{인}$)의 2.6배에 달한다는 것은, 한국의 도시들이 평균적으로 이미 ‘과체중’ 이상의 상태에 있음을 방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역적 기준을 ‘당위적 목표’로, 귀납적 기준을 ‘단계적 관리 기준’으로 병행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10] 이중 검증법 결과 비교



주 1) 상단은 연역과 귀납 두 방법론에 따른 기준을 중첩하여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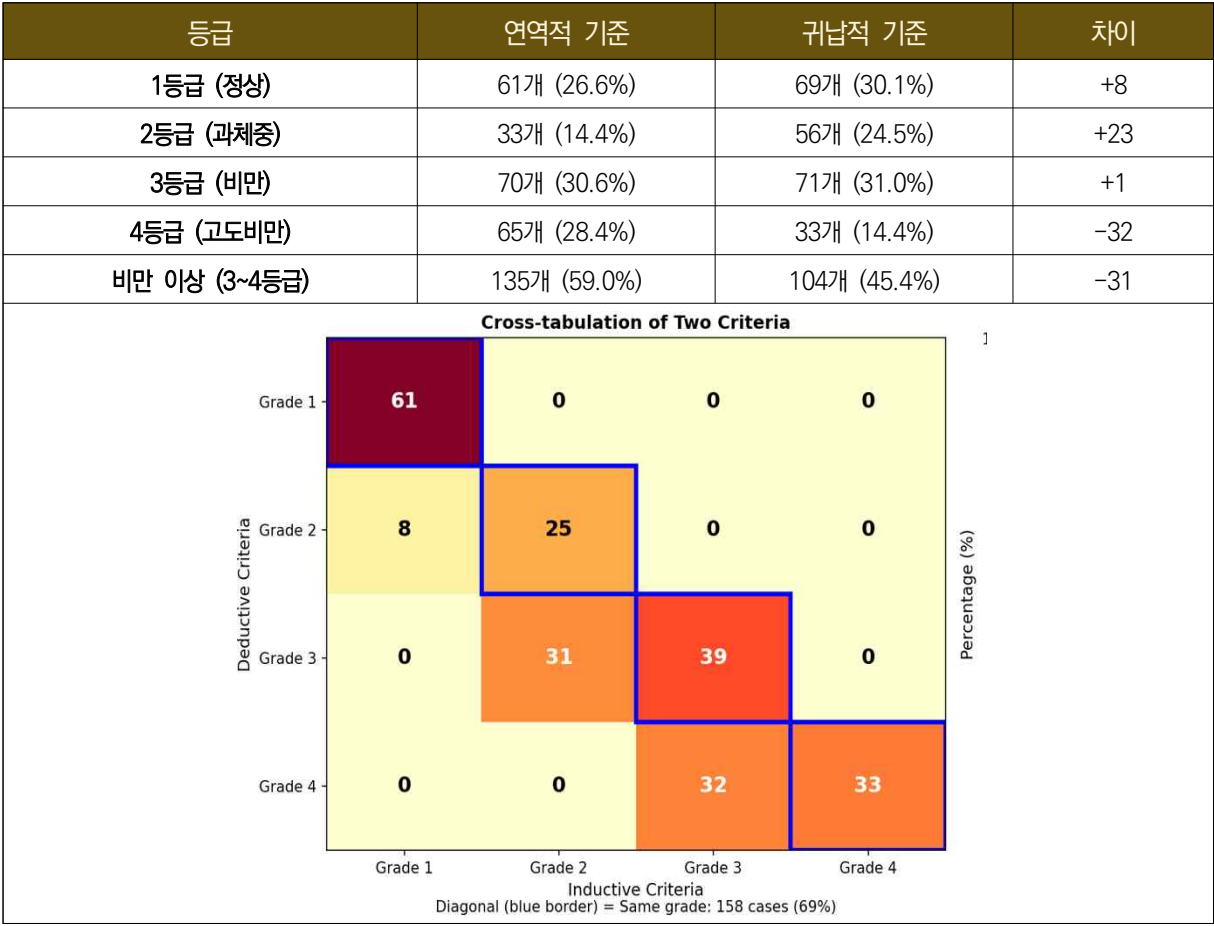
2) 하단은 두 방법론에 따른 등급의 분포를 막대그래프로 대조

IV. 분석 결과

1. 전국 시군구 도시비만지수 현황

연역적 기준(250/500/1,000)을 적용한 결과, 1등급(정상) 61개(26.6%), 2등급(과체중) 33개(14.4%), 3등급(비만) 70개(30.6%), 4등급(고도비만) 65개(28.4%)로 나타나, 전국 시군구의 59.0%가 ‘비만’ 이상으로 진단되었다. 주목한 점은 서울 종로구 55.0㎡/인에서 전남 신안군 4,887.3㎡/인까지 약 89배의 격차다.

[표 6] 두 기준에 따른 전국 등급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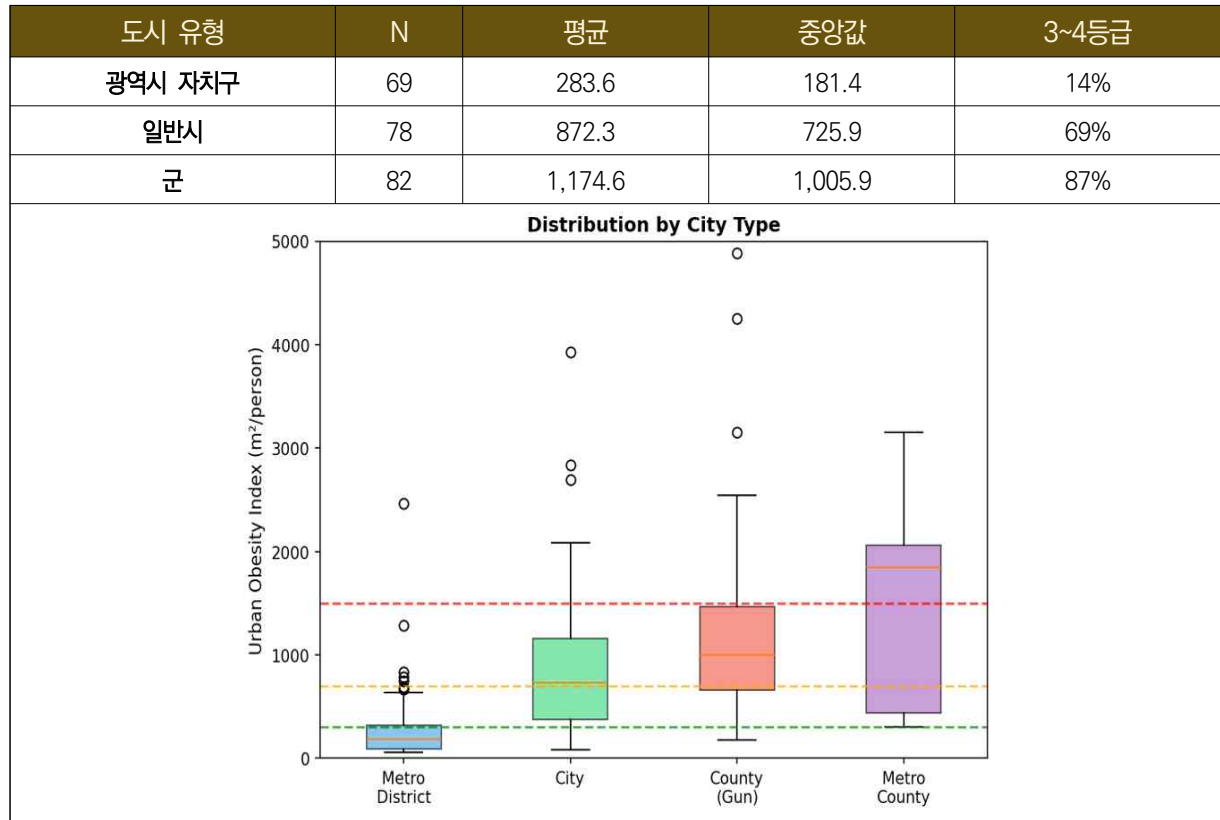


2. 도시 유형별 특성

도시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7]에 따르면 광역시 자치구(69개)는 평균 283.6㎡/인, 중앙값 181.4㎡/인으로 대부분 정상 범위에 해당하며, 연역적 기준으로 72%가 1등급, 비만 이상은 14%에 불과하였다. 반면 일반시(78개)는 평균 872.3㎡/인, 중앙값 725.9㎡/인으로 69%가 비만 이상, 군 지역(82

개)은 평균 1,174.6m²/인, 중앙값 1,005.9m²/인으로 87%가 비만 이상으로 나타나 도시 유형에 따른 공간적 과잉의 정도가 현저히 다를 것을 확인하였다.

[표 기] 도시 유형별 도시비만지수 현황



전남 담양군(4,887.3m²/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1인이 부담해야 할 도시 면적이 서울 양천구(55.0m²/인)의 약 8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인구 밀도의 차이를 넘어, 지방 군 단위 지역의 인프라 효율성이 수도권 대비 구조적으로 붕괴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도시비만지수가 동일 도시 유형 내에서도 유의미한 변별력을 갖는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표 8]은 동일한 ‘군’ 유형에 속하면서 생산인구밀도까지 동일한 전남 함평군과 경북 예천군의 비교를 보여준다. 두 지역은 생산인구밀도가 207.4인/km²로 동일하여, 인구밀도만으로는 도시계획적 차이를 식별할 수 없다. 그러나 함평군은 행정구역의 34.7%를 도시지역으로 지정한 반면 예천군은 10.8%만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러한 도시계획적 의사결정의 차이가 도시비만지수에 그대로 반영되어 함평군은 ‘고도비만(4등급)’, 예천군은 ‘과체중(2등급)’으로 진단된다. 이는 도시비만지수가 단순한 인구밀도의 역수가 아니라, 동일한 인구 조건에서도 ‘도시지역 지정’이라는 계획적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변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는 단일 사례에 기반한 탐색적 분석이므로, 향후 동일 유형 내 다수 지역 간 비교분석을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표 8] 동일 유형 내 변별력 검증: 함평군과 예천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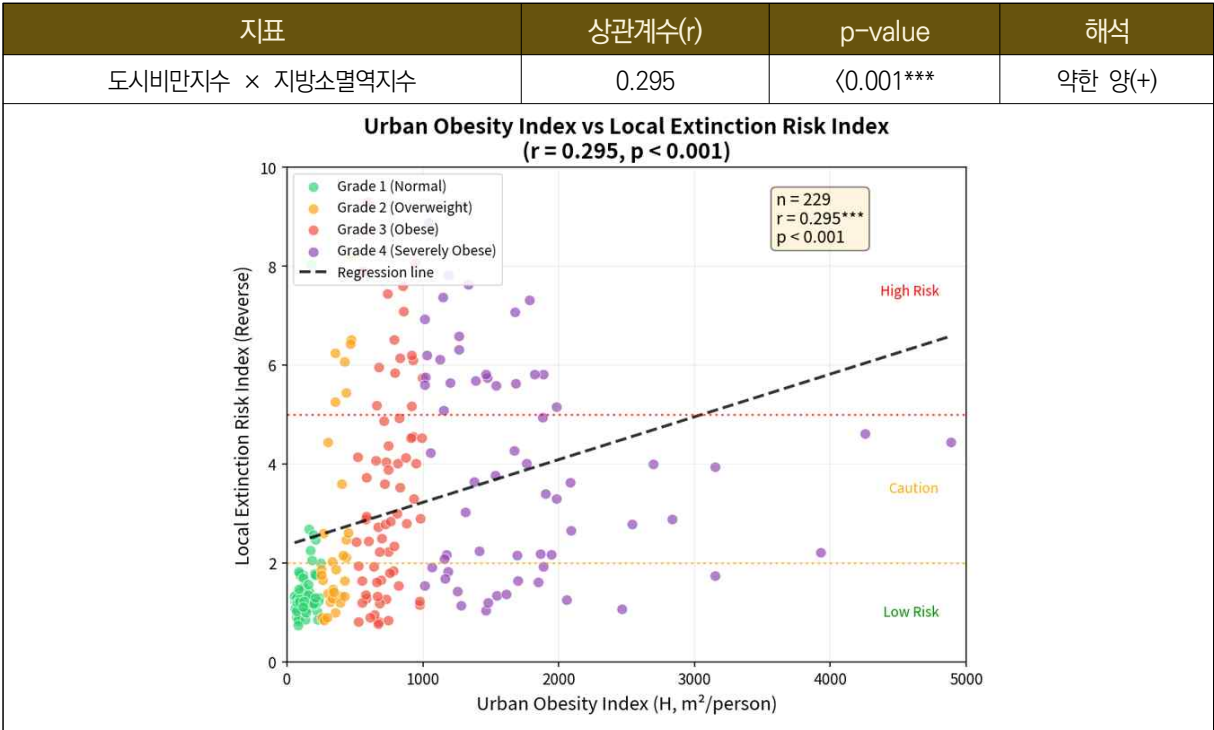
구분	전남 함평군	경북 예천군	비고
행정구역 면적	80.7 km ²	151.4 km ²	
도시지역 면적	28.0 km ² (34.7%)	16.4 km ² (10.8%)	
생산가능인구	16,739명	31,393명	
생산인구밀도	207.4 인/km ²	207.4 인/km ²	동일
도시비만지수	1,675.1 m ² /인	521.0 m ² /인	3.2배 차이
등급 판정	4등급 (고도비만)	2등급 (과체중)	차등 진단

주: 생산인구밀도 = 생산가능인구 ÷ 행정구역 면적, 도시비만지수 = 도시지역 면적 ÷ 생산가능인구 × 1,000

3. 지방소멸위험지수와 비교 분석

도시비만지수와 지방소멸위험지수(지방소멸위험지수의 역수)의 상관계수는 0.295(p<0.001)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9 참조). 이는 두 지수가 완전히 독립적이지도,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음을 의미한다. 지방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이 도시비만도 높은 경향이 있지만, 두 지수가 측정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일치는 보이지 않는다.

[표 9] 지방소멸지수와 상관관계



주: ** p<0.01, *** p<0.001

지방소멸역지수 등급과 도시비만지수 등급(연역적 기준)의 교차 분석 결과,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 150개 중 113개(75.3%)가 도시비만 3~4등급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소멸 안전 지역 18개 중 12개(66.7%)가 도시비만 1~2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지수가 상당한 정합성을 보이면서도 각각 다른 측면을 포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V. 정책적 함의

1. 현행 정책과의 연계

현행 인구감소 대응 정책은 주로 인구 유입 촉진, 출산 장려, 정주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나라살림연구소 2024). 이는 인구 유입이라는 ‘양적 확대’ 전략만으로는 지방의 공간적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II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 도시·국토계획 체계에는 이미 압축적 공간관리를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도시비만지수는 이들 정책의 적용 대상을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정량적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장관리계획(국토계획법 제75조의2)의 적용 대상 선정 시 도시비만지수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2023년 신설된 ‘감소형’ 도시유형의 해당 여부와 도시비만 등급을 교차 분석하여 공간구조 재편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 선정에서도, 도시비만지수가 높은 지역 내 천공화된 구역을 우선적 재생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내부충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농촌공간계획(「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도시비만지수를 통해 읍·면 소재지의 거점 기능 집약의 필요성을 정량적으로 근거할 수 있다.

요컨대, 도시비만지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압축적 공간 재편’이라는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진단 도구로서, 기존 정책체계에 ‘공간적 효율화’의 정량적 근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2. 향후 입지유도형 계획 도입 시 활용 가능성

국토연구원(2024)이 제안한 ‘입지유도계획’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도시비만지수는 거주유도구역과 도시기능유도구역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이 주로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는 데 비해, 도시비만지수는 정량적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계획 수립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3. 등급별 정책 처방

1등급은 현행 도시공간 구조의 유지·관리 단계로 설정되며, 추가적인 강도 높은 계획수단의 도입보다는 기존 계획체계의 정합성을 점검하면서 적정 밀도의 안정적 유지에 정책적 초점을 둔다. 2등급은 도시의 외연 확산을 억제하는 관리 단계로, 개발행위 허가의 강화와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시가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3등급과 4등급은 인구·수요 감소에 대응한 공간구조 재편을 전제로 압축 전략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구간으로 이해된다 ([표 10] 참조).

[표 10] 도시비만지수 등급별 정책 처방(안)

등급	정책 기초	도시계획적 수단	정책 연계
1	현행 유지	-	-
2	확산 억제	개발행위 허가 강화, 모니터링	도시·군기본계획 '성숙안정형' 성장관리계획 사전 적용
3	압축 검토	용도지역 축소 검토, 거점 집중	도시·군기본계획 '감소형' 연계 도시재생사업 우선 적용
4	압축 시급	재자연화, 관리지역 전환	입지유도계획 수립 권고 농촌공간계획 연계

4. 도시비만지수의 예외적 적용

도시비만지수를 활용할 때에는 다음 제약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국가산업단지, R&D특구 등 중앙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정한 고부가가치 지역은 지수가 높더라도 정책 대상에서 예외로 처리하거나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 유형별 맥락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며, 연역적 기준은 '당위적 목표'로, 귀납적 기준은 '단계적 관리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용도지역 축소나 재자연화는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적절한 보상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VI. 결론

본 연구는 도시압축의 필요성을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직접 진단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로서 '도시비만지수'를 제안하였다. 도시비만지수는 도시지역 면적을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단순한 산식을 통해 '인구 대비 공간의 과잉' 정도를 측정하며, BMI의 구조적 유비를 활용하여 직관적 이해와 정책적 소통을 용이하게 하였다.

지수의 등급 기준은 도시계획 지침에서 연역적으로 도출한 이론적 기준(250/500/1,000㎡/인)과 전국 분포에서 귀납적으로 도출한 현실적 기준(300/700/1,500㎡/인)을 병행하여 설정하였으며, 두 기준은 69%의 동일 등급 판정률을 보이며 상호 검증되었다. 분석 결과, 전국 시군구의 59%가 ‘비만’ 이상으로 진단되었으며, 전국 중앙값이 적정값의 2.6배에 달해 한국 도시들의 구조적 과잉 상태가 확인되었다.

지방소멸위험지수와 상관계수는 0.295로, 도시비만지수가 기존 지표와는 다른 측면(공간적 과잉)을 포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공간적 과잉’을 직접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했다는 점이다. 정책적 의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압축적 공간 재편’,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감소형’ 도시 유형, 성장관리계획, 도시재생사업, 농촌공간계획 등 현행 정책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정책 도구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왜 압축해야 하는가’를 설명한다면, 도시비만지수는 ‘무엇을 압축해야 하는가’를 직접 진단함으로써, 두 지수는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의 관계에 있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로는 생산가능인구의 질적 차이(소득,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점, 도시지역 내 실제 이용률(공실률, 유헴지 비율)을 반영하지 못한 점, 시계열 분석을 통한 동태적 변화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특히, 분모로서 생산가능인구가 고령화 효과를 혼입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총인구 기반 지수와 비교 분석을 통해 별도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읍면동 단위의 세분화된 분석과 함께 실제 정책 적용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018.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세종: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세종: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20.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세종: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23.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세종: 국토교통부.
- 국토연구원. 2024. 인구감소 시대 입지유도계획 도입 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김보형·윤철재. 2024. 스마트 축소 전략의 이론적 논의와 적용 가능성. 국토계획 59(2): 45-62.
- 김현수. 2021. 축소도시 시대의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방향. 국토계획 56(1): 5-24.
- 나라살림연구소.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실태 분석. 서울: 나라살림연구소.
- 마강래. 2017. 지방도시 살생부: 압축도시는 해법인가. 서울: 개마고원.
- 박세훈·김은란·이승욱·이다예. 2020.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 유재성·이희연. 2019. 축소도시 유형화 및 특성 분석. 국토계획 54(2): 5-21.
- 이상호. 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고용동향 브리프 2016년 여름호: 1-20.
- 이승욱·박세훈·송지은. 2021. 축소도시 대응 해외 도시정책 비교연구: 일본,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세종: 국토연구원.
- 정재희·임준홍. 2020.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공간 압축특성 분석: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5(4): 5-17.
- 한국토지주택공사. 2022. 2022년 용도지역 현황 통계.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
- 행정안전부. 2021.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세종: 행정안전부.
- Alonso, W. 1964. *Location and land use: Toward a general theory of land r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ontje, M. 2004. Facing the challenge of shrinking cities in East Germany: The case of Leipzig. *GeoJournal* 61(1): 13-21.
- Dantzig, G. B. and Saaty, T. L. 1973. *Compact city: A plan for a liveable urban environment*. San Francisco: W.H. Freeman.
- Ewing, R., Schmid, T., Killingsworth, R., Zlot, A., and Raudenbush, S. 2002. Relationship between urban sprawl and physical activity, obesity, and morbidity.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8(1): 47-57.
- Galster, G., Hanson, R., Ratcliffe, M. R., Wolman, H., Coleman, S., and Freihage, J. 2001. Wrestling

- sprawl to the ground: Defining and measuring an elusive concept. *Housing Policy Debate* 12(4): 681-717.
- Haase, A., Bernt, M., Großmann, K., Mykhnenko, V., and Rink, D. 2016. Varieties of shrinkage in European cities.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23(1): 86-102.
- Hollander, J. B. and Németh, J. 2011. The bounds of smart decline: A foundational theory for planning shrinking cities. *Housing Policy Debate* 21(3): 349-367.
- Masuda, H. 2014. 地方消滅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 Tokyo: Chuko Shinsho.
- OECD. 2012. Compact city policies: A comparative assessment. Paris: OECD Publishing.
- Pallagst, K., Wiechmann, T., and Martinez-Fernandez, C. (Eds.). 2014. *Shrinking cities: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policy implications*. New York: Routledge.
- Wiechmann, T. and Pallagst, K. M. 2012. Urban shrinkage in Germany and the USA: A comparison of transformation patterns and policy respons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6(2): 261-280.

베를린 도심부 ‘기억의 장소’의 재맥락화와 문화자본으로의 전환

정성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수진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팀 부연구위원, 교신저자(E-mail: sjkim07@keis.or.kr)

국문초록

본 논문은 베를린 도심부 기억의 장소들이 시간적 중첩과 공간적 집적을 통해 재맥락화된 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대상은 베를린 도심부 운터덴린덴의 상이한 배경과 성격을 지닌 기억의 장소이고, 분석 과정에서 문화경제학과 기억 연구를 결합하여 공간-기억-가치의 삼중 구조 분석 틀을 구성하고 시간적 축적, 공간적 집적, 담론적 교차, 가치 전환의 네 차원에서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억의 장소들은 상호참조적 네트워크로 작동하며, 과거사에 대한 공적 성찰의 장으로 기능하고, 도시브랜딩과 관광·시민교육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문화자본으로 전화되었다. 연구 결과, 베를린의 도심은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었으며, 베를린 도심부 기억의 장소가 갖는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쟁과 해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만 도심부의 공적 장소 분석에 집중하여 비공식적 기억의 장소나 다른 도시의 적용 가능성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고,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기억의 장소, 문화자본, 재맥락화, 불편문화유산, 베를린 도심

From Memorial Landscape to Cultural Capital: Recontextualizing Memorial Places in Central Berlin

Chung, Sungyoun Research Associate, The May 18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im, Sujin Associate Research Fellow, Local Economy & Employment Division,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memorial sites in Berlin's city center have transformed into a complex memory landscape through temporal layering and spatial concentration, and analyzes the mechanism by which this recontextualization converts into cultural capital. The research focuses on diverse memorial sites along Unter den Linden, including imperial monuments, war memorials, and counter-monuments. By integrating cultural economics with memory studies, this study establishes an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the tripartite structure of space-memory-value. The findings reveal that memorial sites operate as a cross-referential network, where post-unification memorial facilities function as contested heritage, forming a circulatory structure in which political symbols convert into social memory and cultural capital.

Keywords : Place of Memory, Cultural Capital, Recontextualization, Difficult Heritage, Berlin City Center

I. 서론

근대 도시에서 기억의 공간은 단순한 추모의 장소를 넘어 국가 정체성과 권력의 상징체계로 작동해왔다. 특히 수도의 도심부는 근대국가가 자국의 정치적 정당성과 근대화의 성취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공간이었다. 베를린은 이러한 공간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왕권을 상징하는 건축물과 제국기 기념물, 전쟁 추도시설이 한정된 지역 안에서 중첩되며 근대 도시의 기억 구조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그리고 통일을 거치며 이 공간들은 반복적인 파괴와 재건을 겪어왔고, 그 결과 도심부의 기념공간은 단일한 내러티브를 담지하지 못하는 복합적 경관으로 변모하였다. 과거의 정치적 상징들이 사라지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며, 도심부 전체가 일종의 '기억의 실험장'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베를린 도심부에 위치한 추도시설(Gedenkst tte)과 기념물(Denkmal)은 서로 인접한 상태로 상호참조적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 노이에 바헤(Neue Wache)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Holocaust-Mahnmal), 그리고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Denkmal f r die Sinti und Roma Europas) 등은 서로 다른 시대의 사건과 기억을 담지만, 하나의 축선(운터텐린텐)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결과적으로 '기억의 경관(Memory Landscape)'을 이룬다. 이는 기존의 개별적 기념비 개념을 넘어선 집합적 공간의 형식을 보여주며, 공간이 물리적 축적을 통해 사회적 기억을 재조직하고 문화적 의미를 생산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베를린 도심부 '기억의 경관'의 변화를 도시적 기억의 재맥락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기념물(Denkmal)'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법적 의미에서의 등록문화재(Baudenkmal)를 넘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모든 유형의 물리적 구조물을 의미한다. 즉, 법적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기억을 매개하고 재맥락화하는 모든 공간적 실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비극적 사건을 반성과 경고의 형식으로 표상하는 시설은 '경고비(Mahnmal)'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의례 공간으로 작동하는 시설은 '추도시설(Gedenkst tte)'로 구분하였다. 또한 기존의 권위적 기억 형식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시설은 '대항기념물(Gegendenkmal, Counter-Monument)'로 정의한다. 종래의 기념물들과 비교했을 때, 대항기념물은 기억의 탈권위화와 비판적 성찰을 실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연구의 범위는 개별 구조물에 한정하지 않고, 거리·광장·건축군 등 복합적 장소성을 지닌 '기억의 장소(Lieux de M moire; Place of Memory)'를 대상으로 한다. 기억의 장소는 과거에 대한 집단적 재현과 해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기억과 관련된 물리적·의례적 실천이 수행되는 장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억의 장소'가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추상적 측면에서는 기억과 기념이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생성하는 장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상 정의는 Rudy Koshar(2000)가 제시한 문제의식—즉, 19세기 국가주의적 ‘기념비 문화’가 전후 독일 사회에서 ‘기억의 흔적’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동시에 James Young(1992)이 제시한 대항기념물(Gegendenkmal; Counter-monument)이라는 개념¹⁾을 참고하여, 기념 행위를 통해 다시 불러내어지는 집단기억이 권위적 서사로서 고정되지 않고, 비판적 성찰과 사회적 참여의 실천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념물’을 자명한 가치를 드러내는 대상이나 공간이 아니라, 기억의 정치를 통해 끊임없이 의미가 재구성되는 동적 공간으로 규정하였다.

기존 연구는 크게 세 영역에서 전개되어왔으나, 각각 특정한 한계를 보인다. 첫째, 건축사 및 도시사 연구는 주로 개별 건축물이나 특정 시기의 정치적 맥락에 집중해 왔다. Benedikt Goebel(2003)은 베를린 중심부의 구조적 변동과 근대적 도시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Laurenz Demps(1996)는 동독 시기 노이에 바헤의 기능 전환을 통해 추도시설의 정치적 의미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Akademie der Künste(1993)가 편찬한 Streit um die Neue Wache는 통일 이후 기념공간의 재설계 논쟁을 상세히 다루며, 기념공간이 사회적 합의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특정 건축물이나 제도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도심부 전체가 형성하는 공간의 상호작용은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

둘째, 문화유산 연구는 기념물의 가치 평가와 보존 논리를 발전시켜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새롭게 건립된 추도시설을 다루는 데에 다소 한계가 있다. 추도시설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유산가치(Heritage Value)—역사성, 예술성, 희소성—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Dolff-Bonekämper(2021)가 제시한 논쟁가치(Streitwert; contested value)와 같은 우회적 채널을 통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조차 유산으로 인정받는 범주를 확대하자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새로 지어진 추도시설들이 유산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공간으로서 작동한다는 점—즉, 도시 정체성과 공공 담론의 장으로 기능하는 방식—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셋째, 역사학과 기억 연구에서는 독일의 추도시설을 과거사 극복(Vergangenheitsbewältigung)이라는 구체적 맥락과 결합하여 분석해왔다. James Young(1993), Sharon Macdonald(2009) 등의 연구는 홀로코스트 기념과 반성적 기억문화의 의미를 깊이 있게 조명하였으나, 이들 시설이 독일의 과거사 문제라는 특수한 이슈를 넘어 보다 도시 브랜딩, 관광 경제, 국가 이미지 재구성 같은 거시적인 범위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전진성(2012)은 왕조 시대의 전통적 유산과 반전·평화 기조를 채택하고 있는 성찰적 공간의 공존이 만들어 내는 ‘혼성적 기억’을 포착하고, 이것이

1) ‘Counter-monument’를 직역하면 반(反)기념물이겠으나, Young이 제시하는 개념은 기념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념비 형식 자체에 저항하여 문제제기하고 성찰을 촉발한다는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대항기념물’이라고 번역하였다.

베를린의 도시 정체성의 근간을 이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 유산과 성찰적 공간의 병존 및 상호작용에 대한 적극적 평가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기념공간 연구를 종합하면, 그 이론적 경향을 크게 네 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1세대는 기념물의 건립 과정, 형태,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며 국가 권력과 집단 정체성의 관계를 다뤘고(Nora 1989; Connerton 1989), 2세대는 전통적 기념물의 권위주의적 속성을 비판하며 대항기념물(counter-monument) 개념을 제안했다(Young 1992, 2000). 3세대는 기념물의 체험과 활용, 재맥락화에 주목하며 다크 투어리즘 연구를 통해 추도시설의 복합적 기능을 분석했고(Stone 2006; Lennon & Foley 2000; Macdonald 2009), 4세대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SNS, 전시, 퍼포먼스, 시민참여활동 등 무형의 요소가 기념을 구성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Hoskins 2018). 3세대와 4세대 논의를 잇는 지점에서 진행되는 본 연구는 추도시설의 재맥락화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물리적 공간의 네트워크가 기억의 안정성과 해석의 준거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추도시설이 드러내는 역사인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평판 등 무형의 요소가 독일과 베를린에 일정한 가치를 제공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avid Throsby(2001)의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추도시설들이 독일과 베를린에 제공하는 가치의 다층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념공간이 사회적 담론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능동적 자산으로 전환되어, 전통적 유산들과 함께 문화자본으로 기능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베를린 도심부의 기념공간을 시간적 축적과 공간적 집적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개별 기념공간 분석 및 여러 기념공간이 만들어 내는 도시 경관의 분석은 공간의 물질적 형상, 사회적 기능, 상징적 의미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최병두 2012, 130).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정치적 상황이나 도시 경관의 변화 속에서 기념공간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상호 간 해석의 준거로 작동하는 네트워크를 포착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베를린 중심축(운터덴린덴) 일대를 대상으로, ①19세기 중반부터 1910년대까지의 '창조의 기념비화', ②전쟁과 재건기를 거친 '선별·보존의 기념비화', ③통일 이후 새로운 추도시설들이 더해진 '재맥락화의 기념비화'라는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도심부 기념공간이 정치적 상징에서 사회적 기억으로, 나아가 문화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기억의 장소가 재맥락화되며 의미를 생산하고 도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독일이 형성한 문화자본과 국가 이미지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베를린 사례를 통해 도시의 기념공간이 기억과 가치 생산의 순환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향후 한국 도시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이론적 구성틀

본 장에서는 베를린 운터덴린덴 일대의 기억의 장소들을 해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개별 기념물의 조형적 특징이나 의미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공간 속에서 공간-기억-가치가 상호작용하며 형성하는 관계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중층적 교차 구조(layered and intersecting structure)로서, 이는 시간적 축적과 공간적 집적이 교차하며 의미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지칭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심부 기억의 장소들은 사회적 기억의 흔적들이 켜켜이 쌓이고 서로 교차하면서 의미를 확장시키는 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도심과 기억: 공간적 특징과 의미구조

도심(core)은 한 도시의 기능적 중심일 뿐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이 구현된 상징적 공간이다(Lynch 1960, 78). 특히 수도의 도심은 국가의 정체성과 권력이 집중되는 공간으로, 행정·정치·문화적 기능이 중첩되어 시대별 지배 담론이 층위를 이루며 축적된다. 이러한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중심이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를 서술하고 재현하는 상징적 무대로 작동한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건립한 건물이나 동상 등의 기념물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 상징을 드러내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집단기억의 산물이라면 서 집단기억을 강화하는 ‘기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Assmann(2006, 20)은 도심이 도시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점이나 주요 건축물이 밀집되어 생겨난 시각적 존재감이 집단기억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대화(in Szene gesetzt) 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하며, 도심부 기억의 장소가 사회적 기억을 표현하고 재현하는 장치로 기능함을 강조했다.

이처럼 도심부가 기억의 무대로 기능하는 것은 그것이 물리적 구조이면서 동시에 기호적 질서로 이루어진 복합체이기 때문이다. 건축물, 거리 이름, 기념물, 심지어 폐허의 흔적까지 모두 사회적 의미를 담은 기호로 작용하며, 도시 전체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된다. 따라서 도심부 기억의 장소를 분석하는 것은 개별 건축물의 형태를 넘어, 서로 다른 의미와 기억이 얹혀 형성된 기호적 관계망(symbolic relations)을 읽어내는 과정이 된다.

이러한 기호적 관계망은 두 가지 차원에서 형성된다. 첫째는 시대별 흔적이 중첩되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적 축적(temporal layering)이며, 둘째는 상징과 제도가 밀집되어 의미의 밀도가 강화되는 공간적 집적(spatial concentration)이다. 이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도심은 단일한 서사로 환원될 수 없는 복합적인 기억의 장으로 변모하며, 사회적 갈등과 담론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적 무대가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기억의 장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기억(memory)과 기념(commemoration)이 교차하는 장이다. 기억은 과거에 대한 집단적인 재현과 해석의 총체를 의미하며, 기념은 그러한 기억을 물리적·의례적 형식으로 실천하는 행위를 지칭한다(Connerton 1989). Pierre Nora(1989)의 기억의 장소(Lieux de Mémoire)라는 개념은 이 두 차원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개별 기념물을 넘어 거리, 광장, 건축군 등 복합적 장소성을 지닌 공간 전체를 '기억의 장소'로 제시하였다.

2. 기억의 장소화와 네트워크 형성

기억이 도심부 공간에 새겨지는 과정은 결코 자동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다. 집단의 경험과 서사는 특정한 공간에 축적되고, 그 공간은 도시의 정체성을 구성한다(Nora 1989, 18-20). 그러나 이 과정은 선택적이다. 사회가 특정한 과거를 해석하고 선택하는 방식(Connerton 1989, 59; Assmann 1995, 125-133)은 건축과 조형의 형태로 도시공간 속에서 실체화된다. 그리고 공간화의 과정 속에서 기억은 고정되지 않고, 주변 공간 및 다른 기념물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되며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Macdonald 2009, 1-2; Till 2005, 8).

이러한 과정은 기억의 장소가 단순히 기억을 보존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가 경쟁하고 재배치되는 담론의 장임을 보여준다. 여기서 '장소(place)'는 단순한 '공간(space)'과 구별되는데, Tilley(1994, 11)가 지적했듯 장소는 경험과 의미가 축적된 사회적 구성물이다. 국가권력이 기념물을 설치하여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을 드러내고자 할지라도, 그 의미는 공공의 장에서 협상되고 때로는 전복되기도 한다. Assmann이 지적했듯, 기억의 장소는 과거 해석이 사회적 협상과 토론을 거치며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산으로 재편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Assmann 2006, 11; Nora 1989, 12).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기억의 장소는 사회적 선택과 권력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 19세기 이전 기억의 장소는 주로 왕이나 장군의 조각, 왕궁 같은 권위적 건축물, 전쟁 승리 기념물 등 국가권력과 영웅 서사를 강화하는 상징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 이후 기념의 주체가 권력자에서 시민사회로 변화하면서 왕이나 귀족을 위한 상징을 대신해 시민과 공동체적 가치를 표상하는 기념물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기억의 장소를 둘러싼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었다. 산업화 및 제국주의 시기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유럽 각국 수도에는 국력 과시와 애국심 고취를 목표로 한 대규모 기념물이 건립되고 광장과 도로 등 웅장한 경관이 조성되었다. 이 공간들은 파시즘 시기와 냉전기에는 국민 동원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이런 기념물은 영광과 자부심의 상징에서 벗어나 기성 사회질서나 관념을 비판하고 성찰을 촉진하는 장치로 변하고 있다(Krzyżanowska 2015, 470). 이러한 변화에 대해 Young(1993,

5)은 “기념물이 단순한 기억의 저장고에서 벗어나 집단 정체성과 역사 서사를 둘러싼 지속적 협상의 무대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전환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곳이 독일이다. 2차대전에서의 패배 이후, 독일은 강한 국력이나 강력한 지도자, 혹은 군사적 승리를 과시하던 기존 수도 도심부 기억의 장소들이 가진 종래의 의미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과거 왕조적·군사적·제국주의적 기억의 장소를 대체하거나 재맥락화하며, 과거사 극복과 반성적 역사 인식을 제시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억의 장소들이 도심부에 자리하게 된 것은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반영한다.

독일의 전후 기억 문화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기억의 장소를 구성하는 기념물(Denkmal) 형식이 다양해지고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전통적인 기념물은 폭력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된 이를 영웅, 희생자, 순교자, 승리자 등으로 묘사하던 방식(Koselleck 1979, 256)으로서, 주로 조각상이나 비석 같은 조형적 형태를 지닌 기념비(Monument)의 형태로 건립되었다. 그러나 전후 독일에서는 반성과 성찰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식의 기념물들이 등장하며, 기억의 장소를 구성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새로운 기념물 형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추도시설(Gedenkstätte)로서, 이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의례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교육적·성찰적 기능을 수행한다(Till 2005, 8-11). 추도시설은 단일 기념물이 아니라 전시관, 문서센터, 기념비, 의례 공간 등을 포괄하는 ‘시설(Stätte)’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베를린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 추도시설(Gedenkstätte Sachsenhausen)은 수용소 유적지 전체를 보존하며 박물관, 기록관, 교육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노이에 바헤(Neue Wache)는 단일 건축물이지만 국가 추도시설(Zentrale Gedenkstätte)로 재맥락화되어 전쟁과 폭정(Krieg und Gewaltherrschaft)의 희생자를 위한 추모 및 의례 공간으로 기능한다.²⁾

둘째, 경고비(Mahnmal)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경고(Mahnung)와 반성을 목적으로 한다. Knischewski & Spittler(2005, 12)가 지적했듯, 경고비는 ‘가해의 기억’을 다루는 독일 특유의 형식으로, 피해자 추모에 초점을 둔 추도시설과는 구별된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셋째, 대항기념물(Gegendenkmal, Counter-Monument)으로서, 전통적인 기념물의 권위를 거부하고 비판적 성찰을 유도한다. Young(1992, 271)은 이를 ‘기억에 대항하는 기억(memory against itself)’으로 정의하며, 함부르크의 ‘파시즘 반대 기념물(Hamburg Monument Against Fascism, 1986)’처럼 시간이 지나며 사라지거나 변형되도록 설계된 사례를 제시한다. 대항기념물은 기념이 영구적인 것(permanence)이 아니라 과정(process)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을 베를린 도심부의 대표적인 대항기념물 사례로 분석한다.

2) 노이에 바헤에 관해서는 정성윤(2017)의 연구를 참고.

그런데 전술한 유형의 기억의 장소들(추도시설, 경고비, 대항기념물)은 도심부에 위치한 역사적 기념물들(왕궁, 개선문, 승전기념비)과 병존하며, 결코 독립된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의 장소들은 인접한 다른 장소가 가진 의미나 맥락을 참조하며 나름의 의미와 맥락을 획득한다. 마찬가지로 역사적 기념물 역시 새로운 기억의 장소들과 병존하는 가운데 현재적 의미를 획득하고 재맥락화된다. 여러 기억의 장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은 도심 전체를 하나의 기억경관(Memory Landscape)으로 전환한다.

노이에 바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 등 20세기 말 이후 베를린 도심부에 새롭게 마련된 기억의 장소들은 각각 다른 집단의 기억을 표상하면서도 상호참조적 구조를 이루며, 베를린 도심부의 기억정치가 전개되는 핵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처럼 기억의 장소는 개별 공간 내부가 아니라 공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며, 비밀상적이고 이질적인 헤테로토피아의 네트워크가 베를린의 도시 정체성을 규정하는 새로운 대표성으로 작동한다.³⁾

3. 기억의 장소와 가치순환: 문화자본으로의 전환

도심부 기억의 장소들이 형성하는 이러한 네트워크는 단순히 상징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가치의 순환으로 이어진다. 문화경제학적 관점에서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은 단순한 보존 대상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과거로부터 전승된 산물이 구성원들에게 유무형의 편익을 제공하는 일종의 문화자산(Cultural Asset)으로 평가된다(Throsby 2001). 이러한 관점에서 기억의 장소는 과거의 사건과 기억을 물리적 형태로 전환시킴으로써 역사적·상징적 가치는 물론 교육적·정치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Caves 2005, 470), 도시의 정체성을 재생산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억의 장소가 지닌 가치를 평가할 때 핵심적인 기준은 개별 기념물의 미학적 완결성이나 역사적 희소성이 아니라, 그 공간이 사회적 해석과 논쟁을 통해 획득하는 의미에 있다. 기념물, 나아가 기억의 장소는 자율적 예술품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는 상징체계를 매개로 집단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사회적 매체로서 기능한다(Krzyżanowska 2015, 469-470). 이러한 점에서 기억의 장소는 단순한 과거의 표상이 아니라, 사회가 과거를 해석하고 책임지는 방식을 실험하는 공공의 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⁴⁾이라는 개념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Macdonald(2009)는 독일의 나치 유산 사례를 통해 공동체가 자부심을 느끼기 어려운 과거—가해, 폭력,

3) Foucault가 제시한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개념은 사회의 일상적 질서를 비추는 동시에 교란시키며, 정상성과 타자성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베를린 도심부의 기억의 장소들은 바로 이러한 헤테로토피아로서, 일상적 공간 질서를 벗어나 사회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장으로 작동한다(Foucault 1984, 46).

4) Macdonald(2009)가 논하는 'Difficult Heritage'는 나치의 과거 같은 어렵고 불편한 역사를 의미하는데, 맥락에 따라 '어려운 유산', '불편한 유산', '논쟁적 유산', '부끄러운 유산' 등으로 번역된다. 본 연구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도심부 기억의 장소를 '공간-기억-가치(문화자산)' 삼중구조로 논하기 때문에 '불편문화유산'이라고 지칭하였다.

전쟁, 억압과 같은 부정적 유산—를 다루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불편한 과거를 미화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된 논쟁을 통해 불편함과 윤리적 긴장을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담론을 재조정하고 시민사회의 성찰을 촉진시킨다. 여기에서 기억의 장소는 부정적인 기억을 반복하는 장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하고 시민 윤리를 재정립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개념이 논쟁가치(Streitwert; contested value)이다. 일반적으로 기념물은 역사성, 상징성, 예술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유산가치(Heritage Value)를 인정받고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며, 이러한 유산가치를 지키기 위한 보존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산가치가 아니라 논쟁가치에 주목하는 입장에서 볼 때, 논쟁은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긍정적 요소이다. Dolff-Bonekämper(2021, 7)에 따르면 기념물의 가치는 그것을 둘러싼 갈등과 논쟁 속에서 발생하는 논쟁가치로 (재)규정될 수 있으며, 기억의 장소가 사회적 충동을 가시화하고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가치가 강화된다. 여기에서 논쟁가치는 합의된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담론과 갈등 과정을 문화유산의 핵심적인 가치로 인정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성찰과 민주적 토론을 촉진한다. Schmitt(2022, 116-118)는 이러한 논쟁적 유산(contested heritage)이 단순히 게 저장기억(Speichergedächtnis)에 머무르지 않고 기능기억(Funktionsgedächtnis)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기억의 장소를 단순히 과거 기억을 보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논쟁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하고 시민 윤리를 실천하는 장으로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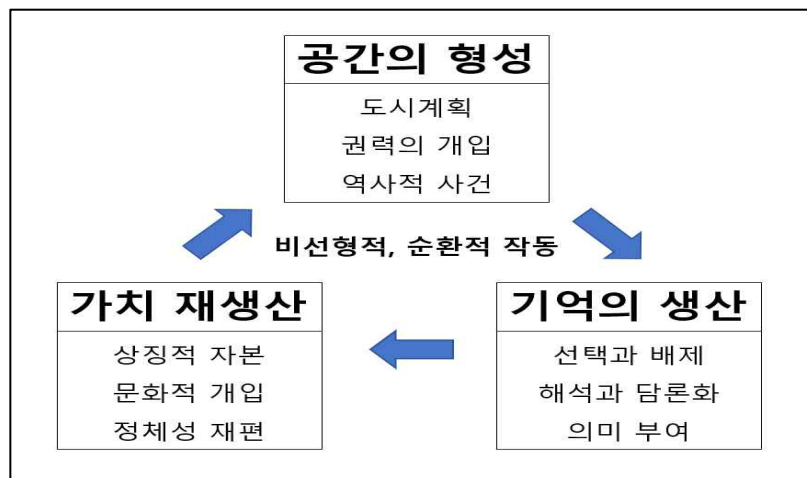
결국 기억의 장소가 갖는 의미와 가치는 불편한 과거 유산과 논쟁가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생성된다. 이 공간들은 불편함과 긴장을 통해 사회적 학습과 토론을 촉진하며, 기억의 윤리와 공공성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낸다. 추도시설, 경고비, 대항기념물 등 새로운 유형의 기억의 장소는 그러한 논쟁적 유산이 도시 차원에서 구현된 대표적 사례로, 독일의 특수한 상황과 정치적 필요를 바탕으로 조성된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이 도심부의 역사적 기념물들과 더불어 도시의 문화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특정한 기억이 공간적으로 실체화·시각화되어 문화자본으로 전환되는 단계로 나아간다. Throsby(2001)는 문화자본을 도시나 공동체 차원에서 축적해온 문화자산으로 정의하는데, 도심부 기억의 장소는 사회가 축적해 온 자산으로서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통합과 공공기억의 장이자, 물리적으로 실체화된 공공재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관광,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자본으로 전화되는 것이다. 즉, 기억의 장소는 공동체 내 반복된 논쟁과 해석을 거치면서 도시의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잡고, 문화자본의 일부가 된다.

4. 기억의 장소의 작동 구조: 공간-기억-가치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도심부 기억의 장소들은 공간-기억-가치의 삼중 구조로 작동하며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공간의 형성은 도시계획, 권력의 개입, 역사적 사건이 얹혀 만든 물리적 기반이고, 기억의 생산은 사회가 과거를 선택·배제하고 해석하며 담론화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가치 재생산은 그 공간이 상징적·문화적 자본으로 전화되는 단계이다. 세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고 순환적으로 맞물리며, 도심부 기억의 장소를 정태적 조형물이 아닌 의미와 가치의 회로로 만든다.

[그림 1] 도심부 기억의 작동 구조: 공간-기억-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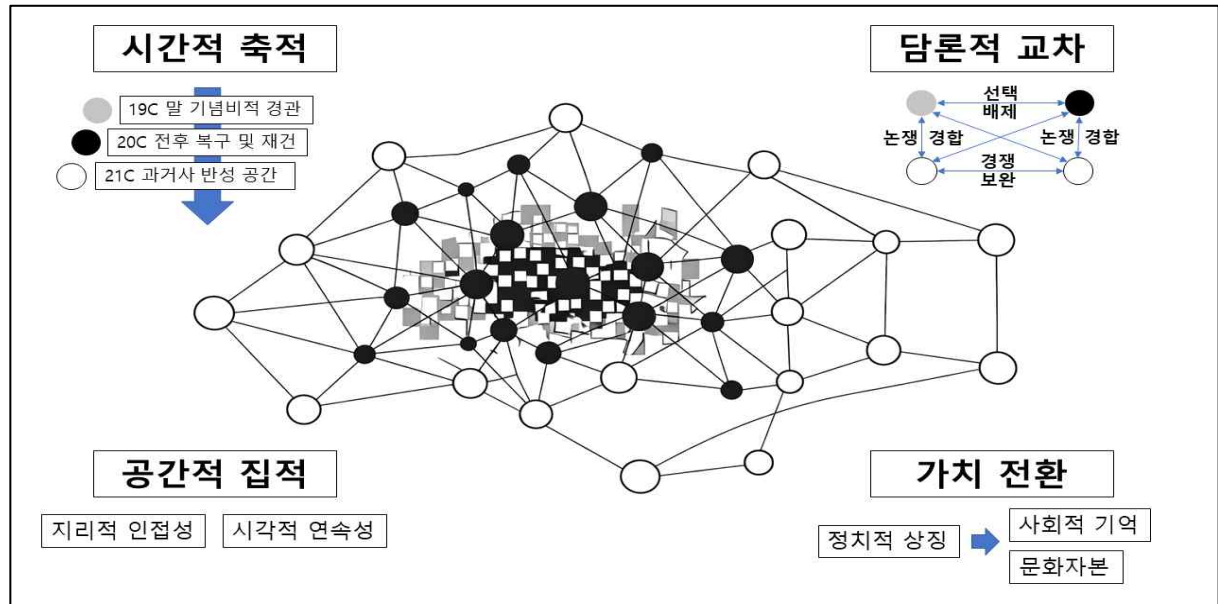


이러한 순환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한다. 첫째, 시간적 축적(temporal accumulation)은 각 시대의 정치적 의도와 기억이 공간에 중첩되고, 이후 시대가 이를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둘째, 공간적 집적(spatial concentration)은 도심부에 밀집한 기념물과 기억의 장소들이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상호참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의미의 확산과 증폭을 낳는 현상이다. 셋째, 담론적 교차(discursive intersection)는 개별 공간의 의미가 네트워크 속에서 다시 맥락화되며, 논쟁과 경합, 보완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넷째, 가치 전환(value transformation)은 정치적 상징이 사회적 기억으로, 다시 도시의 문화자본으로 전환되는 단계다.

이 네 차원은 서로 얹혀 도시의 기억을 생산하고 재구성하는 구조를 이루며, 그 속에서 도심부 기억의 장소는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고, 도시의 문화정체성을 재편한다. 기억의 장소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는 도심 곳곳에 점(point)처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기념물들을 서로

연결하고 연관시켜서 도심부를 기억 경관(Memory Landscape)으로 전환시킨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이 분석 틀은 이후 제3장에서 베를린 도심부의 역사적 변동을 추적하고, 제4장에서 통일 이후 기억 장소의 재맥락화 과정을 분석하는 해석적 전제로 작동한다.

[그림 2] 순환 구조의 작동 방식: 네 가지 차원



III. 베를린 도심부 기억의 장소의 형성과 변동

베를린 도심부에 위치한 기억의 장소들은 단일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약 150년에 걸친 건축적 축적과 복원, 그리고 공간의 사회적 재구성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앞서 2장에서 제시한 분석 틀(시간적 축적, 공간적 집적, 담론적 교차, 가치 전환)에 따라, 본 장은 도심부가 어떻게 기억의 장소로 형성되고 변모했는지를 세 단계로 나누어 고찰한다.

첫째, 19세기 중반부터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제국의 권력을 표상하는 기념물 건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다(1단계: 도심부의 기념비화). 둘째, 전쟁과 냉전기 동안 파괴된 공간을 선별적으로 재건·보존하며 정치적 정당성을 공간에 새긴 시기다(2단계: 기념물의 선별·재건·보존). 셋째, 통일 이후 새로운 유형의 기억의 장소들이 더해지며 기존 공간의 의미를 재맥락화한 시기다(3단계: 기념물의 재맥락화).

Goebel(2003)이 지적했듯, 베를린 중심부는 “근대적 도심부로의 변모와 해체, 그리고 불완전한 재조립의 반복”을 겪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대 구분은 도시경관 변화를 시간의 축으로 읽어내기 위한 분석 틀이며, 각 단계에서 공간-기억-가치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추적한다.

1. 역사적 전사: 베를린 왕궁 및 도심부 경관의 형성

17-18세기 베를린은 왕궁(Berliner Schloss)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1701년 프리드리히 1세의 대관 이후 왕궁에서 서쪽으로 1.5km 가량 이어지는 운터덴린덴(Unter den Linden) 거리가 도심의 핵심 축선으로 조성되었다(Goebel 2003, 9-10). 이 축을 따라 왕궁 인접 지역에는 무기고(1706 완공)와 국립오페라(1743 완공)가, 축의 서쪽 끝에는 도시 경계를 표시하는 브란덴부르크문(1791 완공)이 건립되었다. 18세기 후반 프리드리히 2세 시기에는 왕립도서관(1780 완공) 등 학술기관이 더해지며 왕권과 계몽의 결합을 상징하는 공간이 형성되었다.

[그림 3] 베를린 운터덴린덴의 약도



Friedrich Schinkel은 19세기 초 이 지역에 고전주의 양식의 건축물들을 건립하였다.⁵⁾ 그는 운터덴린덴 축을 중심으로 왕궁 동쪽의 루스트가르텐(Lustgarten)과 슈프레 강변을 연결하는 도시 경관을 계획하였다(Bergdoll 1994, 215). 그에 따라 왕궁 맞은편에 노이에 바헤(Neue Wache, 1818 완공), 루스트가르텐에 알테스 뮤지엄(1830 완공), 그 남쪽에 콘체르트하우스(Konzerthaus, 1821 완공)를 배치하여 도시 전체를 하나의 예술작품(Gesamtkunstwerk)으로 조직했다. Schinkel에게 기념물은 ‘권력의 표상’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이 만나는 공공적 상징의 매개체’였다(Bergdoll 1994, 215). 이는 19세기 중반 이후 본격화 될 도심 기념비화 작업의 미학적·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2. 1단계: 도심부의 기념비화(1850-1910)

19세기 중반 이후 베를린에서는 대규모 기념물 건설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었다. 1871년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제국이 성립되며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도심부 곳곳에 기념물을 건립하여 제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웅장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핵심 목표였다. 운터덴린덴 축을 중심으로 승전기념비(Siegestsäule, 1873 완공), 제국은행(Reichsbank, 1876 완공), 붉은 시청사(Rotes Rathaus, 1869 완공), 베를린 돔(Berliner Dom, 1905 완공) 등이 건립되었다.⁶⁾ Goebel(2003, 49)은 1910년경 베를린이 “구조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근대화와 기념비화를 동시에 달성한 상태(baulich wie funktional modernisiert und monumentalisiert)”였다고 평가한다.

1850년에서 1910년에서 사이의 도심 기념비화 작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공간적으로는 왕궁을 기점으로 박물관 섬(Museumsinsel)과 운터덴린덴을 잇는 축선이 제국 권력을 표상하는 핵심 경관으로 완성되었다. 둘째, 기능적으로는 국가기관, 문화시설, 종교시설이 집중 배치되며 행정·문화·상징의 중심이 형성되었다. 셋째, 프로이센이 덴마크(1864), 오스트리아(1866), 프랑스(1871)에게 거둔 승리를 기념해 건설된 전승기념탑(Siegestsäule)을 정점으로 하여, 전쟁 승리와 제국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기념물들이 도심부 주요 지점에 자리잡았다. Koshar(2000, 57)가 지적했듯, 이 시기 베를린 도심은 도시 공간 자체가 제국의 역사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공간화된 기억 장치(spatialized memory apparatus)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5) Schinkel은 1815년 프로이센 왕립 건축감독관으로 임명되어 1841년까지 베를린의 공공건축을 총괄했다. 그의 재임 기간은 프로이센이 나폴레옹 전쟁의 패배에서 벗어나 국가 정체성을 재구축하던 시기였다. 군사적 승리를 과시할 수 없었던 프로이센은 ‘문화국가(Kulturstaat)’로서의 정당성을 건축과 예술을 통해 표상하고자 했고, Schinkel의 고전주의는 이러한 전략의 핵심이었다(Bergdoll 1994, 201-203).

6) 베를린 도심의 기념물 건립은 파리의 오스만 재개발(1853-1870), 런던의 빅토리아 기념물 건설(1901-1911)과 같은 유럽 주요 수도의 도시 재편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Hall 1998, 709-715). 19세기 유럽 수도들은 자본축적과 국가 권력을 공간적으로 가시화하는 ‘세계도시(world city)’ 경쟁에 참여했으며, 베를린의 기념비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Harvey 1985, 63-89).

그러나 이 시기의 기념비화는 '제국적 기념비화'였다는 점에서, 기억(memory)보다는 권위(authority)의 건축적 연출에 가까웠다. 공간은 권력을 재현하는 수단이었으며, 이 시기의 기념물들은 이후 시대에 '기억의 대상'이자 '재맥락화의 대상'이 되는 물질적 기반으로 남게 된다.

1910년 이후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는, Goebel에 따르면 도시 경관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시기였다.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가 전쟁과 경제 위기로 인해 성과 없이(folgenlos) 종료된 탓이 컸다(Goebel 2003, 58). 다만 나치 시기 운터텐린덴 일대의 건축물들은 전쟁 동원과 선전을 위하여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노이에 바헤로, 이 건물은 프로이센이 나폴레옹에 맞서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승전기념비로서 건설된 이후 왕궁 진입로 일대의 감시 초소라는 기능을 부여받았는데, 1차대전 당시에는 국민 동원명령 및 동원명령 해제를 선언하는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1차대전 종전 후에는 전몰장병 추도소로 개조되었고, 나치 시기에는 전몰장병 현창(Ehrung)에 활용되었다(정성윤 2017). 그러나 이 시기의 변화는 주로 내부 개조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건물 외관 및 도시경관 측면의 변화는 제한적이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3. 2단계: 기념물의 선별·재건·보존(1945-1989)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를린 도심부는 기념비적 경관을 상실했다. 수많은 건축물이 파괴되었고, 전후 복구 및 복원 과정에서 경제적 실용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Goebel(2003, 123)은 이를 역사적 중심부의 “무계획적 재편(Stadtveränderung ohne Konzept)”이라 평가하며, 중세 시대에 지어진 유서 깊은 건축물조차 주택단지 개발을 위해 철거되었다고 지적한다. 이 시기 베를린의 도시계획은 새로운 건축을 통한 의미 창출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별적 과정으로 성격이 변화했다.

분단된 수도의 양측은 각각 독자적인 기념 대상, 서사구조, 추모의례를 규정하였고, 동·서베를린에 위치한 기억의 장소들을 체제의 정당성과 정치적 정체성을 시각화하는 장치로 활용했다. 동베를린의 노이에 바헤가 대표적 사례다. 노이에 바헤는 왕실 경비초소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제1차 세계대전 전몰자 추도시설로 변모했으나, 동독 시기에 다시 ‘파시즘과 군국주의 희생자를 위한 추도시설’(1960)로 재맥락화되었다.⁷⁾ 동독은 옛 왕궁을 비롯한 프로이센 건축 유산을 ‘봉건 잔재’로 규정하며 복원을 포기하거나 철거했으나, 반파시즘 서사에 부합하는 건축물은 선택적으로 보존했다(Macdonald 2013, 78-82). 이처럼 동독의 도시정책은 물리적 복원보다 상징적 재배치와 선별적 보존에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 ‘기념’은

7) Till(2005, 67-98)은 노이에 바헤의 개조가 ‘반파시즘 신화(antifascist myth)’를 도시 공간 속에 제도화하려는 시도였다고 분석한다. 동독 정권은 나치즘을 자본주의의 최종 단계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이 파시즘과 무관하다는 서사를 구축하고자 했다. 노이에 바헤는 이러한 이념적 프로젝트가 물질화된 공간이었다.

더 이상 과거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재편하고 정당성을 구축하는 정치적 행위였다. 동독의 선별적 기념비화는 과거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필요에 따라 과거를 재편성하는 과정이었다.

서베를린 역시 선별적 보존을 진행했으나 그 방향은 달랐다. 1950년대 이후 경제 재건과 교통 효율성이 도시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되면서, 역사적 건축 유산은 개발 논리에 따라 희생되었다. 도심은 기억의 공간(Gedächtnisraum)이 아니라 효율의 공간(Effizienzraum)으로 전환(Goebel 2003, 126)되었던 것이다. 한편 Ladd(1997, 189-215)는 서베를린의 도시재건을 “기억의 소거(erasure of memory)”로 규정한다. 서베를린은 과거 프로이센 유산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으며, 대신 현대적·기능주의적 도시상을 구축했다. Ladd(1997, 195-203)는 이를 “과거와의 의도적 단절(deliberate rupture from the past)”로 규정하며, 서베를린이 제국 시대의 도시 경관을 계승할 수 없었던 정치적·심리적 맥락을 분석하였다. 동독이 사회주의 서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기억의 장소를 보존했다면, 서독은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거치며 선별적으로 기억의 장소를 삭제했다. 양측 모두 전쟁 이전의 기념비적 도시 경관을 직접 계승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부정의 기념비화(monumentalization by negation)’를 수행한 셈이다.

그 결과, 베를린 도심부는 전쟁 이전에 형성한 단일한 상징적 질서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파괴와 복원, 보존과 철거가 반복적으로 교차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여러 시대의 기념물이 중첩된 도시 공간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전후 베를린에서 기억의 장소가 재구성된 과정은 단순한 재건이 아니라 기억의 대상과 보존 범위를 결정하는 정치적 선택의 과정이었다. 동·서독은 각기 다른 이념적 우선순위와 서사에 따라 특정 건축물은 보존하고 다른 요소는 비가시화하며 도심부 공간구조를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통일 이후 베를린이 직면하게 된 기억정치적 복잡성을 형성한 기반이었다.

4. 3단계: 기념물의 재맥락화(1990 이후)

통일 이후 베를린 도심부는 과거사 극복(Vergangenheitsbewältigung)이라는 과제를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했다. 동독 시기 ‘파시즘과 군국주의 희생자’를 위한 추도시설로 재맥락화되었던 노이에 바헤는 1993년 재정의되어 ‘전쟁과 폭정의 희생자들(Opfer von Krieg und Gewaltherrschaft)’을 위한 중앙 추도시설(Zentrale Gedenkstätte)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추도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이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다. 핵심 쟁점은 ‘누구를 추도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1980년대 헬무트 콜 정권 하에서 독일 우파들은 독일인 역시 전쟁의 희생자라는 입장을 제시하며 ‘무고한 독일인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실현시키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이 프로젝트는 노이에 바헤를 통해 완성에 이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유대인 단체들은 홀로코스트 희생자와 나치 가해자(독일인 전사자)를 동일한 공간에서 추도하는 것에 반발했고, 이는 별도의 추도시설 건립 요구로 이어졌다(Till 2005, 165-178).⁸⁾ 통일 독일은 노이에

바해가 상징하는 추도의 포괄성이 오히려 특정 집단의 고통을 비가시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으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2005 완공),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2012 완공) 등 구체적 피해 집단을 위한 추도시설을 도심부에 연속적으로 건립했다.

이 시기 기억의 장소들은 과거 건축 유산을 복원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억의 층위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병치했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운터덴린덴 축의 남쪽, 브란덴부르크문에서 약 200m 지점에 위치하며, 2,711개의 콘크리트 석판(Stelen)이 늘어서서 종래의 기념비 형식과는 새로운 형태의 기념비로 자리잡았다.⁹⁾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은 연방의회(Bundestag) 남쪽 티어가르텐 내에 자리하며, 수면이 있는 원형 공간에 단 하나의 삼각형 돌만을 배치하여 침묵과 부재를 표현한다.¹⁰⁾ 이처럼 새로운 대항기념물들은 과거사 책임과 반성을 다루는 조형물이지만, 전통적 추모비와 달리 영속성, 명료함, 위안을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편함, 혼란, 지속적 질문을 유발한다. Krzyżanowska(2015, 470)는 이러한 전환을 “기념물이 영광과 자부심의 상징에서 벗어나, 사회질서를 비판하고 성찰을 촉진하는 장치로 변화했다”고 설명한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추도시설들의 가치는 전통적인 유산가치 개념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새롭게 마련된 추도시설들은 그 공간의 역사나 전통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 공간이 아니다. Macdonald(2009, 4)는 이를 “역사적 장소성(Historic Siteness)이 아니라 윤리적 성찰(ethical reflection)을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는 공간”이라 규정한다. 이들 대항기념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기존 기념물(특히 운터덴린덴 일대에 위치한 독일 제국 시대의 기념물)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생성한다. 이런 ‘제국기념물’과 대항기념물의 공간적 병치는 도심부 경관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19세기 제국기 건립된 승전기념비, 베를린 대성당, 브란덴부르크문이 상징하는 승리, 영광, 민족, 국가, 권위, 영속성과 대항기념물이 상징하는 범죄, 희생, 사죄, 반성, 추모, 불완전성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바로 대조 속에서 양자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진다.

제국기념물의 전통적 상징성이 강하고 선명한 만큼, 대항기념물이 제기하는 윤리적 질문도 날카롭게 부각된다. 노이에 바해가 ‘전쟁과 폭정의 희생자들’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추도 대상을 설정한다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유대인’이라는 구체적 피해 집단을 명시한다. 전자가 Schinkel의 신고전주의

8) 노이에 바해 재설계를 둘러싼 논쟁은 1993년 Akademie der Künste가 편찬한 *Streit um die Neue Wache*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독일 유대인 중앙위원회(Zentralrat der Juden)는 케테 콜비츠의 조각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Mutter mit totem Sohn)》가 기독교적 피에타 도상을 차용하여 유대인 희생자를 적절히 표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논쟁은 단일 추도시설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피해 집단별 별도 추도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인시켰다(Akademie der Künste 1993; Young 1993, 27-48).

9)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건립은 1988년 시민단체 제안으로 시작되어 17년간의 논쟁 끝에 2005년 완공되었다. 설계 공모(1994)에서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의안이 선정되었으나, 보수 정치인들은 “독일인에게 수치심만 주는 기념물”이라 반대했고, 일부 예술가들은 “희생자를 추상화하여 비인간화한다”고 비판했다. 건립 과정 자체가 독일 사회의 기억정치를 둘러싼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10)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 건립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보다 더 긴 투쟁의 결과였다. 신티와 로마 공동체는 1980년대부터 독립적 추도시설을 요구했으나, 독일 정부는 이들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종적으로 조성된 추도비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과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형식을 취하여, 신티·로마 학살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나치 범죄의 전체 구조 속에 위치시킨다.

건축 내부에 조각을 배치한 전통적 형식이라면, 후자는 건축적 형식 자체를 해체한 대항기념물이다. 이 두 공간의 근접 배치는 우연이 아니라, 독일 사회가 기억 정치를 둘러싼 긴장을 공간적으로 가시화한 결과다(Till 2005, 203-207).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 역시 연방의회 건물과 승전기념탑이라는 제국기념물의 그림자 속에 놓여 있으며, 그로 인해 ‘누가 승리했고, 누가 희생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더욱 날카롭게 제기한다.

이러한 재맥락화는 베를린의 도시 이미지와 국가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19세기 제국 수도로서 베를린은 군사적 승리와 국력을 과시하는 도시였으나, 통일 이후 베를린은 과거사 성찰과 윤리적 책임을 표상하는 도시로 재정의되었다. 도심부 경관은 더 이상 단일한 국가 서사를 전달하지 않고, 가해와 피해, 권력과 저항, 기억과 망각의 긴장을 동시에 드러낸다. Nora(1989, 19)가 지적했듯, 기억의 장소는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공간이며, 베를린 도심부는 이러한 관계 재구성을 가장 극적으로 수행한 사례다. 국제사회에서 베를린은 ‘과거를 직시하는 도시’, ‘책임지는 국가’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Levy & Sznaider(2002, 87-106)는 홀로코스트 기억이 국가적 경계를 넘어 보편적 인권 담론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하며, 독일이 이 과정에서 도덕적 신뢰를 획득했다고 분석한다. 이는 독일의 국가 이미지 재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Olick 2007, 3-18; Art 2006, 265).¹¹⁾

이러한 공간들은 사회적 담론과 교육의 차원을 넘어 관광경제적 가치로도 전환되었다. 통일 이후 추도시설의 조성은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는 새로운 경제 섹터를 창출했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재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Information Centre 방문객만 약 48만 명에 달하며, 야외 기념비는 베를린 방문객 대다수가 경유하는 필수 경로로 자리잡았다(Stiftung Denkmal 2025).

결과적으로 베를린의 도심부는 세 시기의 기념비화 과정이 중첩된 ‘기억의 도시’로 변모하였다. 19세기의 기념물들은 제국의 권력과 국가 표상을 시각화하고, 전후의 잔존 건축물들은 단절과 파괴의 경험을 가시적으로 드러냈다. 통일 이후 조성된 추도시설들은 과거의 폭력과 가해 책임에 대한 윤리적 성찰(공적 성찰)을 전면적으로 드러낸다. 이 세 시기의 기억의 장소들은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병치되어, 도시 전체를 시간적 층위가 겹쳐진 기억 경관으로 만든다. 각 시대의 기념물들이 파편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미를 지탱하고 반사하면서 집합적 기억의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중첩적 기념비화의 과정은, 공간이 기억을 저장하는 수동적 그릇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동적 장(場)임을 보여준다.

11) Art(2006, 257-284)는 독일의 과거사 대응이 유럽통합 과정에서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필수적 자원이었으며, 베를린의 추도시설들이 이러한 진정성을 가시적으로 증명했다고 설명한다. Olick(2007, 3-18)은 독일의 과거사 대응을 “부정적 국가주의(negative nationalism)”로 규정한다. 전통적 국가주의가 자국의 영광과 위대함을 강조한다면, 독일은 과거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함으로써 도덕적 신뢰를 획득하는 역설적 전략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독일의 리더십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자본으로 작동했다.

IV. 기억의 장소의 재맥락화와 문화자본으로의 전환

베를린 도심부 기억의 장소들은 개별 건축물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의 층위가 겹치며 만들어진 의미의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는 시간적으로는 각 시대의 정치적 맥락을 반영하고, 공간적으로는 지리적 근접성과 시각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시간적 축적과 공간적 집적은 개별 시설의 상징성을 넘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기억 장치'로 기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본 장에서는 기억의 장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기억의 경관(Memory Landscape)과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으로 전환되는지를 살펴본다.

1. 기억의 장소의 시공간적 집적과 의미의 층위

운터덴린덴 일대는 베를린 도심부의 역사적 핵심축이자 기억의 장소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다. 18세기의 왕궁과 성당, 19세기 제국 시대의 기념비, 20세기의 전몰장병 추모시설 그리고 21세기의 반성적 기억을 표상하는 공간이 모두 이 축선상에 자리한다. 공간의 시간적 층위화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각 장소는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포하지만, 그 물리적 근접성이 상호참조적 관계를 만들어낸다.

예컨대 노이에 바헤(Neue Wache)는 19세기의 군사적 승전 기념에서 출발해, 동독 시기의 반파시즘 추모시설을 거쳐 통일 이후에는 '전쟁과 폭정의 희생자들을 위한 국가 추모시설'로 재정의되었다.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과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이 있으며, 이들 공간은 노이에 바헤와 대화하듯 배치되어 있다. 각 장소는 개별적으로는 모호하거나 한정된 메시지를 지니지만, 집합적으로는 보다 명확한 역사 인식을 구성한다. 이는 마치 의미의 삼각측량(triangulation of meaning)처럼, 각 점이 서로를 규정하고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다.

이러한 집적은 해석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온다. 개별 장소의 정치적 편향이나 해석상의 모호함이, 주변 시설과의 관계 속에서 완화되거나 재조정되기 때문이다. 노이에 바헤가 국가의 책임을 상징한다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은 주변부의 고통을 드러낸다. 이처럼 다성적 기억의 공간들은 서로의 의미를 보완하고, 때로는 긴장 속에서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만든다. 이러한 구조는 푸코가 말한 헤테로토피아의 '이질성의 병치'를 넘어, 이질성의 상호작용이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기억의 장소 네트워크의 사회적 작동: 기억 경관의 형성

이처럼 기억의 장소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는 단순히 물리적 인접성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민과 방문객은 운터텐텐 일대를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여러 기억의 장소와 마주친다. 그 경험은 단일한 기념물 앞에서의 ‘의례적 추모’가 아니라, 일상적 동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성찰이다. 즉, 기념의 장소들은 더 이상 특정한 정치 행위의 무대가 아니라, 시민적 윤리와 역사인식이 일상 속에서 재생산되는 장소로 전환된 것이다.

운터텐텐 일대의 추도시설들은 물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경로를 형성한다. 노이에 바헤, 브란덴부르크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신티·로마 추모비, 그리고 토포그래피 데스 테러스(Topographie des Terrors) 등이 서로 도보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 위치하며, 방문객은 이 일대를 걷는 과정에서 베를린 도심 공간에 중첩되어 드러나 있는 전쟁, 폭력, 분단, 화해의 역사적 층위를 몸으로 경험하게 된다.¹²⁾ 이는 추상적 도덕 교훈보다 더 강력한 공간적 학습(spatial learning)의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기억의 경관(Memory Landscape)을 형성한다. 노라가 말한 ‘기억의 장소’가 고정된 단일 지점을 의미했다면, 베를린의 경우에는 장소 간의 관계와 움직임 속에서 기억이 구성된다. 이곳의 기억은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다수의 점과 선이 엮인 폴리포닉(polyphonic) 구조로 작동한다. 서로 다른 시대의 기억의 장소들이 하나의 도시적 서사로 엮이면서, 베를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은 ‘성찰하는 도시’로 재정의되었다.

3. 문화자본으로의 전환: 기억의 경제와 도시 브랜드

기억의 장소들의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Throsby(2001, 28-43)는 문화자본을 “미래 세대에 문화적 편익의 흐름을 제공하는 문화적 가치의 자산”으로 정의하며, 이것이 유형적 형태(건축물, 예술작품)와 무형적 형태(관습, 가치, 신념)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베를린 도심부는 이 두 층위가 중첩된 복합적 문화자본을 형성한다. 왕궁, 박물관섬 등 전근대 건축유산이 지닌 전통적 역사성과 2000년대 이후 구축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

12)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 호모섹슈얼 메모리얼, 인락사 희생자 메모리얼 등을 관할하는 Stiftung Denkmal für ermordeten Juden Europas에서는 재단이 담당하는 기념물들에 대한 도보 가이드 투어(Guided Tour)를 제공하고 있다. ‘기억의 경관으로서의 베를린 (Berlin as a landscape of remembrance)’이라는 이름의 이 투어는 약 2시간 30분 동안 도심의 기념물들을 도보로 답사하며, 참가자에게 장소의 연원이나 기념물의 목표, 디자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념물이 어떤 대상을 다루고 있고 누구를 다루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기념물들이 도심에 위치하게 되었는지, 나치 과거사가 오늘날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https://www.stiftung-denkmal.de/en/offers/city-walk-berlin-as-a-landscape-of-remembrance/> (Accessed Dec. 30, 2025)

등 성찰적 공간이 동일 축선상에 병치되면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윤리적 성찰의 장으로서의 가치가 상호 강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은 교육, 관광, 도시마케팅의 측면에서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베를린을 방문해 최소 하나 이상의 추도시설을 경유한다.

Caves(2000, 3-18)는 문화산업이 지닌 '아무도 모른다(nobody knows)' 속성, 즉 사전에 가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반성적 기억을 표상하는 베를린의 기억의 장소들은 건립 당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도시의 핵심 문화자산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문화자본이 즉각적 시장 거래가 아닌 사회적 인정과 담론 축적을 통해 형성됨을 보여준다.

베를린시 관광위원회 보고서(visitBerlin 2025)에 따르면 2019년 관광객의 총 지출액은 169억 유로로, 이는 베를린 GDP의 3.2%에 해당하는 직접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Novy와 Colomb(2013, 1820-1822)은 베를린시의 도시 관광전략에서 기억의 장소가 '책임 있는 수도' 이미지를 구축하는 핵심 문화자원으로 활용되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베를린은 창조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억의 장소 네트워크는 이러한 도시 브랜딩의 중요한 축을 형성했다. Colomb(2012, 140-145)는 베를린이 '기억 관광'과 '창조 경제'를 결합하여 독특한 도시 정체성을 만들어냈으며, 기억의 장소들이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과거를 직시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라는 상징자본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했다고 분석한다.

베를린의 문화자본은 단순히 도시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정치자본(Political Capital)으로도 작동한다. Art(2006, 257-284)는 독일의 과거사 대응이 유럽통합 과정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필수적 정치자본이었으며, 베를린의 기억의 장소들이 이러한 진정성을 가시적으로 증명했다고 설명한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과 같은 공간들은 독일이 과거의 범죄를 은폐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반성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물적 증거로 기능한 것이다. 베를린의 기억의 장소 네트워크는 바로 이 부정적 국가주의의 물리적 구현이며, 이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독일의 리더십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자본이자 정치적 자본으로 작동했다. 독일 총리들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을 방문하고, 외국 정상들이 노이에 바헤에 헌화하는 의례는 단순한 추도 행위가 아니라 독일의 도덕적 신뢰를 재확인하는 정치적 퍼포먼스다.

베를린의 기억의 장소들은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대표적인 사례로, 방문객들은 이 공간에서 단순히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체감하고 윤리적 성찰을 경험한다. 이는 문화자본의 지속가능한 재생산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윤리적 긴장을 수반한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나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이 관광 상품으로 소비되는 현상은 '고통의 상품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 개념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환기시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쟁과 비판, 시민토론, 학술포럼 등을 통해 끊임없이 기억의 윤리를 갱신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논쟁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 역시 가능하다.

그 결과 베를린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과거를 성찰함으로써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과정은 베를린이 “기억의 수도(Capital of Memory)”로 불리게 된 배경이며, 기억의 장소 네트워크가 도시 브랜드로 기능하게 된 핵심 요인이다. 동시에 이는 베를린의 문화자본이자 독일의 정치자본으로, 도시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을 동시에 관통하는 이중적 가치 구조를 형성한다.

요컨대, 베를린 도심부의 기억의 장소들은 개별적 건축물의 미학적 가치를 넘어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자본으로 기능한다. 그들은 과거의 비극과 권위, 폭력의 흔적을 숨기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기억의 윤리를 공유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시킨다. 이와 같은 다층적 전환 과정은 도시가 스스로를 중층적, 교차적 기억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이다.

IV. 결론: 중층적 기억과 문화자본의 구조

본 연구는 베를린 도심부의 기념공간을 공간 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기념비화(Monumentalisierung)의 과정을 창조(1850-1910), 선별·보존(1945-1989), 재맥락화(1990-현재)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기념공간이 정태적 유산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의 변동 속에서 지속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동적 구조물(dynamic construct)임을 확인하였다. 각 시대의 정치적 필요와 이념적 정당성은 공간의 창조와 선별을 결정했으며, 통일 이후 베를린은 이러한 이질적 층위들을 재맥락화하여 다층적 기억이 공존하는 기억의 경관(Memory Landscape)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가 제시한 분석 틀은 공간-기억-가치의 삼중 구조로 요약된다. 공간의 형성은 도시계획, 권력, 역사적 사건이 얹혀 만든 물리적 기반이며, 기억의 생산은 사회가 과거를 선택·배제하고 해석하며 담론화하는 과정이고, 가치의 재생산은 그 공간이 상징자본에서 문화자본으로, 나아가 정치자본으로 전환되는 단계이다. 이 세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고 순환적으로 작동하며, 네 가지 차원—시간적 축적(temporal accumulation), 공간적 집적(spatial concentration), 담론적 교차(discursive intersection), 가치 전환(value transformation)—을 통해 구체화된다.

베를린 사례의 특수성은 이러한 네 차원이 극단적으로 압축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있다. 19세기의 권력적 공간, 20세기의 이념적 공간, 21세기의 성찰적 공간이 물리적으로 병치되면서, 각각의 장소가 서로를 해석하고 비판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병치는 우연한 공존이 아니라 의미의 몽타주적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화의 몽타주가 개별 쇼트의 병치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듯, 베를린 도심부는 서로 다른 시대와 담론이 얹힌 장소들이 병치되며 단일 공간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집합적

의미를 창출한다. 제국기념비가 상징하는 승리와 권위, 추도시설이 드러내는 희생과 반성은 대립하면서도 상호참조적 관계를 형성하며, 이 긴장 구조 자체가 베를린의 기억 경관을 구성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분석은 몇 가지 이론적 기여를 제공한다. 첫째, 기억 연구(memory studies)와 도시 연구(urban studies)를 문화경제학적 관점에서 통합하였다. 기존 연구가 기념공간을 주로 상징적 차원이나 담론적 차원에서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Throsby(2001), Caves(2000)의 문화자본 이론을 결합하여 상징자본이 문화자본 및 정치자본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실증하였다. 둘째, 개별 기념물이 아닌 기념공간의 네트워크를 분석 단위로 설정함으로써, 공간들 간의 상호작용이 의미를 생성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셋째, 베를린은 20세기 이후 기억 담론과 추도시설 조성에서 이론과 실천을 선도한 지역으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대항기념물, 불평문화유산 등 새로운 기념 양식이 실험되고 확산된 중심지이다. 따라서 베를린 사례 분석은 단일 도시에 대한 사례 연구를 넘어, 현대 도시의 기억 정치와 문화자본 형성에 관한 확장 가능한 문제제기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른 역사적 트라우마를 지닌 도시들에도 적용 가능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시기와 관련된 장소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도시정책은 전통적으로 재개발을 통한 물리적 쇄신과 지역 가치 상승에 집중해왔으며, 기존 공간의 보존과 의미 부여를 통한 가치 창출 방식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베를린 사례는 재개발이라는 물리적 갱신 없이도, 기존 공간의 유지·보존과 네트워킹, 그리고 사회적 담론을 통한 의미 재구성만으로 문화자본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역사적 장소의 활용에 있어 파괴와 재건이 아닌 재맥락화와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대안적 경로를 제시하며, 한국 도시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남영동 대공분실(현 민주화운동기념관), 구 전남도청 등 국가폭력의 현장을 복원하고 전시·교육 기능을 통합한 복합 공간의 조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념공간 건립이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국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지면서, 국가폭력을 고발하는 공간에 국가의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비해 베를린은 상대적으로 작고 소박한 개별 공간들을 통해 선명한 입장을 드러내며, 이들 공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반전과 평화라는 공유된 인식을 구축한다. 공간의 규모, 스타일, 기념 대상, 운영 주체가 다양하다는 점은 희생자를 기억하는 올바른 방식에 대한 윤리적 고민으로 이어지는데, 이 역시 거대 국책사업 중심의 한국 기념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베를린의 기억의 장소 네트워크는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정치적 맥락, 특히 과거사 극복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 속에서 형성되었다. Art(2006)와 Olick(2007)이 지적했듯, 독일의 과거사 대응은 유럽통합과 국제사회 복귀라는 구체적 정치적 필요와 결합되어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나 도시가 동일한 경로를 따를 수 없는 특수성을 구성한다. 또한 본 연구는 주로 도심부의 공식적 기념공간에 집중하였으며, 주변부나 비공식적 기억의 장소, 그리고 시민사회의 기억 실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베를린 모델의 이식 가능성과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베를린 도심부에 위치한 서로 다른 시대의 기념물들이 공간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상호 해석의 준거로 작동하며, 결과적으로 역사수정주의나 극우적 해석을 억제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주요 논점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향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형 기억 생산이 활성화될 경우, 물리적 공간이 제시하는 역사 해석의 영향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맥락이 탈각된 이미지나 서사가 유통되고, 이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유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플랫폼을 아우르는 기억의 다중매체적 거버넌스(multi-platform governance)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시민참여의 개방성과 역사적 사실성 사이의 긴장을 조율할 윤리적 판단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공적 기억(public memory)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후속 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본 연구가 다루고 있지 않은 영역이며,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결국 베를린 도심부의 기억의 장소들은 고정된 상징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시간이 중첩된 층위들이 교차하며 구성한 중층적 기억의 경관이다. 공간은 기억을 저장하는 수동적 그릇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동적 장(場)으로 기능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상징은 사회적 기억으로, 사회적 기억은 문화자본으로, 문화자본은 다시 도시의 정체성과 국가의 정치자본으로 전환된다. 베를린은 이러한 순환 구조를 통해 도시가 역사와 공공성을 재구성하는 실험장임을 보여주며, 본 연구는 그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해명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전진성. 2012. 「통일독일 수도 베를린의 발명 - 도시공간의 형성과 기억의 도구화에 관하여」. 대구사학 106: 1-32.
- 정성윤. 2017. 「독일 국립추도시설 '노이에 바헤'의 보편성과 특수성 : '일반 희생자 추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병두. 2012. 「역사적 경관의 복원과 장소 정체성의 재구성」. 공간과 사회 22(4): 92-135.
- Akademie der Künste (ed.). 1993. *Streit um die Neue Wache: Zur Gestaltung einer zentralen Gedenkstätte*. Berlin: Akademie der Künste.
- Art, David. 2006. "The Politics of the Nazi Past in Germany and Austria."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41(2): 265-283.
- Assmann, Aleida. 1995. *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 München: C.H. Beck.
- Assmann, Aleida. 2006. *Der lange Schatten der Vergangenheit: Erinnerungskultur und Geschichtspolitik*. München: C.H. Beck.
- Bergdoll, Barry. 1994. *Karl Friedrich Schinkel: An Architecture for Prussia*. New York: Rizzoli.
- Caves, Richard E. 2005. "The Economics of Cultural Goods." In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edited by Victor A. Ginsburgh and David Throsby, 469-473. Amsterdam: Elsevier.
- Connerton, Paul. 1989.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lff-Bonekämper, Gabi. 2021. *Der Streitwert der Denkmale: Berliner Texte 2009-2019*. Berlin: Urbanophil.
- Foucault, Michel. 1984. "Of Other Spaces: Utopias and Heterotopias." *Architecture/Mouvement/Continuité*, October.
- Goebel, Benedikt. 2003. *Der Umbau Alt-Berlins zum modernen Stadtzentrum*. Berlin: Gebr. Mann Verlag.
- Hall, Peter. 1998. *Cities in Civilization*. New York: Pantheon Books.
- Harvey, David. 1985. *The Urbanization of Capital: Studies in the History and Theory of Capitalist Urbaniz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oskins, A. (ed.) 2018. *Digital memory studies: Media pasts in transition*. Routledge.
- Knischewski, Gerd, and Ulla Spittler. 2005. "Remembering the Past: The Role of Commemoration in Contemporary Germany." *German Life and Letters* 58(1): 8-23.
- Koselleck, Reinhart. 1979. "Kriegerdenkmale als Identitätsstiftungen der Überlebenden." In *Identität*, edited by Odo Marquard and Karlheinz Stierle, 255-276. München: Fink.
- Koshar, Rudy. 2000. *From Monuments to Traces: Artifacts of German Memory, 1870-199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rzyżanowska, Natalia. 2015. "The Discourse of Counter-monuments: Semiotics of Material Commemoration in Contemporary Urban Spaces." *Social Semiotics* 26(5): 465-485.
- Ladd, Brian. 1997. *The Ghosts of Berlin: Confronting German History in the Urban Landsca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nnon, J., & Foley, M. 2000. *Dark tourism: 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 Continuum.
- Levy, Daniel, and Natan Sznaider. 2002. "Memory Unbound: The Holocaust and the Formation of Cosmopolitan Memor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5(1): 87-106.
- Lynch, Kevin. 1960.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 MIT Press.
- Macdonald, Sharon. 2009. *Difficult Heritage: Negotiating the Nazi Past in Nuremberg and Beyond*. London: Routledge.
- Macdonald, Sharon. 2013. *Memorylands: Heritage and Identity in Europe Today*. London: Routledge.
- Nora, Pierre. 1989. "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émoire." *Representations* 26: 7-24.
- Novy, Johannes, and Claire Colomb. 2013. "Struggling for the Right to the (Creative) City in Berlin and Hamburg: New Urban Social Movements, New 'Spaces of Hop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5): 1816-1838.
- Olick, Jeffrey K. 2007. *The Politics of Regret: On Collective Memory and Historical Responsibility*. New York: Routledge.
- Schmitt, Thomas. 2022. "From Storage Memory to Functional Memory: The Role of Contested Heritage in Urban Spaces." *Heritage & Society* 15(2): 115-133.
- Stiftung 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2025. "A Visible Sign – 20 Years of the Holocaust Memorial in Berlin", Press Release <https://www.stif->

tung-denkmal.de/en/latest-news/a-visible-sign-20-years-of-the-holocaust-memorial-in-berlin/ (accessed May 6, 2025)

- Stone, P. R. 2006. "A dark tourism spectrum: Towards a typology of death and macabre related tourist sites, attractions and exhibitions." *Tourism: An Interdisciplinary International Journal* 54(2): 145-160.
- Throsby, David. 2001. *Economics and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ll, Karen E. 2005. *The New Berlin: Memory, Politics, Pla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Tilly, Christopher. 1994. *A Phenomenology of Landscape: Places, Paths and Monuments*. Oxford: Berg.
- visitBerlin. 2025. "An economic factor for Berlin – the tourism and convention industry." <https://about.visitberlin.de/en/economic-factor-berlin-tourism-and-convention-industry/> (accessed Oct 30, 2025)
- Young, J. E. 2000. *At memory's edge: After-images of the Holocaust in contemporary art and architecture*. Yale University Press.
- Young, James E. 1992. "The Counter-Monument: Memory against Itself in Germany Today." *Critical Inquiry* 18(2): 267-296.
- Young, James E. 1993. *The Texture of Memory: Holocaust Memorials and Mean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인천의 도시 정체성은 박물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한국이민사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정지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박사과정

손동혁 인하대학교 대학원 문화경영학전공 통합과정 수료, 교신저자(E-mail: sdhyeok2@gmail.com)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가 인천의 도시 정체성 형성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도시의 '출발 신화'가 어떻게 제도화되는지를 규명한다. 인천시는 20세기 초 하와이 노동이민의 출발지라는 역사적 장소성을,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한국 최초이자 최고'의 권력적 기제로 전유해왔다. 분석 결과, 이민사박물관은 '출발 신화'를 민족적 영웅주의에 입각한 단선적 공식 서사로 제도화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강제이주 피해자·해외 입양아·현대 유입 이민자 등의 '대항 기억'은 구조적으로 주변화되었다. 최근 박물관의 송도 이전 논쟁은 월미도의 시민적 대항 기억과 송도국제도시의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지향하는 도시 권력의 공식 기억이 충돌하는 정치적 장으로 드러난다. 이 사례는 한국 지방정부의 도시 브랜딩 욕망이 박물관 전시 서사를 직접 구조화함으로써 대항 기억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억 연구 및 박물관 연구에 기여한다.

주제어 : 한국이민사박물관, 도시 정체성, 기억의 정치, 장소성, 디아스포라

How is Incheon's Urban Identity Forged in the Museum?: A Case Study of the Korea Emigration Museum

Jung, Ji-Eun

Ph.D. Candidate, Digital Culture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on, Dong-Hyuk

Ph.D. Candidate, Department of Cultural Management, Inh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how the 'politics of memory' surrounding the Museum of Korea Emigration History interacts with the formation of Incheon's urban identity, and examines how the city's 'origin myth' becomes institutionalized in this process. Incheon has appropriated its historical spatiality as the departure point for labor emigration to Hawaii in the early 20th century as a powerful mechanism of 'Korea's first and best' to elevate its urban statu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emigration museum institutionalized this 'origin myth' into a linear official narrative rooted in nationalistic heroism. In this process, 'counter-memories'—including those of women, victims of forced migration, overseas adoptees, and contemporary incoming immigrants—were structurally marginalized. The recent controversy over relocating the museum to Songdo serves as a political arena where the civic counter-memories of Wolmido collide with the official memory of urban power, which aims to establish a 'global platform' in Songdo International City. This case contributes to the fields of memory and museum studies by demonstrating how the urban branding desires of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directly structure museum exhibition narratives, thereby systematically excluding counter-memories.

Keywords : The Museum of Korean Emigration History, Urban identity,
Politics of memory, Spatiality, Diaspora

I. 들어가는 글

한국이민사박물관(The Museum of Korea Emigration History, 이하 이민사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이주’를 주제로 기획되어 2008년 인천 월미도에 개관하였다. 박물관이 위치한 월미도는 20세기 초 하와이 노동이민의 출발지라는 역사적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한인 이민사의 시작을 상징하는 특별한 기억의 서사와 연결된다. 초기 미주 이민자의 상당수가 인천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2003년 미주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 인천에 이민사박물관이 건립된 것은 초기 미주 이민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인천은 개항 이후 화교를 포함한 다양한 민족과 이주 집단이 유입되며 다층적인 이민의 역사를 축적해 온 도시이다. 그러나 이민사박물관의 전시 구성은 이러한 복합적 이주 경험을 충분히 포괄하기보다, ‘개항장’이라는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 독립운동 중심의 민족주의적 서사,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민족 개념을 전제로 한 확장 서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논쟁의 여지를 안고 있다. 이는 곧 지배 권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지역 정체성이 일방적으로 규정되었던 근현대사의 맥락이 이민사박물관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물관 리플릿에도 설립 목적이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아 우리 선조들의 해외에서의 개척자적인 삶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시민들과 해외 동포들이 뜻을 모아서 건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사박물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민의 역사를 ‘출발 신화’와 민족적 영웅주의에 기반한 단선적인 공식 서사로 제도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최근 이민사박물관의 리모델링과 송도 이전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박물관의 정체성과 장소성이 다소 갑작스럽게 환기되었다. 2024년 공개된 「이민사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보고서」가 “현재 박물관 공간이 관람 동선과 접근성, 전시 기획 및 교육 기능 수행에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하며 물리적 재구성과 콘텐츠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박물관의 방향에 대한 내외부의 비판이 고조되었음을 시사한다(인천광역시 2020). 하지만, 이 계획은 공간 구조의 기능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

국내외 선행 연구를 잠시 검토해보면, 박물관이 단순히 유물을 보존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공동체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재현하고 공식화하는 권력적 장치임은 꾸준히 지적되어 온 바다. 토니 베넷(Tony Bennett)은 박물관, 박물관회, 미술관 같은 기관들을 ‘전시 복합체(The Exhibitionary Complex)’라는 개념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 복합체가 사회 개혁의 도구이자 국민 정체성 형성을 위한 근대적 규율 장치로 기능하며, 대중이 지배 계층의 문화적 질서와 지식 체계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Bennett 1995). 캐롤 던컨(Carol Duncan)은 박물관의 공간구조와 전시 동선이 세속적인 의례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문명화된 엘리트 집단의 이상을 관람객에게 주입하는 ‘권력의 공간’임을 강조했고(Duncan 2015), 샤론 맥도날드(Sharon J. Macdonald)는 박물관을 ‘경합하는 기억이 충돌하고 기억의

선택과 배제가 일어나는 정치적 주체'로 명명했다(Macdonald 2003).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국내 이민사박물관 연구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용일(2020)은 이민사박물관 전시가 이민의 역사적 다양성과 지역사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근대화의 전초기지'로서의 인천과 '해외로 진출한 한국인' 중심의 국가 정체성 서사를 강화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노선희(2023)는 이민사박물관의 젠더 재현 문제를 다루며, 한인 사진신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시 서사에서 여성의 경험이 주변화됨을 논증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특정 도시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과 박물관의 전시 서사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공식 기억의 정치'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도시 정체성은 기억의 선택과 배제 속에서 구성되며, 신화화되거나 망각된다. 이 과정에서 박물관은 도시의 다양한 기억을 선별하고, 이를 현재의 정체성으로 제도화하는 권위적이고 핵심적인 장치로 기능한다.

본 연구는 미주 이민에서 시작된 인천의 '출발 신화'가 지방정부가 선택적으로 강조해 온 '최초, 최고'의 도시 서사와 결합하면서, 어떻게 권력적 기제로 기능하게 되는지에 주목한다. 이 단선적인 신화는 인천이라는 한국 제3의 도시를 '이민 역사의 출발점'으로 위치시키는 동시에, 한국 근현대사에서 인천이 지정학적 조건을 통해 획득해 온 상징적 가치와 결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는 이민의 역사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이동의 경험으로 조명하기보다, 인천을 '출발지'라는 단일한 상징으로 고정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 결과 이민사박물관은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 노동 이주, 해외 입양 등 비주류적 기억을 공식 서사의 주변부에 위치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개관 17년차인 이민사박물관이 수행해온 '기억의 정치'가 인천의 도시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민사박물관이 대항 기억을 주변화하는 방식과, 인천이 내세우는 '출발 신화'의 빈약함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을 규명할 것이다. 방법론적으로는, 질적 분석에 기반하며 비판적 담론 분석과 서사 분석을 활용한다. 분석 자료는 1차 및 2차 문헌을 포괄하며, 1차 자료로는 이민사박물관의 상설 전시 구성 및 리플릿을 비롯하여, 인천시의 보도자료와 이민사박물관 관련 계획서를 활용한다. 2차 자료로는 박물관 이전 및 정체성 논란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주요하게 포함한다. 또한, 박물관 현장 직접 방문과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해 취재했던 전문가(지역 언론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충적인 정보 및 배경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의 깊이를 더하였다. 이러한 질적 및 심층적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역사적 서사로서의 '출발 신화'가 도시의 공식 정체성으로 제도화되고 공공 영역에 재현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인천의 도시 정체성 구성 과정과 이민사박물관 건립의 배경을 살펴며 '공식 기억의 정치'가 작동하는 맥락을 규명한다. 3장에서는 이민사박물관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전 논쟁'을 분석하며, 도시 정체성이 장소의 정치 속에서 어떻게 위협받는지 탐구한다. 4장에서는 박물관의 전시 서사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출발 신화'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밝혀낸다. 결론에서는 이민사박물관 사례를 통해 확인된

기억과 도시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며, ‘환대의 도시’를 표방하는 인천의 유일한 박물관이자 이민을 주제로 다룬 유일한 국내 박물관으로서, 이민사박물관이 변화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조건에 대해 밝힐 것이다.

II. 인천의 ‘출발 신화’와 관제 기억의 정치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이민사박물관이 ‘인천이민사박물관’이 아닌 ‘한국이민사박물관’으로 명명된 것은, 인천이 한국 최초의 공식 이민 출발지라는 장소성 상징성을 강력하게 내세우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1902년 제물포항에서 출발해 일본을 거쳐 하와이에 당도한 한국 최초 이민자들의 역사가 박물관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특히, 당시 하와이로 떠난 121명의 이민자 중 절반 이상이 인천 출신이었다. 당시 최초의 감리교회인 내리교회가 인천에 있었고, 목사의 권유로 교인들이 이민에 다수 참여하게 됐다는 역사적 사실이 더해지면, 이같은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이 국가적 상징성을 획득하는 관제 기억의 근거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한국이민사박물관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첫 이민 기념비



한 전직 인천시 공무원의 증언처럼, 2003년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시작된 하와이-인천 미술협회 간 교류와 인천시장의 방미, 해외 성금 모금 등이 박물관 건립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박물관의 명칭과 설립 과정 자체가 지역적 특수성과 한국 이민사의 상징성이 결합된 결과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한국이민사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최초’ 서사를 통해 도시 정체성을 국가적 위상으로 확장하려는 인천시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대변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도시 정체성 확장 전략은 ‘재외동포청 유치’라는 최근의 사건을 계기로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립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던 인천시가 2023년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꽤 거로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인천이 ‘전 세계 재외 한인에게 모국 활동의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되었다(2024년 인천시 보도자료). 이는 이민사박물관이 ‘한국이민사’라는 명칭을 통해 획득한 국가적 상징성을 기반으로, 인천이라는 도시가 추구하는 ‘국제도시’ 담론과 ‘최고’의 위상을 현실 정치 속에서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민사박물관은 도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되며 그 역할 확장에 대한 기대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인천의 도시 정체성 담론은 ‘관제 기억’의 전형적인 생산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제6대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인 2015년부터 ‘한국 최초이자 인천 최고(最古) 서사¹⁾가 ‘인천 가치 재창조’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의 핵심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서사는 1883년 제물포항 강제 개항으로 근대 문화가 유입되며 형성된 수많은 ‘최초’ 사례²⁾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제 기억이 작동하는 선택적 망각의 역설이 발생한다. 인천이 다수 보유한 ‘최초’ 사례는 외세에 의한 강제 개항이라는 식민-제국주의적 폭력의 기억 위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도시 권력은 이 기원을 충분히 성찰하기보다, 이를 도시의 선도성과 개방성을 상징하는 자산으로 전유하며 영웅적 최초의 ‘출발 신화’를 강화해 왔다. 예를 들어 1983년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해 온 인천 개항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항 100주년에 맞춰 30m 높이의 기념탑이 완공되고 성대한 자축연 및 축제 행사가 열린 것은, 인천이 개항의 역사를 기념비적으로 공식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³⁾ 이와는 달리 실제로 개항 기념탑을 두고 강제 개항이었으므로 ‘아픈 역사’로 인식해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와 함께, 실제 인천 개항의 시기를 372년 비류백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며 기념탑의 몰역사성을 비판하는 의견까지 제기되면서 이 기념탑은 2003년 완전히 철거되었다. 특히 2002년 인천시와 지역 단체들이 ‘개항 12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려 했을 때, 시민단체들이 “일제가 한반도 침략을 본격화했는데, 행정기관이 이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려 한다”며 강력히 비판했고, 결국 ‘인천항 개항 120주년 기념행사’가 ‘2003년 인천해양축제’로 명칭이 바뀌었던 사례는 도시가 추구하는 ‘영웅적 개항’ 서사가 비판적 시민 기억과 충돌하는 양상을 명확히 보여준다(오미일·배윤기 2009). 이처럼 인천의 도시 브랜딩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1) 2016년 인천시는 ‘인천 가치 재창조’를 주요 시정방향으로 설정하고, 인천을 중심에 둔 인문적 가치와 인천의 정체성을 되찾는다는 취지의 정책들을 전방위로 펼치면서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을 선정해 홍보했다.
 2) 서양 무역회사 이화양행, 외국인 묘지, 인천에서 처음 탄생한 음식인 짜장면·짬뽕·쫄면, 인천우체국, 동양연초회사, 내리교회,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 야구 도입, 세창양행 숙소, 외국인 묘지 등이 한국 최초이면서 인천 최고 100선에 포함됐다.
 3) 개항백주년기념탑은 개항 100주년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높이를 1백 척(30cm)로 했다는 것이 지역언론에 보도되었다.

‘영광의 기억’으로 전환하는 관제적 서사 전략에 기반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획은 도시의 기억을 탈맥락화하고, 장소성을 소비가능한 이미지로 변환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인천뿐만 아니라 ‘개항’을 지역의 주요 관광 상품으로 내세우는 군산, 목포 등의 도시들에서도 이러한 비판적 검토는 부재하다. 유정복 인천시장⁴⁾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제3의 인천개항(1883년 인천항-2001년 인천공항-2024년 글로벌 개항)’을 선언했는데, 이는 과거의 ‘강제 개항’조차 도시 성장의 기점으로 재활용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잘 나타낸다고 하겠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인천의 여타 공립박물관과 비교할 때 그 위상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이는 인천 내 시립 또는 구립, 공립박물관 중 거의 유일하게 인천을 넘어 한국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도시의 핵심 정체성인 ‘출발 서사’와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특수성은 인천이라는 도시의 정체성 및 브랜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도시의 국가적 상징성 획득 열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인천의 슬로건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나 과거 슬로건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인천은 ‘최초’ 또는 ‘으뜸’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지닌 도시다. 따라서 이민사박물관이 한국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다루는 유일한 공립박물관이라는 사실은, 인천이 단순한 지역 거점을 넘어 서울의 주변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가적 상징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도시의 열망을 반영하며, 박물관이 인천이 추구하는 도시 정체성을 구현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인천이 ‘최초’라는 수식어를 적극 활용해 획득하고자 하는 ‘잘 나가는 도시’로서의 이미지 변화와 이민사박물관이 강조하는 ‘출발 신화’는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 정체성을 단순한 마케팅 슬로건이나 브랜딩 전략이 아니라, 도시 공동체가 스스로를 규정하는 역사적 기억, 사건, 장소적 상징, 그리고 현재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얹히며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문화정치적 담론’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천시가 ‘한국 최초 공식 이민 출발지’라는 역사적 자원을 도시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는 과정은 인천이 지향하는 ‘국제도시’라는 정치적 목표에 복무하는 권력적 행위로 볼 수 있다. 특히 인천의 국제도시 전략이 바다와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면, 개항장 이미지의 강화는 전통적인 구도심인 중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인천의 도시 정체성은 신도시 개발을 통한 화려하고 미래지향적인 국제도시 이미지와, 개항장 및 이민 출발지라는 과거의 장소 기억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이민사박물관은 인천시가

4) 유정복 시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6대 시장을 지낸 후 2022년 제8대 시장으로 다시 당선되어 재임 중이며, 6대 시장 시절의 슬로건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8대 시장 시절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5) 2013년에 인천 신포동에 개관한 한국근대문학관 역시 공식 명칭에 ‘인천’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근대문학에 특화된 유일한 박물관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선택적으로 조직한 ‘관계 기억’을 제도화하고 정당화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가 이처럼 ‘최초, 최고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는 이면에는 ‘마계(魔界)인천’, ‘이부망천(離富亡川)’처럼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부정적 도시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동기가 깔려 있다.⁶⁾ 인천시가 내세우는 ‘한국 최초의 철도’ 경인선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인선은 한국 철도사의 시작이라는 상징성을 지니지만, 오늘날 시민들이 실제 경험하는 지하철 1호선의 현실은 이 상징성과는 거리가 멀다. 불규칙한 배차 간격, 사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지상철의 구조적 한계, 지상철로 인한 지역의 단절, 그리고 이른바 ‘1호선 빌런’⁷⁾이라는 신조어로 대표되는 부정적 이미지까지 고려하면, ‘최초의 열차’라는 역사적 자부심은 현재의 도시 경험 속에서 온전히 혹은 긍정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지역 언론의 지적처럼, “도시 이미지가 ‘마계’로까지 떨어진 현실에서 ‘국내 최초가 몇 개고, 최고가 몇 개니’ 하는 인천시의 고색창연하고 고차원적 가치 재창조 정책들”은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경인일보 2016/5/17). 2018년 지역사회에서 회자했던 ‘서인부대’⁸⁾라는 신조어는 대구는 물론 부산을 앞질러 인천이 서울 다음의 대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담고 있는 단어다. 대구와 부산의 인구 감소에 비해 인천의 인구는 300만 명을 넘어서며 전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다. ‘서인부대’는 이같은 인구 증가 추세와 인천시의 자신감을 반영한 신조어인 셈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인천의 ‘일등 지상주의’와 최고 지향적 담론은 2012년 아시안게임 준비 과정에서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공무원 급여 체불 사태를 빚어냈던 도시의 취약한 현실과 대비되는 역설적 풍경을 만들어낸다. 안종욱(2025)의 지적처럼 “결국 과거 수십 년 동안 ‘서울(경성)의 위성도시’로 언급되고, 일제 강점기 이래 경인(수도권) 공업 지역의 핵심 역할을 해 왔으며, 서울의 인구를 분산 수용해 온 베드타운이었던 인천에 대한 오랜 인식이 과거 세대를 넘어 현재까지도 연장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과 인하대학교 내 이승만 대통령 동상에 대한 지속적인 철거 및 존치 논쟁은 인천이라는 도시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겪은 주요 사건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지에 대한 복합적인 정치적 쟁점, 즉 ‘대항 기억’의 경합을 첨예하게 드러낸다. 이는 인천이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비극과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성공의 역사를 도시의 정체성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 기억의 격렬한 경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6) 마계인천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계 인천’은 인천이 악마의 소굴이라는 뜻으로 인천을 비하·조롱하는 대표적 표현 혹은 멸칭(蔑稱)이며, 이부망천은 2018년 선거를 앞둔 TV토론에서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멀쩡한 사람이 서울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지역 비하 발언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7) 지하철 1호선에서 눈에 띄는 독특한 복장과 행동을 하거나 상식 밖의 기행이나 소란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승객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특히 1호선에 고령층의 비율이 높고, 노후화된 차량이 많아 승차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다는 점이 더해지면서 타 노선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승객 간 갈등이나 기행이 SNS를 통해 자극적으로 소비되었고, 1호선만의 부정적 이미지로 고착화된 측면이 있다.

8) 재선된 이후 유정복 시장은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합동 지지 선언식’에서 “민선6기에 달성했던 서인부대(서울·인천·부산·대구)를 다시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서인부대’ 슬로건을 다시 내세웠다.

이러한 경합의 맥락 속에서, 최근 인천연구원은 “이민사박물관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국립시설 격상 및 이전을 통해 한인 이민사의 상징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민사박물관 및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국립화 방안』 연구를 내놓았다(남근우 2024). 이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3년간 60억 원의 세금을 사용한 인천시가 이민사박물관 역시 인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욕망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두 시설의 ‘국립시설 격상’ 및 ‘국가 매칭펀드 지원’ 주장은 인천이 ‘국가적 상징성’을 내세워 제도적으로 완성하려는 관제 기억의 정치적 확장 시도로도 해석가능하다.

III. 박물관 이전 논쟁에서 나타난 장소-기억의 경합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장소성은 지역적 특수성(월미도)과 국가가 주도하는 기획(재외동포청, 송도국제도시) 사이의 긴장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월미도는 인천 시민들에게는 위락 시설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하와이로 떠난 한국 근대 이민의 출항지로서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집단 기억의 기본을 이루는 핵심적인 장소다. 제물포항에서 출발한 이민자들이 “갑판 위에서 마지막으로 본 고국의 땅이 월미도 남단이었기에 현재의 위치에 박물관이 건립되었고, 이민의 역사, 즉 시간을 봉인하고 있는 듯한 자물통과 그 시간을 풀어내는 쇠대, 또는 하와이의 ‘ㅎ’자를 단순화한 듯한 형태로 박물관이 건축되었다.(최은영 2013)”는 설명 역시 월미도가 가진 장소적 상징성을 뒷받침한다. 개항장이라는 장소성과 ‘떠남의 기억’을 서사화할 수 있는 월미도의 장소성은 이민사박물관이 최초의 이민 역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진정성을 부여하며 박물관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역할 해왔다. 그러나 송도 이전 논란은 이러한 월미도의 ‘최초 이민 출발지’라는 장소-기억의 진정성과 송도국제도시의 ‘미래지향적 국제도시 개발 및 효율성’이라는 도시 개발 이데올로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는 곧 역사적 진정성이 기능적 효율성에 의해 해체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2024년 11월, 인천시는 확대 개편 공청회를 통해 박물관의 내용적(세계 한인 이민사 확장) 및 공간적 범위 변경안을 제시했으며, 공간적 변경 2안으로 송도 인천도시역사관으로의 확장 이전을 공식화했다. 인천시는 송도로의 이전 논리로서 박물관의 관람 동선, 접근성, 교육 기능의 노후된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송도국제도시가 재외동포청,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과의 연계 및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에서 장점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박물관의 기능을 ‘역사적 진정성 보존’이라는 장소 기반의 역할에서 ‘국가 정책 연계 및 글로벌 플랫폼 구축’이라는 미래 지향적 기능으로 재규정하려는 도시 권력의 전략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월미도의 장소성은 과거의 기억을 상징하는 반면, 송도의 기능성은 재외동포청 유치와 결부된 확장된 관제 기억을 제도화하려는 도시의 전략적 자원으로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송도 이전의 주된 논리는 기능적 이점이다. 재외동포청과의 긴밀한 연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과의 문화 클러스터 형성, 인천국제공항과의 높은 접근성, 그리고 쾌적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점들은 박물관을 송도국제도시와 연결해 현대적 ‘글로벌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도시의 개발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논리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배웅과 마중의 도시’라는 이민사적 정체성을 송도의 ‘글로벌 교류 허브’라는 확장된 도시 정체성 담론으로 편입시키고, 이를 인천이 새롭게 강조하는 도시 정체성의 핵심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인 것이다.

하지만 이전 논란이 불거지자 다수의 지역 언론들은 이민사박물관의 장소성을 강조하며 이전 논의에 대한 강경하고도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 또한 “월미도의 역사성과 이민 출항지로서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송도로의 이전은 ‘기억의 장소’를 해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2023년 이후 제기된 이민사박물관의 송도 이전 논의는 ‘접근성 개선’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 시민단체를 포함한 월미도 주민협의회는 “박물관이 위치한 장소 자체가 이민의 역사이며, 이전은 박물관이 가진 증언적 기능을 해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전 반대를 명확히 했다. 반면 인천시는 「이민사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2020)에서 “현 부지는 시설 노후화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교육 및 체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기능적 판단에 대한 비판은 이민사박물관의 위치가 접근성이나 시설 최신화를 넘어, 그 자체가 특정한 역사적 내러티브를 살려내고, 시민들에게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박물관은 시민들의 집단 기억을 재현하는 구심점으로 기능하며, 월미도라는 물리적 장소는 ‘최초 이민’이라는 공식 서사를 체감하게 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이민사박물관은 ‘출발 신화’에서 ‘환대의 도시’ 및 ‘이주사 플랫폼’으로 변화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송도는 이러한 확장된 관제 기억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장소로 재규정된다. 송도 이전의 핵심 논리 중 하나는 재외동포청과의 연계인데, 이는 박물관을 국가적 재외동포 정책을 지원하고 상징하는 공적 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시도로도 해석 가능하다. 송도는 국제 도시 개발이라는 도시 권력의 최신 이데올로기가 투사된 공간으로서, 월미도의 ‘과거 지향적’ 기억을 ‘미래 지향적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담론으로 포섭하고, 재외동포청 유치라는 국가적 성과와 결부시켜 인천의 ‘최고 도시’ 위상을 강화하는데 복무하는 것이다.

결국 이전 논쟁은 역사적 진정성을 보존하려는 시민적 대항 기억과 도시 정체성을 확장하고 국가적 기능성을 선취하려는 도시 권력의 공식 기억이 장소를 매개로 경합하는 정치적 드라마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기억의 장소 문제가 표상적 수준을 넘어, 도시 개발과 국가 기관 유치라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정치적 실천 영역임을 입증한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피에르 노라(Pierre Nora)가 제시한 ‘기억의 장소’를 살펴보면, 노라는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환경으로서의 기억’, 살아있는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기억이 쇠퇴하자, 이를 상징적 공간, 기념물, 박물관 등 인위적인 매개를 통해 ‘대리 기억’으로 제도화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러한 ‘기억의 장소’는 남아있는 것인 동시에 만들어진 것이며,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중립적 저장소가 아니다. 대신, 특정 국가나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조화하기 위해 과거의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강조하며, 침묵시키는’ 문화정치적 행위가 일어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공간이다. 월미도에 위치한 이민사박물관은 지금까지 바로 이러한 ‘기억의 장소’로 기능해왔다. 이민의 출발지라는 장소성을 통해 ‘출발 신화’라는 공식 기억을 구조화하고 지역 정체성을 기억의 구심점으로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다. 그러나 송도 이전 논의는 이러한 장소성의 진정성과 상징 체계를 해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곧 공식 기억의 제도적 권위를 둘러싼 장소적 경합 문제로 이어진다.

송도로의 이전을 주장하는 측은 재외동포청과의 긴밀한 연계, 문화 클러스터 형성, 높은 접근성 등 기능적 이점을 제시하며, 박물관을 ‘역사적 진정성 보존’이라는 장소 기반의 역할에서 ‘글로벌 플랫폼 구축’이라는 미래 지향적 기능으로 재규정하려는 도시 권력의 전략을 드러낸다. 이들은 월미도로 대표되는 구도심의 장소성이 상징하는 과거 지향적 기억을 송도라는 신도심의 기능성이 상징하는 확장된 도시 정체성 담론으로 편입시키려 한다. 하지만 박물관 이전 논란에 대한 대항 기억은 월미도의 역사성과 이민 출항지로서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송도 이전이 ‘기억의 장소’를 물리적으로 해체하여 집단 기억의 구심점을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즉, 이민사박물관의 위치는 특정 역사적 내러티브와 정체성을 제도화하는 장소성의 정치적 권위 그 자체라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송도로의 이전은 박물관의 전시 서사가 도시 정체성과 맞물려 작동하는 방식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문화정치적 사건이다. 외교부 산하의 국가 기관인 재외동포청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인천시의 전략은 이민사박물관을 지역적 기념 공간에서 국가적 재외동포 정책을 상징하는 공적 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계는 박물관이 기존에 지적받았던 국가 중심적, 민족주의적 서사를 더욱 강화할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 이는 이주자 개인의 복합적인 삶의 경험, 젠더 문제, 이주의 실패 등 민족적 대의라는 틀에 포섭되기 어려운 다양한 측면을 주변화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재외동포청과의 긴밀한 연계는 해외 거주 한인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나가는 이민’을 공고히 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민족적 경계를 넘어선 보편적인 인간의 이동 경험과 ‘들어오는 이민’의 현실은 제도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박물관은 ‘나가는 이민’을 포괄하여 진정한 의미의 이주사 박물관으로 확장되는 대신, 국가 정책의 상징적 부속 기관으로 기능하며 이민사의 범위를 오히려 협소하게 만들 위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전 논란은 단순한 공간 이동의 문제를 넘어, 이민사박물관이 어떤 기억을 선택·배제하며, 어떤 정체성을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는 곧 박물관이 국가적 상징성, 지역적 기억, 탈국가적 이주 현실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쟁점이다. 더불어 ‘기억의 장소’가 특정 역사적 지리적 맥락에 고정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기능적 효율성과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시킨다. 인천시가 2019년 개통한 국내 최장 도심형 관광모노레일인 월미바다열차의 역사 이름을 ‘박물관역’으로 명명하고 이민사박물관을 홍보한 것 역시, 박물관의 장소-정체성을 공공 인프라를 통해 강화하려는 전략임을 나타낸다.⁹⁾ 이같은 전략은 이민사박물관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 첫 해양문화시설’임을 강조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적용된다 하겠다, 즉, 박물관의 위치는 접근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내러티브와 정체성을 제도화하려는 장소성의 정치적 권위 그 자체인 셈이다.

이러한 기억의 장소성 경합은 2025년 8월에 발표된 「한국이민사박물관 증축 확대 개편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결론을 통해 일단락됐다. 연구용역은 “현 부지의 역사성이 있는 장소에 증축, 건립을 통해 지금까지 구축한 한국 이민사의 정체성을 유지하자”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이는 월미도라는 장소-기억의 상징성이 송도의 기능적 효율성 논리에 대해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정은 다수의 지역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시민공청회에서 표출된 ‘이민 역사의 상징성이 있는 현 위치의 중요성’, ‘구도심 중구의 주요 문화 콘텐츠 이전 우려’ 등 지역 사회의 공공 기억과 대항 기억이 공식적으로 관철된 결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이전 논란은 이민사박물관이 공식 이민사를 재현하는 방식과 그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관이 주도해 이끌어간 도시 정체성과 지역사회의 공공 기억이 어떻게 충돌하고 조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박물관은 장소성의 진정성을 유지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동시에, 민족주의적 서사와 출발 신화에 국한된 한계를 벗어나 ‘들어오는 이민’을 포괄하는 비판적 시선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적 책무를 안게 된 것이다.

IV. 전시에 나타난 인천의 도시 정체성 재현

1. ‘출발 신화’의 구조화

9) 2019년 열차 개통 당시 이민사박물관역이었으나, 2024년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박물관역으로 변경되었다.

박물관은 특정 공동체의 기억을 수집, 보존, 해석함으로써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고 공공의 기억을 공식화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이민사박물관은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적인 이주 경험을 재현하며, 이는 인천의 ‘출발 신화’와 국가의 민족적 상상과 얽혀 특정한 ‘공식 이민사’를 구축하게 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박물관 개관 이래 수년 전부터 기획전시와 상설전시를 여러 차례 참관한 경험 및 최근 직접 방문하여 수행한 심층적인 현장 관찰 내용을 바탕으로 이민사박물관 전시가 ‘하와이 이민 출발 신화’, ‘애국적 디아스포라’, ‘글로벌 코리안’이라는 국가 및 도시 주도의 정체성 서사를 전시 공간 전반에 걸쳐 어떻게 구조화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본 장은 현장 관찰 기록을 주요 자료로 삼아 박물관 전시를 대중에게 한민족 정체성을 생산하고 내면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상정하고, 이민사박물관의 상설전시 구성을 중심으로 박물관이 한국 이민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식화’하고 있는지 그 재현 방식과 내러티브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석 틀을 통해 심층적으로 다루어진다. 첫째, 전시 서사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전시실의 배치, 관람 동선, 전시물 간의 순서 및 강조점이 특정한 ‘출발 신화’를 어떻게 구성하고 관람객의 인식에 개입하는지 그 통치적 메커니즘을 해부한다. 둘째, 전시 텍스트, 이미지, 유물 배치, 미디어 활용 방식 등의 기호들이 어떻게 이민의 역사를 미화하고 탈각(脫却)된 2차 기억으로 치환하는 의미를 생산하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전시 텍스트와 서사에서 반복되는 수사, 누락된 주체, 그리고 중심화/주변화되는 내러티브를 추적함으로써, 관제 기억이 어떻게 냉전적 인식체계와 결합하고 대항 기억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지를 밝혀낸다.

[표 1] 이민사박물관 상설전시실 분석

전시실	주요 내용	서사 전략	대항 기억 배제 방식
제1전시실 (출발의 방)	갤럭시 내부 재현 하와이 이민 여정	인천=공식 출발지 이민=도전의 시작	이주 원인(빈곤, 식민) 축소
제2전시실 (노동, 정착)	하와이 정착 과정 사진신부 등 커뮤니티 역사	개척자, 영웅 서사 독립운동 기여 강조	젠더 맥락 주변화
제3전시실 (디아스포라)	중국, 러시아, 독일, 남미 등 미국 외 이주 역사	민족적 수난 극복 서사 조국 헌신 강조	조선족 현재 현실 및 정체성 배제
제4전시실 (인하관)	인하대 설립 역사 글로벌 코리안 활동	출발 신화의 서사적 완결	비귀환 서사 부재

이민사박물관은 1층부터 2층에 걸쳐 제1전시실부터 제4전시실까지 상설 전시실을 운영하며, 각 전시실은 특정 이민사의 국면과 내러티브를 강조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이민사박물관 전관을 통틀어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는 내러티브는 인천의 도시 정체성과 결합된 ‘출발 신화’와 냉전적 코드로 분열된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임이 확인된다. 관람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제1전시실은 입구를 최초의 이민선인 갤릭호 내부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디자인하여, 한국인의 미주 이민 역사를 이주 여정 중심으로 조명한다. 이는 전시 서사의 구조적 분석 관점에서, 인천을 ‘하와이 이민의 공식적인 시작점’으로 설정하며, 이후 전개될 모든 이민 서사에 대한 전형적인 프레임을 제시하는 장치이다. ‘미지의 세계로’라는 테마 아래 이민자의 발자취를 전하는 동시에 도전의 출발지로서의 인천을 강조하며, 미주 이민을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민 서사의 시작점으로 공식화한다. 이처럼 박물관은 전시실의 물리적 배치를 활용하여 인천에서 시작되었다는 ‘출발 신화’를 구축하는 통치적 메커니즘을 가동하며, 인천의 ‘최초, 최고’ 신화라는 도시 정체성을 이민사의 근원으로 권위화한다.

이어지는 제2전시실은 한인들의 하와이 정착 과정과 미국 전역에 뿌리를 내린 개척자로서의 발자취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당시 교과서가 전시된 교실 공간,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노동환경, 그리고 ‘사진신부’ 제도를 통한 초기 한인 커뮤니티 형성 서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 구성은 남성 중심의 민족주의적 시각에 기초하여 물젠더적인 재현 방식을 취함으로써 대항 기억을 배제하는 문제를 드러낸다(노선희 2023). 특히 ‘사진신부’의 탄생 배경, 이주 과정의 트라우마, 농장 및 도시에서의 이중적 노동 등 여성들의 개별 기억은 남성 중심의 집단 기억에 종속되어 주변화된다. 또한 전시 곳곳에서 초기 한인 이민자들을 역경을 극복한 개척자이자 영웅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는 서사를 강화한다. 특히 ‘독립의연금 증서’와 같은 전시물의 기호학적 활용은 고국의 독립을 염원하던 한인들의 활동을 다루면서, 이민을 단순히 개인의 삶을 개척하기 위함이 아닌 민족적 대의에 기여한 숭고한 행위로 공식화한다. 이는 이민의 1차 기억이 민족적 희생이라는 2차 기억으로 치환되는 관제 기억의 전형적인 작동 방식을 보여준다.

이후 전시실은 중국, 러시아, 일본, 사할린, 멕시코, 쿠바, 독일 등지로 확산된 이주 흐름과 해외 입양을 포함한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삶’을 소개한다. 이 부분은 주류 미주 이민사 서사의 부차적 확장으로 다뤄지며, 냉전적 인식체계에 따른 차별적 서사화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만주와 연해주로의 이주, 일본과 사할린으로의 강제 이주는 일제 강점기의 국가폭력과 연결됨으로써 민족적 수난의 역사로 재현된다. 그러나 ‘조선족’으로 불리는 중국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재현하는 전시물은 조선족 자치구 학교 교과서와 명동학교 학적부 등으로 제한되어, 이마저도 민족 정신의 계승과 독립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 중인 조선족의 복합적인 현실과 정체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반서방 진영으로의 이산 경험을 타자화하고 현재적 맥락을 누락시키는 방식이라 하겠다.

이외에도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남미로의 경제이민 등 다양한 이민 경로가 소개됨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전시는 서사적으로는 여전히 민족적 의지와 고난을 극복한 서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다.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파독광부간호사협회에서 제작한 기록영화의 제목은 「고난의 벽을 넘어 기적의 라인 강으로」이며, 전시품 중에는 모국 새마을 운동 식수 기념 모금 안내장 등의 유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강제이주, 젠더 문제, 이주의 실패 경험 등 개인의 고통과 비정형적인 측면은 부차적이거나 간략히 다루어져 공식 서사에서 주변화된다.

이민사박물관 상설전의 주요 구성은 ‘출발의 방-노동의 방-정착의 방-현재의 방’으로 이어지는 선형 서사 구조를 갖는다. 입구 벽면에는 하와이행 갤럭호의 흑백 사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향한 항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이는 출발 신화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출은 이주의 복합적 원인(가난, 식민지 구조, 강제노동)을 삭제한 채, 이주를 ‘개척’과 ‘용기’의 미화된 서사로 재구성한다. 또한 ‘노동의 방’에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모형과 한인 노동자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으나,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인종차별의 맥락보다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도 한민족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했다는 서사가 중심으로 다뤄진다. 이러한 선택적 배치는 던컨이 지적한 바와 같이, 관람객에게 특정한 감정적 의례를 수행하게 하는 권력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민사박물관에서 가장 특징적인 전시실은 ‘인하관. 하와이와 대한민국, 그리고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이민의 현재와 미래’를 다루는 제4전시실이다. 2018년에 조성된 이 전시실은 전시 서사의 구조적 정점을 형성하며, 하와이로 이민간 한인들의 귀환을 상징하는 전시실로, 선조들의 조국에 대한 헌신과 지원의 역사, 그리고 ‘글로벌 코리아’로서의 활동 등을 통해 현재 진행형의 이민 현실을 조명한다. ‘인하관’은 인천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진 공공의 기억, 즉 하와이 이민과 인하대학교 설립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전시 서사의 구조적 완결점이자 공통 기억의 현재화가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제시한다. 하와이 이민의 성과가 인하대학교 설립이라는 교육적 성취와 조국 헌신으로 귀결되며, 이 공간이 물리적 동선의 끝이자 서사적 절정에 위치함으로써, ‘출발 신화’가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완성을 관람객의 인식 속에 각인시키는 전략을 보여준다. 이 공간은 이민자들의 고단함과 희생이라는 1차 기억을 조국에 대한 헌신과 조국의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교육적 성취라는 2차 기억으로 치환하는 기호학적 장치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 전시실의 내용 역시 동포 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적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며, 해외 한인 축제와 기념사업 등의 내용은 이민자들의 조국에 대한 기여를 상징적으로 부각할 뿐, 이주자 개인의 다양한 내러티브나 복합적 정체성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2018년 일부 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사박물관의 상설전시는 미주 이민 중심의 ‘출발 신화’와 국가주의적 서사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한계는 상영 중인 〈우리는 모두 대한인입니다〉 영상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영상은 “이민생활의 고단함을 극복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강조하며, 시대를 막론하고 이민의 역사를 민족주의적 희생과 성공의 서사로 축소시키는 관제 기억의 핵심 담론을 재생산한다.

[그림 2] 한국이민사박물관 인하관 입구



제4전시실의 ‘인하관’이 보여주는 서사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신적 귀환’을 강조하는 전시에서조차 이민사박물관이 민족주의적 서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코리언의 이주 역사를 ‘식민 트라우마’와 ‘민족≠국가’의 어긋남이 착종된 이산(離散) 트라우마로 보지 않고, 분단국가 수립 이후의 ‘이민(移民)’이라는 단선적인 성공 신화로 포획하려는 관제 기억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다. 박물관이 ‘나가는 이민’을 독립운동의 하위 범주 혹은 민족적 대의에 기여한 성공적인 서사로만 다룸으로써, 이산되어 간 ‘보통’ 사람들의 삶의 고통이나 냉전적 코드 속에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비정형적 삶을 주변화하는 재현의 편식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민사박물관의 전시는 “박물관이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현재의 정체성과 갈등, 다양성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샤론 맥도날드의 주장과는 달리, 여전히 민족주의적 서사에 집중되어 있다(Macdonald 2003). 이는 들어오는 이민, 즉 현대 인천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삶과 기억을 의도적으로 주변화하고 대항 기억을 배제하는 관제 기억의 전형적인 작동 방식을 드러낸다. 이처럼 이민사를 ‘국가적 기획의 일부’로 재현하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이산 트라우마의 복합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중심주의’적 시선을 강화한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재이주한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이해할 수 없는 타자’로 인식한다. 결국, 이민사박물관은 관람자가 과거의 이산 주체와 공감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 설정을 하는 대신, 유물 수집의 한계와 실유물 중심주의라는 구조적 제약을 통해 미주 이민 중심의 ‘출발 신화’를 지지하는 물리적 증거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전시 서사의 편향성을 구조화하고 있다. 이는 박물관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직면과 사회적 치유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신, 도시 정체성과 국가적 이념을 강조하는 냉전적 기억의 체계 안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처럼 이민사를 ‘국가적 기획의 일부’로 재현하는 방식은 개인적이고 비정형적인 이주 경험을 제도화된 관제 기억의 틀 속에 편입시키며, 특정한 정체성을 강조하고 다른 정체성들을 배제하는 기억의 선택적 정치를 수행한다. 분석 결과 이민사박물관의 전시는 비서구권 이주, 젠더, 노동, 난민, 현대 이주의 복합적 현실 등은 충분히 포괄되지 못하거나 영웅적 서사 속에서 미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박물관이 ‘국가의 기억’을 재현하는 공식 기제로 기능하는 동시에, 탈국가적이고 유동적인 현대 이주 현실과 이산 트라우마를 외면하는 편향된 정체성 서사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박물관 전시 서사의 편향성은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방안이라는 구조적 한계와 연결되어 편향성을 구조화한다. 이민사박물관의 유물 수집은 ‘실유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특정 서사를 지지하는 물리적 증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이민사박물관의 소장 유물 총 32,329점 중 기증 유물이 86.2%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상설전시 주제인 미주 지역 이주사와 관련된 것이다(김상열 2013). 이민사 유물은 ‘골동(骨董)’으로서의 가치가 낮고 이주 과정에서 생활용구와 자료들이 소실된 경우가 많아 실물 확보가 어려우며, 유일한 문서나 전적류는 영인 및 복원 형태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유물 수집이 기증에 크게 의존하고 실유물 확보에 제약이 많다는 특수성은 결과적으로 특정 이민 서사를 지지하는 물리적 증거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전시 내용을 구성하게 되는 경향을 강화한다.

2. ‘현대’ 전략과 기억의 재배치

박물관 차원에서 전시 구성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민사박물관은 2018년 전시 공간 개편을 통해 이전보다 확장된 이민사 스펙트럼을 담으려 시도했다. 남미 이민사 비중을 줄이고 아시아 및 유럽 코너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의 한인 이주사를 포괄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독 한인 남영자 씨, 인천 산곡동 ‘성 원선시오의 집’ 서재송 전 원장 등이 기증한 해외 입양 관련 자료들이 소개되도록 아시아·유럽지역 코너를 마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담론 분석 관점에서, 젠더 및 국가 책임 회피의 문제와 얽혀 기존 공식 서사에서 주변화되었던 대항 기억 중 일부를 박물관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시는 여전히 ‘미주 이민 중심의 ‘출발 신화’라는 구조적 편향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제4전시실에 신설된 ‘인하관. 하와이와 대한민국, 그리고 인천’은 박물관이 지역사회의 공공 기억을 공식화하고 도시 정체성 담론을 제도적으로 완성한 인상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인하관

신설의 가장 큰 의의는 지역에서 구전되던 분절된 기억과 하와이 이민자들의 정신적 귀환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공식적인 역사 기록으로 승격시키고 통합했다는 점이다. 이 전시실은 인천의 ‘출발 신화’를 국가적 스케일로 확장하며 전시 서사의 구조적 완결점을 형성한다. 인하대학교가 1952년 하와이 동포 이주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는 점,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된 하와이 교포들의 모금과 성금이 그 기반이 되었다는 점, 인천(仁川)과 하와이(荷蛙伊)의 첫 자를 따서 교명이 만들어진 사실들이 이 공간을 통해 기념비적 역사로 자리 잡는다. 개교 70주년을 맞은 인하대 캠퍼스 내에 ‘하와이-인하 공원’이 조성된 것도 동일한 맥락이라 하겠다.¹⁰⁾ 이러한 기억의 공식화는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인천에서 인하대가 흔히 ‘인천의 하버드’로 불리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인천과 하와이와의 연결고리를 공공기관을 통해 전시함으로써, 인천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최고’ 신화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역사적 근거를 들어 확고히 제도화한다. 이는 박물관이 공공의 기억을 보존하고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 기억을 도시 정체성 담론을 강화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역 서사를 다룬 인하관의 사례만큼이나, 해외 입양 아동을 다루는 전시가 마련된 것은 한국 해외 입양의 역사를 공적인 기억 영역으로 편입시키려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362점에 달하는 기탁 자료가 확보¹¹⁾되었음에도 실제 전시 규모가 소규모에 그치며, ‘해외 입양의 역사’와 ‘해외 입양인들의 영원한 고향, 인천’이라는 단선적인 주제로 구성된 것은 전시 서사의 구조적 한계와 비판적 성찰의 부재를 시사한다. 분석 결과 현재 전시는 해외 입양을 마치 역사적 사실의 나열처럼 ‘해외 입양의 역사’라는 패널로 요약하고 있을 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 인권 침해, 가족 해체의 비극, 정체성 혼란과 차별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미군 기지 근처에서 태어난 혼혈 아동에 대한 서술은 당시 사회의 낙인과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 서술된다. 더 나아가, 이같은 접근은 그들이 겪는 친가족 찾기의 어려움, 문화적 장벽, 버려졌다는 상실감과 같은 복합적인 이산 트라우마를 감상적인 차원으로 축소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¹²⁾ 가장 비판적인 지점은 해외 입양 문제를 국가가 주도하고 방관해온 역사적 책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부재하다는 점이다. 1950년대 이후 빈곤과 혼혈아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해외 입양은 아동 중심의 원칙보다는 국가의 편익과 경제적 논리가

10) 인하대 내에 2천479㎡ 규모로 조성된 공원 중앙에 ‘인하의 비상’이라는 조형물이 건립되었으며, 밀알 형태 구조물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조형물 중앙 5개의 밀알은 1902년 인천에서 국내 첫 이민선 갤릭호를 타고 하와이에 도착한 교포들이 이민 50주년을 기념해 1952년 인하대 설립을 추진한 것을 의미하고, 외곽 7개의 밀알은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아 비상하는 인하대를 상징한다.

11) 서재송 전 ‘성 원선시오의 집’ 원장의 해외 입양자료 기탁식에서 이민사박물관 관계자는 “해외입양은 모국에서 품을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준 아프지만 현실적 선택이었다는 점과 친생 가족과 한민족 공동체에서 그들을 분리시켰다는 이중적 관점이 존재하는데 넓게는 한인 이민사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기탁한 자료들의 전시를 통해 이민사박물관과 인천은 해외 입양인들이 모국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해 전시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이 확인된다.

12) 전시가 “인천의 보육시설을 거쳐간 해외 입양인들은 인천을 모국에서의 마지막 보금자리로 기억하면서 입양국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모국을 찾아 한국에 돌아올 때에도 가장 먼저 밟게 되는 모국의 땅도 바로 인천이라는 점에서 입양인들에게 인천이라는 도시는 마지막 보금자리이자 귀환의 시작점이기도 하다.”라는 문구로 마무리되는 것은 해외 입양인들의 현실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미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현재까지도 미온적인 지원 체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부재하다. 이는 이민사박물관이 공공의 기억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불편한 진실과 책임을 공공 기억으로 공식화하는 데 소극적임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이 전시 서사는 관계 기억이 작동할 때, 특정 집단(해외 입양인)의 고통과 국가의 제도적 폭력을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서술을 통해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사박물관의 전시 개편은 인천 지역의 이민사 연결고리를 공식화하고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인하관’은 박물관이 지역의 특정 공공 기억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전시를 통해 공식적인 역사로 승격시킨 도시 정체성 담론의 제도적 완성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시도의 이면에 존재하는 해외 입양 관련 전시의 한계는 박물관이 공공 기억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서사와 경험을 어떻게 배제하거나 미화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해외 입양인들의 고통과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복합적이고 민감한 이슈는 여전히 이민사박물관 전시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항 기억들은 공적인 역사 서사에서 주변화되고 있다. 그동안 열린 기획 전시들을 살펴보면, 『동방을 밝힌 등불, 북간도 명동촌』, 『젊음, 독일행 비행기에 오르다』, 『자이니치 학교들-재일 한인 민족교육』, 『황무지에서 지켜낸 민족혼』, 『사할린 한인의 망향가』, 『재외동포와 함께한 100년』, 『코리아 아메리칸의 삶과 기억』 등 다수가 이산의 트라우마를 ‘고난 극복’과 ‘조국에 대한 헌신’이라는 영웅적 서사로 포획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식민-냉전 시기 이주의 복합적인 정치경제적 배경과 민족이 국가와 일치하지 않는 식민지 시대의 어긋남을 직시하기보다, 민족 정체성 수호라는 단선적인 국가주의적 서사 틀을 반복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2019년 ‘멕시코·쿠바 한인 이민과 독립운동 특별전’은 이민을 개인의 생존을 넘어선 ‘국가를 위한 고난의 역사’이자 ‘애국적 헌신’으로 공식화하는 관계 기억의 서사 전략을 따랐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 다른 이민, 해외 입양』과 같은 기획 전시는 이민사의 다층적 양상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일부 전시에서 ‘대항 기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 역시 부수적 위치에 머물러 있으며, 전시 전체의 내러티브를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기획 전시의 시도만으로는 여전히 상설 전시의 구조적 편향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 또한 이민사박물관이 ‘근대적 민족국가 중심의 역사 관점을 강화하면서도 탈국가적·다문화적 현실을 반영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이용일 2020), 박물관의 서사는 여전히 ‘인천에서의 출발-민족적 자긍심을 잇는 통로’라는 단선적 구조에 머무른다.

이민사박물관 내에 상시 비치되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한국이민사 여권’ 역시 전시 서사의 구조적 편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다. 이 여권은 멕시코 에네켄, 브라질 의류산업, 독일 파독광부·간호사, 하와이 껌떡호 등 애국적이거나 성공적으로 포획되는 이민의 경로만을 강조하고 상징적 아이টে임을 도장으로 찍어 완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담론 분석 관점에서, 박물관이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권위화한

이주 경험만을 유효한 서사로 인정하며, ‘들어오는 이민’이나 인천 지역과 동시대 ‘디아스포라’가 연결되는 현재적 지점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박물관이 지역 커뮤니티 및 다양한 이주 정체성과의 접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사박물관은 단지 20세기 초 한인의 서구사회로의 진입만을 다루는 것을 넘어, 20세기 중후반의 한인의 이주와 기억 또한 재현하고 있으며, 20세기 전체를 포괄하는 역사박물관으로서 한인의 디아스포라가 복합적으로 재현된 공공역사의 장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 박물관 전시 서사의 편협성과 관제 기억의 한계는 박물관 내부에서도 인지되고 있다. 이민사박물관장인 김상열은 박물관이 “러시아 거주 고려인들, 중국의 조선족, 재일동포들”의 이산 트라우마를 포함하여 “유입이민이 증가”하는 다문화 사회의 현실 속에서 ‘나가는 이민’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이민’까지 아우르는 종합 이주사 박물관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김상열 2013). 실제로 박물관장은 현 미주 중심의 전시 범위를 전 세계 한민족 이주사로 확장하고, 한국 사회에 정착한 다문화가정 유입이민자들을 위한 ‘어머니의 방’을 신설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이러한 계획은 박물관이 이주의 다층적인 현실과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하려는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유입이민’의 재현과 ‘귀환입양인’을 디아스포라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시도는 ‘떠나간 우리’ 중심의 서사에서 벗어나 현재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지형을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 계획조차 관제 기억의 딜레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첫째, 유입이민자들을 위한 ‘어머니의 방’은 이주 여성의 삶을 ‘어머니’라는 단일한 역할과 젠더 서사에 국한함으로써, 이들의 복합적인 주체성과 노동, 젠더화된 이주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물젠더적인 재현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노선희(2023)가 지적했듯, 박물관 전시가 ‘일원적이고 특정한 젠더 중심의 서사’를 구성할 경우 오히려 ‘물젠더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이주 여성들의 다층적인 삶의 맥락을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박물관이 “선조들의 성공적인 정착 과정을 통해 유입 이민자들에게 국내 적응의 본보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김상열 2013)는 여전히 특정 ‘성공’ 서사를 강조하며 이주자 개인의 복합적인 경험이나 어려움을 축소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권용석(2018)의 지적처럼 “모든 개인과 집단의 요구를 다 수용하여 전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누가 더 고통받았고 누가 더 결백한 희생자인지 경쟁하는 희생자들간의 경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이민사박물관이 포괄적 이주사 박물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고통을 성공이라는 틀 안에 편입시키려는 관제 기억의 유혹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억과 고통을 균형 있게 재현하는 섬세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4년 열린 ‘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설명 위주의 나열식 전시 방식과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된 것은, 박물관이 기존의 민족주의적이고 ‘출발 신화’

중심의 서사라는 구조적 편향성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내외부적 비판이 고조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라 할 수 있다. 이에 박물관은 재외동포청 개청이라는 국가적 이벤트와 맞물려, 미래 비전을 담은 야심 찬 추진 목표를 제시하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시된 목표들, 즉 ‘한국 이민사 플랫폼’ 구축, ‘콘텐츠 강화 도시’로의 자리매김, ‘재외동포들이 머물고 싶은 인천을 위한 중심기관’ 등은 인천시가 도시 정체성을 ‘최초, 최고 도시’에서 ‘환대의 도시(City of Welcome)’¹³⁾로 확장하고, 재외동포청 유치라는 국가적 상징성을 박물관 확대를 통해 제도적으로 완성하려는 공식 기억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범위 확대, 해외 시민 포용, 참여적 방식 등)과 함께, 가장 최근인 2025년 8월 발표된 연구용역에서는 ‘이민사를 공감하고 현재와 미래를 소통하는 이민사박물관’이 비전으로, 콘셉트는 ‘해외시민의 역사와 인천의 미래’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비전과 콘셉트는 ‘나가는 이민’ 중심 서사에서 벗어나 ‘들어오는 이민’의 맥락까지 포괄하려는 긍정적인 담론적 전환을 시도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세계 초일류 도시’ 목표와 ‘국내 유일한 이민사박물관 독점 교육/연구기관’이라는 일등 지상주의적 수사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관제 기억이 다층적 이주 현실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외연을 확장하되, 궁극적으로 도시 권력의 전략에 복무하려는 의도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국내 유일한 이민사박물관 독점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개편의 핵심으로 삼거나, 연구 분야에서 ‘국내 유일한 한국 이민사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는 것은, 박물관의 구조적 편향성을 비판적 성찰을 통해 해소하기보다 ‘출발 신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천의 ‘유일성’을 내세우고, ‘환대’와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딩 전략을 통해 포괄적 민족주의적 서사로 재구성하는 기획임을 확인할 수 있다.

V. 나가는 글

이민사박물관의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는 특정 시점과 지역에 초점을 맞춰 ‘공식 이민사’를 구축하고 재현해 왔다. 특히 인천과 하와이 이민의 관계를 ‘인하관’을 통해 공식화함으로써, 인천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미주 이민사의 연관성을 공공의 기억으로 각인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박물관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특정 역사적 사실을 선별하여 공동체의 집단 기억으로 승격시키고

13) 이 표현은 2026년 제14회를 맞은 ‘디아스포라영화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화제 주관 기관인 인천영상위원회는 인천을 ‘환대의 도시’로 정의한다. 영화제는 인천을 “식민지 조선을 떠난 재일조선인과 고려인, 한국전쟁의 실향민과 이산가족, 산업화 시기 독일로 떠난 재독한인간호사와 광부 등 한인 디아스포라를 비롯해 난민, 추방, 실향, 이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이주를 겪는 소수자들의 이야기까지. 한 세기의 기억을 통해 떠나고 들어오는 많은 이들의 설렘과 슬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함께 품는 도시, 하늘과 바다를 통해 들어온 다양한 정체성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이곳”이라고 소개한다. 이는 앞서 본문에서 분석한 이민사박물관의 확대 개편 목표와 마찬가지로, 인천시가 ‘출발 신화’를 넘어 이산(離散)과 들어오는 이민(Immigration)을 포괄하여 도시의 문화적/경제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공식 기억의 정치가 ‘환대의 도시’ 브랜딩을 통해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식화하는 박물관의 권위적 기능을 드러낸다. 박물관은 과거의 무수한 사건과 기억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고 배열함으로써 하나의 공식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 내러티브를 통해 방문객들이 특정한 역사 인식과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내면화하도록 유도한다. 이 점에서 이민사박물관은 기억을 보존하는 중립적 공간이라기보다, 기억을 선별하고 제도화하며 도시 정체성의 정당성을 생산하는 문화정치적 장치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공식화 과정은 이민사의 다양한 측면을 효과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고통스럽거나 복합적인 기억, 비주류적 이주 경험, 그리고 동시대 인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이주자들의 다층적인 정체성은 현재의 전시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거나 주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박물관이 공공의 기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선택과 배제의 정치학’을 명백히 드러내는 지점이다. 복잡하고 유동적인 이주 역사를 단일한 민족 서사나 국가 기획의 틀에 포섭하려는 시도는 재현의 폭을 축소시키며, 이주의 복잡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딜레마를 낳는다.

현재 이민사박물관의 전시는 인천을 비롯한 동시대 한국에서 문화적·민족적 경계를 넘나들며 일어나는 복합적인 이민 현상과 그 얽혀진 역사를 다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박물관이 과거의 유산만을 보존하는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진행형인 사회적 변화와 다문화적 현실을 반영한 기억의 공간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기존 전시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최근 진행된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도 확인된다. 이 용역의 내용에는 박물관의 전시 주제를 미주 중심에서 전 세계 한인 이민사로 확대하고, 인천이 재외동포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재외동포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박물관의 기능적, 서사적 확장을 위한 다각적인 구상(경인일보 2024/7/30)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민사박물관 역시 기존 전시의 제한적 서사 구조를 인지하고, 탈국가적이고 다층적인 이주 현실을 포괄하려는 시도를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실제 인천시는 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 위치에 박물관을 증축하기로 결정하고, 전세계 한인 이민사를 망라하는 종합 이민사박물관으로 범위를 확대해,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강화된 재외동포에 대한 환대의 도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시도는 박물관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냄으로써 기억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며, 단순한 과거의 재현을 넘어 현재에도 지속되는 문제에 대한 성찰과 비판적 질문을 던지는 공간으로의 변화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박물관은 ‘20세기 초 한인의 서구사회 진입만을 다루는 것을 넘어, 20세기 전체를 포괄하는 역사박물관으로서 한인의 디아스포라가 복합적으로 재현된 공공역사의 장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노선희 2023).

이전 논쟁과 별개로, 이민사박물관은 과거 역사의 보존을 넘어,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와 다문화적 현실 속에서 ‘기억의 공간’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다. 이는 인천이 개항도시로서의 정체성에 기대어 강조 중인 ‘출발 신화’를 넘어, 다양한 이주 경험과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박물관 전시 내러티브에 통합해야 한다는 과제를 포함한다. 나아가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실패, 혐오, 젠더 문제와 같은 민감한 주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다루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인구다양성 지수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며,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에서 전국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인천이 현재 한국 사회의 인구 다양성과 이주 현실을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도시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민사박물관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된 이주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과거 이민사의 기념 공간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이주 경험까지를 포괄하는 ‘기억의 공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이민사박물관은 이주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적 함의를 탐색하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용석. 2018. 「인천 박물관들 속 기억의 정치와 정체성 만들기: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도시연구 13: 287-317.
- 김상열. 2013. 「이민사박물관의 이주역사 유물수집방안」. 2013년도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발표자료.
- 남근우. 2024. 「이민사박물관 및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국립화 방안」. 인천: 인천연구원.
- 노선희. 2023. 「이민사박물관에서의 젠더 재현에 관한 논의: 한인 사진신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91: 143-175.
- 안종욱. 2025. 「인천의 주요 도시 이미지로서 ‘서울의 위성도시’의 형성 및 변화 과정」. 한국지리학회지 14(2): 163-184.
- 오미일·배윤기. 2009. 「한국 개항장도시의 기념사업과 기억의 정치 -인천의 집단기억과 장소성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83: 45-81
- 이용일. 2020. 「민족적 상상과 글로벌 현실 사이의 이민사박물관」. 현대사와 박물관: 138-147
- 인천광역시. 2020. 「이민사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시공문화.
- 인천광역시. 2024.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 발표자료.
- 최은영. 2013. “그들도 한국인이다.” 플랫폼 통권 41호. 인천문화재단.
- 최혜진·안수인·김주리·곽윤경·최선영. 2025.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캐롤 던컨. 2015. 『미술관이라는 환상: 문명화의 미래와 권력의 공간』. 김용규 (역). 부산: 경성대학교출판부.
- 피에르 노라. 2010. 『기억의 장소 1』. 강희진 등 (역). 서울: 나남출판.
- Bennett, T. 1995. *The birth of the museum: History, theory, politics*. London: Routledge.
- Macdonald, S. 2015. Museums, National, Postnational and Transcultural Identities. *Museum & Society* 1(1): 1-16. (<https://doi.org/10.29311/mas.v1i1.3>)
- “마계 인천”이라니...방치할 수 없는 인천 이미지.” 경인일보 (사설). 2016.5.17. <https://www.kyeongin.com/article/1075259> (검색일: 2025년 9월 19일)
- “역사성 무시한 한국이민사박물관 송도 이전” 인천일보 (사설). 2024.7.31.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0305> (검색일: 2025년 9월 25일)

- 김창수. “디아스포라영화제가 남긴 질문.” 경인일보. 2025.5.27.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1060> (검색일: 2025년 9월 19일)
- 목동훈. “데스크칼럼 ‘마계(魔界) 인천’이라 불러야 하나.” 경인일보. 2022.2.6. <https://www.kyeongin.com/article/1580486> (검색일: 2025년 9월 7일)
- 박현주. “한국이민사박물관 전시범위 전세계로 확대.” 경인일보. 2024.7.30. <https://www.kyeongin.com/article/1702880> (검색일: 2025년 9월 30일)
- 양진채. “인천문화 40년을 듣는다 - 황흥구, 하와이·인천 미술교류전에서 이민사박물관까지.” 인천in. 2022.11.24.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63> (검색일: 2025년 10월 14일)
- 인천광역시. “인천시, 재외동포 친화도시 조성 재결심” 보도자료. 2024.6.20.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10154540 (검색일: 2025년 10월 14일)
- 디아스포라영화제 홈페이지(<https://www.diaff.org/kor/default.asp>)
- 한국이민사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museum/MU040101>)

청년의 가구소득이 여가활동을 매개로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차이

김지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부연구위원

오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전문연구원, 교신저자(E-mail: daeunoh@kihasa.re.kr)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의 가구소득이 여가활동 참여를 매개로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간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15,09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R 4.4.2의 mediation 패키지와 lavaan 패키지를 활용하여 매개효과 분석과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의 가구균등화소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되는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소득의 직접적 영향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경로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 수도권 청년의 경우 여가활동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과정에서 경제적 요인과 여가활동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청년 사회적 관계망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청년, 가구소득, 여가활동, 사회적 관계망, 지역 간 차이

The Effect of Household Income on Young Adults' Social Networks through Leisure Activities: Regional Differences

Kim, Jimin

Associate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Research Planning and Coordinati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Oh, Daeun

Se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Public Finance and Statistic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young adults' household income influences their social networks through leisure participation and how this relationship varies across regions. Using data from the 2024 Survey on Youth Life commissioned b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analysis included responses from 15,098 young adults.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the Mediation and Lavaan packages in R 4.4.2. The results show that a higher income is associated with greater leisure participation, which, in turn, expands social networks, confirming the mediating role of leisure activities. Income also has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social networks. Additionally, the pathways differed by region, indicating that leisure participation had a stronger impact on social networks among young adults living in metropolitan areas.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e role of economic factors and leisure activities in shaping young adults' social networks and highlights the need for regionally tailored policies to strengthen their social connections.

Keywords : Young adults, household income, leisure activities, social networks, regional differences

I. 서론

청년기는 중장년기와 노년기로 이어지는 중요한 생애 전환기로, 성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시기이다(류주연 외 2023; 최윤희 외 2025).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은 증가하는 삶의 불확실성과 위험 속에서 다차원적인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어, 기존의 전통적 관점만으로는 이들의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류주연 외 2023; 박지영 2023; 이정봉 2021). 고용 불안, 주거 불안정,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은 상호작용하며 누적적으로 나타나고, 이는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박지영 2023; Lee and Park 2024). 특히 부정적인 생애 사건이나 사회 진출 실패는 사회적 단절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며(유민상 외 2021), 이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관계망 약화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사회적 관계망은 이러한 위험을 완충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청년들이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은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를 살펴보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관계 단절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인다(정세정 외 2025). 특히 이러한 변화는 가족보다 주변 지인의 네트워크에서 빠르게 발생한다고 보고되는데(정세정 외 2025),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소득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Bourdieu 1986; Putnam 2000). 청년기에 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수준을 넘어 사회참여와 관계 확장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제약은 이러한 기회의 접근과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아름 2023a; 뉴스1 2022/12/15). 더 나아가 여가활동은 공통의 관심사와 취향을 공유하며 타인과의 접촉을 촉진하는 사회적 매개로서, 그 참여 수준은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Putnam 2000; 김기태 2020; 남은영 외 2012). 이에 본 연구는 소득이 여가활동을 매개로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편,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인프라, 정책 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기회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청년의 여가활동과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Andersen and Davidson 2007).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문화·여가 인프라와 인구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김현우·강명구 2020; 노혜진 외 2024; 조동훈 2021), 이는 청년의 여가참여 방식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의 소득이 여가활동 참여를 매개로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적 맥락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년의 소득은 여가활동을 매개로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청년의 소득이 여가활동을 매개로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수도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1. 청년의 소득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2. 청년의 여가활동이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가?

II. 선행 연구 고찰

1. 청년의 가구소득과 여가활동,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적 구조

1) 청년의 가구소득과 사회적 관계망

Bourdieu(1986)에 따르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속한 사람들은 경제적 자원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더 폭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과 같은 경제적 자본의 차이는 개인이 일상적인 사회적 접촉과 관계 유지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축소나 단절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소득 차이에 따른 사회자본의 격차는 빈부격차가 크고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러한 사회일수록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의 자본 축적 속도 차이가 크고,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계층 간 격차가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이다(최수빈·최성언 2024).

우리나라에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인간관계를 포함한 여러 가치를 포기하는 청년들을 의미하는 'N포 세대'라는 개념(최셋별 2022)은 빈곤이 청년을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로 청년들의 일상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경제적 어려움은 청년들로 하여금 가까운 친구를 만나는 일조차 어렵게 만들고 기본적인 식사 자리까지 사회적으로 단절되게 한다. 청년재단과 뉴스1이 공동기획하여 대학생, 취업준생, 직장인 등 다양한 상황의 청년 2,0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 생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5.1%가 갚아야 할 대출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31.3%는 대출금과 이자 부담으로 인해 지인들과의 만남을 포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스1 2022/12/15). 청년들 대상의 인터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관계를 단절하는 양상이 더욱 구체적으로 포착되는데, 청년들은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외출을 줄이고 자연스레 친구와의 약속도 줄여나가며(한겨레 2023/8/21), 아르바이트가 없을 때는 돈이 부족해서 친구들

과의 약속 빈도를 조절하기도 한다(KBS뉴스 2023/4/26). 그리고 버스요금 등이 오르면서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로 자취방을 옮기고 활동 반경을 학교 근처 도보권으로 축소시키는 경우도 있다(최아름 2020). 2023년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고립 당사자 청년 인터뷰에서는 한 은둔 경험 청년은 교통비가 올라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던 외출도 못하게 되어 4개월 이상 은둔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또한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김기태(2020)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의 혼밥 빈도는 가구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하루 세 끼를 모두 혼자 먹는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가구유형(부모 동거 여부 등)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루 세 끼 모두를 주로 혼자 먹는다는 비율은 가구 월소득 600만 원 이상 집단에서는 1.62%밖에 되지 않았으나 가구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집단에서는 9.57%로 10명 중 1명에 육박했다(김기태 2020). 혼밥을 하게 되는 이유 역시 소득과 관련이 있다. 2022년 서울시먹거리통계조사에 따르면 혼밥을 하는 주된 이유로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를 꼽은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69.3%인데, 이 비율은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인 경우 89.5%로 높아지며, 주관적 사회계층과 학력이 낮을수록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등 자발적 혼밥의 경우 소득과의 관계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과 대비되는 경향이다(서울특별시 2022b).

2) 여가활동의 매개적 역할

Putnam(2000)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다양한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러한 활동 참여를 통해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소득이 높은 개인은 동료들과의 여가 취미 활동이나 교류에 필요한 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소득이 낮은 개인은 경제적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를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자는 실증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여가활동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사회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덜 참여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재정적 불안과 경제적 궁핍이 사회적 활동 참여와 관계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질 높은 여가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한다는 연구결과(신아름 2023b)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형성됨을 보여준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활동적이거나 관계 중심의 여가를 선호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이 적은 휴식형 여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강인원·고호석 2009; 남은영 외 2012; 남은영·최유정 2008), 이러한 차이는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 유형의 구성이 사회적 관계형성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청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주로 학교나 직장 같은 공식적 환경을 통해 형성되지만, 이러한 정기적인 접촉이 곧바로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 중 일부는 학교나 직장을 다니면서 물리적이고 정규적인 타인과의 접촉이 있더라도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인식하기도 한다(류주연 외 2023). 반면, 취미와 여가활동을 통한 만남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관심사와 취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친밀감을 형성하기 쉽고 밀도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고립은둔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 청년 상당수는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미활동을 통해 사람을 만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서울특별시 2022a), 이는 청년들에게 취미 여가활동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가활동에는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발생한다. 친구를 만나거나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출을 위한 교통비부터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한 식사 비용, 문화적 활동을 위한 영화 관람료나 여행 경비 등이 필요하다. 2024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참여 수준이 높았으며 경제적 지출 부담은 여가활동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24).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이러한 비용은 지불 능력이 적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비용이 물가상승과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취미와 여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높아지는 현상은 청년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취미와 여가를 향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2022년 국민여가활동 조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시행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한편, 여가생활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서우석 2023). 또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의 50.2%가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3). 취미와 여가에 대한 지출과 부담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취미와 여가에 드는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득이 적은 청년들은 비용이 덜 발생하는 여가활동을 찾게 되는데 이는 곧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의미한다. 2022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만 19세~34세 청년세대의 여가활동 잠재유형과 결정요인을 분석한 신아름(2023a)은 청년 세대의 여가활동을 ‘관계지향형’, ‘복합 여가형’, ‘문화예술관광 참여형’, ‘취미오락 무관심형’, ‘관계 무관심형’의 다섯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 중 ‘관계 무관심형’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만나는 활동을 하지 않는 유형을 의미한다. 여기에 속하는 청년들은 가구 소득과 여가비용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유형에 속하는 청년들은 관계 지향형 여가활동에도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에 비해 관계 무관심형 집단에 속하는 청년들은 관계 지향형 여가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은 가장 높게 나타나, 여가를 가장 중요시하면서도 실제 참여는 소극적인 ‘욕구와 실제 활동의 간극’이 발견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경제적인

여건이 청년들로 하여금 관계 지향형 여가 참여를 위촉시킬 수 있으며, 저소득 청년은 자신이 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의 여가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청년들을 사회적 관계 단절로 내몰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신아름 2023a).

따라서 본 연구는 가구소득이 여가활동 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매개적 경로를 개념적 분석틀로 설정한다. 다만, 이는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적 기반에 따라 접근 가능한 자원의 격차가 존재하므로 이어지는 장에서는 지역적 맥락에 따른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지역적 맥락에서 본 청년의 자원, 여가,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1) 지역 간 사회경제적 자원의 불균형과 청년의 생활환경

지역의 사회경제적 맥락, 즉 사회적·물질적 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과 일상적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Andersen and Davidson 2007), 청년기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는 이후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김재원 외 2024; 노혜진 외 2024; 최윤희 외 2025). 실제 지역자원의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공공재의 공급역량이 높고(김현우·강명구 2020), 지역의 경제적 역량은 지역주민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진희 2016). 그리고 지역 내 접근성, 교통수단 보유, 지역의 보안 상태 등은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 이용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keera et al. 2009).

한편, 지역격차를 다룰 때 전통적인 분류는 도시와 농촌이었으나, 대부분은 농촌과 도시의 문화적 속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윤곽만을 보여준다는 한계가 있다(문창진 1990; 윤태호 2010). 이에 많은 연구에서 지역 간 격차를 논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류를 적용하고 있다(강동우 2023; 문영만 2022; 윤태호 2010; 조동훈 2021; 최윤희 외 2025). 최영준(2025)은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지역 문제를 논할 때 ‘비수도권’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것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더 빠르게 위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는데, 이는 결국 지역 간 구조적 격차와 사회경제적인 불균형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경제적 영역뿐 아니라 생활 전반의 환경에서 확인된다(노혜진 외 2024; 문영만 2022; 이찬영·이흥후 2016; 최윤희 외 2025).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2013~2020년 두 지역의 일자리 분포를 보면 수도권은 고임금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임금 수준 하락과 일자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강동우 2023). 자원의 불균형은 주민의 건강행태로도 이어져, 수도권 거주자의 기대수명은 높고 사망률 및 스트레스, 비만율과 같은 건강위험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등 지역 간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윤태호 2010; 이진희 2016).

특히 최근의 청년세대는 적극적으로 여가생활을 누리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도권을 선호하며(김성아 외 2023; 김재원 외 2024; 이지은·이정은 2020), 25세~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문화서비스 혜택의 확대에 따른 청년층 인구 유입 효과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찬영·이흥후 2016). 이러한 지역적 맥락의 차이는 사회적 관계망이 개인에게 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망은 청년의 심리적 건강을 보호하는 완충 기제로 작용하지만, 그 구체적인 발현 경로는 거주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최윤희 외 2025).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이 체감하는 자원 결핍의 내용과 그에 따른 심리적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 또한 지역적 맥락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수도권 거주가 모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동훈(2021)의 연구에서 4년제 대학졸업자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를 비수도권에서 졸업한 뒤 수도권에서 대학 교육을 마치고 다시 비수도권에서 취업한 청년들의 최초 이직 확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경우 일자리 이동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직 선택이 쉽지 않은 구조적 제약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나, 그럼에도 지역 간 격차 속에서도 비수도권이 반드시 불리한 공간만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또한 비수도권 거주 청년의 자살생각 확률과 우울 수준은 수도권 거주 청년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이수비 외 2021; 지은주 외 2024). 이는 수도권 자원의 집중이 청년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비수도권의 환경이 심리적 안정감과 생활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구조적 격차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격차를 몸소 체감하고 있으며(노혜진 외 2024), 고임금뿐 아니라 전반적인 일자리 질 격차는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육, 문화생활 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청년의 수도권 유출은 지속되어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문영만 2022; 최영준 2025).

2) 지역 간 여가활동 격차와 청년의 여가활동 참여

문화 및 여가활동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주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특히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 시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23; 영화진흥위원회 2025), 이러한 인프라 분포는 지역 간 여가 접근성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여가활동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공 여가 인프라 부족으로 여가활동 빈도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여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유성은·민영희 2025). 또한 대도시는 여가시설이 다양하고 여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게 인식되고(신아름 2023b)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지역을

불문하고 관련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노혜진 외 2024; 박해광 2018). 또한 청년들에게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풍부하게 누릴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노혜진 외 2024).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 내 여건의 다양성이 커지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문화·여가활동이 확대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항상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주요 대도시에는 다양한 문화·여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청년층의 여가 접근성이 수도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손헌일 2022). 강인원·고호석(2009)의 연구에서도 인프라 중심의 격차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여가활동 요인과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원의 절대적 부족이라기보다 여가참여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Kang et al. 2018), 실제 연구에서도 문화 및 편의시설의 접근성 자체가 청년층의 이동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우·강명구 2020).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발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지역 거주자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역 거주자의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의 어메니티 수준보다는 개인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적 부담 등이 여가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강상훈·권영현 2021).

또한 문화예술 활동의 범위가 과거보다 확장되면서, 청년세대에서는 소비 행위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체험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재원 외 2024). 청년세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며 문화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 향유의 차이는 거주지역보다는 활동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크다(고명지 2020). 그리고 여가유형 중 여행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은 주요 소비자층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 해외여행자 중 약 1/3이 청년층으로 나타난다(이수현 2019; 한국관광데이터랩 2025). 이러한 변화는 청년세대가 여가를 통해 새로운 경험과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 요인은 여전히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여가활동과 사회적 관계망의 관계 및 지역적 특성

여가활동은 다양한 사회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관계성과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이러한 경험이 개인의 행복감과 사회적 관계망 확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남은영 외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타인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할 때 혼자일 때보다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여가활동이 타인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신인철 2023). 청년 여가활동의 차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선호하며 이를 빠르게 타인과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정하림·박인권 2021). 동료, 친구 및 다른 사람들과 여가생활을 즐기는 경향은 청년기 발달단계의 특성을 반영한다(손영미·오세숙 2011). 실제 관련 연구에서도 또래를 중심으로 한 다수와 함께하는 여가가 더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활동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손영미·오세숙 2011; 주형철·김수현 2013). 그리고 여가활동을 통해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을 중요시하며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청년은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주형철·김수현 2013). 문화서비스가 발달한 지역에 거주하려는 선호가 높아지고 이는 청년의 지역이동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이찬영·이흥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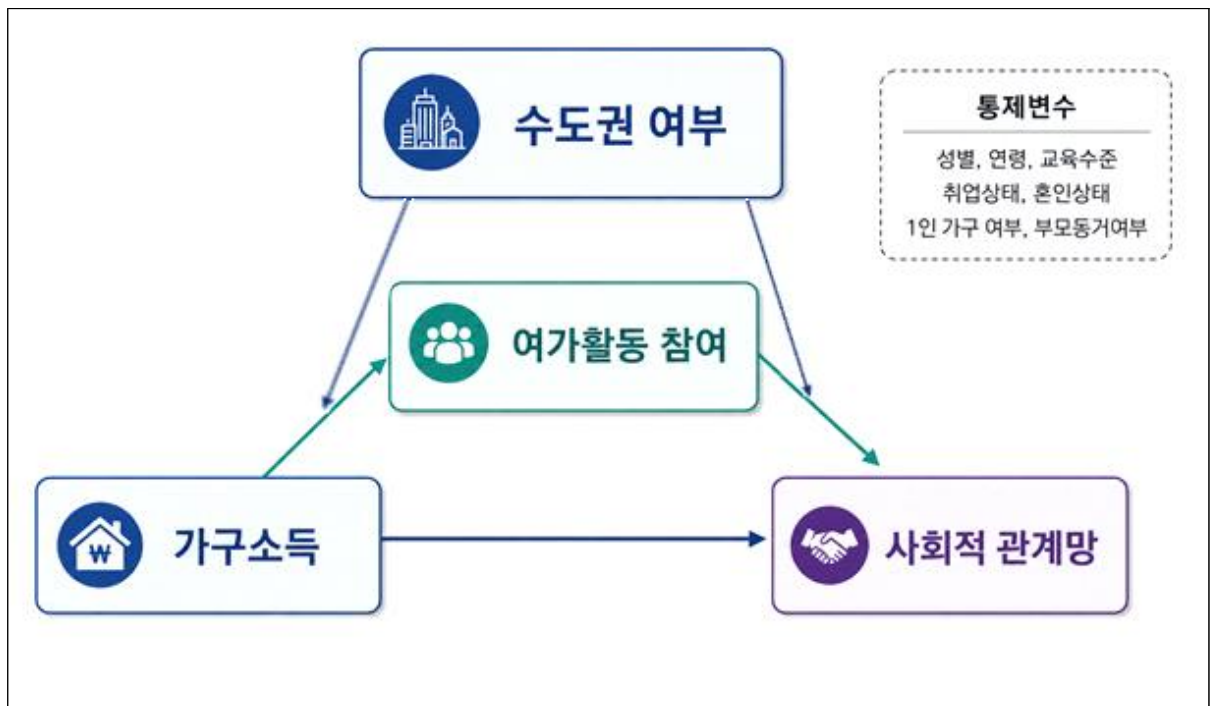
한편, 사회적 관계망은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는 네트워크의 크기, 유대자원과 구성원의 동질성, 상호적 지지 교환의 기회와 같은 구조적이고 상호작용적 차원으로 설명된다(ELL 1984). 이러한 관계망의 특성은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삶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동원 가능한 사회적 지지의 성격과 범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ELL 1984). 특히 청년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망의 효과는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최윤희 외 2025),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은 지역의 관계 구조와 익명성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수도권의 청년은 익명성이 보장된 느슨한 관계망을 선호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청년은 밀접한 지역 관계 속에서 익명성 부족과 공정성의 한계를 경험하며 벗어나기 위해 이주를 선택하기도 한다(노혜진 외 2024). 이는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기능이 지역의 관계 구조 및 상호작용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여가활동 인식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지역 간 여가 환경의 차이를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하림·박인권 2021). 반면, 다수가 함께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지역 격차에 대한 인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정하림·박인권 2021). 특히 최근 청년층은 SNS를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미술관이나 전시 관람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이 주요 여가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고명지 2020; 김성아 외 2023). 이에 따라 전시회 등 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청년들은 이러한 활동을 매개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청년의 가구소득이 여가활동 참여를 매개로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수도권 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년의 소득과 여가활동 참여,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제2024-027호)을 받아, 2024년 6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수행되었으며, 조사 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일반가구의 19세부터 34세 이하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조사 방법은 Tablet PC를 활용한 전문조사원의 방문 면접조사인 TAPI 조사이며 부득이한 경우 유치조사를 병행하였다. 모집단으로 추정된 19-34세 청년 9,916천 명 중 조사 참여에 동의하고 조사를 끝까지 마친 최종 응답자 수는 15,098명이다.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족 또는 가족 외 지인’으로 정의하였다. 어려움을 측정하는 문항은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이다. 청년삶실태조사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가족과 가족 외 지인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도움 요청 가능 여부를 각각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지인에 대해 각 항목별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1,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코딩 후 합산하여 총 0~10점 범위의 변수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해당 지표를 활용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관계 유형별 차이보다는 실질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반적 지지망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변수 구성 및 코딩 방식은 사회적 관계망의 양적 측면이 갖는 보호 효과를 검증한 최근의 선행 연구(최윤희 외 2025) 등에서도 유사하게 활용된 바 있어 척도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다만, 해당 지표는 관계의 강도나 만족도 등 질적 측면은 반영하지 못한 양적 규모 중심의 지표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41로 양호하였다.

2) 독립변수: 로그균등화소득

독립변수로는 총 가구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가구소득을 로그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청년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거나 1인 가구 등 가구 형태가 다양하므로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3) 매개변수: 여가활동 참여

여가활동 참여는 ‘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2-3일 정도의 여행’, ‘여가 관련 동호회 활동’ 각각에 대해 지난 1년 간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를 1, 없는 경우를 0으로 코딩 후 합산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 휴식이나 독서 등의 개인적 활동보다는 관계 형성 가능성이 높은 활동들로 구성하였다. 다만 참여 빈도나 함께한 사람의 유형(가족/친구/새로운 사람), 활동의 질적 측면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698로 양호하였다.

4) 조절변수: 수도권 여부

조절변수인 수도권 여부는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1)로, 나머지 지역을 비수도권(0)으로 측정하였다.

5)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여자 0, 남자 1), 연령대(19~24세 1, 25~29세 2, 30~34세 3), 교육수준(고졸 이하 1, 대학교 재·휴학 2, 대졸이상 3), 취업상태(미취업 0, 취업 1), 혼인여부(배우자 없음 0, 배우자 있음 1), 1인가구 여부(일반가구 0, 1인가구 1), 부모동거 여부(부모 비동거 0, 부모 동거 1)을 포함하였다.

4. 분석방법

소득이 여가활동 참여를 매개로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과 수도권 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R4.4.2를 사용하였고 여가활동의 매개효과 분석에는 mediation 패키지를, 수도권 여부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에는 lavaan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계수와 유의확률을 검토하였으며 다중공선성 검토를 위해 VIF(분산 팽창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청년의 소득이 여가활동 참여를 매개로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1)을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종속, 독립-매개, 매개-종속 각 관계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 분석의 전제조건을 확인하고 mediation 패키지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재표집 1,000회)으로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 매개비율을 추정하였다. 넷째, 청년의 소득이 여가활동을 매개로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수도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연구문제2) 검증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에는 lavaan패키지를 사용하였고 분석모형은 Hayes(2015)의 PROCESS Model 58으로 설정하였다. Model 58은 조절변수가 독립변수-매개변수 경로(소득→여가활동)와 매개변수-종속변수 경로(여가활동→사회적 관계망) 모두를 조절하는 이중조절 매개모형으로, 수도권 여부가 두 경로 모두에서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이론적 가정을 검증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강건한 표준오차 산출을 위해 MLR(Maximum Likelihood with Robust standard errors)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다섯째, 조절된 매개효과와 구체적인 경로(연구문제 2-1, 2-2)를 확인하기 위해 각 경로별 조절효과를 추가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표본수는 15,098명으로 성별은 여성이 50.81%, 남성이 49.19%이며 연령대는 19~24세가 36.22%, 25~29세가 33.81%, 30~34세가 29.97%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59.53%로 가장 많고 대학 재(휴)학이 22.52%, 고졸 이하가 17.95%이며 67.19%가 취업중이다. 혼인 상태와 가구 유형은 미혼(이혼, 사별 등 포함)이 85.89%, 1인 가구 비율은 30.16%, 부모 동거 비율이 53.07%이다. 거주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가 33.31%로 확인되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항목	빈도	%
성별	여자	7,672	50.81
	남자	7,426	49.19
연령대	19~24세	5,468	36.22
	25~29세	5,105	33.81
	30~34세	4,525	29.97
학력	고졸 이하	2,710	17.95
	대학재(휴)학	3,400	22.52
	대졸이상	8,988	59.53
취업 상태	미취업	4,954	32.81
	취업	10,144	67.19
혼인상태	미혼	12,967	85.89
	기혼	2,131	14.11
1인가구 여부	다인가구	10,545	69.84
	1인가구	4,553	30.16
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7,085	46.93
	동거	8,013	53.07
거주 지역	비수도권	10,069	66.69
	수도권	5,029	33.31

2) 주요 변수 특성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자료에서 가구균등화소득은 평균 3,494만원이며 여가 활동 참여 수준은 0~4점 중 1.60점, 사회적 관계망 크기는 0~10점 중 5.32점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구균등화소득의 경우 수도권이 3,647만원으로 비수도권(3,418만원)에 비해 높고 여가활동 참여도 수도권이 1.68점으로 비수도권(1.56점)에 비해 높으며 사회적 관계망 크기도 수도권이 5.48점으로 비수도권(5.24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 기술통계

(단위: 만원, 점)

구분	가구균등화소득 평균(표준편차)	여가활동 참여 평균(표준편차)	사회적 관계망 평균(표준편차)
전체	3,494.57 (2,182.32)	1.60 (1.35)	5.32 (2.16)
수도권	3,647.00 (2,458.96)	1.68 (1.35)	5.48 (2.20)
비수도권	3,418.44 (2,025.93)	1.56 (1.34)	5.24 (2.13)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변수 간 선형적 관계의 존재와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한 예비적 기술통계 단계로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상관계수의 크기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으나¹⁾, 모든 주요 변수 간 관계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후속 매개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단위: 만원, 점)

구분	가구균등화소득	여가활동 참여	사회적 관계망
가구균등화소득	1.00	-	-
여가활동 참여	0.07***	1.00	-
사회적 관계망	0.05***	0.08***	1.00

주: * $p < .05$, ** $p < .01$, *** $p < .001$

1)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란요인과 측정오차로 인해 상관계수가 0.1 이하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발달심리학 분야에 보고된 논문 12,412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상관계수 분포의 25백분위수가 0.08로 확인된 바 있다(Weinerová et al. 2022).

2. 여가활동 참여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청년의 가구균등화소득이 여가활동 참여를 매개로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소득이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16($p < .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되는 매개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소득이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도 0.132($p < .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가활동 참여를 통제한 후에도 소득이 사회적 관계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간접효과의 비중을 산출하였다. 간접효과 비중은 총효과 중에서 간접효과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부트스트랩 1,000회에서 추출된 분포를 바탕으로 한 추정값은 0.11($p < .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소득이 사회적 관계망에 이르는 총 효과 중 약 11%가 여가활동 참여를 통한 매개경로로 설명될 수 있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여가활동 참여가 소득과 사회적 관계망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여가활동 참여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b	se	t	95% CI[하한-상한]
간접효과	0.016***	0.003	6.412	0.012-0.021
직접효과	0.132***	0.025	5.371	0.084-0.180
총효과	0.148***	0.025	6.013	0.100-0.196
간접효과 비중	0.110***	0.026	4.246	0.070-0.173

3. 수도권 여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청년의 소득이 여가활동을 매개로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이 수도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으로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비수도권 여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는 비수도권이 0.007($p < .01$), 수도권이 0.021($p < .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두 집단 간 간접효과의 차이도 0.015($p < .01$)로 유의하였다. 이는 소득이 여가활동을 통해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청년의 거주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수도권 여부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의 매개효과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경로별로 수도권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경로 ①)에 있어서 소득의 직접효과와 수도권 여부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소득과 수도권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소득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수도권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반면, 여가활동이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경로 ②)에 있어서는 여가활동, 수도권 여부의 주효과와 여가활동과 수도권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즉, 여가활동이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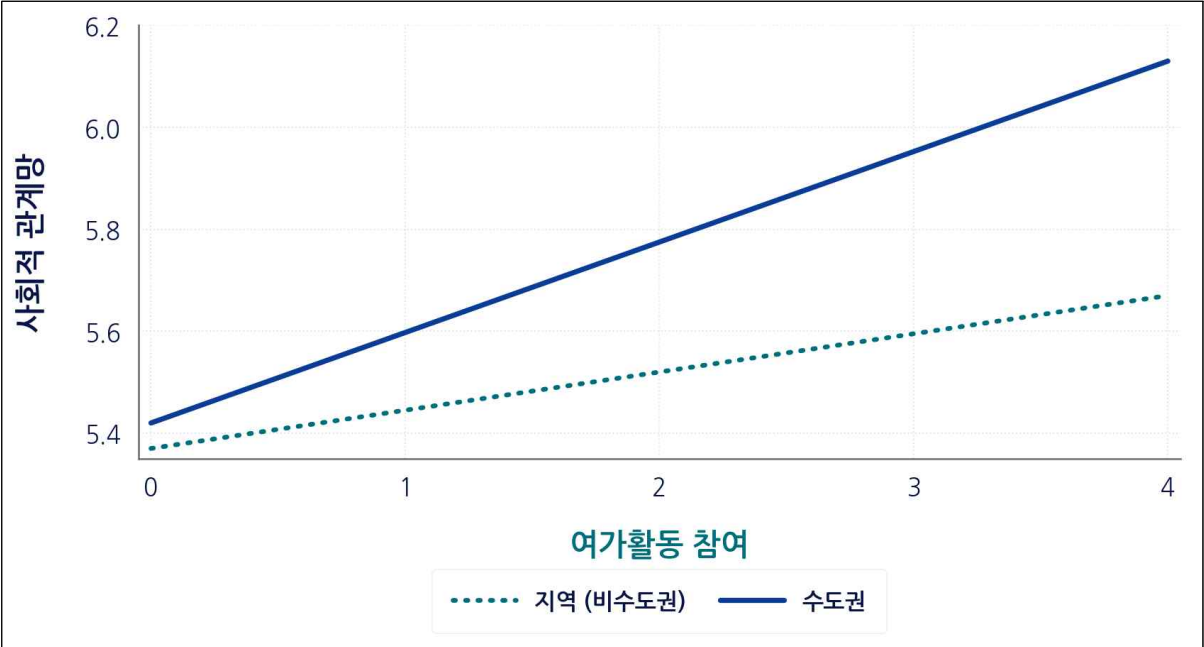
여가활동과 사회적 관계망의 경로가 수도권 여부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래프는 [그림 2]와 같다. 점선은 비수도권 표본, 실선은 수도권 표본을 의미하며 가로축은 여가활동 참여, 세로축은 사회적 관계망을 의미한다. 여가활동 참여 전 범위에서 수도권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이 크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수도권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이 더 충분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청년의 경우 여가활동 참여와 사회적 관계망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 여가활동 참여가 늘어날수록 사회적 관계망 크기가 커지는 효과가 수도권에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5] 수도권 여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영향요인	b	se	z	95% CI[하한-상한]
소득→ 여가활동 (경로 ①)	소득	0.088***	0.019	4.7	[0.051, 0.124]
	수도권 여부	0.103***	0.023	4.5	[0.058, 0.148]
	소득×수도권	0.031	0.031	1.0	[-0.029, 0.091]
여가활동→ 관계망 (경로 ②)	여가활동	0.075***	0.016	4.6	[0.043, 0.107]
	수도권 여부	0.220***	0.037	5.9	[0.147, 0.293]
	여가×수도권	0.105***	0.028	3.7	[0.050, 0.160]
소득→관계망 직접효과		0.150***	0.026	5.7	[0.098, 0.202]
비수도권 간접효과		0.007**	0.002	3.3	[0.003, 0.010]
수도권 간접효과		0.021***	0.005	4.0	[0.011, 0.032]
간접효과 차이		0.015**	0.006	2.6	[0.004, 0.026]

주: *p<.05, **p<.01, ***p<.001 통제변수를 포함한 전체 결과값은 부록표 참고

[그림 2] 여가활동이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 지역별 차이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득이 여가활동 참여를 매개로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과 수도권 여부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19세에서 34세 청년 15,098명을 대상으로 매개효과 분석과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소득이 여가활동 참여를 매개로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청년의 여가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저소득 청년의 경우에는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여가활동 참여가 감소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소득 청년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 및 유지하여 고립 위기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청년 대상의 여가·문화생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 여행, 체육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나 ‘스포츠 바우처’ 등 현재 운영중인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특히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손영미·오세숙 2011; 주형철·김수현 2013) 단순 관람, 개별적 강좌수강이 아닌 공동체적

특성을 가진 활동에는 지원 기준을 완화 또는 확대하거나 동호회 활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영화나 공연 관람 비용을 지원하거나 강좌 수강을 바우처 처리해주는 현재 지원 내용을 넘어 문화예술 소모임 활동비나 스포츠 동아리의 공간 대여료 등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신인철 2023). 다만, 본 연구에서 여가활동의 매개효과는 소득이 관계망에 미치는 총 효과 중 약 11%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가활동 외에 소득이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은 교통비, 식사비 등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 때문에 친구와의 약속을 줄이거나 활동 반경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뉴스1 2022/12/15; 한겨레 2023/8/21). 더욱이 경제소외층의 문화여가 활동은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서우석 2023),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여가활동 지원 뿐 아니라 소득보장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이 여가활동을 매개로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저소득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가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보다는 수도권 지역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소득과 여가활동 참여, 여가활동 참여와 사회적 관계망의 각 관계의 지역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소득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수도권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소득이 낮은 청년의 경우 거주지역이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여가활동 참여가 적다는 것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소득의 영향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공통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 청년의 여가활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다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원 방식에 차별점을 둘 필요가 있다(강인원·고호석 2009). 예를 들어 문화여가 시설이 많고 거리나 교통 접근성도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과 대안적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김재원 외 2024). 구체적으로는 지역 청년센터나 공공 공간을 관심사 기반의 소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개방하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취미 클래스를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되는 효과는 수도권에서 훨씬 크게 나타나 지역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수도권 청년의 경우 여가활동 기회 부족이 관계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지역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의 주요 형성 배경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명지 2020; 김성아 외 2023). 비수도권은 타 지역에서 전입

은 청년보다 연고지에 계속 거주중인 청년의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런 경우 학교 등을 통해 형성한 기존 관계망이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관계망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노혜진 외 2024). 반면에 수도권 청년의 경우 타지에서 전입한 비율이 높고 새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가활동 참여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주요 통로로 기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영향이 비수도권에 비해 클 수 있다. 나아가 수도권은 인구 규모와 사회집단의 다양성이 크고, 문화·여가 인프라 및 모임·동아리·커뮤니티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풍부한데 이러한 환경적 특성 또한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일한 여가활동 참여라도 수도권에서는 새로운 관계로 확장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경우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여가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저소득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득지원 뿐 아니라 여가활동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경우 여가활동 참여와 사회적 관계망 간의 연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므로, 관련 지원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여가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바우처 지원 형식의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여가활동 참여가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수도권만큼 여가활동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접근성이 좋지 않으므로 소모임 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과 공공 주도의 취미 클래스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 여가활동 참여가 미치는 영향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는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나 외출 및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비 지원, 지방거점지역의 경우 공유주택 등의 다양한 개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변수 간 인과관계 추정에 한계가 있다. 특히 여가활동 참여와 사회적 관계망 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자기회귀 교차지연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해 변수 간 인과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자료의 지역 변수가 시도코드로만 제공된 한계로 인해 지역 구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하여 비수도권 내에 존재하는 지방 거점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시군구 다층모형이나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구분의 연구 등을 통해 지역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총량으로 측정하였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관계의 질이나 상호작용의 강도 등 관계망의 질적 차원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가족과 지인은 관계망으로 기능하는 방향과 중요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석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질적 연구 등을 통해 대상에 따른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인식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가구균등화소득을 활용하여 청년이 실질적으로 동원 가능한 경제적 자원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취업 청년의 경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취업 청년 집단에서 개인소득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전체 청년 대상 가구소득 분석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독립성 수준에 따른 소득 효과의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반적인 여가활동 참여 수준이 사회적 관계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참여여부 총합을 변수로 활용했으나, 여가활동의 속성이나 질적차이를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여가 유형의 선택이 관계망 형성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청년의 소득과 사회적 관계망 사이에서 여가활동 참여가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경로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빈곤이 물질적 결핍을 넘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지원방안으로서 여가활동의 역할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수도권 여부에 따른 차이를 경로별로 상세히 검증하여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위한 개입에는 지역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위한 정책 설계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동우. 2023. 「일자리 분포의 지역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교를 중심으로」. 월간 노동리뷰. 11. 한국노동연구원.
- 강상훈·권영현. 2021. 「여가활동만족도에서 여가시간, 여가비용과 거주지의 영향: 2018 대구사회 조사 사례」. 호텔관광연구 23(1): 50-59.
- 강인원·고호석. 2009. 「지역특성에 따른 여가활동의 질적 활성화 방안」. 관광연구 23(4): 455-478.
- 고명지. 2020. 「청년세대의 새로운 문화적 실천과 구별짓기: 인스타그램 '전시 관람'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6): 1867-1882.
- 김기태. 2020. 「청년의 식생활, 정신건강 및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84: 33-46.
- 김성아·김문길·조성은·정세정·노혜진·강예은·장성현·김지연·이정민. 2023. 「청년정책 지원대상연구: 취약 청년과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재원·김유송·최셋별. 2024. 「청년세대는 무엇을 쫓아 이동하는가: 지방소멸시대의 청년과 문화예술」. 문화와 사회 32(3): 7-52.
- 김현우·강명구. 2020. 「삶의 자기결정권 선호에 따른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의 인구이동 특징」.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32(5): 49-77.
- 남은영·이재열·김민혜. 2012. 「행복감, 사회자본, 여가」. 한국사회학 46(5): 1-33.
- 남은영·최유정. 2008. 「사회계층 변수에 따른 여가 격차」. 한국인구학 31(3): 57-84.
- 노혜진·김성아·강예은·장성현. 2024. 「청년에게 지역은 어떤 의미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51(2): 61-90.
- 류주연·성기옥·김수진. 2023. 「청년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가?」. 사회과학연구 34(3): 47-71.
- 문영만. 2022.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유출 실태 및 결정요인-7개 권역과 노동시장 격차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55-77.
- 문창진. 1990. 『보건의료사회학』. 서울: 신광출판사.
-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 2024. 「2024 국민여가 활동조사」.
- 박지영. 2023. 「청년이 위험하다, 청년 4고(苦)」. 복지이슈 FOCUS 11. 경기복지재단.
- 박해광. 2018. 「문화는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문화와 사회 26(1): 43-90.
- 서우석. 2023.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10-220.

- 서울특별시. 2022a.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서울특별시. 2022b.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보고서」.
- 손영미·오세숙. 2011. 「대학생의 여가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여가소비 및 심리적 특성」.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5(2): 33-48.
- 손헌일. 2022.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의 가능성과 대전환」. 부산연구원.
- 신아름. 2023a. 「청년세대의 여가활동 잠재유형과 결정요인」. 여가학연구 21(3): 81-101.
- 신아름. 2023b. 「여가정책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연구: 지역규모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7(3): 61-90.
- 영화진흥위원회. 2025. 「2024년 전국 극장조사 결과」.
- 유성은·민영희. 2025. 「수도권 대도시와 비수도권 중소도시 장년층의 여가활동 및 여가시설 인식 비교: 서울과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34(3): 479-492.
- 유민상·신동훈·이민정.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태호. 2010.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의 현황과 정책과제」. 비판사회정책 30(30): 49-77.
- 이수비·최윤주·이현옥. 2021.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우울의 변화유형에 미치는 영향: 7가지 박탈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8(5): 45-56.
- 이수현. 2019. 「한국 청년들의 여행 경험에 관한 연구」. 여가학연구 17(1): 49-71.
- 이정봉. 2021. 「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8: 1-21.
- 이지은·이경은. 2020.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2): 57-86.
- 이진희. 2016. 「지역적 건강불평등과 개인 및 지역수준의 건강결정요인」. 보건사회연구 36(2): 345-384.
- 이찬영·이흥후. 2016.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경제연구 34(4): 143-169.
- 정세정·고혜진·김기태·김동진·김성아·오욱찬·이아영·이혜정·임덕영·신영규·하은솔·한겨레·김근혜. 2025.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하림·박인권. 2021.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활동 격차 인식 형성의 구조적 분석: 인지된 여가활동 접근도, 여가선호 유형, SNS 이용도, 상대적 박탈감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56(6): 73-87.
- 조동훈. 2021. 「고졸이후 대졸자의 지역간 이동경로 요인분석」. 경제연구 39(4): 85-110.
- 주형철·김수현. 2013. 「대학생들의 여가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여가만족 그리고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8(4): 57-72.
- 지은주·류한소·이민아. 2024. 「청년니트(NEET)의 자살생각 및 우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7(2): 33-55.

- 최수빈·최성언. 2024.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타적 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6(1): 259-288.
- 최섯별. 2022. 「한국의 MZ 세대 이야기: 기성세대의 상식을 넘어서다」. 지식의 지평 32: 63-76.
- 최아름. 2020. 「[Special Report 2 PART 1] 인터뷰| 안암생활 입주민 _ “청년에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건...”」. 더스쿠프 418: 28.
- 최영준. 2025. 「지역은 누가 돌보는가? 누가 관심이나 있는가?」. 보건사회연구 45(3): 1-3.
- 최윤희·김선미·임은효. 2025. 「청년이 인식하는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5(3): 448-474.
- Andersen, Ronald M., and Pamela L. Davidson. 2011. “Improving Access to Care in America: Individual and Contextual Indicators.” In *Changing the U.S. Health Care System: Key Issues in Health Services Policy and Management*, edited by Ronald M. Andersen, Thomas H. Rice, and Gerald F. Kominski, 3-31. San Francisco: Jossey-Bass.
- Bakeera, S. K., Wamala, S. P., Galea, S., State, A., Peterson, S., and Pariyo, G. W. 2009. “Community perceptions and factors influencing utilization of health services in Uganda.”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8: 1-12.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241-258. New York: Greenwood Press.
- Ell, K. 1984.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A review.” *Social Service Review* 58(1): 133-149.
- Kang, S., Vogt, C. A. and Lee, S. 2018. “Does taking vacations make people happy? A regional disparity perspective.”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3(11): 1021-1033.
- Lee, Y. and Park, R. 2024. “Changing Patterns of Youth Social Exclusion in South Korea.” *Youth & Society* 56(6): 1071-1092.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 Weinerová, Josefína, Dénes Szűcs, and John P. A. Ioannidis. 2022. “Published Correlational Effect Sizes in Soci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Royal Society Open*

Science 9(12): 220311. <https://doi.org/10.1098/rsos.220311>

- “2023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23.11.8.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300&bid=219>(검색일: 2025년 10월 29일)
- “[9층 시사극] 청년물가 대해부 “밥은 먹고 다니세요?”” KBS뉴스. 2023.4.2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61774>(검색일: 2025년 10월 29일)
- “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12.1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0&bid=0027&list_no=1479278&act=view(검색일: 2025년 10월 29일)
- “버스 대신 파릉이...대학생들 ‘짬내 분투’, 눈물인지 땀인지.” 한겨레. 2023.8.2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5045.html(검색일: 2025년 10월 29일)
- “사회적 고립의 시대, 사회적 여가에서 답을 찾다” 여가친화지원. 신인철. 2023. 9. 22. <https://happyoffice.rcda.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3&boardNo=370&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03>(검색일: 2025년 10월 27일)
- “청년 2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대출금 부담에 ‘5명 중 1명’ 식비 줄여요” 청년이 바꾼다-금융·재테크". 뉴스1. 2022.12.15. <https://www.news1.kr/articles/4890518>(검색일: 2025년 10월 29일)
- 한국관광데이터랩. 관광통계-국민해외관광객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ts/getDtrmcNatiCust2Form.do>.(검색일: 2025년 10월 27일)

부록

[부록 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통제변수 포함 전체 경로)

경로	영향요인	b	se	z	95% CI[하한-상한]
소득→ 여가활동(경로①)					
주요변수	소득	0.088***	0.019	4.7	[0.051, 0.124]
	수도권 여부	0.103***	0.023	4.5	[0.058, 0.148]
	소득×수도권	0.031	0.031	1.0	[-0.029, 0.091]
통제변수	성별	0.092***	0.022	4.1	[0.049, 0.135]
	혼인여부	-0.075	0.059	-1.3	[-0.191, 0.041]
	가구유형	0.003	0.055	0.1	[-0.104, 0.110]
	자녀유무	-0.099	0.054	-1.8	[-0.206, 0.007]
	취업여부	0.266***	0.025	10.5	[0.217, 0.315]
	연령(29세이하 기준)				
	30~34세	0.027	0.031	0.8	[-0.034, 0.088]
	35~39세	0.010	0.035	0.3	[-0.059, 0.079]
	학력(고졸 이하 기준)				
	대학 재·휴학	0.562***	0.039	14.5	[0.486, 0.638]
	대졸 이상	0.478***	0.029	16.6	[0.421, 0.535]
여가활동→ 사회적 관계망(경로②)					
주요변수	여가활동	0.075***	0.016	4.6	[0.043, 0.107]
	수도권 여부	0.220***	0.037	5.9	[0.147, 0.293]
	여가×수도권	0.105***	0.028	3.7	[0.050, 0.160]
통제변수	성별	0.062	0.036	1.7	[-0.008, 0.132]
	혼인여부	-0.003	0.103	-0.0	[-0.205, 0.199]
	가구유형	0.035	0.096	0.4	[-0.153, 0.223]
	자녀유무	0.022	0.095	0.2	[-0.164, 0.208]
	취업여부	0.109**	0.041	2.7	[0.029, 0.189]
	연령(29세이하 기준)				
	30~34세	-0.193***	0.053	-3.6	[-0.297, -0.089]
	35~39세	-0.421***	0.059	-7.1	[-0.537, -0.305]
	학력(고졸 이하 기준)				
	대학 재·휴학	0.437***	0.065	6.7	[0.309, 0.565]
	대졸 이상	0.358***	0.053	6.8	[0.254, 0.462]
소득→관계망 직접효과		0.150***	0.026	5.7	[0.098, 0.202]
비수도권 간접효과		0.007**	0.002	3.3	[0.003, 0.010]
수도권 간접효과		0.021***	0.005	4.0	[0.011, 0.032]
간접효과 차이		0.015**	0.006	2.6	[0.004, 0.026]

주: *p<.05, **p<.01, ***p<.001.

리빙랩 기반 문화도시 활성화 전략 연구: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강보라 우송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초빙교수

배영현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임상재활연구과 연구관, 교신저자(E-mail: researcher2018@korea.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의정부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수행된 사업과 정책을 분석하고, 리빙랩 도입 필요성과 정책지원 강화가 요구되는 전략을 실증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2022~2024년 추진된 263개 세부 사업을 문화자원 유형과 대상자 관점에서 재분류하였으며, 사업 담당자, 전문가, 시민 42명을 대상으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은 문화활동과 문화자치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무형문화자원과 생활문화자원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 참여는 시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취약계층 참여는 낮았다. 리빙랩 도입 필요성은 문화활동, 문화거점, 문화자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IPA 분석에서는 문화거점과 문화자치가 유지영역, 문화활동은 과잉영역, 문화창생과 문화관문은 저순위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리빙랩을 기반으로 한 시민참여 구조 강화, 정책 방향의 재조정,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문화도시 정책의 전략적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문화도시, 문화자원, 리빙랩, 정책지원, 중요도-만족도 분석

* 이 논문은 2024년 의정부문화재단의 작은연구 사업 지원을 받음.

A Study on Living Lab-Based Strategies for Cultural City Revitalization: Focusing on Uijeongbu

Kang, Bora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Woosong University

Bae, Young-Hyeon

Se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Clinical Rehabilitation Research,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jects and policies implemented after Uijeongbu was designated as a legal cultural city and identifies strategic areas requiring the introduction of Living Labs and enhanced policy support for sustainable cultural development. A total of 263 projects conducted between 2022 and 2024 were reclassified by cultural resource type and target group. A survey of 42 stakeholders, including project managers, experts, and citizens, was used to perform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The analysis revealed a concentration of projects on cultural activities and cultural autonomy, with a strong reliance on intangible and everyday cultural resources. Citizen participation was high, whereas the involvement of underrepresented groups remained limited. The perceived need for Living Lab implementation was highest for cultural activities, hubs, and autonomy. IPA results further indicated that cultural hubs and cultural autonomy fell within the “maintain” quadrant, cultural activities in the “Possible Overkill” quadrant, and cultural creation and cultural gateways in the “low-priority” quadrant.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restructure policy portfolios, strengthen citizen-centered collaborative systems, and improve accessibility for underrepresented groups using Living Lab approache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nsights into refining the strategic directions for cultural city policies.

Keywords : Cultural City, Cultural Resources, Living Labs, Policy Support,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문화도시 정책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국가 전략 사업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의정부시는 2021년 예비 문화도시 선정 이후 2022년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창의적 시민문화로 도약하는 경기북부 문화관문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문화자치, 문화활동, 문화창생, 문화거점, 문화관문 등 다섯 가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다(경기신문 2022/12/7). 지정 4년 차에 접어든 현 시점은 기존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중요한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최근 문화정책과 도시정책 전반에서 ‘사용자 중심(user-driven)’ 접근과 시민참여형 혁신이 강조되면서, 리빙랩(Living Lab)은 정책 설계와 실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장환영·김걸 2019). 리빙랩은 시민의 실제 생활환경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방안을 실험하는 개방형 혁신 체계로, 유럽 ENoLL 등 해외 도시에서 기후대응, 모빌리티, 도시전환 정책의 실험적 거버넌스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도시재생, 복지,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문화도시 정책과의 연계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의정부시 또한 일부 도시환경 개선 사업에서 리빙랩 방식을 제한적으로 도입한 바 있으나, 문화도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리빙랩과 연계한 정책 혁신전략을 제시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기존 문화도시 연구는 특정 사업 혹은 특정 대상 중심 분석에 치중하여, 도시 전체의 문화정책 구조와 자원 배분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의정부 문화도시 사업의 3개 연도(2022~2024)를 대상으로 사업 구조를 문화자원 유형 및 참여자 특성, 추진전략별 배분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책 담당자, 전문가, 시민 참여자 등의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측정하고(조아진·윤태환 2016), 그 결과를 문제발굴, 공동설계, 실험·검증, 확산의 리빙랩 단계와 연계하여 정책지원 우선순위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의정부 문화도시 정책의 구조적 특징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PA 방식은 경영학 분야에서 처음 자동차 산업의 마케팅 목적으로 적용된 이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조아진·윤태환

2016). 이 방법은 관광지, 외식산업, 컨벤션, 항공 산업, 숙박 산업 등 다양한 현대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최기종 2002; 최동석·이태희 2017), 최근에는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도시 문화자원과 정책 등을 분석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IPA 방식은 정책의 인식 기반 진단에 유용하나, 표본 규모·응답 편중·인식 중심 데이터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IPA 결과를 리빙랩의 단계적 개입 전략과 결합하여 분석의 설명력을 보완하여 제시하는 데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문화도시 사업을 단순 성과 평가가 아닌 ‘도시 실험 플랫폼’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문화도시 정책의 운영 방식과 거버넌스를 혁신할 수 있는 실질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의정부 문화도시 사업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고, 추진전략별 중요도와 만족도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IPA 분석 결과를 리빙랩 단계와 연계하여 정책지원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도시사회 기반 리빙랩(Urban Living Lab)의 개념과 진화

리빙랩(Living Lab)은 사용자가 실제 생활환경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그 해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이해된다(송위진 2012; 성지은 외 2016; 김한성·이정환 2018; 성지은·송위진 2023; 이수연 2022; Almirall et al. 2012). 초기 리빙랩이 기술기업의 제품 실증 중심 실험장으로 활용되었다면, 최근의 도시사회 기반 리빙랩(Urban Living Lab, ULL)은 도시의 복잡한 공공문제를 다루는 사회혁신 모델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김효정 외 2004; 박형웅 2021; Franz 2015). ULL은 문제발굴, 공동설계, 실험 및 검증, 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은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실험의 공동 설계자이자 실행 주체로 기능한다(Bulkeley et al. 2016). 이러한 점에서 ULL은 도시정책의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실험적 거버넌스 체계를 제공하며, 유럽 ENoLL의 사례에서 보듯 기후전환, 모빌리티, 문화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혁신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도시재생, 환경, 교육,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리빙랩 도입이 확산되었으며(장환영·김걸 2019), 시민의 생활세계에서 직접 실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효성과 체감도가 높은 정책도구로 평가된다(김나은 외 2022; 최성민 외 2020). 이러한 ULL의 특징은 시민 참여와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을 핵심 원리로 하는 문화도시 정책과의 높은 적합성을 보여준다.

2. 문화자원의 개념과 분류체계

문화자원은 역사, 예술, 생활문화, 산업·관광 등 지역의 유형·무형 문화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역문화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원구조를 형성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04). 국내 연구에서는 문화자원을 역사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관광·산업자원 등으로 분류하며(남치호 2007), 이러한 분류는 지역문화 전략 수립과 자원 배분 기준의 근거로 활용된다.

문화도시 분야에서는 생활문화 중심의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면서 생활문화자원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전통문화·예술·문화산업 등 전문적 문화자원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김종두 2021). 특히 문화도시 정책의 장기적 지속성을 위해서는 자원 유형 간 균형적 활용이 필요하나, 관련 연구는 개별 사업 중심의 사례 분석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 구조적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가 문화자원 분포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분석하는 이유도 이러한 간극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문화자원은 특정 문화의 가치를 반영하는 유·무형 요소로 구성되며, 지역문화정책의 기반을 형성한다(이한늬 2017). 문화자원에는 유적, 유구, 유물, 역사 지구, 역사 기록물 등이 포함된다(문화재청 2003). 관광자원의 분류 방법은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형과 무형, 또는 자연과 인문으로 크게 분류하는 특성을 보인다. 문화자원 분류는 [표 1]과 같다.

[표 1] 문화자원 분류

유형		구분
남치호 (2007)	유형문화자원	역사문화자원: 민속자료, 기념물 등
		문화시설자원: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
		인공경관자원: 건축물, 문화광장 등
	무형문화자원	특정 유명인물 또는 그 인물과 관련된 자원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공예기술 등
		문화프로그램: 축제, 전시, 공연, 각종 문화행사 등
문화체육 관광부 (2004)	관광문화자원	유물, 유적, 명승지, 특산물
	생활문화자원	행정, 교육, 산업, 의료, 교통, 통신, 체육, 레저, 편의시설
	예술문화자원	문학, 음악, 미술, 공연, 기타
	전통문화자원	민속, 문화, 설화, 관혼상제
	종교문화자원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문화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정책 사업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된 도시를 의미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법정 문화도시는 역사전통 중심형, 예술 중심형, 문화산업 중심형,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 자율형의 5가지 유형을 포함한다[표 2].

[표 2] 법정문화도시 5가지 지정 분류

기본분야	관련법근거(지역문화진흥법)	세부분야 예시
역사전통중심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 육성 특별법 등	역사·전통 등
예술중심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등
문화산업중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영상·음악·게임·출판·광고 등
사회문화중심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생활문화·여가·인문·문화교육·다문화·시민문화 등
지역자율	문화도시 조성 관련법 일반	기본분야 융/복합·생태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2)

3. 문화도시 정책 구조와 리빙랩의 연계 가능성

문화도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되는 국가 정책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특히 문화도시는 시민참여, 공동체 기반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정체성 강화라는 세 가지 원리를 핵심 구조로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사용자주도, 공동실험, 개방형 협력 모델을 지향하는 ULL과 공통된 정책 철학을 공유한다.

의정부시는 2022년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후, 문화자치, 문화활동, 문화창생, 문화거점, 문화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경기신문 2022/12/7). 그러나 기존 선행 연구는 특정 프로그램 또는 단발성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 문화도시 전체 정책구조와 ULL의 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부족하다.

선행 연구에서 문화공간 또는 지역사회의 리빙랩적 운영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 공간 또는 단일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화도시 전략 전반의 구조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5대 추진전략(문화자치, 문화활동, 문화창생, 문화거점, 문화관문)이 ULL 단계와 어떻게 정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김경환·유혜연 2023; 심준영·백민경 2022; 이연재 2024; 하상섭·신상범 2024)

따라서 문화도시 정책구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진단과 ULL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본 연구가 수행하는 분석의 핵심적 기여로 볼 수 있다.

4. 중요도-만족도 분석의 개념과 정책적 활용 가능성

IPA 방법은 중요도와 만족도를 이차원 좌표로 배열하여 서비스 또는 정책 개선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분석 기법이다(Martilla & James 1977). 국내에서는 관광, 항공, 외식, 숙박 등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도시, 복합문화공간 등 공공문화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송위휘 외 2020; 최성민 외 2020; 김동진·전재균 2021; 임학순·나보리 2024; 한승준 2025).

그러나 IPA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인다. 첫째, IPA는 시민 또는 관계자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의 실제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둘째, 표본 구성의 편중은 결과해석에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사분면 기반 판단은 정태적 분석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정책 실행 과정의 동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PA 분석 결과를 단독 해석하지 않고, ULL의 문제발굴, 공동설계, 실험, 확산 구조와 결합하여 정책 실행 로드맵으로 확장하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즉, IPA는 “현재의 인식 기반 진단”을 제공하고, ULL은 “문제 해결의 실행 경로”를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5. 선행 연구 요약 및 본 연구의 분석틀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문화도시와 리빙랩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인다. 첫째, 문화도시 전체 사업을 전수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둘째, 문화자원, 정책전략, 참여대상 간 구조적 연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셋째, 정책 담당자, 전문가, 시민 등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통합한 연구 설계가 제한적이다. 넷째, IPA 결과를 실제 정책 실행과 연결하는 실천적 분석틀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의정부 문화도시 263개 사업 전수 분석, 문화자원 재분류 분석, 이해관계자 IPA 조사, IPA-ULL 연계 해석이라는 분석틀을 구조화하여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문화도시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함과 동시에 시민참여 기반 혁신전략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범위 및 연구절차

1)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2022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하여,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수행된 사업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인식에 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범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의정부문화재단이 수행한 총 263개의 문화도시 세부사업이며, 이를 문화도시 5대 추진전략(문화자치, 문화활동, 문화창생, 문화거점, 문화관문)의 틀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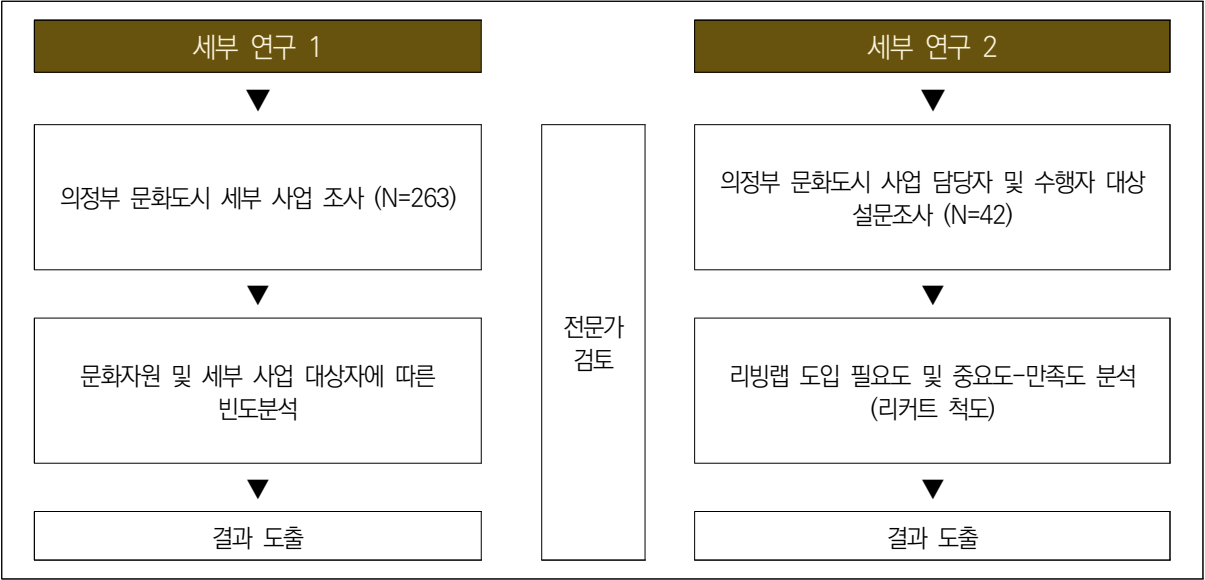
그리고 문화도시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문화도시 사업을 기획 및 관리하는 정책 담당자, 문화예술, 문화정책 전문가, 그리고 실제 사업에 참여한 시민(비의정부 거주자 포함) 등 총 4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참여자는 문화도시 사업에 단발적으로 참여한 단일 프로그램 참여자에 한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응답자는 기획자·사업 수행자·참여자 등의 역할을 복수로 경험한 바 있어, 문화도시 정책 전반에 대한 다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응답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표본 규모의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하였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문화도시 정책의 공급자, 수행자, 수혜자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정책 효과와 체감도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세부 연구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첫째, 의정부 법정 문화도시 지정 이후 수행된 지원 사업이나 정책에서 활용된 자원의 분포를 문화자원 분류와 세부 사업자 대상자 관점에서 분석한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의정부 문화도시 지원 사업이나 정책을 공급한 담당자와 지원을 받아 수행한 시민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리빙랩 도입의 필요한 추진전략 분야와 각 추진전략 분야의 중요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를 분석한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의정부 문화도시 사업의 운영 구조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리빙랩(Living Lab) 기반 정책지원의 우선순위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는 다음의 연속적 절차를 거쳐 수행되었다(그림 1).

[그림 1] 연구 절차



첫째, 문화도시 사업 구조 분석을 위해 의정부문화재단 사업보고서, 사업계획서, 행정자료, 문화도시 관련 누리집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263개 세부사업을 추진전략별과 문화자원 유형과 참여 대상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문화도시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 개발은 문화도시 정책 및 IPA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한 후, 의정부 문화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문화정책 전문가 3인의 검토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셋째, 수집된 자료는 정량분석 절차에 따라 통계화하였으며, 특히 IPA방식을 적용하여 추진전략별 정책지원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4사분면(유지, 집중개선, 저순위, 과잉)으로 구분하였고, 최종적으로 IPA 결과를 리빙랩의 단계(문제발굴, 공동설계, 실험·검증, 확산)와 연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방법, 측정도구, 분석결과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표 3].

[표 3] 전문가 정보

순번	성명	소속	분야	경력
1	박○은	○○생명공익재단	사회공헌	18년차
2	최○진	○○복지공단	사회복지	20년차
3	하○라	○○대학교 연구소	다문화	16년차

2. 측정도구

1) 문화도시 세부사업 분류도구

의정부 문화도시 263개 세부사업은 의정부 추진전략 분야[표 4]와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문화자원 분류체계(문화체육관광부 2004; 남치호 2007)에 따라 유형문화자원(역사, 시설, 경관 등)과 무형문화자원(프로그램, 인물, 무형문화재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문체부의 문화자원 5대 분류(생활, 예술, 관광, 전통, 종교) 체계를 추가 적용하여 자원 활용 구조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사업 참여 대상을 분석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 노인, 장애인, 다문화, 예술인, 시민 등 9개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이는 문화도시 사업의 보편적 참여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이다.

[표 4] 의정부 문화도시 추진전략 분야

번호	구분	내용	사업예시
1	문화자치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있는 도시	문화자치학교,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협치워크숍 공짜공짜
2	문화활동	내 역할이 있는 도시	100만원 실험실, 나의 창작노트, 도시가 극장, 자연이 무대
3	문화거점	시민과 문화를 연결할 공간이 있는 도시	사이공간, 의정부문화역 이음
4	문화창생	자부심 느낄 콘텐츠가 있는 도시	의정부기억저장소, 빼빼마을프로젝트, 의정부 하루여행
5	문화관문	인근 도시와 연계 협력하는 포용 도시	문화도시와 동거동락, 문화 1호선, 경기북부평화문화네트워크

2) 설문조사 도구

설문 문항은 의정부 문화도시의 5대 추진전략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각각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는 응답자의 인식 정도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3점은 ‘보통이다’를, 5점은 ‘매우 그렇다’를 의미한다.

설문조사 실시 이전에 응답자들이 리빙랩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기반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동으로 실험하는 개방형 혁신 모델’이라는 표준 정의와 국내외 적용 사례를

간단히 설명하는 사전 안내문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응답자는 리빙랩의 핵심 개념과 단계(문제발굴-공동설계-실험-확산)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춘 상태에서 문항에 응답하였다.

설문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문항과, 문화도시 핵심 전략(문화자치, 문화활동, 문화창생, 문화거점, 문화관문)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문항 구성은 문화정책 분야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내용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내부 일관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중요도와 만족도 항목 모두 0.82의 계수를 나타내며 적절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문헌 및 2차 자료는 2022~2024년 의정부문화재단이 발간한 사업보고서, 의정부문화도시 관련 온라인 자료, 공공정보 등을 활용하였다. 이는 문화도시 사업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근거 자료로서 신뢰도를 갖춘 공식 자료만을 선별하였다.

설문조사는 2024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다. 응답자 42명은 문화도시 사업 참여 경험을 보유한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체감도의 실질적인 분석이 가능하였다.

연구자는 응답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응답 누락 여부, 불성실 응답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모든 자료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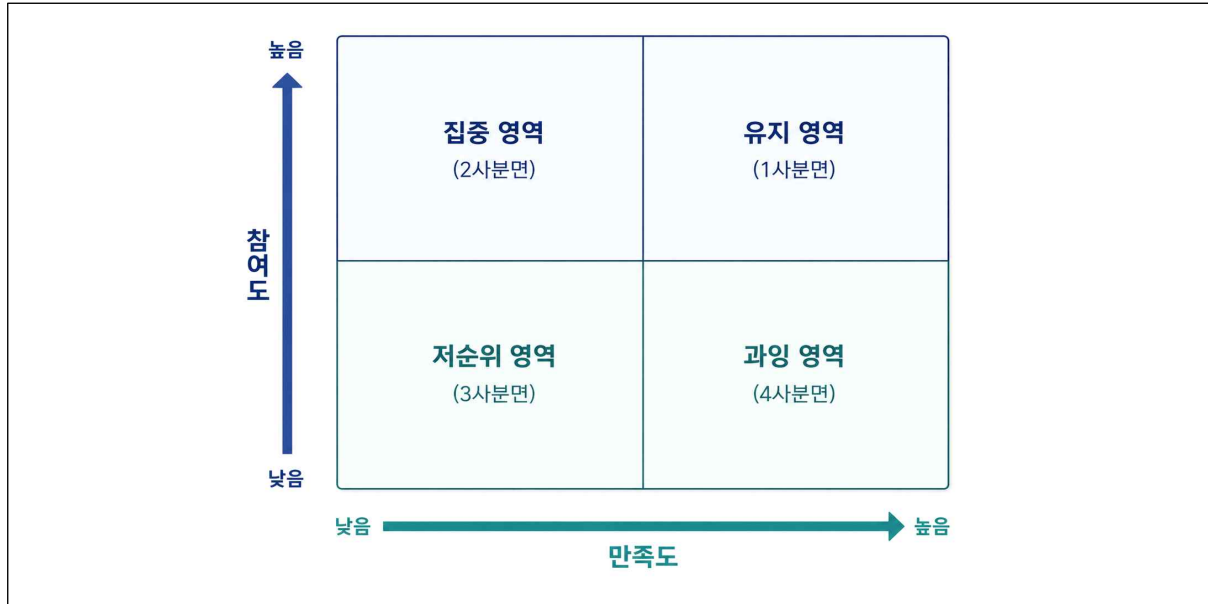
연구 분석은 정량적 접근을 중심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첫째, 문화도시 사업 구조 분석 단계에서는 추진전략별 빈도, 문화자원 유형별 분포, 참여대상별 분포 등을 중심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도시 사업 구조의 전반적 경향성과 편중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추진전략의 중요도 및 만족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이후 IPA 분석틀을 적용하여 4개 사분면 즉, 유지영역, 집중개선영역, 저순위영역, 과잉영역으로 분류하였다(그림 2). IPA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도와 만족도 간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r=0.19$ 로 낮은 상관성을 나타내며 IPA 적용의 기본 요건인 변수 간의 독립성을 충족하였다.

셋째, IPA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결과를 리빙랩의 4단계 프로세스(문제발굴, 공동설계, 실험 및 검증, 확산)에 연계하여 해석하였다. 이는 단순 중요도-만족도 차이를 넘어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단계별 개입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다.

넷째,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사회복지, 문화정책, 다문화 분야 전문가 3인)의 검토를 실시하였다. 자문은 연구설계, 도구 구성, 분석과정, 결과해석 단계에서 각각 수행되었으며, 모형의 적합성과 해석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림 2] 중요도-만족도 분석 틀



IV. 결과

1. 의정부 문화도시 사업 구조 분석

1) 추진전략별 사업 분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의정부 문화도시에서 수행된 263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은 특정 전략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사업 중 문화활동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65.02%), 다음으로 문화자치 분야가 23.95%를 차지하였다. 이 두 분야가 전체의 약 89%를 구성한다는 점은 의정부 문화도시의 사업 구조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과 문화 거버넌스 구축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문화거점, 문화관문, 문화창생 분야는 각각 4.56%, 3.42%, 3.04%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사업 분포가 제한적이었다[표 5],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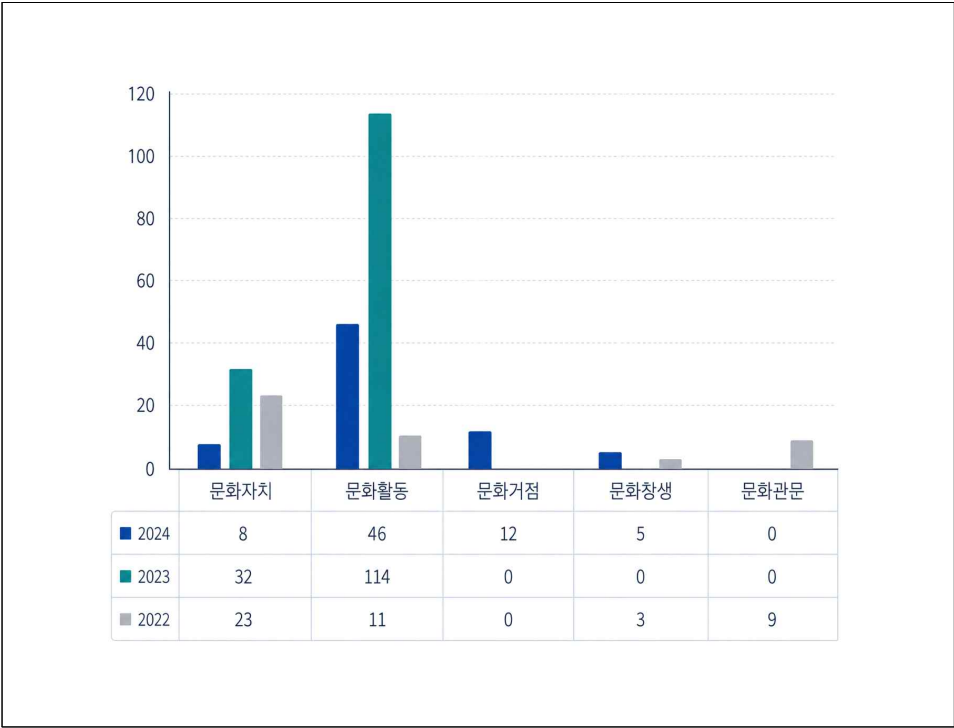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기존 보고서의 분석과 상이한 측면을 가진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성과지표 연구(추미경 외 2024)에서는 세부 사업이 비교적 균형 있게 배분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세부 사업 전체를 재분류한 결과에서는 특정 분야로 편중된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분석 결과와 실제 세부 사업의 운영 현황 간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함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야별 편중은

의정부문화재단의 사업 구조가 생활문화 및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 문화거점 및 문화창생 분야의 물리적,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 예산 및 인력 배분에서 단기 체감형 프로그램이 우선시되는 구조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5] 추진전략 분야별 세부 사업 수 (단위: 263명)

항목	2024	2023	2022	합계
	n 또는 n(%)			
합 계	71(27.00)	146(55.51)	46(17.49)	263(100)
문화자치	8	32	23	63(23.95)
문화활동	46	114	11	171(65.02)
문화거점	12	0	0	12(4.56)
문화창생	5	0	3	8(3.04)
문화관문	0	0	9	9(3.42)

[그림 3] 연도별 5대 추진전략 분야 세부 사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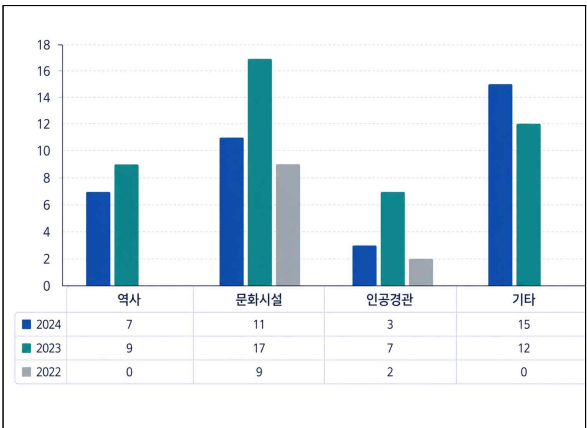
2) 문화자원 유형 분석

문화자원 유형 분석에서는 무형문화자원이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56.27%에 이르렀다. 특히 무형문화자원 중에서도 문화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이는 의정부 문화도시 사업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설계·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유형문화자원은 전체의 약 25% 내외였으며, 이 중 문화시설자원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그림 4-5]. 이러한 경향은 유형 기반 문화자원의 확장이나 장기적 공간 기반 문화정책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의미하며, 향후 물리적 자원과 프로그램 자원의 균형 있는 활용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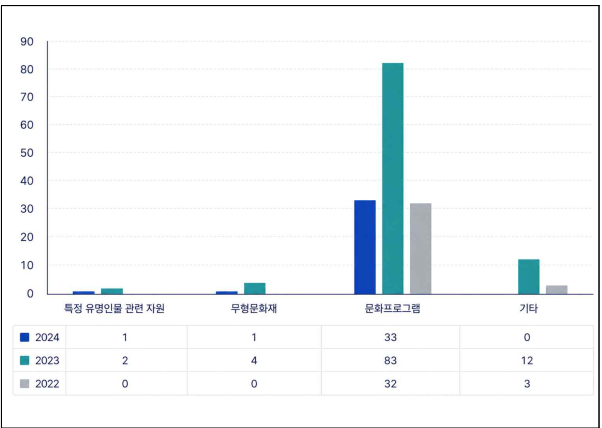
[표 6] 유·무형 문화자원 분류별 세부 사업 수 (단위: 263명)

항목		2024	2023	2022	합계
		n 또는 n(%)			
합계		71(27.00)	146(55.51)	46(17.49)	263(100)
유형문화자원	소계				
	역사문화자원	7	9	0	16(6.08)
	문화시설자원	11	17	9	37(14.07)
	인공경관자원	3	7	2	12(4.56)
	기타	15	12	0	27(10.27)
무형문화자원	소계				
	특정 유명인물	1	2	0	3(1.14)
	무형문화재	1	4	0	5(1.90)
	문화프로그램	33	83	32	148(56.27)
	기타	0	12	3	15(5.70)

[그림 4] 유형 문화자원별 세부 사업 수



[그림 5] 무형 문화자원별 세부 사업 수



3) 문화체육관광부 분류기준에 따른 문화자원 분석

문화체육관광부의 분류 체계에 따라 세부 사업을 재분류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생활문화 자원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예술문화자원이 29.28%, 관광문화자원이 15.97%로 뒤를 이었다[표 7], [그림 6]. 전통문화자원과 종교문화자원은 활용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 지역의 역사·전통 콘텐츠를 활용하는 사업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오재환 외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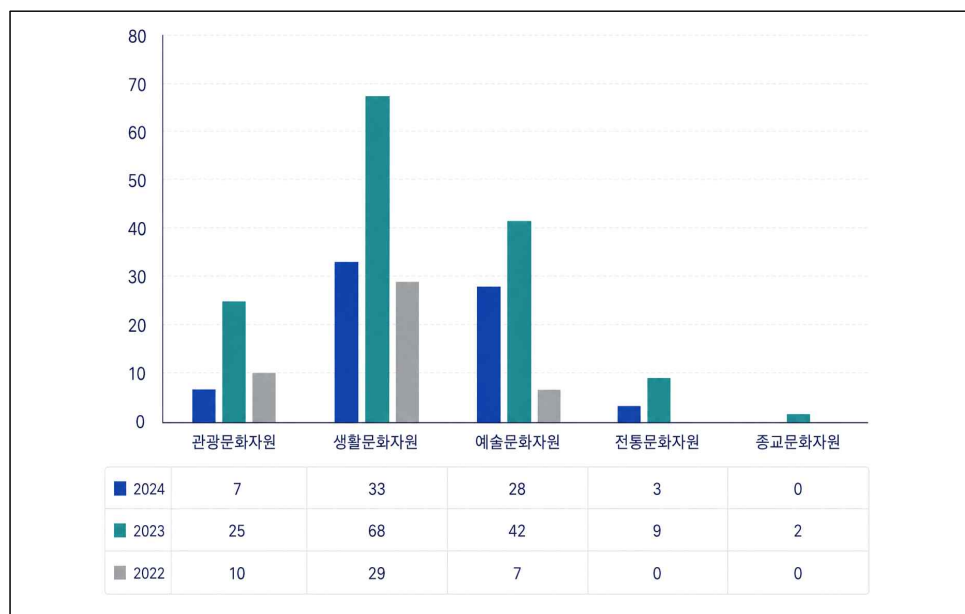
특히 생활문화자원 비중이 높다는 점은 문화활동 부문에서 시민 주도적 참여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과 연관되며, 선행 연구(JNP 2022)에서 시민들이 생활문화 프로그램에 반복 참여했다는 분석과도 일관성을 지닌다.

[표 7]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자원 세부 사업 수

(단위: 263명)

항목	2024	2023	2022	합계
	n 또는 n(%)			
합계	71(27.00)	146(55.51)	46(17.49)	263(100)
관광문화자원	7	25	10	42(15.97)
생활문화자원	33	68	29	130(49.43)
예술문화자원	28	42	7	77(29.28)
전통문화자원	3	9	0	12(4.56)
종교문화자원	0	2	0	2(0.76)

[그림 6]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자원별 세부 사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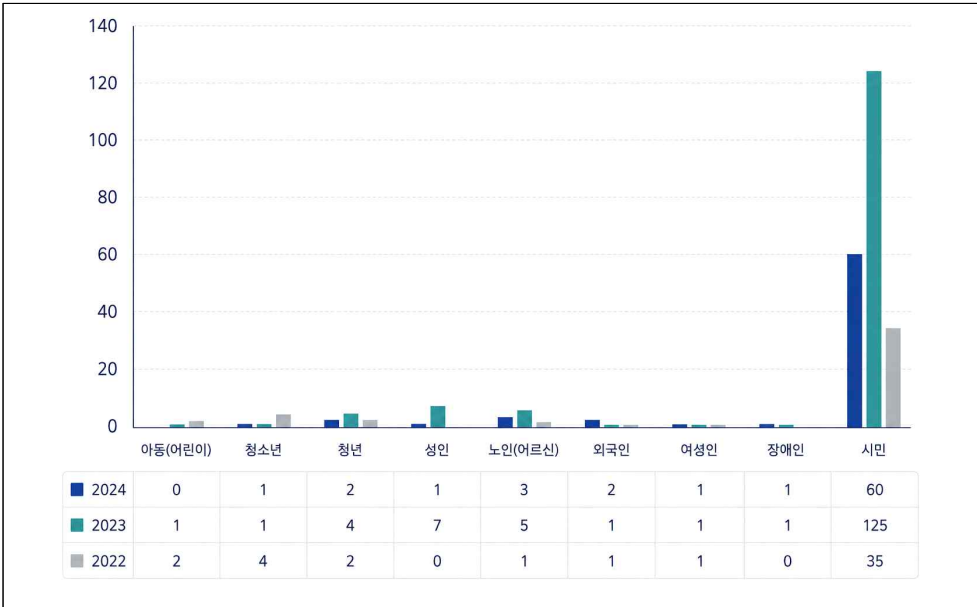
4) 사업 참여대상 분석

사업 대상자 분석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참여대상이 ‘시민 전체’로 설정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이다(83.65%). 특정 계층(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전체의 약 13%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장애인 대상 사업의 비중은 0.76%로 매우 낮았다[표 8], [그림 7].

[표 8] 대상자 관점의 세부 사업 수 (단위: 263명)

항목	2024	2023	2022	합계
	n 또는 n(%)			
합계	71(27.00)	146(55.51)	46(17.69)	263(100)
어린이(아동)	0	1	2	3(1.14)
청소년	1	1	4	6(2.28)
청년	2	4	2	8(3.04)
성인	1	7	0	8(3.04)
노인(어르신)	3	5	1	9(3.42)
외국인	2	1	1	4(1.52)
예술인	1	1	1	3(1.14)
장애인	1	1	0	2(0.76)
시민	60	125	35	220(83.65)

[그림 7] 대상자별 세부 사업 수



이러한 결과는 문화도시 사업이 참여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면서도, 선행 연구(JNP 2022)와 마찬가지로 문화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즉,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참여대상에 기반한 전략적 사업 분배가 요구된다.

2. 리빙랩 도입 필요도 및 정책지원 강화 우선순위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리빙랩 도입 필요도 및 정책 지원 강화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9]과 같다.

[표 9]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42명)

구분		n(%)	구분		n(%)
나이			역할		
	20대	3(7.1)		담당자	3(7.1)
	30대	6(14.3)		수행자	39(92.9)
	40대	16(38.1)	담당 또는 수행 분야		
	50대	13(31.0)		문화자치	15(35.7)
	60대	4(9.5)		문화활동	15(35.7)
거주지				문화거점	11(26.2)
	의정부	33(78.6)		문화관문	1(2.4)
	경기북부	5(11.9)		문화창생	0(0)
	서울	4(9.5)			
성별					
	남	10(23.8)			
	여	32(76.2)			

2) 리빙랩 도입 필요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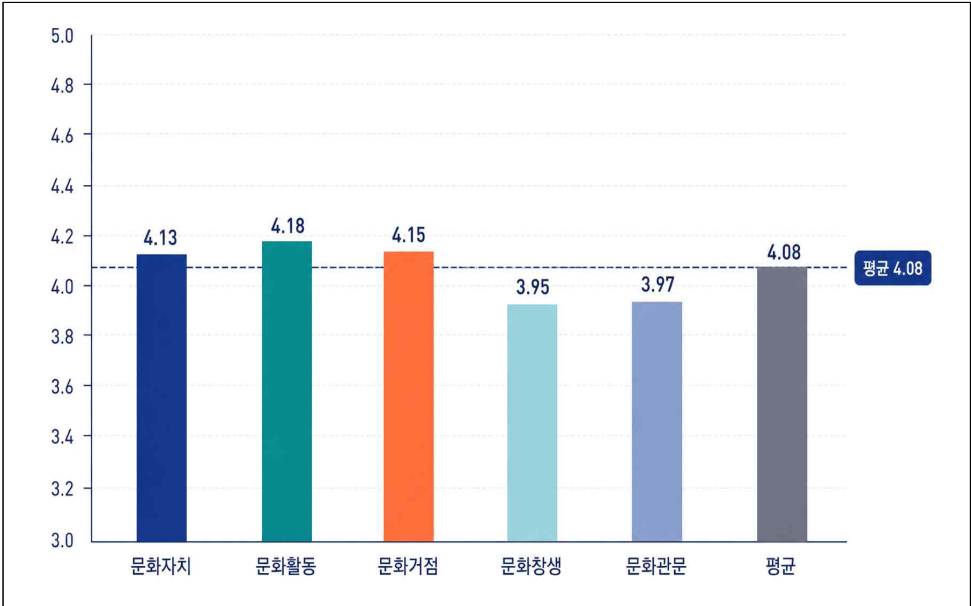
리빙랩 도입 필요성에 대한 평가 결과[표 10], [그림 8], 응답자들은 문화활동(4.18)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인식하였다. 이어 문화거점(4.15)과 문화자치(4.13)가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해당 전략 분야에서 시민 주도적 실험과 협력 활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문화창생(3.95)과 문화관문(3.97)은 필요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분야는 리빙랩 적용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평균 또한 4.0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리빙랩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10] 리빙랩 도입 추진전략 분야 필요도 결과

항목	필요도 (평균±표준편차)
합계	4.08±1.13
문화자치	4.13±1.13
문화활동	4.18±0.94
문화거점	4.14±0.87
문화창생	3.95±1.05
문화관문	3.97±1.01

[그림 8] 추진전략 분야별 리빙랩 도입 필요도



3)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중요도와 만족도 평균은 각각 4.14점과 3.77점으로 확인되었다[표 11]. 중요한 점은 모든 전략 분야에서 중요도가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으로, 이는 정책 수행에 대한 기대 수준이 실질적 성과 체감 수준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표 11] 리빙랩 도입 추진전략 분야 중요도와 만족도 결과

항목	중요도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합계	4.14±0.87	3.77±0.98
문화자치	4.18±0.85	3.79±0.89
문화활동	4.13±0.86	3.82±1.02
문화거점	4.28±0.89	3.85±1.09
문화창생	3.97±0.93	3.72±0.89
문화관문	4.13±0.80	3.67±1.01

IPA 틀을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표 12], [그림 9]. 문화거점과 문화자치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영역에 위치하였다. 이는 두 전략 분야에서 정책성과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으며, 향후 안정적 운영과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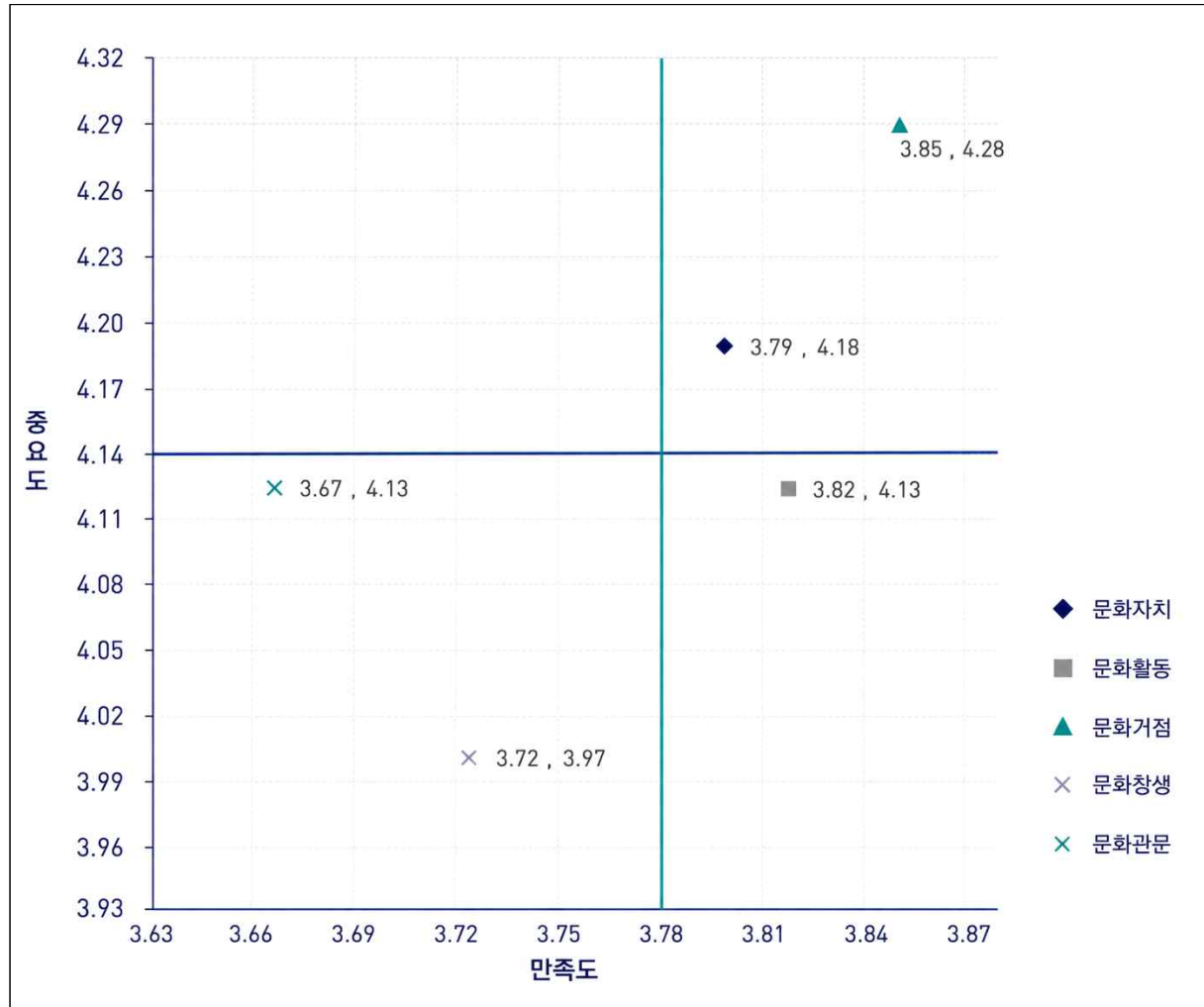
문화창생과 문화관문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영역에 위치하였다. 두 분야는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과제가 충분히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하며, 보다 장기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문화활동은 중요도보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에 속해 과잉투자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전략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활동이 '과잉 영역'으로 분류된 이유는 단순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분야가 반복적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해 중요도 대비 과도한 자원 투입이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잉'은 단순 과다의 의미가 아니라 자원 배분의 재조정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정책지원의 균형성 확보와 함께 문화자원 및 전략 분야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향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표 12] 중요도-만족도 분석

항목	분야
유지 영역	문화거점, 문화자치
집중 영역	-
저순위 영역	문화창생, 문화관문
과잉 영역	문화활동

[그림 9] 중요도-만족도 분석에 따른 정책지원 방향 도출



V. 논의

1. 문화도시 정책 구조의 특성과 편중의 문제

본 연구는 의정부 문화도시가 지난 3년간 수행한 263개 사업을 기반으로 전략별 사업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정 시민 참여대상자와 문화활동 및 문화자치 분야로 사업이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생활문화 중심의 무형자원 활용 비중이 확대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시민참여 중심의 문화도시 정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김종두 2021), 사업 편중 현상은 장기적 전략 분야(문화창생, 문화관문)의 상대적 약화를 초래하였고, 도시 간 문화적 네트워크와 지역 정체성 기반 콘텐츠 확장이라는 문화도시 정책의 핵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문화도시가 단기적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정책 구조 전반의 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의 지적(오재환 2009; 문화체육관광부 2020)과도 상응한다.

2. IPA 분석과 시민 인식 기반 정책 평가의 의미

본 연구에서 수행한 IPA 방식은 문화도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구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적용하였다(조아진·윤태환 2016; Xiao 2024). IPA 결과에서 모든 전략은 평균 이상의 중요도를 보였으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문화도시 정책이 기대 수준에 비해 체감 성과는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문화활동은 만족도는 높았으나 중요도가 낮아 ‘과잉 영역’으로 분류되었고, 문화창생과 문화관문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저순위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전략이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가치가 시민이나 사업 수행자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책 실행 과정의 정교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3. IPA 기반 리빙랩 도입의 전략적 함의

IPA 분석과 리빙랩 도입 필요도 분석을 통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의정부 문화도시의 정책 구조는 전략별로 리빙랩의 적용 가능성과 개입 방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빙랩이 단순한 참여 프로그램을 넘어 정책 전반의 재구조화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Ballon & Schuurman 2015).

우선, 문화거점과 문화자치 분야는 IPA 분석에서 모두 ‘유지 영역’에 위치한 동시에 리빙랩 도입 필요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두 전략 분야는 이미 시민참여 기반과 운영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리빙랩의 단계를 구조적으로 적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문화거점은 공간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향후 리빙랩 방식의 실험 설계가 적용될 경우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판단된다. 문화자치 또한 시민 거버넌스가 제도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다행위자 협력이라는 리빙랩의 속성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을 갖는다(신은희 2023).

반면 문화창생과 문화관문 분야는 IPA에서 ‘저순위 영역’에 해당하여 당장의 정책 우선순위는 낮지만, 이는 오히려 리빙랩이 새로운 개입 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 영역임을 시사한다. 문화창생 분야에서 지역 스토리 및 문화콘텐츠 개발이 미흡하게 나타난 것은 전문가 중심의 기획 방식에 머물러 시민의 경험과 생활세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리빙랩을 적용할 경우 시민이 지역의 기억, 문화, 정체성을 재해석하고 실험하는 방식의 창의적 프로젝트가 가능해진다. 문화관문 분야의 경우 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이지만, 현재까지 그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리빙랩 네트워크로

확장함으로써 다지역 협력 기반의 실험적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Bulkeley et al. 2016; Kowalczyk et al. 2021; Park & Fujii 2023).

한편 문화활동 분야가 IPA에서 ‘과잉 영역’에 위치한 결과는 시민참여 중심 정책의 장점이 자원 편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전략 분야에서는 리빙랩 접근이 향후 문제 해결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이다. 예를 들어 참여자 집단이 프로그램 설계 단계부터 직접 관여하고, 실험 기반의 활동을 통해 문화적 문제를 스스로 규정·해결하는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리빙랩의 핵심 가치인 사용자 중심, 공동 창출(co-creation)의 원리를 문화도시 정책 내에 체계적으로 내재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Almirall et al. 2012; Franz 2015).

4. 문화도시 정책 설계에서의 리빙랩의 학술적·정책적 기여

본 연구의 결과는 리빙랩이 단순히 참여 확대를 위한 기법이 아니라, 문화도시 정책의 전반적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임을 보여준다.

리빙랩은 정책 실행 전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잠재적 구조를 제공하며, 실험 및 검증 단계 역시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로 기능한다. 따라서 IPA 분석과 결합된 본 연구의 접근은 리빙랩 도입을 전략별로 차별화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는 문화도시 정책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정책과정 기반 분석틀”을 제공한 것으로, 문화정책 분야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정부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2022년 이후 수행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정책을 대상으로, 문화자원 활용 현황과 참여 대상자 구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리빙랩(Living Lab) 방식의 도입 가능성과 정책지원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문화도시 정책의 핵심 가치인 시민참여, 지역 정체성, 문화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사업 구조를 재해석하였다. 더불어 IPA 분석을 기반으로 리빙랩 적용 전략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발전 방향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추진전략별 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의정부 문화도시 정책은 문화활동과 문화자치에 집중된 구조를 보이며, 시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이

전체 사업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 주도의 문화실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나, 문화창생과 문화관문과 같이 지역 정체성과 도시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 분야의 상대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문화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양적 확장 중심의 문화활동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략 분야 간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문화자원 분석 결과, 무형문화자원의 문화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생활문화자원이 전체 문화자원 활용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의정부 문화도시 정책이 주민 체감형 문화참여를 충분히 활성화해 왔음을 의미하나, 동시에 지역의 역사, 전통, 예술, 문화경관 등 유형 자원 기반의 중장기적 문화발전 전략이 미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참여대상 분석에서 시민 참여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장애인·외국인·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집단의 참여 비율이 매우 낮아 포용성과 접근성의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드러났다.

셋째, 리빙랩 도입 필요도와 IPA 분석 결과는 정책구조 개선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리빙랩 도입 필요도는 문화활동, 문화거점, 문화자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시민참여 기반의 다중 행위자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일수록 리빙랩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IPA 분석에서 문화거점과 문화자치는 ‘유지 영역’으로 분류되어 향후 리빙랩 실험의 핵심 플랫폼으로 확장될 잠재력을 가진다. 반면 문화창생과 문화관문은 ‘저순위 영역’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오히려 리빙랩을 통해 새로운 문제 설정과 실험적 접근을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화활동은 ‘과잉 영역’으로 분류되어, 기존의 양적 확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리빙랩 기반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의정부 문화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거점과 문화자치 분야는 리빙랩 기반 정책 실험의 중심축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점 공간을 시민 중심 문제해결의 실험 장소로 활용하고, 문화자치를 통한 제도적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주도 협력 생태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둘째, 문화창생과 문화관문 분야는 단순한 프로그램 보완이 아닌 전략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지역 정체성과 문화자원의 내재적 가치를 발굴하는 ‘스토리 리빙랩’, 의정부-경기북부 도시 간 공동의 문제를 다루는 ‘광역 협력 리빙랩’ 등 새로운 실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문화정체성과 도시 확장성을 회복해야 한다.

셋째, 문화활동 분야는 현재 과도한 자원 투입 구조를 재검토하고, 리빙랩 방식의 문제 중심, 공동설계, 자기평가 구조를 도입하여 전체 사업의 질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반복적 프로그램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참여자 설계형 문화활동’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의정부 문화도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설문조사가 참여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특정 분야(문화활동, 문화거점, 문화자치)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문화자원 활용 빈도와 정책효과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지역 비교 연구, 정성 및 정량 혼합 연구, 실험 기반 리빙랩 연구 등이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취약 계층 참여 확대와 문화자원 지속 가능성 평가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IPA 분석과 리빙랩 적용 논리를 통합하여 문화도시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로서, 문화도시 정책의 혁신적 재편을 위한 실천적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과 시사점이 의정부 문화도시의 향후 정책 설계에 실질적 근거로 활용된다면, 시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JNP. 2022. 「2022 의정부 문화도시 예비사업 성과관리 설문조사 보고서」. 의정부문화재단.
- 김경환·유해연. 2023. 「문화예술 리빙랩 운영을 통한 지역변화 연구-마포구 망원동 '소그룹' 운영공간의 문화경관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경관학회지 15(1): 59-73.
- 김나은·김재훈·정혜진. 202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빙랩 연구 동향」. 한국정책학회보 31(4): 269-308.
- 김동진·전재균. 2021. 「IPA 기법을 통한 흰여울문화마을의 관광활성화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1): 445-458.
- 김종두. 2021. 「리빙랩(Living lab)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기예술연구 23(3): 209-224.
- 김한성·이정환. 2019. 「융합연구리뷰」. 융합연구정책센터 5(11): 1-73.
- 김효정·유승호·김민규·서선영. 2004. 「문화도시 육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남치호. 2007. 『문화자원과 지역정책』. 경기도: 대왕사.
- 문화재청. 2003. 『천연기념물 백서』.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04. 『창의 한국: 21세기 새로운 문화비전』. 서울: 대덕문화사
- 박형웅. 2021. 「사회문제 해결형 대학 리빙랩 프로젝트 수업의 의의와 효과적인 문제 정의 도출을 위한 활용 툴킷 개발」. 디지털융복합연구 19(10): 15-20.
- 성지은·송위진. 2023.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복지·돌봄 혁신 방향에 관한 연구: 기술·서비스 통합도 및 돌봄 당사자의 주체화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23: 177-214.
- 성지은·한규영·정서화. 2016.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리빙랩 사례 분석」. 과학기술학연구 16(2): 65-98.
- 송위진. 2012. 「Living Lab: 사용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모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브리핑 59: 14.
- 송위휘·최육희·전재균. 2020. 「IPA 분석을 통한 중국 관광객의 감천문화마을 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4): 1579-1592.
- 신은희. 2023. 「지역 문화 리빙랩의 실천과 거버넌스: 사례 분석」. 지역문화연구 18(1): 33-55.
- 심준영·백민경. 2022.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 현장 적용 연구」. 실과교육연구 28(3): 77-95.
- 오재환·김형균·오동하·김영표. 2009. 「부산지역 문화자원 특성분석과 활용방안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 이수연. 2022. 「리빙랩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인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22: 297-329.

- 이한늬. 2017.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연콘텐츠 제작 분석」.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학순·나보리. 2024. 「국제 문화산업축제와 지속가능발전의 연계를 위한 도시문화정책 과제 탐색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77): 389-430.
- 임혜경·이연재. 2024. 「리빙랩을 활용한 발달장애청소년 자립역량 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예술활동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연구 28(2): 45-73.
- 장환영·김걸. 2019. 「리빙랩 기반의 시민주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3): 41-53.
- 조아진·윤택환. 2016. 「IPA 기법을 활용한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 참가자 분석: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교 분석」. 관광연구 31(5): 143-157.
- 최기종. 2002. 「도시관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환경단서, 가치지각 변수의 구조적 체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미발행박사학위논문.
- 최동석·이태희. 2017. 「국내 여행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관한 IPA 연구」. 관광연구저널 31(3): 49-63.
- 최성민·정욱·김홍범. 2020. 「IPA 기법을 활용한 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도시관광 활성화 전략 연구」. 관광연구저널 34(5): 35-48.
- 추미경·양채운·김수민·이대한·권유란·이홍비·정예균. 2024. 「의정부 문화도시 성과지표 개발 및 2023년 사업성과분석 연구」. 문화다움.
- 하상섭·신상범. 2024. 「리빙랩의 관점에서 본 시민 주도 지역브랜드 창출: 원주시 한지 문화산업 사례」. 인문사회과학연구 25(2): 357-396.
- 한승준. 2025. 「현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효과성 평가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8(4): 209-231.

- Almirall, E., Lee, M., and Wareham, J. 2012. "Mapping living labs in the landscape of innovation methodologies."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2(9): 12-18. (DOI:<https://doi.org/10.22215/timreview/603>)
- Ballon, P., and Schuurman, D. 2015. "Living labs: concepts, tools and cases." *Info* 17(4). (DOI:<https://doi.org/10.1108/info-04-2015-0024>)
- Bulkeley, H., Coenen, L., Frantzeskaki, N., Hartmann, C., Kronsell, A., Mai, L., Marvin, S., McCormick, K., van Steenbergen, F., and Voytenko Palgan, Y. 2016. "Urban Living

- Labs: Governing Urban Sustainability Transitions.” *Current Opinion i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22: 13-17. (DOI:<https://doi.org/10.1016/j.cosust.2017.02.003>)
- Franz, Y. 2015. “Designing social living labs in urban research.” *Info* 17(4): 53-66. (DOI:<https://doi.org/10.1108/info-01-2015-0008>)
- Kowalczyk, M., Kucharska, W., and Stasiak, K. 2021. “Living Labs as Collaborative Platforms for Urban Innov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Sustainability* 13(18): 10278. (DOI:<https://doi.org/10.3390/su131810278>)
- Martilla, J. A. and Jam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DOI:<https://doi.org/10.2307/1250495>)
- Park, S., and Fujii, H. 2023. “Co-creation in local cultural initiatives: Comparative analysis of East Asian cities.” *Urban Studies* 60(7): 1350-1372.
- Xiao, L. 2024. “Participatory approaches to urban cultural development.” *Journal of Urban Culture* 10(1): 44-62.
- “의정부시 제4차 문화도시 지정 경기북부 최초.” 경기신문. 2022. 12. 07.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28543>(검색일: 2025년 1월 19일)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2002#0000>)
- 의정부문화재단(https://www.uac.or.kr/mobile/introduce_8.php)

노년기 건강 궤적의 생애주기적 영향요인 분석: 아동기와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중심으로*

도화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박통합과정(E-mail: sunrhdown2671@naver.com)

국문초록

본 연구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아동기 및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이 노년기 건강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년기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생애단계별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3차(2018년)부터 18차(2022년)까지 5개년 자료를 활용하고,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수행하여 노년기 건강 궤적의 양상과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인의 건강 상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하되었고, 개인 간 건강 격차는 점차 감소하는 수렴 양상이 나타났다. 조건부 모형 분석결과,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은 노년기 건강 초기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은 노년기 상황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 초기값을 기준으로 생애주기 관점 모델 중 경로 모델을 지지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아동기 빈곤에 대한 조기 개입, 노인 대상 경제적 지원 확대의 정책적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성인기 사회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추후 성인기 변수를 포함한 노년기 건강의 영향 경로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노인, 건강, 건강궤적, 사회경제적 상황, 잠재성장모형

* 이 논문은 도화정(2024)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년기 건강 궤적의 생애주기적 영향요인 분석」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Analyzing Life–Course Factors on Health Trajectories: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ituations in Childhood and Old–Age

Do, Hwajeong

Ph.D. Candidat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ituations in childhood and old age on older adults' health trajectories from a life–course perspective and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to reduce health disparities in later life. Using data from the 13th (2018) to the 18th (2022)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was employed to analyze the patterns of health change and their determinants. The results showed that older adults' health declined over time, while inter–individual disparities gradually decreased, indicating a convergence pattern. Conditional model analysis revealed that socioeconomic situation in old age directly affected the initial level of health, whereas childhood socioeconomic situation indirectly influenced health through old age. These findings support the pathway model within the life course framework.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early interventions in childhood poverty and expanded economic support for older adults. However, this study could not account for the effects of adulthood on socioeconomic situations, suggesting that future research should include adult factors to clarify the pathways that influence health in later life.

Keywords : Older adults, Health, Health Trajectory, Socio–economic situation(SES), Latent growth model

I. 서론

2023년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83.5세에 이르렀다. 수명이 늘면서 건강한 노년기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현재 한국 노인의 건강 상태는 낙관적이지 않다. 2021년 건강수명은 72.5세로, 기대수명과 11년의 격차를 보여 고령기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노화로 인한 건강 저하는 자연스럽지만 개인별 차이는 크다. 2000년대 이후 국내 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건강행동, 사회적 자본, 사회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변인이 노년기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해왔다. 이 중 사회경제적 요인은 노년기 건강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으로, 건강을 단순한 생물학적 결과가 아닌 사회적 불평등의 산물로 이해하려는 관점이 확산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자원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을 위한 자원 동원 능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Grundy and Sloggett 2003).

건강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고, 생애 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생애 자본으로 볼 수 있다(Lynch and Davey Smith 2005). 이에 건강을 한 시점의 단면이 아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 결과로 이해하려는 관점이 확산되며(서제희 외 2010; Shuey and Willson 2014), 건강 궤적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Asakawa et al.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생애 전반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노년기 건강 변화와 밀접히 관련된다. 일부 연구들은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이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지속적 영향을 검증했다(Cheval et al. 2018; Haas 2008; Zilioli et al. 2022). 그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직업지위 등 초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노년기 건강을 예측하며(Moody-Ayers et al. 2007), 이는 생애 전반의 자원 불평등이 누적되어 건강 궤적의 분화를 초래함을 시사한다(Dannefer 2003; Ferraro and Shippee 2009).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한 시점의 사회경제적 상태만을 고려해 생애적 변화와 누적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Wagmiller et al. 2006).

이에 본 연구는 아동기 사회경제적 조건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생애 단계별 조건이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이 노년기 건강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Pudrovska and Anikputa 2014)와 직접적 영향도 존재한다는 결과(Arpino et al. 2018)가 공존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생애단계별 사회경제적 변화와 건강 간 구조적 관계를 다룬 실증연구가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이 5년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아동기 및 노년기 사회경제적 요인이 건강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두 시기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노년기 건강에 작용하는지 분석함으로써, 노년기 건강 향상을 위한 적절한 개입 시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노년기 건강 궤적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아동기 및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은 노년기 건강 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1. 생애주기 관점 모델

생애주기 이론(Life-Course Theory)은 인간의 발달과 변화는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고, 개인이 속한 환경적 요인들이 삶의 고유한 궤적을 형성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이론에서는 이렇게 한 번 형성된 삶의 경로는 이후 발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을 전제로 하고 있다(Dannefer 2003). 1920년대부터 역사적인 맥락에서 개인의 삶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활용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인을 설명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Elder et al.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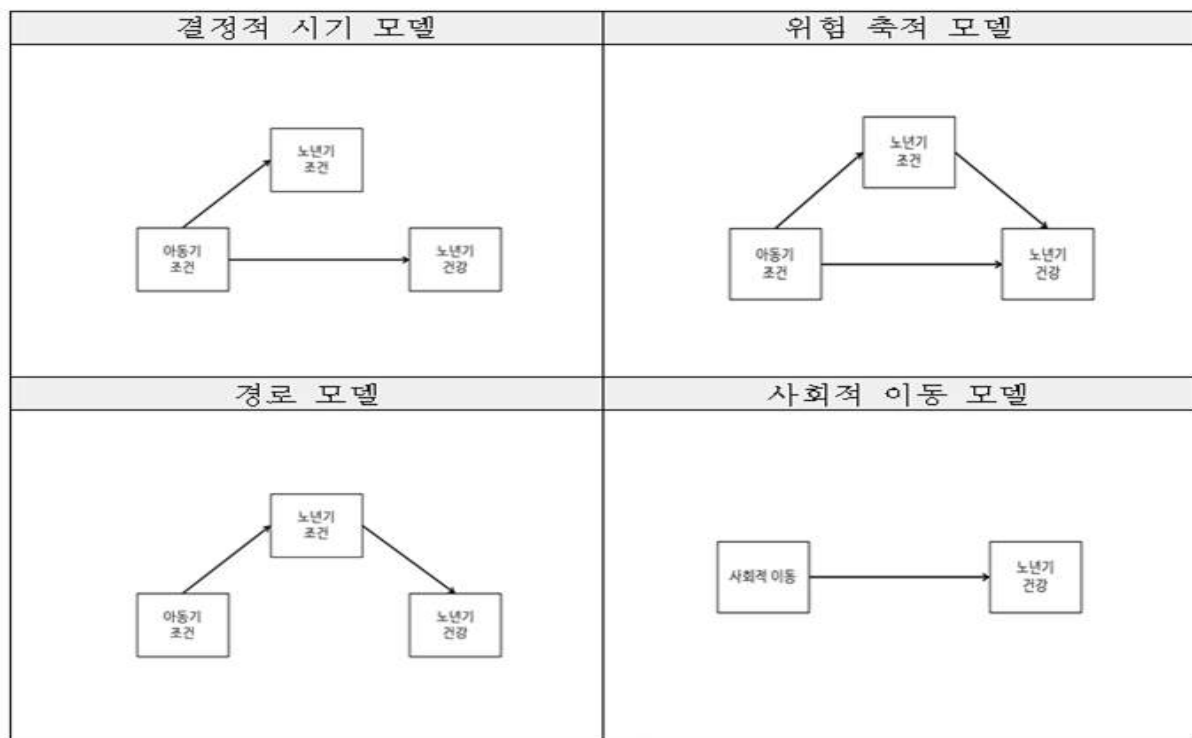
건강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화한 생애주기 건강발달, 즉 LCHD(Life Course Health Development) 접근이 주목받고 있다. LCHD는 건강 발달이 수태부터 사망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며, 이전 경험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한다고 본다. 특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노출의 시기(timing)를 중시하며, 짧은 기간의 노출도 장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LCHD에서 생애 초기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이후 건강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접근 모델로는 결정적 시기 모델(critical period model), 위험 축적 모델(accumulation of risks model), 경로 모델(pathway model), 사회적 이동 모델(social mobility model) 등이 있다(Stringhini et al. 2011). 먼저, 결정적 시기 모델은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이후 생애의 건강에 지속적이고 비가역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Ben-Shlomo and Kuh 2002).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초기 환경이 이후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건강 수준을 결정짓는다는 관점이다. 반면, 위험 축적 모델은 생애의 여러 단계에서 경험한 불리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누적되어 건강 저하를 초래한다고 본다(Diprete and Eirich 2006). 이에 따르면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개인보다, 전 생애에

결쳐 지속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 개인이 건강 악화에 더 취약하다(Kahn and Pearlin 2006). 경로 모델은 초기의 사회경제적 경험이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형성하고, 이를 매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Ben-Shlomo and Kuh 2002). 이 모델은 초기 조건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이후의 사회경제적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위험 축적 모델과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이동 모델은 생애 초기 조건의 영향이 이후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에 따라 완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Ferraro and Shippee 2009). 즉, 상향 이동을 경험한 개인은 생애 전반에 걸쳐 불리한 조건에 머문 개인보다 노년기에 더 나은 건강 상태를 보이며, 반대로 하향 이동은 초기의 유리한 조건을 상쇄할 수 있다(Langenberg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모델들 중 어떤 모델이 분석 결과상 생애 초기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노년기 건강 간 메커니즘을 잘 설명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중 생애 초기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이후의 사회경제적 상황 간 관계 자체를 하나의 설명변수로 보는 사회적 이동 모델은 연구설계 상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세 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각 모델의 변수 간 구체적인 경로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생애주기 관점 모델



주: 본 자료는 Stringhini et al.(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2. 노년기 건강 궤적

건강은 단기간에 형성되기보다 긴 잠재기(latency)를 거치며, 그 과정에서 생물학적·사회적·행동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해 생애 전반의 독특한 궤적을 형성한다(Lynch and Davey Smith 2005). 이에 따라 건강을 한 시점의 현상(snapshot)보다 개인의 삶 속에서 누적·변화하는 역동적 결과로 이해하려는 관점이 확산되었고(서제희 외 2010), 건강 궤적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Asakawa et al. 2012).

노년기 건강 궤적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시간이 지날수록 주관적 건강 만족도와 일상 기능이 감소하고, 만성질환 수가 증가한다고 보고한다(김진영 2008; Shaw and Krause 2002). 그러나 변화의 양상과 속도는 노인 하위집단의 특성에 따라 달랐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연구에서는 후기 노인(old-old) 집단의 건강이 초기 노인(young-old)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경향이 보고되었으나(이현숙·염영희 2017; Bamba et al. 2010; García-Esquinas et al. 2019), 반대로 후기 노인일수록 악화 속도가 둔화된다는 결과도 있다(Sargent-Cox et al. 2010).

연령 외에도 농촌·도시 거주지나 교육수준에 따라 건강 궤적이 다르게 나타났다. 염지혜(2013)는 두 지역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이 저하되었지만, 농촌 노인의 저하 속도가 더 빠르다고 보고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 집단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는 반면, 저학력 집단은 빠른 건강 악화를 보여 궤적이 분기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김진영 2008; Willson et al. 2007). 반면, 노년기에 진입하면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다(House et al. 1990). 이러한 차이는 연구마다 사용한 자료와 분석 방법의 차이 또는 성인 초기에 결정된 교육수준이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시간적 간격의 영향으로 해석된다(Leopold and Engelhardt 2013).

3. 사회경제적 상황과 주관적 건강

(1)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과 주관적 건강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의료적 차원, 기능적 차원, 자기평가적 차원이 있다. 의료적 차원은 건강을 질병 유무에 근거를 두고 판단하는 방법이고, 기능적 차원은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자기평가적 차원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건강 상태이다. 의료적 차원과 기능적 차원은 의학적으로 그리고 기능 수행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별개로 겪는 건강상의 어려움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자기평가적 차원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개인의 건강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주관적 건강 상태는 사망률, 신체적

불편, 만성질환 등을 예측할 때 비교적 높은 타당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George 2001). 또한, 주관적 건강은 실제 신체적 건강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주관적 건강 상태는 노년기 신체 건강을 살펴보는 데 적절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건강 증진 행동의 실천 자원 확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노인의 건강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되어 왔다(Grundy and Sloggett 2003). 대부분의 연구는 양호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Ross and Wu 1996).

성인기 및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교육수준, 직업 지위, 소득이 주로 사용된다. 다만 노인의 경우 은퇴자 비율이 높고, 생계형 노동이 중심이기 때문에 직업 지위는 대표 변수로 활용되기 어렵다(김수영 외 2016). 일부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고려하였으며, 경제활동이 신체 활력과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필동·이정화 2016). 그러나 이는 건강한 노인이 경제활동을 지속한다는 역인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수준은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고, 비교적 생애 초기에 결정되어 건강 위기 사건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자주 활용된다(Braveman et al. 2005). 또한 이후 소득과 직업 지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많은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된다(Meeks and Murrell 2001; Ross and Wu 1996). 다만 교육은 생애 초기 요인으로,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시간적 간극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Backlund et al. 1996).

소득수준 역시 노년기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수급자 집단이 비수급자보다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이정숙·이인수 2005), 주거 빈곤 및 낮은 가구소득 집단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박정민 외 2015; 남연희·남지란 2011). 소득 분위별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기대수명이 약 6년, 건강수명이 약 11년 길었다. 또한 소득이 높은 노인일수록 건강 저하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illson et al. 2007).

(2)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과 주관적 건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아동기 사회경제적 조건이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본격화되었다(Cheval et al. 2019; Haas 2008; Zilioli et al. 2022). 아동기 사회경제적 조건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지위, 유년기 빈곤 여부, 거주지 특성, 학업 곤란 경험 등 다양한 지표가 사용되어 왔다(김진현·한지나 2014; 서제희 외 2010; 이현주·정은희 2016; Haas 2008).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이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은, 유년기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심장질환·뇌졸중·신체기능 저하·주관적 건강 악화·사망률 증가와 연관된다고 보고했다

(Moody-Ayers et al. 2007). 또한 아동기 조건은 특정 시점의 건강뿐 아니라 건강 변화 속도에도 영향을 미쳤다(Haas 2008). 그러나 아동기 사회경제적 환경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Wagmiller et al. 2006), 생애 전반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아동기 조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노년기 건강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Shuey and Willson 2014), 영향 경로의 직접성과 간접성에 대해서는 아직 일관된 결론이 없다.

일부 연구들은 아동기의 빈곤 경험이 현재의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노년기 건강에 독립적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현재의 경제상황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준다고 보고했다(Arpino et al. 2018; McDonough and Berglund 2003). 이러한 결과는 생애 전반의 불리한 경험이 누적되어 건강에 복합적 영향을 미친다는 위험 축적 모델의 관점과 일치한다. 반면, 다른 연구들은 아동기 사회경제적 조건이 성인기·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했다(Galobardes et al. 2004; Pudrovska and Anikputa 2014). 즉, 생애 초기 조건의 효과는 이후 사회적 이동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아동기 빈곤에서 성인기 상향 이동을 경험한 집단은 부정적 영향이 완화된 반면(Luo and Waite 2005), 불리한 조건이 지속된 집단은 건강 저하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다(Shuey and Willson 2014).

한편 국내 연구는 이러한 생애 단계 간 경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많지 않다(강민아 외 2010; 김민혜·최은진 2019). 대부분은 아동기 단일 시점의 조건만을 다루어 이후 단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건강 간의 구체적 경로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하는 한국복지패널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동일 가구와 가구원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완료한 가구 중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층화이중추출법을 통해 선정되었다. 원표본은 약 7,000가구(저소득가구 3,500, 일반가구 3,500)이며,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감소함으로 인해 조사의 엄밀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7차년도 조사시점부터 약 1,800 가구를 추가로 패널조사에 투입하였다. 또한, 이 패널데이터는 층화이중추출법 기반으로 표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과대표집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복지패널은 크게 가구용 데이터, 가구원용 데이터, 부가조사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가구용 데이터와

가구원용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2018년 조사 기준 만 60세 이상의 노인 5,834명으로 선정하였다.

2. 변수 구성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관적 건강 상태이다. 해당 문항은 5점 척도로, 본래 각 문항은 ‘아주 건강하다’를 1점으로, ‘건강이 아주 안 좋다’를 5점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연구 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변수를 역코딩한다. 최종적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는 ‘건강이 아주 안 좋다’를 1점으로 ‘아주 건강하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로 정리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도 자료를 사용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종단적 변화를 ‘건강 궤적’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과 현재 사회경제적 상황이다.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친척집 성장 경험’,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학업 중단 경험’, ‘부모 교육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친척집 성장 및 학업 중단 경험은 해당 경험이 없으면 ‘0’, 있으면 ‘1’로 코딩하였다. 부모 교육수준은 부와 모 각각 무학(0)부터 대학원 졸업(7)까지 8단계로 코딩하고, 모름·무응답은 결측 처리하였다.

현재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은 ‘가처분소득’과 ‘최근 경제적 곤란 경험’으로 구성하였다. 가처분소득은 2018년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보정한 후, 정적 편포를 완화하기 위해 자연로그로 변환하였다.¹⁾ 경제적 곤란 경험은 2017년 한 해 동안 겪은 경제적 어려움 10개 항목(예: 주거비·공과금 체납, 식료품 절핍 등)을 합산하여 연속형 변수로 구성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행동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포함하고, 건강행동 요인에는 흡연 여부와 1년간 평균 음주량을 사용하였다. 모든 변수는 2018년 응답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성별은 남성 ‘0’, 여성 ‘1’로, 연령은 출생연도로 투입하였다. 교육수준은 미취학(0)부터 박사 졸업(8)까지 9단계로 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형성 시점과 노년기 간 시간적 간극이 크다는 점(Backlund et al. 1996)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1) 가구원소득 = 가구소득 / $\sqrt{\text{가구원수}}$

건강행동 변수 중 흡연 여부는 현재 비흡연 '0', 흡연 '1'로 코딩하였다. 음주량은 '전혀 마시지 않음(0)'부터 '주 4회 이상(4)'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건강행동 변수인 흡연 여부는 현재 흡연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0',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를 '1'로 코딩하였다. 1년간 평균 음주량 변수는 '전혀 마시지 않는다'(0), '월 1회 이하'(1), '월 2~4회'(2), '주 2~3회'(3), '주 4회 이상'(4)로 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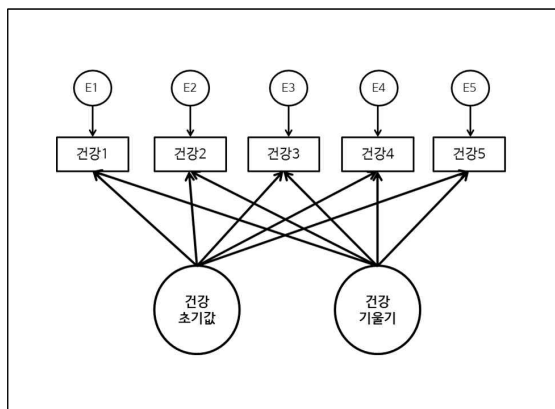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잠재성장모형 분석(latent growth curve modeling)을 수행하여 노년기의 건강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궤적을 형성하는지 확인하고, 생애과정에서 축적된 사회경제적 상황이 이러한 건강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어떤 예측 요인도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부 모형(unconditional model) 분석을 실시하여 시간에 따른 노년기 주관적 건강 상태의 궤적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조건부 모형(conditional model) 분석 단계에서는 아동기와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 변수가 노년기 건강 상태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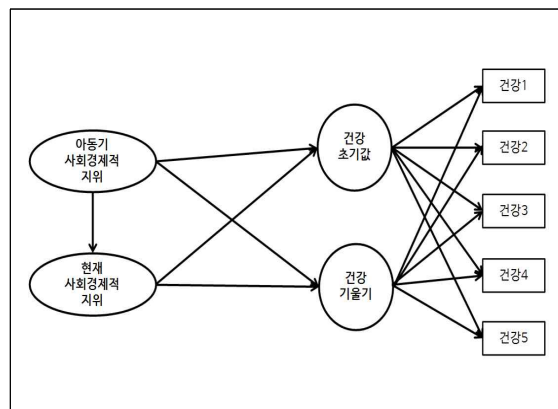
모형 분석 후에는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제곱 값, RMSEA, 증분적합지수인 CFI와 NFI 값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RMSEA는 0.08 미만일 때, CFI와 NFI는 0.9 이상일 때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한다(Hu and Bentler 1998).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추가적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표본의 결측치는 회귀 대체법을 사용해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2], [그림 3]과 같다.

[그림 2] 무조건부 모형



[그림 3] 조건부 모형



IV. 분석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여성(61.0%)이 남성(39.0%)보다 더 많았고, 2018년 기준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74.1세였다. 교육수준은 무학이 3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전문대졸업 이상 집단은 6%가 채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건강행동과 관련 특성을 살펴봤을 때, 흡연을 하지 않고(90.6%),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74.0%) 이들이 다수로, 건강에 유익한 생활습관을 보이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특성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친척집에 성장한 경험이 있는 집단(3.9%)에 비해 없는 집단(96.1%)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집단(28.2%)에 비해 없는 집단(71.8%)이 더 많았다. 부모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무학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고, 특히 어머니 집단은 75% 이상이 무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특성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1번이라도 경제적 곤란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집단(3.6%)에 비해 없는 집단(96.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은 2018년 기준 평균 약 2,832만원이었다. 소득은 정적 편포되어 있기 때문에 중위값을 확인했는데, 중위소득은 약 2,007만원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건강 상태는 매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는데, 첫 조사연도(2018년)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33%가 본인 건강 상태에 대해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답하였는데, 5년 후 가장 최근 조사연도(2022년)에는 이 비율이 36.8%로 증가했다. ‘건강하지 않은 편’에서 ‘아주 안 좋음’까지 포함한 건강 취약군의 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22년 42.0%까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아주 건강하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전체 대상자 중 약 0.6%에 불과했다.

2. 무조건부 모형 분석 결과

노년기 건강 상태의 궤적을 살펴보기 위해 무조건부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봤을 때 카이제곱 값은 166.878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카이제곱 값은 표본 크기가 클 때 값이 크게 나와 영가설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고 모형의 복잡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채구묵 2018).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275	39.0
	여자	3,559	61.0
평균 연령 (2018년 기준)	만 60~64세	944	16.2
	만 65~69세	909	15.6
	만 70~74세	1,036	17.8
	만 75~79세	1,343	23.0
	약 74.1세		
본인의 교육수준	미취학	998	17.1
	무학	2,292	39.3
	초등학교 졸업	1,099	18.8
	중학교 졸업	1,039	17.8
	고등학교 졸업	62	1.1
	전문대학교 졸업	282	4.8
	대학교 졸업 이상	62	1.1
흡연 여부 (2018년 기준)	없음	5,098	90.6
	있음	530	9.4
1년 평균 음주량 (2018년 기준)	전혀 마시지 않음	4,165	74.0
	월 1회 이하	298	5.3
	월 2회	452	8.0
	주 2~3회	355	6.3
	주 4회 이상	358	6.4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 성장 경험	없음	5,549	96.1
	있음	225	3.9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 경험	없음	4,143	71.8
	있음	1,629	28.2
부 교육수준	무학	2,990	53.7
	서당수학	681	12.2
	초등학교 졸업	1,233	22.2
	중학교 졸업	311	5.6
	고등학교 졸업	230	4.1
	전문대학교 졸업	33	0.6
	대학교 졸업 이상	86	1.6
모 교육수준	무학	4,216	75.1
	서당수학	168	3.0
	초등학교 졸업	1,009	18.0
	중학교 졸업	131	2.3
	고등학교 졸업	78	1.4
	전문대학교 졸업	5	0.1
	대학교 졸업 이상	8	0.1
최근 경제적 곤란 경험 (2018년 기준)	없음	5,626	96.4
	있음	208	3.6
가처분소득 (2018년 기준)	평균 2,832만원 중위값 2,007만원		
건강상태 (2018년 기준)	아주 안 좋음	171	2.9
	건강하지 않은 편	1,926	33.0
	보통	1,877	32.2
	건강한 편	1,751	30.0
	아주 건강함	109	1.9

이에 다른 지수들을 살펴봤을 때, 절대적합지수인 RMSEA는 0.043, 증분적합지수인 CFI와 NFI는 각각 0.972, 0.969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무조건부 모형 분석 결과는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건강 상태의 초기값(intercept)은 약 2.9점(5점 만점 기준)으로 나타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건강 상태는 조사연도 첫해부터 5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약 0.05점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초기값과 기울기(slope)의 분산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p<.001$), 개인 간 건강 상태 출발점과 변화 속도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노인집단 내 건강 궤적에서 상당한 개인차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집단 내 기존 건강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초기값과 기울기 간 상관관계, 조사 대상자의 연도별 건강 상태 분산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초기값과 기울기의 상관관계수는 -0.020 으로, 이는 첫 조사연도에서 건강 상태가 양호했던 노인일수록 이후 건강 저하 속도가 더 빠름을 시사한다. 또한, 연도별 건강 상태 분산 값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해가 거듭될수록 노인집단 내에서 건강 수준이 점차 균질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우선적으로 표본 탈락에 따른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조사 첫해에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거나 안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약 30%가 최종 조사 시점에서 이탈하였고, 이는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괜찮다고 응답한 집단과 비교해 높은 표본 탈락률이었다.

한편, 5년의 관찰 기간에서 노인집단의 건강 격차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년기 건강 상태의 초기값과 변화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러한 건강 궤적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조건부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2] 무조건부 모형 분석 결과

구분		Estimate	S.E	C.R	P
고정효과	평균				
	초기값	2.897	0.011	270.594	***
	기울기	-0.046	0.003	-13.697	***
무선효과	분산				
	초기값	0.375	0.013	29.318	***
	기울기	0.011	0.001	8.440	***
공분산(초기값-기울기)		-0.020	0.003	-5.915	***

주: *** $p<0.001$.

3. 조건부 모형 분석 결과

노년기 건강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상황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변수들을 투입한 조건부 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봤을 때 카이제곱 값은 2009.875로 유의확률이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절대적합지수인 RMSEA는 0.065, 증분적합지수인 CFI와 NFI가 각각 0.908, 0.905로 나와 모형의 적합도는 적합한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이 건강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처분소득이 높을수록 ($b=0.189$, $p<.001$), 경제적 곤란 경험의 빈도수가 적을수록($b=-0.124$, $p<.001$) 첫 조사연도에서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 상태의 변화율(기울기)에는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과 건강 궤적 간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모든 아동기 변수는 노년기 건강 초기값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에 성장한 경험과 학업을 중단한 경험은 건강 기울기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b=-0.038$, $p<.01$; $b=-0.024$, $p<.001$),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기에 사회경제적으로 결핍된 경험이 있는 이들의 건강이 더 빠르게 저하되었다.

아동기와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 간 관계에서,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에서 성장한 경험이 가처분 소득에 미치는 영향,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최근 경제적 곤란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 간 관계가 유의수준 .10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에 성장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험이 더 많았고($b=0.036$, $p<.10$),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노년기 가처분 소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0.136$, $p<.001$). 부모 교육수준 역시 자녀의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노년기 가처분소득이 높았고($b=0.066$, $p<.001$),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험은 적었다($b=-0.008$, $p<.10$). 어머니의 교육수준 역시 가처분소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b=0.046$, $p<.001$),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것으로 나타났다($b=0.015$, $p<.01$).

통제변수와 건강 궤적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성별은 건강 궤적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은 건강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b=0.020$, $p<.001$),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김진영 2008; Shaw and Krause 2002). 본인 교육수준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발점에서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게 나타나 ($b=0.068$, $p<.001$), 건강에 대한 교육수준의 긍정적 기제를 보고한 다른 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 (Meeks and Murrell 2001; Ross and Wu 1996). 건강행동 요인에서는 음주와 흡연 모두 건강 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음주의 경우, 음주 횟수가 많은 집단에서 초기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b=0.097$, $p<.001$), 건강 저하 속도는 더 빠르게 나타났다($b=-0.007$, $p<.01$). 흡연은 건강 상태 초기값과 기울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흡연자 집단이 비흡연자 집단에 비해 초기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았고 ($b=-0.129$, $p<.001$), 흡연자 집단의 건강 저하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b=-0.021$, $p<.05$). 이러한 결과는 건강행동 요인이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이정숙·이인수 2005).

분석 결과,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은 건강 궤적 중 초기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노년기 조건은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이 노년기 건강 초기값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고자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간접효과의 유의 확률이 모두 .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부트스트래핑 검정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정리하면,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이 노년기 건강 기울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은 기울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은 건강 초기값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노년기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노년기 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Galobardes et al. 2004). 이는 건강 궤적의 초기값을 기준으로 경로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 조건부 모형 분석 결과

구분	B	S.E	C.R	P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 → 건강				
가처분 소득 → 건강 초기값	0.189	0.015	12.503	***
가처분 소득 → 건강 기울기	0.007	0.005	1.536	
최근 경제적 곤란 경험 → 건강 초기값	-0.124	0.030	-4.113	***
최근 경제적 곤란 경험 → 건강 기울기	0.006	0.009	0.629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 → 건강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 성장 경험 → 가처분 소득	-0.062	0.042	-1.469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 성장 경험 → 최근 경제적 곤란 경험	0.036	0.021	1.735	+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 경험 → 가처분 소득	-0.136	0.018	-7.371	***

구분	B	S.E	C.R	P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 경험 → 최근 경제적 곤란 경험	0.012	0.009	1.354	
부 교육수준 → 가처분 소득	0.066	0.008	7.939	***
부 교육수준 → 최근 경제적 곤란 경험	-0.008	0.004	-1.864	+
모 교육수준 → 가처분 소득	0.046	0.011	4.073	***
모 교육수준 → 최근 경제적 곤란 경험	0.015	0.006	2.772	**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 →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 성장 경험 → 가처분 소득	-0.062	0.042	-1.469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 성장 경험 → 최근 경제적 곤란 경험	0.036	0.021	1.735	+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 경험 → 가처분 소득	-0.136	0.018	-7.371	***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 경험 → 최근 경제적 곤란 경험	0.012	0.009	1.354	
부 교육수준 → 가처분 소득	0.066	0.008	7.939	***
부 교육수준 → 최근 경제적 곤란 경험	-0.008	0.004	-1.864	+
모 교육수준 → 가처분 소득	0.046	0.011	4.073	***
모 교육수준 → 최근 경제적 곤란 경험	0.015	0.006	2.772	**
통제변수 → 건강				
성별 → 건강 초기값	0.000	0.023	0.004	
성별 → 건강 기울기	0.004	0.007	0.594	
연령 → 건강 초기값	0.020	0.001	17.842	***
연령 → 건강 기울기	0.000	0.000	1.145	
교육수준 → 건강 초기값	0.068	0.009	7.534	***
교육수준 → 건강 기울기	-0.001	0.003	-0.499	
흡연 → 건강 초기값	-0.129	0.033	-3.850	***
흡연 → 건강 기울기	-0.021	0.010	-2.075	*
음주 → 건강 초기값	0.097	0.008	11.729	***
음주 → 건강 기울기	-0.007	0.003	-2.848	**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4]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구분	간접효과 계수	S.E
친척집 성장 경험→건강 초기값	-0.016*	0.009
학업중단 경험→건강 초기값	-0.027**	0.005
부 교육수준→건강 초기값	0.014**	0.002
모 교육수준→건강 초기값	0.007**	0.003

주: * $p < 0.05$, ** $p < 0.01$

V. 결론 및 제언

건강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생애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라는 연구적 논의가 확산되면서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이 이후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구명하려는 연구들이 전개되고 있다(Cheval et al. 2019; Hass 2008; Zilioli et al. 2022). 그러나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상황 역시 생애과정 속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 역시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생애 초기 조건만을 강조하거나 특정 시점의 건강 상태만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영향요인과 건강의 변화 양상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Shuey and Willson 2014).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애과정에서 아동기와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노년기 건강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첫째, 노년기 건강 수준은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변화 속도에는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초기 건강상태가 좋았던 노인일수록 이후 건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건강 격차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수렴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정책의 보호 효과나 생물학적 노화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House et al. 1990), 이러한 해석을 내리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사회적 지출 수준이 낮고 노인 인구의 빈곤율도 높기 때문에 사회정책의 완충 효과로 인해 노년기 건강 격차가 감소된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다(OECD 2001). 또한, 이후 기술할 조건부 모형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경제적 요인이 노년기 건강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생물학적 요인이 사회경제적 요인을 압도한다고

해석하기도 비약적인 측면이 있다. 이에 그보다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건강 격차 감소 추세는 기존에 건강하지 않은 조사 대상자들이 중증 질환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패널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나, 건강 상태가 이미 낮은 수준에 도달해 추가적인 건강 저하가 미미하게 보이는 바닥 효과(floor effect)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조사연도 첫해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집단의 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

둘째, 노년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건강의 초기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처분소득이 높고 경제적 곤란 경험이 적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다. 이는 사회경제적 자원이 노년기 삶의 질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명희 2019; 남연희·남지란 2011; 박정민 외 2015; 이정숙·이인수 2005; Lima-Costa et al. 2005; Zimmer 2008). 반면, 건강의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아, 노년기에 진입한 이후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건강의 변화 속도보다는 현상 유지나 완화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은 노년기 건강 초기값에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고, 건강 변화율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가능한 한 가지 해석으로는 건강에 대한 사회경제적 상황의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 효과를 통해 작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관찰된 5년의 기간은 그 영향을 포착하기에 다소 짧았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고령이 되면서 의료급여나 의료 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적 제도의 지원을 이전보다 큰 폭으로 받게 되면서, 이들의 개인 소득이 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다(Haas 2008; Smith 2005).

마지막으로, 노년기와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 간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하위변수들 간 관계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아동기 상황이 노년기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노년기 경제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예외적인 결과는 조사대상자 어머니 중 다수가 무학이라는 점에서 측정의 한계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또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의 교육 수준에 비해 일관되지 않다는 결과가 보고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Li et al. 2020).

위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한 결과,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과 노년기 건강 초기값의 관계를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애주기 관점 모델 중 경로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들과 일치한다(Galobardes et al. 2004; Pudrovsk and Anikputa 2014).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건강에 있어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 못지않게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아동기 환경이 열악했더라도 노년기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다면 건강에 대한 아동기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술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생애주기적 요인을 고려한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은 이후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개인의 건강에 간접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기에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례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부모의 돌봄이 어려운 가정과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놓인 아동에 대해서는 보다 안정된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드림스타트업 사업에서는 현재 대부분 초등학생 이후 생애 단계에 대해서는 체계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 유사한 서비스 대부분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장기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여유진 2018). 따라서 아동기부터 생애 전환 단계마다 적절한 보호와 자원 제공이 연계되는 생애주기적 관점의 통합적 지원 체계가 더욱 정교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미 아동기부터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 노년기 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아동기 사회경제적 자원과 노년기 건강 간의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아동기의 불리한 조건이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도록 노년기 사회경제적 자원을 보완하는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생애주기 관련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아동기 초기 개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물론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이 건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초기 개입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러한 접근은 자칫 노년기 개입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도 있다. 특히 본 연구처럼 경로 모델(pathway model)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노년기의 근위적 위험요인(proximal risk factor)에 대한 개입은 아동기 개입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장숙량 2013). 따라서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 노인의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진구 2008). 이로 인해 빈곤 노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노인집단 내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빈곤 노인에 대한 의료급여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거나, 대체 제도를 통한 관련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노년기 건강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편적인 의료 접근성을 달성한 국가들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Avendano et al. 2009). 예컨대,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은 기본적인 영양 섭취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고(이승재 외 2015), 본 연구에서도 식생활 관련 경제적 곤란 경험이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 지원뿐 아니라 식생활 개선 등 열악한 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을 보완해줄 수 있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생애주기적 요인인 아동기와 노년기 변수를 모두 분석과정에 투입하였으나, 그 중간 단계인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2차 자료의 한계로 인해 확인할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인기 변수를 포함하여 노년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애 전반의 경로를 보다 정교하게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5년간의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의 건강 궤적을 분석하였으나, 조사 기간 동안 사망 등의 사유로 표본에서 탈락하는 케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지만, 결과 해석 시에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을 하나의 동질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건강 궤적과 그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집단을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하위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접근도 필요해 보인다. 넷째, 노년기 건강 기울기와 아동기 사회경제적 상황 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석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간주하되, 향후 다양한 이론적 틀과 방법론을 통해 추가적인 해석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민아·조성일·강영호·하은희·천희란·장숙량. 2010. 「한국 노인의 당뇨병과 소년기 굶주림 경험」.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7(1): 81-89.
- 김동배·유병선·민정선. 2011. 「노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건강 수준 차이의 요인 분석」. 사회복지연구 42(3): 267-290.
- 김명희. 2019.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9(12): 30-43.
- 김민혜·최은진. 2019. 「아동기 사회경제적 환경이 중고령자의 당뇨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42(1): 89-113.
- 김수영·허성희·장수지. 2018.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1): 88-124.
- 김진구. 2008. 「노인의 의료이용과 영향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39: 273-302.
- 김진영. 2008. 「잠재성장곡선 모형을 이용한 교육과 건강의 궤적 간 관계 분석」. 한국사회학 42(2): 164-190.
- 김진현·한지나. 2014. 「축적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노년기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 축적된 불평등 이론 (Cumulative disadvantage theory)의 검증」. 노인복지연구 65: 207-230.
- 남연희·남지란. 2011. 「노인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4): 145-162.
- 문필동·이정화. 2016. 「장애노인의 경제활동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6(3): 149-175.
- 박정민·허용창·오욱찬·윤수경. 2015. 「주거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7(2): 137-159.
- 서제희·김호·신영전. 2010. 「아동기 및 성인기 사회경제적 위치와 세대 간 사회이동이 성인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예방의학회지 43(2): 138-150.
- 여유진. 2018.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8(5): 25-39.
- 염지혜. 2013.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궤적에 대한 비교 연구: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농촌사회 23(1): 193-239.
- 유재남. 2015. 「중고령자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의 종단분석」. 노인복지연구 68: 331-356.
- 이석구·전소연. 2005.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수준, 건강행태와의 관계」. 예방의학회지 38(2):

154-162.

- 이승재·이경원·오지은·조미숙. 2015. 「한국 노인에서 식품불안정 (food insecurity) 이 건강상태 및 식이섭취상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 (2010) 자료를 이용하여」.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48(6): 519-529.
- 이정숙·이인수. 2005. 「노년기 건강관리 행동과 사회 경제 요인이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7: 231-253.
- 이태화·고일선·이경자·강경화. 2005. 「빈곤층 노인의 건강상태, 건강인식 및 건강증진행위 실천 간의 관계: 보건소 방문간호 대상자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35(2): 252-261.
- 이현숙·염영희. 2017.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건강성과의 발달궤적 및 연령차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7(2): 287-324.
- 이현주·정은희. 2016. 「생애과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년기 건강: 초기 성인기 및 중년기 사회경제적 지위의 다중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36(3): 53-84.
- 이희영·정효선·한진옥·김자영·박현춘·서수인·신소을·이예지·정수경·최민정·강정은. 2019. 「경기도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젝트」.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장숙량. 2013. 「노년기 건강불평등의 생애과정 접근」. *Annals of geriatric medicine and research* 17: 111-117.
- 장아현. 2022. 「노인 최장기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련성: 2020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구묵. 2018. 『SPSS와 AMOS를 이용한 고급통계학』. 파주: 양서원.
- 천희란·김정석. 2016. 「노년기 남녀의 주관적 건강 수준에 대한 생애과정적 고찰」. *한국인구학* 39(3): 63-81.
- 통계청. 2023. 『2023 생명표』. 대전: 통계청.

- Arpino, B., Gumà, J. and Julià, A. 2018. "Early-life conditions and health at older ages: The mediating role of educational attainment, family and employment trajectories." *PloS one* 13(4): e0195320.
- Asakawa, K., Senthilselvan, A., Feeny, D., Johnson, J. and Rolfson, D. 2012. "Trajectorie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differ by age among adults: Results from an eight-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Health Economics* 31(1): 207-218.
- Avendano, M., Glymour, M. M., Banks, J. and Mackenbach, J. P. 2009. "Health disadvantage

- in US adults aged 50 to 74 years: a comparison of the health of rich and poor Americans with that of European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9(3): 540-548.
- Backlund, E., Sorlie, P. D. and Johnson, N. J. 1996. “The shap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Mortality Study.” *Annals of epidemiology* 6(1): 12-20.
- Bambra, C., Netuveli, G. and Eikemo, T. A. 2010. “Welfare state regime life courses: the development of western European welfare state regimes and age-related patterns of educational inequalities in self-reported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40(3): 399-420.
- Benshlomo, Y. and Kuh, D. 2002. “A life course approach to chronic disease epidemiology: Conceptual models, empirical challenges an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1: 285-293.
- Braveman, P. A., Cubbin, C., Egerter, S., Chideya, S., Marchi, K. S., Metzler, M. and Posner, S. 2005. “Socioeconomic status in health research: one size does not fit all.” *Jama* 294(22): 2879-2888.
- Cheval, B., Sieber, S., Guessous, I., Orsholits, D., Courvoisier, D. C., Kliegel, M., ... and Boissongtier, M. 2018. “Effect of early-and adult-life socioeconomic circumstances on physical inactivity.”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50(3): 476-485.
- Dannefer, D. 2003. “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and the life course: Cross-fertilizing age and social science theor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8(6): S327-S337.
- DiPrete, T. A. and Eirich, G. M. 2006. “Cumulative advantage as a mechanism for inequality: A review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develop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2: 271-297.
- Elder GH, Johnson MK and Crosnoe R. 2003.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life course theory”. In *Mortimer JT, Shanahan MJ, editors: Handbook of the life course*.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Ferraro, K. F. and Shippee, T. P. 2009. “Aging and cumulative inequality: How does inequality get under the skin?.” *The Gerontologist* 49(3): 333-343.
- Galobardes, B., Lynch, J. W. and Davey Smith, G. 2004. “Childhood socio-economic circum-

- stances and cause-specific mortality in adulthood: Systematic review and interpretation". *Epidemiologic Reviews* 26: 7-21.
- García-Esquinas, E., Ortolá, R., Prina, M., Stefler, D., Rodríguez-Artalejo, F. and Pastor-Barriuso, R. 2019. "Trajectories of accumulation of health deficits in older adults: are there variations according to health domain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20(6): 710-717.
- George, L. K. 2001. "The social psychology of health."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5: 217-35.
- Grundy, E. and Sloggett, A. 2003. "Health inequalities in the older population: the role of personal capital, social resources and socio-economic circumstances." *Social science & medicine* 56(5): 935-947.
- Haas, S. 2008. "Trajectories of functional health: The 'long arm' of childhood health and socioeconomic factors." *Social science & medicine* 66(4): 849-861.
- Halfon, N. and Forrest, C. B. 2018. "The emerging theoretical framework of life course health development". *Handbook of life course health development*: 19-43.
- House, J. S., Kessler, R. C. and Herzog, A. R. 1990. "Age,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The Milbank Quarterly* 68(3): 383-411.
- Hu, L. and Bentler, P. M.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al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 425-453.
- Kahn, J. R. and Pearlin, L. I. 2006. "Financial strain over the life course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7: 17-31.
- Langenberg, C., Hardy, R., Kuh, D., Brunner, E. and Wadsworth, M. 2003. "Central and total obesity in middle aged men and women in relation to lifetime socioeconomic status: Evidence from a national birth cohort."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7: 816-822.
- Leopold, L. and Engelhardt, H. 2013. "Education and physical health trajectories in old age. Evidence from the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SHAR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8: 23-31.
- Li, Y., Xue, Q. L., Odden, M. C., Chen, X. and Wu, C. 2020. "Linking early life risk factors to frailty in old age: evidence from the China Health and Retirement Longitudinal

- Study.” *Age and ageing* 49(2): 208-217.
- Lima-Costa, M. F., Firmo, J. O. A. and Uchôa, E. 2005. “Differences in self-rated health among older adults according to socioeconomic circumstances: the Bambuí Health and Aging Study.” *Cadernos de Saúde Pública* 21: 830-839.
- Luo, Y. and Waite, L. J. 2005. “The impact of childhood and adult SES on physical, mental, and cognitive well-being in later lif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0(2): S93-S101.
- Lynch, J. and Davey Smith, G. 2005. “A life course approach to chronic disease epidemiology.”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26: 1-35.
- McDonough, P. and Berglund, P. 2003. “Histories of poverty and self-rated health trajectori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8-214.
- Meeks, S. and Murrell, S. A. 2001. “Contribution of education to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mediated by negative affect.”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3(1): 92-119.
- Moody-Ayers, S., Lindquist, K., Sen, S. and Covinsky, K. E. 2007. “Childhood social and economic well-being and health in older ag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66(9): 1059-1067.
- OECD. 2001. “OECD Health Data 2001: Comparative analysis of 30 countries (1st ed).” Paris: OECD.
- Pudrovska, T. and Anikputa, B. 2014. “Early-life socioeconomic status and mortality in later life: An integration of four life-course mechanisms.”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9(3): 451-460.
- Ross, C. E. and Wu, C. L. 1996. Education, age, and the cumulative advantage in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04-120.
- Sargent-Cox, K. A., Anstey, K. J. and Luszcz, M. A. 2010. “Patterns of longitudinal change in older adults’ self-rated health: The effect of the point of reference.” *Health Psychology* 29(2): 143-152
- Shaw, B. A. and Krause, N. 2002. “The impact of salient role stress on trajectories of health in late life among survivors of a seven-year panel study: Analyses of individual growth curv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5(2): 97-116.
- Shuey, K. M. and Willson, A. E. 2014. “Economic hardship in childhood and adult health

- trajectories: An alternative approach to investigating life-course processe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22: 49-61.
- Smith, G. D., Hart, C., Blane, D., Gillis, C. and Hawthorne, V. 1997. "Lifetime socioeconomic position and mortality: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Bmj* 314(7080): 547.
- Stringhini, S., Dugravot, A., Kivimaki, M., Shipley, M., Zins, M., Goldberg, M., ... Singh-Manoux, A. 2011. "Do different measures of early life socioeconomic circumstances predict adult mortality? Evidence from the British Whitehall II and French GAZEL studie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5: 1097-1103.
- Wagmiller Jr, R. L., Lennon, M. C., Kuang, L., Alberti, P. M. and Aber, J. L. 2006. "The dynamics of 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ren's life chan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5): 847-866.
- Willson, A. E. Shuey, K. M. and Elder, G. H., Jr. 2007. "Cumulative advantage processes as mechanisms of inequality in life course healt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2: 1886-1924.
- Yi, Z., Gu, D. and Land, K. C. 2007. "The association of childhood socioeconomic conditions with healthy longevity at the oldest-old ages in China." *Demography* 44(3): 497-518.
- Zilioli, S., Gómez, J. M., Jiang, Y. and Rodriguez-Stanley, J. 2022. "Childhood Socioeconomic Status and Cardiometabolic Health: A Test of the John Henryism Hypothesis in African American Older Adul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A* 77(2): 56-64.
- Zimmer, Z. and Kwong, J. 2004.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in rural and urban China."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6(1): 44-70.

지역 가치 제고를 위한 대학의 역할: 지역별 RISE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이수연 인천테크노파크 RISE센터 과장(E-mail: yisuyeon@gmail.com)

국문초록

본 연구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대학-지역 협력을 통해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지역대학이 다양한 지역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있어 능동적 행위자로 기능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지역의 RISE 기본계획에 제시된 추진전략을 분석하여, 대학-지역 협력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RISE 참여 지역들은 자기 지역의 현안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역 특화형 사업 기획·실행을 통해 지역 가치 제고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학은 기존에 해결되지 못한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행위자로서 기능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국가 단위의 발전전략 및 정책 변화와 지역 단위 실행전략 간의 연계 메커니즘까지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는 국가 정책 방향과 지역 실행전략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RISE 사업의 장기적 함의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지역가치, 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대학-지역 협력, 지역발전

The Role of Universities in Enhancing Regional Value: An Analysis of Regional RISE Master Plans

Lee, Suyeon

Manager, RISE Center, Incheon Technopark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initiative enhances regional value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local universities play an active role in addressing diverse regional needs and responding to local challenges. It reviews RISE implementation strategies presented in the basic plans of 17 regions across Korea, focusing on approaches to addressing regional issues and promoting social development through university–region cooperation. By analyzing these regional strategie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RISE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creating regional value beyond the conventional goals of region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regions participating in the RISE initiative demonstrat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ir local challenges and seek to enhance their regional value through region–specific projec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Moreover, universities can play a leading role in addressing unresolved regional issues and supporting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Despite these contributions, this study does not fully consider the broade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or regional response mechanisms associated with evolving policy frameworks. Future research should examine the interactions between national policy directions and regional implementation strategies to better understand the long-term implications of the RISE initiatives.

Keywords : regional value, universities,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university–region collaboration, regional development

I. 서론

1. 연구배경

대한민국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학의 목적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대한민국 고등교육법 제28조). 이처럼 대학은 지적 자원을 보유한 고등 교육 기관으로, 교육과 연구개발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지식을 확산시키는 공적 역할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역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주도적 위치에 있다. 대학은 지역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인재 육성, 학문의 발전,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의 진보를 만들어내며 학문의 질적 성장 및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대학은 지역의 산업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요 행위자이자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 주체이기도 하다.

그간 대학은 인재 육성-기술 개발-산업 발전이라는 구조의 주요 행위자로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 등으로 대표되는 대학의 역할은 경제·산업적 관점에서 중요시되어왔으며,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역시 이러한 기조에서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이에 비해 대학의 지역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이는 인재 육성과 학문적 성취 등, 지역 산업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대학이 제공하는 역할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은 이제 역할의 재정의와 이에 따른 확장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과 대학이 맞닥뜨리게 된 공통 위기에서 기인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산업 경쟁력 쇠퇴에 따른 지역 위기가 자연스럽게 대학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대학은 이제 이러한 지역 위기에 지역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위기 해결의 시작은 지역이다. 대학은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대학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존 대학의 역할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 공급과 기술혁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의 혁신 주체로서 지역의 문제발굴과 해결, 나아가 지역 가치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역할이 재정의된 것이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을 추동한다는 국가 발전 구조의 원류를 볼 때, 지역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정부 역시 대학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대학을 키우며 지역과 대학이 공동 발전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 성장의 핵심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교육부 2025). 중앙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난제 해결에 있어 지역과 대학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공존하며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대학이 직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구조화된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 인·물적 자원과 촘촘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지역의 주요 행위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학이 지역에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대학과 지역의 새로운 공생을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와 깊은 관련이 있다. 연구자는 지역과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을 넘어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지역사회 지속 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모델로써 RISE가 가지는 의미를 통해 대학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RISE 기본계획을 수집하여 대학과 지역이 구상한 지역문제 및 현안 해결전략 등을 검토하고 RISE체계를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 가치 제고에 있어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 RISE를 추진 중인 충남, 세종, 울산,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남, 충북, 제주, 전북,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인천 등 지역에서 대학들이 지역 현안 해결- 원도심 활성화, 스마트시티, 지역개발 등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 기획을 통해 지역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새로운 사회적 책무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중앙과 지역이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의 현안 해결과 미래 비전 설계에 대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학의 참여를 통해 대학이 지역 산업 성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가치와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를 기반으로 한다.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는 참여정부 시절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념으로 소개되었으며, 정책적 성과로는 지역 대학의 인재양성 사업, 혁신도시 건설,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이 있다. 지역혁신체계는 혁신의 공간적 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목표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학습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그것을 확산시켜 응용,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혁신 역량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데 있다. 즉, 지역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 간의 관계와 지역 내·외부 환경과 조응하여 구축되는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지역혁신체계의 성공 요인은 구성원들 간 소통과 신뢰, 연결망의 공고함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문경희 2021, 67-69).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시작된 지역혁신체계는 정부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며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 일변도의 운영과 예산 투입 과정에서 지역 대학의 역량을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역 참여에 있어 지역과 대학 간 호흡이 부족했기에 지역과 대학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구상이 미진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개선을 거듭해 온 지역혁신체계는 RISE에 이르러 지역혁신의 관점에서 대학의 사회 기여에 대한 역할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앙 역시 중앙이 아닌 지역과 대학의 관계 재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RISE의 구조와 철학이 대학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이를 문헌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대학의 사회적 가치 발굴과 책무에 대해 분석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기존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의가 어디까지 연구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학과 지역의 공동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추진 중인 RISE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떠한 측면에서 RISE가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는 토대가 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과는 달리 RISE는 특정 분야에 집중된 사업이 아닌 대학과 지역의 자율성을 전제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새로운 지향점을 찾는 일종의 체계로, 이 체계에 의해 지역과 대학은 지역의 특성과 대학의 특·장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에서 작성된 전국 17개 지역의 RISE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지역별로 대학을 통해 지역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지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학의 네트워크와 역할이 더욱 활발히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3. 선행 연구

우선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대학의 전통적인 역할인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지식의 축적 및 확산을 넘어 대학이 지역과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분석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김현영(2025, 54-57)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강조하며 대학은 지식 생산과 전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사회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학협력(地學協力)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지학협력은 대학의 자원을 지역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 문제 발굴과 해결에 대학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모델이며,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협업 주체 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학이 조정자(Facilitator) 역할을 해야 하며, 장기적 지역 전략과 연계된 지역 사업을 통해 사회에 대한 기여도 제고와 지역 공동체의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혜선 외(2025,

63-65)는 일본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본 돗토리현(鳥取県) 지역 대학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돗토리현은 저출산, 고령화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돗토리 간호대학(鳥取看護大学), 돗토리 단기대학(鳥取短期大学), 돗토리현(鳥取県), 쿠라요시시(倉吉市) 등 지자체와 고등교육기관, 지역 내 경제·의료·복지 단체를 연결하여 돗토리 간호대학-돗토리 단기대학과 지역의 발전을 추진하는 모임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교원·학생·지역 시민이 참여하는 ‘거리의 보건실’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 측정이나 개별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출전형’ 지역 보건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대학 커리큘럼에 정식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수진들과 함께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참여형, 실습형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역 대학 학생 및 교수진들이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지역문제를 참여형으로 해결하는 지역의 플랫폼으로 성장하며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김창환(2020, 26)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USR)에 대한 원류를 연구하였다. 김창환은 대학은 모든 국가의 중요한 기관이자 인류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대학, 기업, 정부 및 시민 사회 간의 협력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과 공존이 필요한 시기에 대학은 사회가 보유한 자원이자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주체이기 때문에, 대학의 역량을 교육과 연구에서 교육과 연구, 사회 공헌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미(2021, 3054)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이며, 여기서 사회적 가치는 경제, 사회 환경 등 분야를 넘어 미래 세대를 포함한 공동체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진형·안정선(2024, 296-299)은 대학은 지역사회의 이슈나 사안들을 경청해야 하며, 지역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동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의 난제와 요구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통해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해야 하며, 대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사회구성원을 포용하고 공동체의 합의와 연대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199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의 사회 공헌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학 리더십의 표현이자 대학에 적용되는 윤리와 책임, 지역 협력과 관련이 있다. 1990년 탈루와르 선언(Talloires Declaration: University President for a Sustainable Future), 1994년 코페르니쿠스 헌장(Copernicus- The University Char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98년 UNESCO 세계고등교육회의(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등을 거치며 대학은 교육과 인재 양성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환경, 사회, 불평등, 빈곤, 인류의 미래 등 사회적 이슈에 있어 대학의 기능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보이어(Boyer)는 1996년에 지역사회와의 쌍방향 파트너십에

기반한 소통 방식에 파생된 지역협력 대학(Engaged University)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대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역협력의 학문적 실천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창환 2020, 32-35).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다수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층위에 접근하여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제고해야 한다는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상기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대학이 가지는 역할을 재정 의하면서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에 있어 RISE가 대학의 방향을 추동할 수 있음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RISE의 비전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넘어 대학이 지역사회에 내재된 문제의 해결자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대학이 장기간 축적한 지식과 역량, 자산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학이 지역의 지속 성장과 발전에 지역 대학-지역 주민-기업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II. RISE 체계 검토

1. 지역혁신체계로서의 RISE

국가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1995년 교육개혁 이후 시작된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질적·양적 성장을 견인해 왔다. 이후 정권의 변천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고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참여정부 시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며 지방대학 발전 및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되기 시작하였고, 지역과 지역 대학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정책과 대학 정책이 연계되며 지역 특성화 전략을 통해 대학 재정지원이 확대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대학의 자율 혁신 지원과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연계 협력 전략을 고도화하고자 하였다.

참여정부 시절 소개되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으로 활용된 지역혁신체계는 정부에 따라 변화하며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부처 간 분절적 사업 추진과 중앙정부 중심 운영, 형식적인 자산화

협의체 네트워크 구성으로 인해 개편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2019년에 이르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의 주도적 참여를 문제 개선책으로 제시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과 중앙-지방 간 교류 확대, 지역 대학을 활용한 지역-대학 혁신모델 개발을 개선안으로 수립하였다. 특히 대학의 역할에 주목하여 대학을 지역혁신체계의 핵심 주체로 상정하고, 교육과 연구개발, 지산학 중심을 넘어 대학이 지식의 확산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문경희 2021, 70-73).

이처럼 대학과 지역은 별개의 사업 추진 대상이었으나 정책 수립의 원류에 있어서 깊이 연계되어 있다. 다만 복잡해지는 지역의 내·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역 생존 위기에 있어 지역과 대학의 관계 재설정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인한 지역 중심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진화는 경제성장 둔화, 지역산업 저발전, 지역 인구감소 및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지역과 지역 대학의 입지가 위태로운 지금의 현실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지역 소멸, 지역 위기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혁신 정책의 주체로 대학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202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RISE를 추진하고 있다. RISE는 지역 대학의 책임과 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으며, RISE가 기존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 혁신 주체 간 협력을 강조하는 체계(System)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은 RISE가 지역혁신체계(RIS)의 명맥을 잇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과 대학의 공동 발전을 위해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인재 육성, 혁신 역량 제고, 정주 인프라 개선 등을 목표로 지역발전을 위한 고유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지역 활력 회복의 출발점을 대학으로 보고,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모델을 그리고 있다.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기치로 이재명 정부 공약 중 하나인 지역혁신·성장의 중심의 RISE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추동하겠다는 전략이다. 즉, RISE 체계는 지방분권식, 상향식 구조를 중심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 통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혁신과 연계한 사업체계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는 RISE의 4대 성과 목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둘째, 지·산·학·연 협력 셋째, 혁신적 직업·평생교육 넷째, 지역 현안 해결이 그것이다(교육부 2025). 이처럼 RISE의 성과 목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기업과의 성장 및 지역 연구역량 제고, 지역 주민 역량 강화, 지역 난제 해결 등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대학과 ‘지역을 직시하는’ 구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대학만의 성장이 아닌 지역과 대학의 공동 성장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명제는 그간 대학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의 핵심에서 관찰자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순수 학문 탐구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오랫동안 지역의 위상을 유지해 왔다. 1980년대 이후 대학이 양성한 고급 인력이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하면서 대학은 산학협력 주체로서의 기능을 확장하였다. 이 같은 대학의 기능 변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지역사회적 맥락이 배제되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었다(김은정 외 2020, 2).

그러나 지역혁신체계에서 대학은 지역혁신의 앵커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둔 혁신체계 간 상호작용과 상호학습을 강조하는 지역혁신체계에서 대학은 지식의 생산과 전파, 공유, 활용, 가치 창출 등 대학의 고유 기능을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이슬기 2023, 365).

RISE는 대학의 양적·질적 성장을 뒷받침해 온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혁신체계의 명맥을 잇는 새로운 대학-지역 간 협력체계로서 지역과 대학이 구상하는 사회적 가치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대학의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무와 관련, 지역사회를 위한 대학의 구상을 분석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현안 해결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지역별 RISE기본계획(5개년 계획)은 지역별 RISE 비전, 전략, 성과 목표, 프로젝트, 세부과제로 구성된 기본계획으로, 지역-대학 간 협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의 혁신을 설계하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내 지역 현안 해결 부분에서 각 지자체들의 구상과 대학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지역별 RISE 기본계획

1) 전라남도 - 지역과 대학이 주도하는 GRAND 전남 혁신성장 실현

전라남도는 RISE 기본계획에 6개 핵심 목표와 4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세부 계획 중 지역 현안 및 지역사회 발전 관련 내용으로는 프로젝트 5번인 ‘역동적 대학-지역 동반성장(Dynamic University-Regional Co-Growth)’을 기반으로 전남 동반성장 프로젝트와 시·군 동반성장 사업을 구상하였다. 대학이 보유한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사회·산업·환경·일자리 등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한 공동 해결과 대학이 없는 시·군의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 및 시·군 주민이 참여하는 리빙랩 기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전남은 지역 자체 현황 진단에서 지역의 위협(Threat) 요인을 첫째, 학령인구 및 신입생 감소, 지역 소멸 가속화에 따른 지역대학 존폐 위기 둘째, 일자리 부족에 따른 인재 유출 셋째, 제조업 근무 기피 넷째, 글로벌 산업·기술 패러다임 대응 역량 및 첨단산업 기반 취약으로 보았다. 이러한 지역사회 위협 요인 감소를 위해 제시된 동반성장 프로젝트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기초지자체-대학 간 협의체 운영, I(Issue)-솔루션 बैं크 운영, 리빙랩 기반 기술 개발 및 환경개선, 현안 해결 솔루션 개발, 지역 주민 대상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대학 프로젝트로는 일반/전문대로

구분하여 대학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지역 소멸 위기 공동 대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등이 있다. 전남의 이러한 시도는 전남 소재 대학의 지역 혁신 역량과 관련 있다고 보인다. 전남 지역 대학들은 최근 2년간 인재 양성, 산학협력, 지역혁신, 연구지원 분야의 사업 건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들은 보건·의료·문화·예술 분야를 특성화 및 강점 분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21~2040) 중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및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및 경관 조성, 글로벌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등의 추진전략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2) 충청북도 - 첨단산업 및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융합 중심, 충북 RISE

충청북도는 RISE기본계획에 4개 프로젝트와 9개 단위과제, 4개 성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충북은 지역 현안으로 인구구조 불균형과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다문화·외국인 가구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수요 증자, 의료여건 개선을 들고 있다.

이러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과 대학의 Cheer-Up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첫째, 충북 생활연구소 고도화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둘째, 지역 소멸 대응 의학교육 여건 개선이다. 지자체·지역 주민·대학·기업이 문제 정의, 기획 단계부터 기술·정책·제품/서비스 개발과 실제 적용 방안까지 협력하는 지역 맞춤형 문제 해결 구상으로, 특히 과학기술, 인문·사회, 법·제도 기반 문제해결형 융합 교육을 통해 수요자의 현안을 해결하는 대학-지자체 간 협업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생활연구소 운영은 연구개발과 후속 적용이라는 구조를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요발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히 미래 지역 정주 대상들인 학생들의 관점에서 지역 현안을 정의하고 해결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충북은 생활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대학-지자체 간 소통체계와 문제관리 및 해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향후 참여 주체의 다양화와 체계의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지역문제를 지역 주민이 발굴하고 지역 기업과 해결하는 충북 모델은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3) 광주광역시 - 지역-대학 함께 UP! 교육혁신 기회도시 광주

광주광역시는 RISE 5개 프로젝트와 16개 단위과제를 수립하였다. 지역사회 현안으로는 인구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산업인력 부족, 지역성장 한계, 대학 존폐위기 등이 있다. 광주와 대학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GROW UP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프로젝트는 도심 캠퍼스 리빙랩 운영, 광주 통합돌봄 허브대학 운영, 광주 문화예술·관광도시 활성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심 캠퍼스 리빙랩 운영은 지역 주민과 청년의 아이디어가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학-지역주민-기업-자치구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통합돌봄 허브대학은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대학에서 전담인력을 양성하는 모델로 청년뿐 아니라 평생교육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교육-채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대학 간 집단지성과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및 공동 성장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발굴과 정책 반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도모하고 있다. 지역의 주요 현안(고령화, 인구감소, 보건복지, 기후변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혁신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특히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해 청년 대상의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적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청년세대 대상 지역 정주 매력도를 제고시키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광주 RISE 기본계획에서 위협 요인으로 지적한 지역 성장의 한계를 지역의 문화 확산을 통해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로 읽힌다.

4) 강원특별자치도 - 대학-지역이 함께 만드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산·학·연 혁신 동력 「대학도시」 생태계 실현이라는 목표로 5개 프로젝트와 13개 단위과제를 제시하였고, 이중 대학 주도형 지역 현안 프로젝트에서는 지역 위기 대응 공동연구소 G-Lab 구축, 외국인 유학생 시티즌(CITIZEN)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지역 현안 발굴 및 해결 협업 플랫폼 구축과 대학의 지역 내 지역 현안 과제 수행을 통한 지역위기 극복 선도, 대학과 지역 주민의 참여 유도를 통한 공동체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은 지역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대학, 지자체, 지역 주민 등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G-Lab 플랫폼 운영으로 기후변화, 환경, 지역경제, 인구감소, 고령화, 접경 및 폐광지역, 해양 등 지역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문제발굴 및 선정-의제화-의제 실행-성과공유 확산이라는 운영 모델을 중심으로 지역 출연연과의 공동연구, 주민참여, 지역 적용이라는 흐름을 안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은 지역이 당면한 지역 고유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 증대를 위한 지역-대학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전북특별자치도 - 함께 성장! 함께 성공! 모두가 행복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는 RISE를 위해 4대 프로젝트와 12+2대 단위과제를 수립하였다. 4대 프로젝트 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 프로젝트는 지역 현안 리빙랩 활성화, 로코노미(Locomony: Local+Economy) 거점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북은 공공·민간·시민·협력형 지역혁신 참여형 리빙랩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이 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로컬 콘텐츠 브랜딩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로코노미

거점 조성은 고령화 등 지역문제 해결과 청년층의 정주 매력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로컬 콘텐츠 발굴 및 적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로코노미 거점 조성 등은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기반으로 외지인이 유입되고, 지역의 특성을 청년의 관점에서 재발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6)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과 대학이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Learn+Vacation) 도시 조성을 목표로 5개 프로젝트와 8개 단위과제를 수립하였다. 지역사회를 위한 혁신 과제로는 대학이 이끄는 사회혁신 및 미래 변화 대응 경쟁력 강화사업과 지역 미래 의료·농업 혁신 지원사업이 있다. 제주는 대학이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 역할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리빙랩 운영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 상생 모델을 구축하여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도내 지역 간 격차, 원주민-이주민 갈등, 생활 여건 개선, 기후 위기,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 환경 등 지역을 넘어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도내 문제 해결을 국가의 보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으로 보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숙의형 프로세스 운영-연구혁신-지역 적용으로 공동체성 강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 정주환경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

7) 서울특별시 - 글로벌 미래혁신 성장도시 서울

서울은 RISE 운영을 위해 5개 프로젝트와 12개 단위과제를 수립하였다. 서울은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대학의 지역문제 ‘해결사’ 역할 및 사회적 책임 확대와 둘째, 개방, 공유, 협력을 기치로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완화 기여 마지막으로 초·중등 교육과 연계한 저출생 등 지역문제 해결 선도를 제시하였다. 지역 현안 해결 및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지역 동행 선도모델 확립과 협력 범위 확대, 참여 주체 간 협력 및 소통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와 대학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대학의 문제 해결 역량과 사회 공헌 역할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서울은 수도로서 지역 고유의 문제보다는 보편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발전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을 중요시하며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모델을 기반으로 사회 공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8) 경상북도 - K-대학의 대학 대전환을 통한 아이디어 산업 활성화

경상북도 RISE 추진계획은 4대 프로젝트 17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K-LEARNing 프로젝트는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와 지역 현안 해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 수행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경북은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역할 증대를 배경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개방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소외계층 문화 활동 지원, 취약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역할과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로컬이슈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대학 간 공동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은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역할 확대를 표명하며 대학이 지역 혁신 주체의 역할을 넘어 지역의 지속을 위한 공동의 협력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9) 경상남도 - 지역과 대학을 위한 RISE, 도약하는 경남

경상남도의 RISE 추진계획은 5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12대 단위과제를 수립하였다. 이중 창업 및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정주 환경 조성이 담겨 있는 5번 프로젝트에서 지역문제 해결 리빙랩 선도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 수요 기반의 지역문제 맞춤형 자율과제 운영, 대학 기초학문 분야의 사회참여 기획 및 추진 등으로, 대학과 지역의 참여형 프로그램 기획과 적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은 창업과 정주 환경 조성에 주목하며 지역 대학의 고유 역할인 교육 분야를 활용하여 지역과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경기도 - 지산학 협력으로 동반 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 경기도

경기도는 4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6개 단위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역 현안 관련 내용으로는 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이 있으며, 경기도 지역사회 공헌 및 현안 해결이 주요 내용이다. 대학과 지역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 및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대학과 공공, 민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거버넌스 중심 현안 과제 발굴과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경기는 지역 대학의 특성화 역량과 캠퍼스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지역 혁신성장 및 가치 창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으며, 서울과 동일하게 대학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11) 충청남도 -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담대한 개혁과 혁신으로 힘센충남 구현

충청남도의 RISE는 4대 프로젝트와 16대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혁신 프로젝트로는 성장과 나눔의 지역 공동체 구현을 배경으로 청년 로컬활동 생태계 조성 및 로컬 혁신 인재 양성과 기초지자체-대학 협약 기반 자율형 지역 현안 해결을 제안하였다. 충남은 이를 통해 지역 공공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탄소중립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형

거점지구 캠퍼스를 구축,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 및 사회서비스 공간 운영, 문화소외지역 주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 보건의로 서비스 개선 등 기존 정부나 지자체에서 담당하였던 공적 역할에서 지역 대학의 참여가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자율형 지역 현안 해결은 기초지자체와 대학 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수행으로, 기초지자체의 고유 현안 해결에 있어 대학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은 대학의 역할을 기초지자체의 기존 역할에까지 확장하며 기초지자체의 고유 역할을 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2) 울산광역시 - 대학과 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미래산업 중심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

울산광역시의 RISE 기본계획에는 울산 RISE체계 구축을 위한 3대 쟁점 사항 중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보면, 지역 내 발생하는 현안을 전문성과 유효자원을 보유한 대학을 중심으로 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결함으로써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의 생활과 안전, 복지와 연관성이 높은 현안에 대해 과제를 기획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석한 지역현안으로는 복합재난 대응방안 필요, 보건·의료 지방인재 부족, 시민 복지요구 증가 등이 있다.

이 같은 쟁점을 배경으로 수립된 울산 RISE의 비전으로는 ‘대학과 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미래산업 중심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이다. 기본계획 내 4대 프로젝트, 13개 단위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지역사회 관련 과제로는 지역 현안 과제 해결형(LAB) 협력체계 구축, 지역과 문화가 함께하는 매력 있는 풀썸도시 조성이 있다. 울산은 지역 대학의 사회적 공헌도 제고 필요와 지역과 대학의 공동목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를 목표로, 대학 및 학생 중심 프로젝트 운영과 대학 특화 분야 사회공헌활동 운영을 통한 지역 현안 과제 도출과 해결 프로젝트 추진 모델을 구상하였다. 또한, 산업도시를 넘어 문화도시로의 브랜딩을 위해 도시공간 재생 프로젝트와 문화 콘텐츠 개발을 기획하는 등 대학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제시하였다.

13) 부산광역시 - 2030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NEW WAVE를 만드는 부산형 RISE

부산광역시는 RISE기본계획 4대 프로젝트와 12개 단위과제를 설정하였다. 이중 지역 가치 확산을 위한 Social-Wave 프로젝트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을 세부 과제로 수립하였다. 인문사회 예술과 기술 기반 리빙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도시 활력 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활력 프로그램 추진과 대학의 사회 공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 역시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으며, 대학 자원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공동연구, 정책제언, 개선과제 도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 창조와 도전의 고등교육 혁신 한누리캠퍼스 구축

세종특별자치시의 RISE는 4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5개 단위과제를 수립하였다. 지역 현안 관련 프로젝트로는 대학과 함께하는 지역혁신 선도로, 세부 과제로는 한글문화수도 조성 및 MICE산업 육성이 있다. 이 사업은 기관-대학-주민-전문가가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지역문제를 구성원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여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도시 조성 기간이 짧은 배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관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브랜딩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 하에서 이러한 사업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를 대표하는 한글, 박물관 등을 도시 상징으로 브랜딩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정주를 위한 도시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리빙랩 운영 등을 통해 도시 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15) 대구광역시 - 미래 50년 변영 대구, 세계로 비상하는 대학

대구광역시 RISE는 4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7개 단위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도심 캠퍼스타운 조성, 청년 연구자 직·주·락 빌리지 조성, 청년 친화형 지역사회 문화 조성을 구상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침체된 도시에 청년문화 부흥, 대학 중심 도심 생태계 조성, 청년 정주타운 조성, 지역 밀착형 사회문제 해결 지원 등을 지역혁신 과제로 추진하고자 제안하고 있다. 대구는 도시 공간 브랜딩과 청년 정주,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정주 여건의 향상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16) 대전광역시 - 경제·과학도시 대전 구현을 위한 교육혁신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대전광역시 RISE는 5대 프로젝트 12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현안 해결과 관련하여 RISE 촉진형 지역 현안 해결 프로젝트를 수립하였고, 지역 현안 해결 및 꿀잼 도시 조성 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은 지역-대학 동반 리빙랩 운영, 대학-지역 상생형 원도심 활성화, 지역 연계 플랫폼 구축·운영, 대학 중심 문화·예술 꿀잼 콘텐츠 개발 및 지역 문화축제 확산이 있다. 대전은 지역사회 현안 해결 외에도 대학 청년들을 위한 RISE 플랫폼 구축, 대학 중심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과 지역 문화축제 구상 및 추진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학과 지역 주민, 청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사업을 기획하였다.

17) 인천광역시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으로 세계 초일류도시 구현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의 RISE는 4대 프로젝트 및 14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문제 해결형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제물포 르네상스 연계 원도심 가치 재창조를 지역 현안 관련 과제로 수립하였다. 이는 인천의 원도심인 제물포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도시역량 강화 및 신기능 부여를 통해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또한 인천의 기간산업인 제조업 노후산단 인프라 개선 및 재구조화를 통해 청년들이 유입되는 혁신 공간으로 전환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 대상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프로젝트 운영, 리빙랩 기반 아이디어 발굴 및 솔루션 개발, 산단 개조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청년층의 유입과 새로운 콘텐츠 기반 일자리를 만들어내어 매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서 지역 대상 과제인 인천 보물섬 특성화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통해 해양산업 개발과 인구소멸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다양한 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 전국 RISE 추진지역 기본계획 내 지역현안 관련 내용

구분	지역	주요내용
지역현안 해결관련 분야	전라남도	시·군 주민 참여 리빙랩 기반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원
	충청북도	충북 생활연구소 고도화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광주광역시	지역사회 GROW UP 프로젝트: 도심 캠퍼스 리빙랩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위기대응 공동연구소 G-Lab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현안 리빙랩 활성화 및 로코노미 거점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이 이끄는 사회혁신 및 미래변화 대응 경쟁력 강화사업
	서울특별시	대학의 지역문제 '해결사'역할 및 사회적 책임 확대
	경상북도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경상남도	지역문제 해결 리빙랩 선도대학 육성
	경기도	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
	충청남도	기초지자체-대학 협약 기반 자율형 지역현안 해결
	울산광역시	지역 현안 과제 해결형(LAB) 협력체계 구축
	부산광역시	사회문제 해결형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
	세종특별자치시	대학과 함께하는 지역혁신 선도
	대구광역시	동성로 도심 캠퍼스타운 및 직·주·락 빌리지 조성
	대전광역시	RISE 촉진형 지역현안 해결 프로젝트
	인천광역시	제물포 르네상스 연계 원도심 가치 재창조

자료(출처): 전국 17개 지역 RISE 기본계획

3. 검토결과

지역혁신체계를 구성하는 지역과 대학 간의 네트워크 변화는 대학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 역시 지역사회 봉사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의 가치와 발전 지속을 위한 책임을 분담하는 지역 생태계의 주요 행위자로서 고도화되고 있다. 대학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역 산업 발전 일변도의 지역 정책 부응이 아닌 지역사회의 지속과 삶의 질 제고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산업적 측면을 넘어 기존에는 지역이 담당했던 교육, 복지,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참여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지역사회의 성장을 확산시키는 역할도 부여받고 있다.

지역 RISE 기본계획 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의 대응책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역이 가지는 고유한 문제도 있지만 수도권 집중, 인구 유출과 고령화, 그에 수반되는 지역 산업 및 인프라 낙후 등 공통의 지역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RISE는 그간 중앙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이러한 지역의 문제들을 지역과 대학이 같이 검토하여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역에 확산시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RISE를 추진하는 17개 지자체는 정부의 RISE 4대 성과 목표를 기반으로 대학과 함께 지역 산업 및 경제, 대학 역량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RISE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1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대학의 '참여'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기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이 리빙랩(Living Lab)이다. 리빙랩은 시민과 공공, 산학연 관계자 등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개발하여 적용하며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해결 방법론을 담은 플랫폼이다. 리빙랩은 지역 고유의 혹은 보편적 문제 해결에 있어 지역 구성원들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만의 발전 방안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수연 2022, 298).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문제 해결 방법론인 리빙랩의 활용을 기반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동의 문제를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모델은 새로운 방법론은 아니나, 그 중심에 다양한 지적 자원과 인프라,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학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은 지역과 대학의 새로운 공생 과정에서 대학이 가지는 새로운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의 자원과 지식을 활용하는 지역-대학의 파트너십은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지향과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대학이 지향해야 할 사회 공헌의 한 축이다(김창환 2020, 40). 이는 궁극적으로는 사회 공헌의 면모를 가지고 지니고 있으나,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일본 돗토리현 사례처럼, 지역민들을 위한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과정에 대학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교육과정에서의 실무·현장 실습 경험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이 지역 연계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할수록

학생은 지역사회 문제, 지역의 산업, 지역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지적 기반은 지역 정주를 포함한 지역 참여의 출발점이 된다. 지역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역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역 참여로 나아가는 첫 단계이며, 지역 참여의 교육환경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서적 유대와 공동체적 책임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황수정 외 2025, 37).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수립된 17개 지역의 제안들은 지역 현안 해결뿐 아니라 이를 통한 지역과 수도권 간 종속-비종속 관계의 경제 구조 개선, 새로운 지역 산업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으로써 지역사회 가치 제고와 대학 역할의 확대를 넘어서고자 한다. 지역 현안 해결, 지역 경제 다변화,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 강화를 통해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문제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 역시 지역 내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고민함으로써 대학이 지역의 주요 행위자로서 인재 교육과 기술 개발을 넘어 지역과의 공동 발전과 지속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지역 RISE계획에서 드러나는데,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관광도시 활성화, 전북특별자치도의 로코노미 거점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의 런케이션 도시 조성, 울산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꿀잼도시 조성, 세종특별자치시의 한글문화수도 조성 등의 기획은 지역문제 해결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관련 산업 진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정주 매력도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 산업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거 환경 인프라의 구축 여부이다. 각 지역은 대학과 협업하여 현안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원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세부 사업들을 기획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신규 유입을 통한 정주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들이 보유한 특·장점을 활용하여 계획의 운영, 방안 모색, 적용과 실증, 확산에 대학과 지역,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것이다.

결국, RISE를 기반으로 한 지역과 대학의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 모델의 성공 여부는 대학과 지역 주체들의 참여이다. 참여자들은 대학을 중심으로 학습과 공유, 탐색과 협력 등 지속적인 활동 과정을 통해 상호의존성을 체득하고 문제해결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공통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단절되어 있던 지역사회 내 참여자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며, 참여자들의 통합을 촉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RISE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 모델은 그 자체를 넘어,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기반이 된다. 참여자들은 대학과 함께 지역의 능동적 행위자로서 지역의 가치와 규범을 재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가치와 규범은 지역의 지속과 참여자 간 연대를 유지하는 무형의 형태로 지역에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연구자가 RISE사업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일부 나타난다. 연구자는 2025년 10월 ~11월 간 RISE사업 수행대학 2개교의 RISE사업에 참여하는 재학생 15인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의 내용은 RISE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을 희망하는 대학 사업 및 지역에 대한 관심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출신 지역을 막론하고 자신들이 머무르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나, 대학이나 지역에서 지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으로 볼 때, 지역 학생들의 지역 정체성 형성을 위해 대학에서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융합 프로그램이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다음 의견으로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공공과 나누고 지역에 전달하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부분은 특히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나 도서 지역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학의 RISE사업 운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학생들이 지식과 경험을 지역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사회를 이해함으로써 RISE체계의 비전인 지역 정주와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가치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식 공유와 참여 제고를 위한 수요를 발굴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III. 결론

고착화된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 지역의 주요 행위자인 대학이 지역의 현안 해결과 지역의 지속을 위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대학이 참여자 또는 관찰자 입장에서 벗어나, 지역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다양한 내·외부의 위협 요인에서 파생되는 지역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대학의 참여는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과 지역 가치 제고와 연계되며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은 특히 RISE 체계를 통해 지역 현안 발굴과 해결에 교내 전문적인 학과 수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교내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한다. 대학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들에 교육받은 우수한 학생들이 참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제시할 수 있고, 학생 스스로는 교육 내용의 현장 적용과 실습 등을 통해 개인의 전문성 제고와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학생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시도할 수 있도록 대학은 내·외부의 기반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졸업 후 지역 정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의 사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지역-대학 등 다양한 참여자 간 연대를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성장 유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지역과 대학의 공생을 위한 지역 정체성 강화와 공통의 문제해결을 통한 지역 통합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영미. 2021.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21 44: 3063-3074.
- 김창환. 2020.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을 강화하는 기제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임(USR) 연구」. 고등교육 1: 25-54.
- 김현영. 2025. 「지학협력과 RISE: 지역혁신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평화들 PEACES 4(1): 53-81.
- 배진형·안정선. 2024.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법 모색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인문사회과학 연구 12: 295-314.
- 이수연. 2022. 「리빙랩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인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22: 297-329.
- 문경희. 2021. 「경상남도의 지역혁신과 지자체-대학 협력사업 계획과정에서의 정치동학」. 비교민주주의연구 17(1): 63-101.
- 김은정·허원빈·양기용·오영삼·김지수. 2020.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 접근에서 대학의 역할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2(1): 1-22.
- 이슬기. 2023. 「대학 연구센터의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연구: 지역대학의 선도연구센터와 지역혁신센터의 성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7(3): 361-390.
- 황수정·배상훈·이예원. 2025. 「대학의 지역참여 교육환경이 학생의 지역몰입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이해와 지역참여 공감의 매개효과」. 교육행정학연구 43(5): 35-61.
- 송혜선. 2025. 「일본대학의 지역활성화 인재육성사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
- 대한민국 고등교육법 제2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B%93%B1%EA%B5%90%EC%9C%A1%EB%B2%95> (검색일: 2025년 8월 28일)
-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6088 (검색일: 2025년 10월 13일)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인천, 울산,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충북, 경북, 경남, 부산, 전남, 전북, 광주, 제주, 세종, 강원, 대구).”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type=default&page=3&m=0316&renew=72775&s=moe&boardID=72775> (검색일: 2025년 10월 13일)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행태 실증 분석: 서울시 홍대입구역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안다운 국립공주대학교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박사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교신저자(E-mail: khlee39@kongju.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무단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서울시 홍대입구역 인근으로, 보행 유동량이 많고 주차 문제가 빈번한 지역이다. 현장 관찰조사를 통해 주차 유형, 위치, 체류시간을 기록하고 커널 밀도 분석으로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313대 중 정기 배치 주차 136대(43.45%), 이용자 주차 177대(56.55%)였으며, 불규칙한 형태와 보도 중앙, 자전거 거치대 주차가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 주차의 경우 평일 43.59%, 주말 63.64%가 2시간 이상 방치되었고, 정기 배치 주차는 97.79%가 2시간 이상 체류하여 과잉 공급 문제를 확인하였다. 커널 밀도 분석 결과 지하철역 출입구와 교차로 등 결절점에 주차가 집중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 대상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실증 조사를 통해 전동킥보드 주차 행태를 다각적으로 규명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공유 전동킥보드, 퍼스널모빌리티, 불법주차, 주차 행태, 관찰조사

* 이 논문은 2024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o. Rs-2024-00413192)이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지원(과제번호:2024-0560-01)을 받았음.

투고(접수)일 : 2025년 10월 13일

심사(수정)일 : 2025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6년 6월 22일

<http://doi.org/10.34165/urbanr.2026..29.273>

An Empirical Analysis of Shared E-Scooter Parking Behavior: A Case Study of the Area around Hongik University Station in Seoul

Ahn, Da-Eun

Ph.D., Department of Urban Systems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Lee, Kyoung-Hwan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and Transportation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parking behavior of shared e-scooters to address the growing issue of illegal parking and its implications for pedestrian safety. The study area was located around Hongik University Station in Seoul, a high pedestrian flow zone where scooter parking problems frequently occur. Field observations were conducted to record parking types, locations, and parking durations, and kernel density estimation was applied to identify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 the 313 observed scooters, 136 (43.45%) were operator placements, whereas 177 (56.55%) were user-parked. Irregular parking, sidewalk-center parking, and bicycle rack parking were the most prevalent types of parking. 43.59% of user-parked scooters on weekdays and 63.64% on weekends remained in place for over two hours, and 97.79% of operator placement scooters exhibited parking durations exceeding two hours, revealing an inefficient redistribution issue. Kernel density analysis further indicated that scooter parking was highly concentrated at subway station entrances and nodal points such as intersections. Although the study is limited to a single area, it provides a comprehensive empirical assessment of shared e-scooter parking behavior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targeted management strategie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olicies to improve urban pedestrian environments.

Keywords : Shared e-scooters, personal mobility, illegal parking, parking behavior, field observation

I. 서론

2018년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시 곳곳에 등장하면서 교통사고, 주차 문제, 도시미관 저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정해진 스테이션이 없는 도크리스(Dockless) 형태로 기존 공유 교통서비스에 비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보도나 차도 위에 방치되는 등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보행환경 저해 등 또 다른 도시문제가 제기되고 있다(Fang et al. 2018; James et al. 2019). 특히 보행공간 침범 및 교차로 근처와 주요 보행로에서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전동킥보드 견인 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에서 45.27%, 횡단보도 및 산책로 16.2%,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13.52%의 견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동킥보드의 무단 주차가 교통흐름 및 보행 공간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개인형 이동 수단 전용 주차장 설치, 즉시 견인 구역 확대, 관리 기준 마련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도크리스 기반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이용자들의 자율 주차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행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김수재 2021; 안다은·이경환 2021), 무단 주차 행태 관련 연구(Brown et al. 2020; Bai et al. 2020)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주행과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 공간 침범, 보행자 사고, 보행 연결성 결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견인데이터를 활용한 사후적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주차 행태의 유형·위치·체류시간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태에 기반한 주차 행태 분석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가능함에도,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행태를 유형별·위치별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행태에 대한 관찰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여, 주차 유형, 주차 위치, 체류시간, 공간적 분포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행태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차 행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국내 공유 전동킵보드 운영 현황 및 주차 문제점

서울시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서는 5개 회사가 공유 전동킵보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40,510대가 운영 중이다(24년 6월 기준). 이용 규모의 확대와 함께 도크리스 방식의 구조적 특성상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주차 장소를 결정하게 되어, 보도 점유·교통시설 인근 방치 등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 공간 침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불법주차 현황을 살펴보면, 23년 한 해 동안 총 62,179대가 견인되어 견인료만 총 2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견인료를 운영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실제로 무단 주차를 행한 이용자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부과되지 않아 근본적인 행태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견인 서비스 외에도 공유 전동킵보드 방치로 인한 불편 및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올해 6월부터는 기존 5대 즉시 견인 구역(보·차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장·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및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추가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주차장 설치 및 공유 전동킵보드 관리 기본 대책 등도 함께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견인 중심의 사후적 대응은 불법주차가 발생한 이후의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용자가 실제로 어떠한 유형과 위치에 주차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공유 전동킵보드와 같은 도크리스 형태에서는 주차 장소가 전적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용자 관점에서의 실증적 주차 행태 파악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전제로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주차 행태에 관한 이론적 논의

공유 전동킵보드의 주차 행태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Ajzen(1991)이 제시한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이용자의 주차 행동은 올바른 주차에 대한 태도(attitude), 주변의 사회적 규범 인식(subjective norm), 적절한 주차 공간의 접근성 등 행동 통제 인식(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의 영향을 받는다. 국내에서도 전상민 등(2021)은 계획된 행동이론을 활용하여 창원시 불법주차 의식을 분석한 결과, 지각된 통제감이 불법주차 근절 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차 인프라 접근성과 같은 행동 통제 요인이 주차 행태에 핵심적임을 확인하였다.

도크리스(dockless) 형태인 공유 자전거를 대상으로 한 Wei et al.(2022)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책임감과 주변의 주차 행태 인식이 올바른 주차 태도 및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u et al.(2020)은 현장 실험을 통해 경고 메시지가 올바른 주차를 18.0%, 금전적 인센티브가 25.2%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사회적 규범이나 외부 개입을 통해 주차 행태 개선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 규제를 넘어 인식 개선 및 인센티브 설계와 같은 다각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이러한 행동이론적 접근은 도크리스 형태인 공유 전동킥보드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도크리스 방식의 구조적 특성상 이용자들은 목적지 도착 후 주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지정 주차구역이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차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이용자들은 편의성을 우선시하여 보도 중앙이나 부적절한 위치에 주차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주차 행태는 단순히 이용자의 비합리적 행동이 아니라 편의성 추구 성향과 주차 인프라 부족이라는 구조적 제약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유형별·위치별로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3. 전동킥보드 주차 관련 선행 연구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 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Song et al. 2023), 무단 주차 특성 연구(Lim 2023; Kweon & Lee 2024; Ahn & Lee 2024) 등이 진행되었다. Kweon & Lee(2024)의 연구에서는 전동킥보드 견인자료를 활용하여 무단 주정차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 무단 주정차 발생 횟수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Ahn & Lee(2024)는 전동킥보드 견인자료를 이용하여 불법주차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용도지구별로 구분하여 불법주차 행태를 살펴보고 이에 맞는 불법주차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전동킥보드 견인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데이터 특성상 무단 주차 지점, 주차 형태와 같은 제한적인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 다양한 전동킥보드 주차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시점에 대한 데이터로 주차 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실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주차 행태에 대한 실증 조사를 통해 전동킥보드의 다양한 주차 행태를 파악하고 무단 주차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한 실증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 진행된 전동킵보드 주차 행태 연구를 살펴보면, Brown et al.(2020)은 관찰조사를 통해 전동킵보드 무단 주차가 주민들의 보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주차 인프라 부족이 무단 주차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무단 주차와 관련된 정책이 거리 디자인, 보도 너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Hemphill et al.(2022)는 전동킵보드 주차 준수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관찰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전동킵보드 중 28%만이 올바른 주차로 나타났으며, 72%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는 부적절한 주차 행태로 나타났다. James et al.(2019)의 연구에서도 전동킵보드 주차 행태에 대한 관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606대 중 16%가 부적절하게 주차되었으며, 전동킵보드 무단 주차가 보행자 접근을 방해하는 경우는 전체의 6%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외에서는 전동킵보드 주차 행태 연구를 통해 전동킵보드 주차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차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제시하는 등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전동킵보드 무단 주차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기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Ⅲ. 분석의 틀

본 연구는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서울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전동킵보드 견인 현황 데이터 2021년 7월 15일~2023년 9월 1일에 견인된 전동킵보드 위치 데이터 120,605건을 분석하여 전동킵보드 불법주차가 집중되는 지역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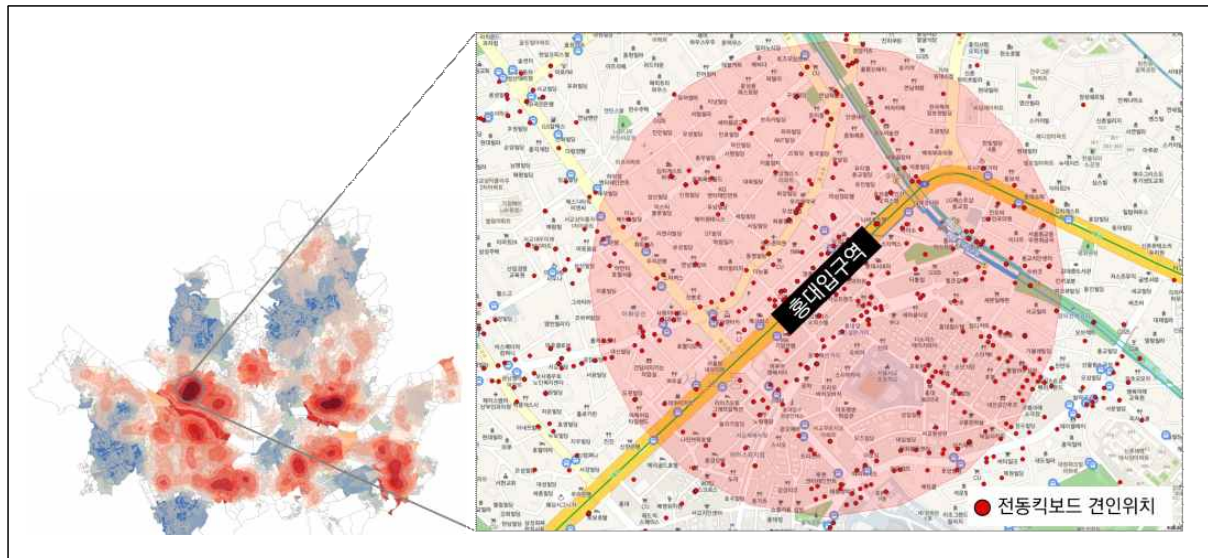
우선적으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유 전동킵보드 무단 주정차 집중 지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ArcGIS)을 활용한 핫스팟 분석(Hot Spot Analysis: Getis-Ord Gi*)¹⁾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 중 녹지·임야 등을 제외한 도시지역 가운데 관찰조사가 가능한 밀집 지역 후보지를 도출하였다. 그 중에서도 보행자 유동량이 많고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과 무단 주정차 밀도와 Gi*값이 모두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이 가장 높은 주차 견인 빈도를 보이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상업시설과 유동 인구가 집중된 대표적인 지역으로, 공유 전동킵보드 이용이 활발한 반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전동킵보드 무단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청년층 유입이 많은 지역 특성상, 유사한 도심지의 주차 문제 특성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는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을 중심으로, 전동킵보드 견인 밀집

1) Getis-Ord Gi는 공간적 자기상관성 통계기법으로, 각 공간 피쳐(feature)의 통계적 유의성을 계산하여 특정 지역이 주변보다 유의하게 높은(Hot Spot) 또는 낮은(Cold Spot) 주정차 밀도를 보이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Yang et al. 2016).

구역,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다양한 도시공간 유형이 혼재된 구간을 실증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지 도출 과정은 [그림 1]과 같으며, 관찰조사 일정은 [표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대상지 도출 과정



공유 전동킵보드 주차 행태조사는 2023년 11월 8일(수)과 11월 11일(토)에 2회 진행하였으며, 1회당 2시간씩 3회(오전 첨두, 점심시간, 오후 첨두)로 총 6시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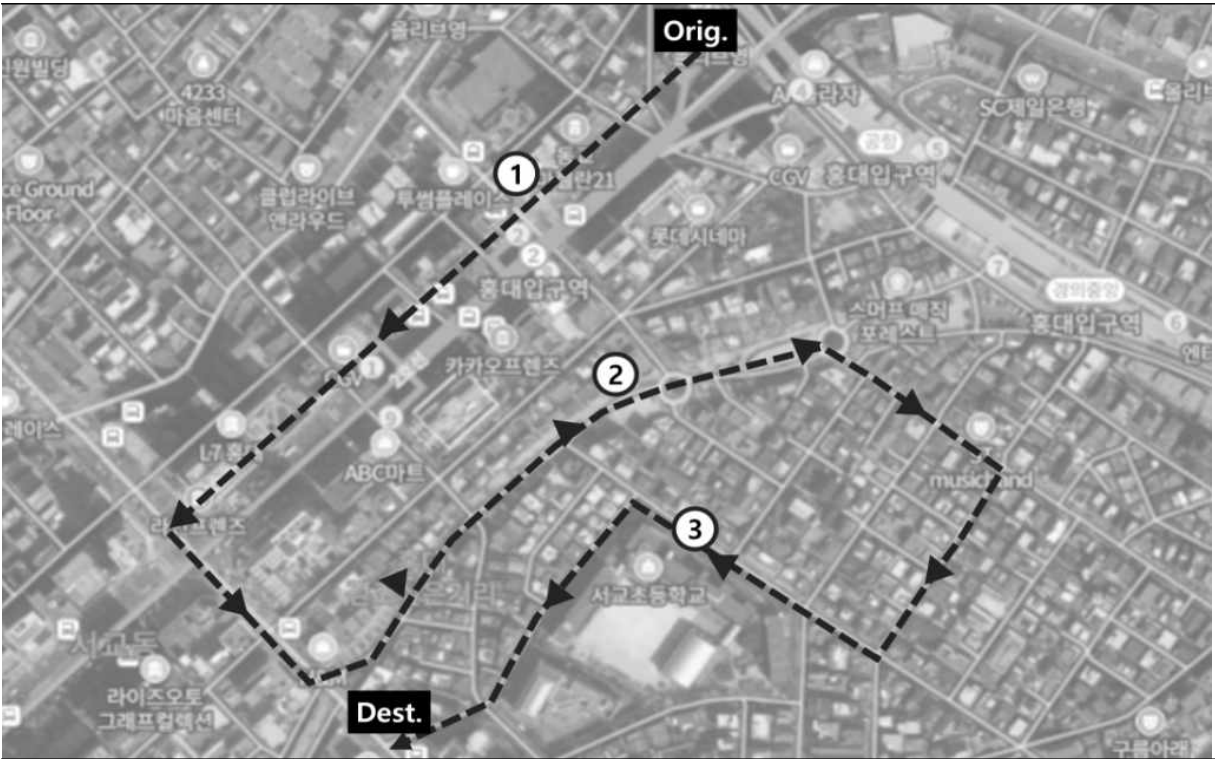
조사 세부 항목은 Brown et al.(2020)에서 활용한 관찰조사 분석틀을 기반으로 국내 전동킵보드 전인 규정 및 도로 현황에 맞게 분석틀을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불법 주정차 유형은 서울시 전동킵보드 전인데이터 현황 분석과 국내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분하였다. 2021~2023년 서울시에서 전인된 120,605대의 전동킵보드 데이터 분석 결과 보도 위, 교통시설 인근, 횡단보도 인근 주정차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Kwon & Lee(2024)는 전동킵보드 전인자료를 활용하여 무단 주정차 유형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였고, Brown et al.(2020)과 PBOT(2018)는 관찰조사 기반 주차위반 유형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도로 기반 지표(차도, 인도, 통행 방해)와 시설물 기반 지표(공공시설, 교통시설, 출입구 시설)로 대분류하고, 총 20개의 세부 지표를 4장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관찰 경로 및 가로별 특징은 [표 2]와 같으며, 주차된 공유 전동킵보드의 체류시간 조사를 위하여 관찰 경로 법을 이용하였다. 조사원은 총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번 조사원이 출발하고 15분 후 2번 조사원이 출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관찰 경로 내 모든 공유 전동킵보드를 기록한 후 최종적으로 중복된 킵보드를 제외하고 주차된 킵보드가 해당 지점에 체류한 시간을 분석하였다.

[표 1] 관찰조사 일정

구분	세부 내용
조사일	2023년 11월 8일(수), 2023년 11월 11일(토)
조사 시간	오전 혼잡시간(09:00~11:00), 점심시간(12:00~14:00), 저녁 혼잡시간(17:00~19:00)
조사 간격	15분 간격의 릴레이 방식(3인)
조사 항목	위치, 전동킥보드 ID, 관찰 시각, 전동킥보드 유형(개인/공유), 주차(유형, 위치, 사진)

[표 2] 관찰 경로 및 도로 특성



구분	세부 내용
① 홍대입구역	개인형 이동 수단 전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지하철 및 버스) 환승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점
② 걷고 싶은 거리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유동 인구가 많으며, 주말에는 차량 출입이 제한됨
③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아동과 관련된 잠재적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구간

IV. 분석결과

조사기간 동안 관찰 경로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평일 214대, 주말 99대로 총 313대가 확인되었다. 이 중 전동킥보드 운영사에서 일정 시간 동안 이용되지 않은 채 동일 위치에 다수의 기기를 배치해 둔 경우는 이용자의 자발적 주차 행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차 유형을 정기 배치 주차(Scheduled Docking)로 정의하고, 동일 지점에 5대 이상 나란히(정렬) 배치된 경우를 기준으로 판별하였다. 이 기준은 기기 배열의 밀집도와 정렬 패턴을 통해 운영사 배치를 유추한 기존 연구들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포틀랜드시(2018)의 경우 한 지점에 붙여 세울 수 있는 기기의 묶음의 총길이를 10ft(약 3.0m) 이하로 제한하고 그룹 간 20ft 이격을 요구하여 사실상 3대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산타모니카시(2024) 역시 총길이 15ft(약 4.6m) 이하, 그룹 간 20ft 이격을 규정해 4대 내외로 허용한다. Bai & Jiao(2020) 또한 정렬된 동일 모델이 일정 수 이상 배치된 경우를 운영사 배치로 간주하였으며, Brown et al.(2020), James et al.(2019) 역시 시각적 정렬, 밀집도, 위치 패턴을 통해 운영사 배치 여부를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동킥보드 운영 환경과 도로 폭을 고려하여, 동일 지점에 5대 이상 정렬된 경우를 정기 배치 주차로 간주하였다.

조사 결과, 관찰 경로에서 확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현황은 [표 3]과 같다. 평일에는 총 214대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이 중 136대(63.55%)가 정기 배치 주차에 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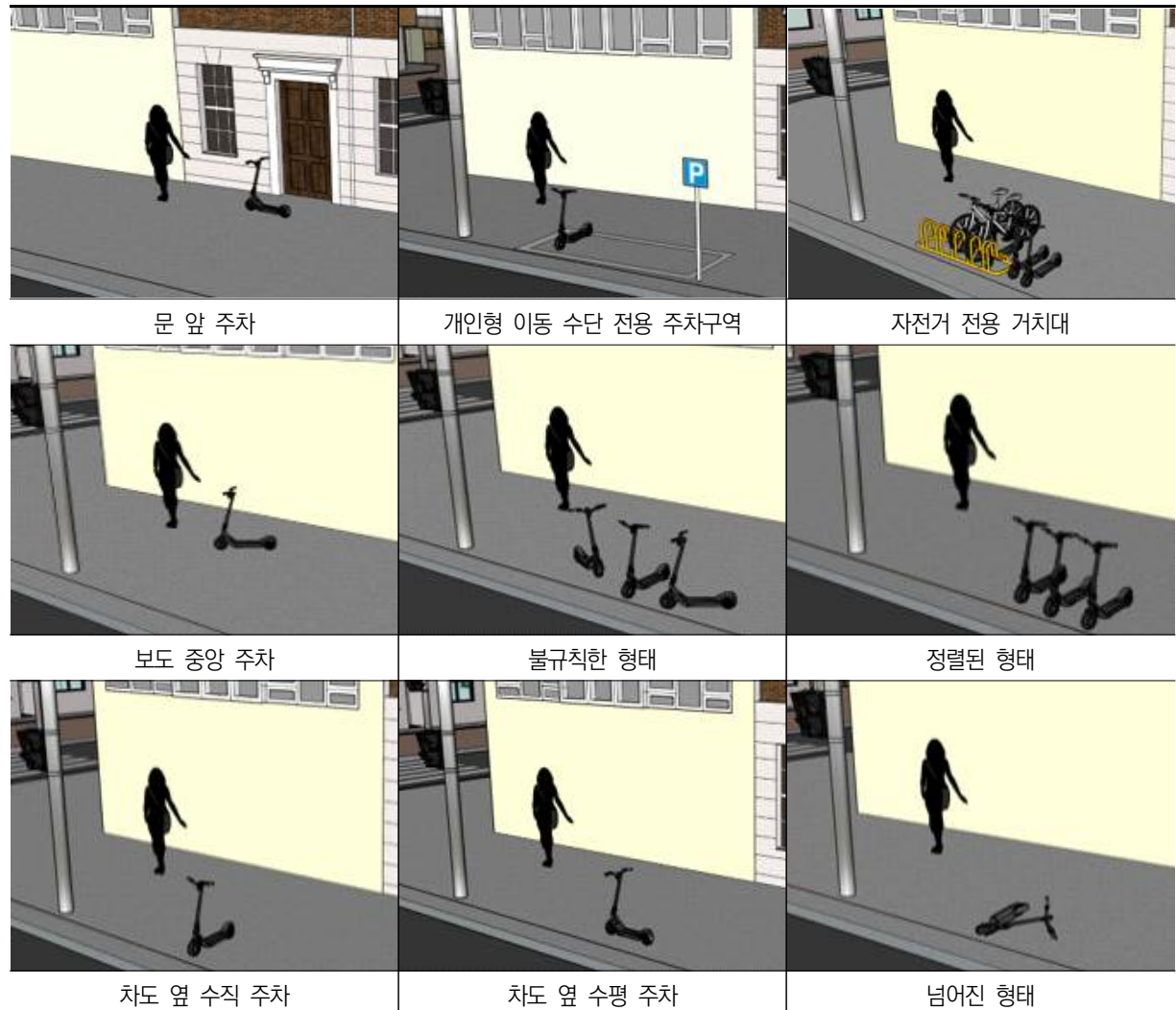
[표 3] 전동킥보드 주차 현황

구분	평일		주말		전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정기 배치 주차	136	63.55	-	-	136	43.45
이용자 임의 주차	78	36.45	99	100	177	56.55
합계	214	100	99	100	313	100

반면 주말에는 정기 배치 주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총 99대 모두가 이용자 주차에 해당하였다. 이는 주말에 운영사의 정기 배치 및 재배치 빈도가 평일 대비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분석에는 평일 78대와 주말 99대를 포함한 총 177대의 이용자 주차 사례를 활용하였다.

정기 배치 주차를 제외한 이용자 주차(User Parking)는 이용자가 직접 주행 후 주차한 경우를 의미하며, 주차 유형은 [표 4]와 같이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문 앞 주차, 개인형 이동 수단 전용 주차구역, 자전거 전용 거치대, 보도 중앙 주차, 불규칙한 형태, 정렬된 형태, 차도 옆 수직·수평 주차, 넘어진 형태 등으로 분류하였다.

[표 4] 전동킥보드 주차 유형 사례



[표 5] 전동킥보드 주차 유형

평일 주차 유형	비율 (%)	주말 주차 유형	비율 (%)
불규칙한 형태	24.36	불규칙한 형태	22.22
자전거 전용 거치대	23.08	보도 중앙	19.19
문 앞	10.26	자전거 전용 거치대	14.14
보도 중앙	10.26	차도 옆 수평 주차	13.13
차도 옆 수직 주차	8.97	차도 옆 수직 주차	11.11
차도 옆 수평 주차	8.97	횡단보도 앞	8.08
횡단보도 앞	7.69	정렬된 형태	7.07
넘어진 형태	5.13	차도	3.03
차도	1.28	넘어진 형태	1.01
-	-	문 앞	1.01
합계	100.0	합계	100.0

[표 5]는 전동킥보드 주차 유형을 살펴본 결과이다. 이용자 주차 분석결과 평일에는 불규칙한 형태의 주차 24.36%, 자전거 전용 거치대에 주차가 23.08%로 나타났다. 이어서 문 앞, 보도 중앙, 차도 옆 수직, 차도 옆 수평, 횡단보도 앞, 넘어진 형태, 차도 주차 순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도 평일과 유사하게 불규칙한 형태가 22.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보도 중앙, 자전거 전용 거치대, 차도 옆 수평, 수직 주차, 횡단보도 앞, 정렬된 형태, 차도, 넘어진 형태, 문 앞 주차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나타난 불규칙한 형태의 주차는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 동선을 차단하거나 시각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 안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불규칙한 형태의 주차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공공공간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Klein et al. 2023; Berg Wincent et al. 2025). 한편,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이를 올바른 주차로 인식할 수 있으며, 실제로 관찰조사를 진행해 보았을 때, 공간의 제약이나 전용 주차구역 부족으로 인해 불규칙한 주차를 선택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이용자 행태를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주차 인프라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와 맞물려 나타나는 행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 주차 행동 교육과 더불어 전용 주차구역의 확충, 시각적 유도 장치 도입 등이 병행된다면 도시 미관 및 보행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은 이용자 주차를 대상으로 주차 위치를 분석한 결과이다. 주차 위치는 앞서 도출한 도로 기반 지표와 시설물 기반 지표를 활용하여 분류하였다. 도로 기반 주차에는 횡단보도 전후, 보도 중앙, 어린이 보호구역, 폭이 좁은 보행자통로(3m 이하), 턱을 낮춘 진출입로, 보차분리된 차도, 자동차 주차구역(주차선 1.5m 이내), 점자블록 위 등이 포함되었으며, 기타 항목은 도로 갓길, 건물 벽, 쓰레기장 앞 등 명확한 유형 구분이 어려운 주차 행태가 해당한다. 시설물 기반 주차에는 자전거 전용 거치대 전후, 배전함 및 환풍구와 같은 시설물 옆, 가로수 옆, 지하철역 출입구 전후, 버스정류장 전후, 소화전, 계단 및 난간 전후, 배수로·맨홀 덮개 위, 건물 및 상가 보행자 진출입구 등이 포함되었다.²⁾

2) 주차 위치 분류 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동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주차된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모두에 포함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발생할 경우 아동 안전과 보행자 보호 측면에서 위험성이 더 큰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 6] 전동킥보드 주차 위치 분석 결과

구분	주차 유형	평일		주말		합계	
		대수	%	대수	%	대수	%
도로 기반	보도 중앙	14	17.95	12	12.12	26	14.69
	횡단보도	8	10.26	11	11.11	19	10.73
	어린이 보호 구역	5	6.41	-	-	5	2.82
	폭이 좁은 보행자통로 (3m이내)	2	2.56	6	6.06	8	4.52
	턱을 낮춘 진출입로	2	2.56	5	5.05	7	3.95
	보차분리된 차도	1	1.28	5	5.05	6	3.39
	자동차 주차구역 (주차선 1.5m)	-	-	2	2.02	2	1.13
	점자블록 위	-	-	1	1.01	1	0.56
	기타	7	8.97	1	1.01	8	4.52
	소계	39	50.0	43	43.43	82	46.33
시설물 기반	자전거 전용 거치대 전후 (1.5m 이내)	19	24.36	16	16.16	35	19.77
	시설물 옆(분전함, 환풍구)	7	8.97	16	16.16	23	12.99
	가로수 옆	-	-	13	13.13	13	7.34
	지하철역 출입구 전후 (1.5m 이내)	5	6.41	7	7.07	12	6.78
	버스정류장 전후 (5m 이내)	3	3.85	1	1.01	4	2.26
	소화전 (5m 이내)	2	2.56	1	1.01	3	1.69
	계단, 난간 전후 (1.5m 이내)	1	1.28	2	2.02	3	1.69
	배수로 덮개, 맨홀 뚜껑 위	1	1.28	-	-	1	0.56
	건물, 상가 보행자 진출입구	1	1.28	-	-	1	0.56
	소계	39	50.0	56	56.57	95	53.67
합계		78	100.0	99	100.0	177	100

분석 결과, 도로 기반 주차의 경우 평일, 주말 모두 보도 중앙에 주차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설물 기반 주차에서는 자전거 전용 거치대 전후 주차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보도 중앙 주차는 보행자 통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유형으로,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James et al.(2019)는 전동킥보드 주차장 도입 후에도 주차장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거나 이미 포화 상태인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이러한 주차 인프라의 부족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보도 중앙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정기 배치 주차가 과잉 공급되거나 장시간 방치될 경우 가용 주차 공간이 축소되어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주차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전용 주차장까지의 이동 거리가 멀수록 보도 중앙 주차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설물 기반 주차의 경우 자전거 전용 거치대 전후 주차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동킥보드가 유사한 개인형 이동수단이라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주차 공간으로 인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거나 충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주차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는 배전함이나 환풍구 같은 도로 시설물 옆에서도 전동킥보드 주차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전함은 전기 공급 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확산할 위험이 크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킥보드가 이러한 시설물 옆에 주차될 경우 화재나 폭발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전기 시설물 인근 주차에 대한 명확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주차 위치 분석과 더불어, 전동킥보드가 특정 지점에 얼마나 오래 방치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과잉 공급 문제와 주차 관리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분 간격의 릴레이 방식 관찰조사를 통해 동일한 전동킥보드의 체류시간을 추적하였다. 구체적으로, 3명의 조사원이 15분 간격으로 순차 출발하여 관찰 경로 내 모든 전동킥보드의 ID를 기록한 후, 중복 관찰된 킥보드를 대조하여 해당 지점에서의 체류시간을 산출하였다.

[표 7]은 이용자 주차 전동킥보드의 체류시간 분석 결과이다. 평일과 주말 모두 2시간 이상 체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일 43.59%, 주말 63.64%가 2시간 이상 동일 지점에 방치되어 있었다.

[표 7] 전동킥보드 체류시간 분석 결과 : 이용자 주차

주차 유형	평일		주말	
	대수	%	대수	%
15분 이하	18	23.08	14	14.14
15분 ~ 30분 이하	8	10.26	2	2.02
31분 ~ 45분 이하	7	8.97	5	5.05
46분 ~ 1시간 이하	2	2.56	8	8.08
1시간 1분 ~ 1시간 15분 이하	3	3.85	5	5.05
1시간 16분 ~ 1시간 30분 이하	4	5.13	1	1.01
1시간 31분 ~ 1시간 45분 이하	2	2.56	1	1.01
2시간 이상	34	43.59	63	63.64
합계	78	100.00	99	100.00

특히 주말의 장시간 체류 비율이 평일보다 약 20%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말에 운영사의 재배치 빈도가 낮아 이용 후 회수되지 않은 킥보드가 장시간 방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동킥보드가 장시간 이용되지 않은 채 보도를 점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보행 공간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전동킥보드 체류시간 분석 결과 : 정기 배치 주차

주차유형	평일		주말	
	대수	%	대수	%
15분 이하	3	2.21	-	-
2시간 이상	133	97.79	-	-
합계	136	10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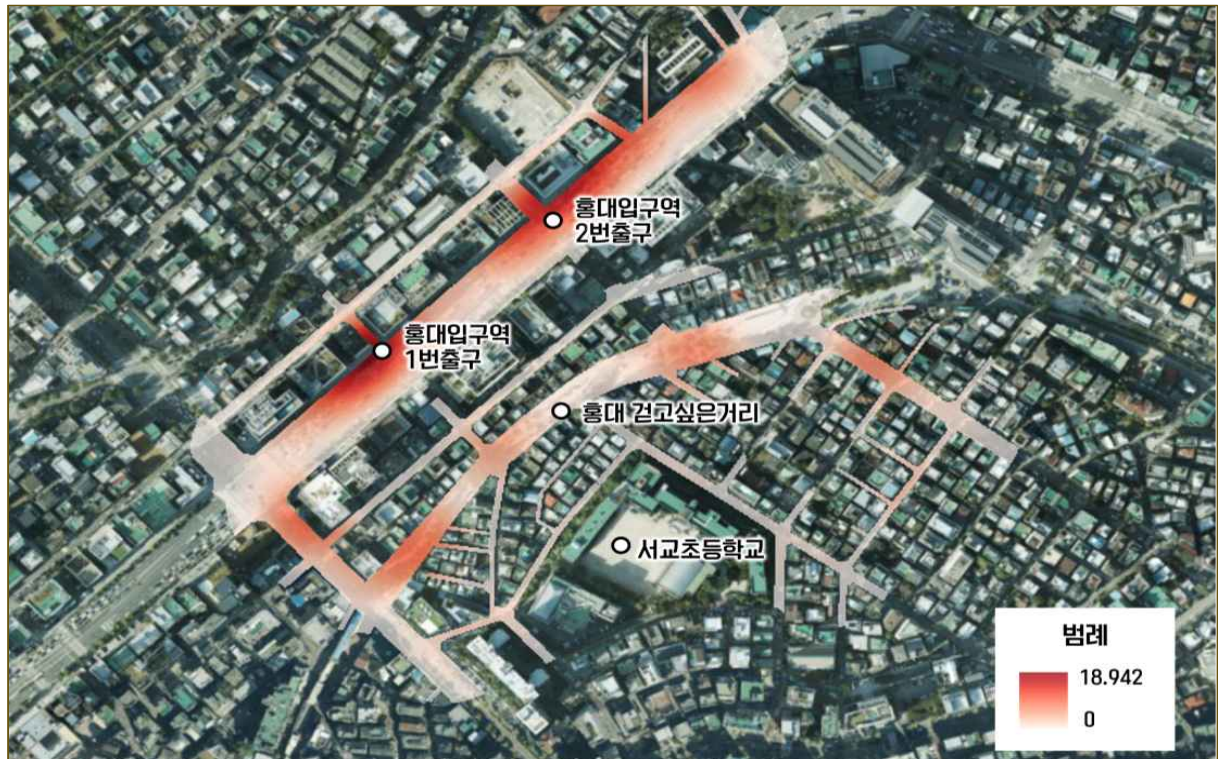
한편, 정기 배치 주차에 대한 체류시간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더욱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다.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정기 배치 주차란 운영업체가 수요 예측에 따라 특정 지점에 5대 이상의 전동킥보드를 정렬 배치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평일에 관찰된 정기 배치 주차 136대를 분석한 결과, 97.79%가 2시간 이상 체류하였으며 15분 이하 체류는 2.21%에 불과했다. 이는 이용자 주차(43.59%)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실제 이용 수요에 비해 전동킥보드가 과잉 공급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반면 주말에는 정기 배치 주차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높은 이용 수요로 인해 배치된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소진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국 평일에는 과잉 공급으로 인해 전동킥보드가 장시간 도로에 방치되어 보행 공간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대별·요일별 수요에 따른 탄력적 공급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이용자 주차와 정기 배치 주차가 동시에 집중되는 구역에서는 가용 보행 공간이 더욱 심각하게 축소될 수 있어, 운영사의 자율적 수거 의무화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앞서 분석한 주차 위치와 체류시간 특성을 공간적 관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자 주차 전동킥보드의 위치를 매핑한 후 커널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는 그 결과를 시각화한 것으로, 전동킥보드 주차의 공간적 집중도와 분포 패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관찰조사 대상지 내 전동킥보드 주차 밀집 지역의 실제 주차 행태 현황이다.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 어울마당로 보행자전용 도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서 전동킥보드가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시설 인근과 이면도로에서의 보행 방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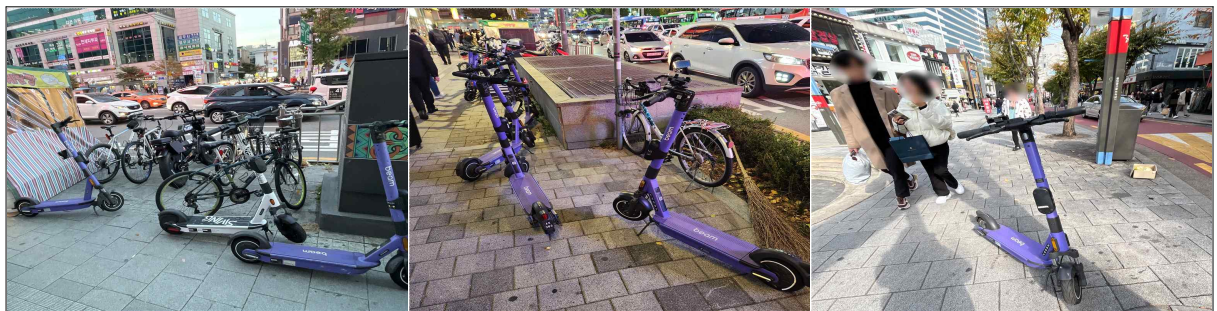
분석 결과, 홍대입구역 1·2번 출구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주차가 가장 높은 밀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보행자 전용도로인 걷고 싶은 거리에서도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직선 도로 구간보다 교차로와 골목 진입부와 같은 결절점(노드)에서 주차 밀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이용자들이 목적지 도착 후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하려는 경향과 결절점이 다음 이동 수단으로의 환승이 용이한 지점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홍대입구역 1·2번 출입구는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구역으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차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라스트 마일' 이동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며,

특히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이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환승 지점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역세권 출입구 인근이 가장 편리한 주차·승하차 지점이지만, 보행 동선 차단 및 혼잡 가중으로 인해 관리의 필요성이 가장 큰 공간이기도 하다.

[그림 2] 이용자 주차 커널밀도 분석 결과



[그림 3] 전동킥보드 밀집지역 내 주차행태 현황



이러한 주차 집중 패턴은 각 지점의 공간적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홍대입구역 출구 인근은 보도 폭이 협소함에도 대중교통 환승 유동량이 높아 전동킥보드 이용 후 즉각적인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구조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 즉시 전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법주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걷고 싶은 거리(어울마당로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 차량 진입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넓은 보행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나, 유동 인구 밀도가 높고 전동킥보드 주차를 억제할 물리적 시설이 부재하여 주차 시 보행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이면도로 골목 진입부는 배전함·가로수 등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어 시설물 기반 불법주차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좁은 보도 폭과 맞물려 보행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주차 집중 지점별로 공간적 조건이 상이한 만큼,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지점의 공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관리에서 환승 거점 공간이 정책적으로 핵심 관리 대상임을 보여준다. 지하철역 출입구와 같이 보행 수요가 집중되는 장소는 단순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용 주차구역 확대, 지하철역 부근 마이크로 모빌리티 허브 설치, 지오펜싱 기반 주차 유도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골목 진입부와 교차로와 같은 결절점은 보행자 시야 확보와 안전과도 직결되므로, 별도의 주차 금지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 홍대입구역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행태에 대한 관찰조사를 실시하고, 주차 유형, 주차 위치, 체류시간, 공간적 분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기간 동안 총 313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관찰되었으며, 이 중 운영사가 배치한 정기 배치 주차는 136대(43.45%), 이용자가 직접 주차한 사례는 177대(56.55%)로 나타났다. 정기 배치 주차는 평일에만 관찰되었으며, 주말에는 높은 이용 수요로 인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이용자 주차 유형을 분석한 결과, 불규칙한 형태의 주차가 평일 24.36%, 주말 22.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자전거 전용 거치대 주차, 보도 중앙 주차가 그 뒤를 이었다. 불규칙한 형태의 주차는 도시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차 위치 분석 결과, 도로 기반 주차는 46.33%, 시설물 기반 주차는 53.67%로 나타났다. 도로 기반 주차 중에서는 보도 중앙 주차(14.69%)가, 시설물 기반 주차 중에서는 자전거 전용 거치대 전후 주차(19.77%)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배전함이나 환풍구와 같은 전기 시설물 옆 주차(12.99%)는 화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체류시간 분석 결과, 이용자 주차의 경우 평일 43.59%, 주말 63.64%가 2시간 이상 동일 지점에 방치되어 있었다. 정기 배치 주차는 더욱 심각하여 97.79%가 2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일 과잉 공급 문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커널밀도 분석을 통해 공간적 분포를 살펴본 결과, 홍대입구역 1·2번 출구를 중심으로 주차가 집중되었으며, 교차로와 골목 진입부 같은 절절점에서 주차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동키토보드가 대중교통 연계 수단으로 활용되며, 환승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 주차가 집중되는 이용 패턴을 반영한다. 그러나 해당 구역은 즉시 건인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여 현행 규제의 실효성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연구 결과 논의 및 정책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유 전동키토보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명확한 주차 가이드라인 제시 및 주차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 정차, 보도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중앙으로부터 50cm 이상 거리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차·주차 금지 장소는 명시되어 있는 반면 올바른 주차 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불규칙한 형태의 주차가 평일(24.36%)과 주말(22.22%)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용자들이 무엇이 적절한 주차인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정된 주차구역, 차도 옆 수직 정렬 주차 등 합법적 주차 공간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지자체에서 설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주차장은 바닥에 선으로만 구역을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용자들이 불규칙하게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 충전소나 거치대 설치를 확대하여 물리적으로 정렬 주차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고정형 거치대 방식과 비정류장 형태의 절충안으로 하이브리드 도킹 시스템(Hybrid Docking System)인 티더링 주차(Tethered Parking) 방식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티더링 주차는 [그림 4]와 같으며, 정해진 주차구역에 케이블이나 줄로 전동키토보드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터키 등에서 운영 중이며 무분별한 주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둘째, 전동키토보드 수요 대응형 배치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정기 배치 주차의 97.79%가 2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일 전동키토보드 과잉 공급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주말에는 정기 배치 주차가 전혀 관찰되지 않아 요일별 수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 즉시 전인 서비스는 보행자가 불편을 느꼈을 때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찰조사 결과, 이용자 주차 전동킥보드의 경우 평일 43.59%, 주말 63.64%가 2시간 이상 동일 지점에 방치되어 있어, 보도 중앙·횡단보도·자전거 전용 거치대·배전함 옆 등 부적절한 위치에 주차된 기기 역시 장시간 방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신고 절차의 번거로움, 시스템 인지도 부족,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면서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과잉 배치된 전동킥보드는 [그림 5]와 같이 보행 공간을 장시간 점유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가용 주차 공간을 축소시켜 이용자들의 부적절한 주차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그림 4] 전동킥보드 티더링 주차 (출처: Skip, Lime)



[그림 5] 정기 배치 주차의 장기체류로 인한 불법 주정차 유발



따라서 운영업체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이용률을 파악하고, 평일·주말, 시간대별, 구역별 수요에 대응한 탄력적 배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2시간 이상 이용되지 않는 기기에 대해서는 자동 재배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과잉 공급 및 장시간 방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운영업체와 지자체 간 데이터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즉시 전인구역 확대 및 과태료 부과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는 보·차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장·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및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즉시 전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찰조사 결과, 자전거 전용 거치대 전후(19.77%), 배전함 및 환풍구 같은 시설물 옆(12.99%), 보도 중앙(14.69%), 턱을 낮춘 진출입로(3.95%) 등에서도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배전함 인근 주차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특성상 화재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어 안전상 우선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차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즉시 전인구역 또는 주차 금지 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현재 과태료가 전적으로 운영업체에만 부과되는 구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도크리스(Dockless) 방식의 특성상 주차 장소는 이용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부적절한 주차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경고 누적 시 이용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단일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찰조사로 인해 토지이용 현황이나 건축 환경이 상이한 다른 지역(주거지역, 업무지역 등)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현장 관찰에 기반한 기술적 분석의 특성상 주차 행태가 왜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는 한계가 있으며, 주차 유형 구분에서 전인 데이터 기반 분류로 인해 실제 단속되지 않은 불법주정차 유형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명확한 유형 구분이 어려운 주차행태(쓰레기장 주변, 건물 외벽 기대기 등)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했다는 한계도 있다. 향후 비교 사례를 추가하거나 분석 범위를 확장하고, 이용자 행태 설문조사와의 연계를 통한 인과 분석, 도로 공간 특성과 주차행태 간의 통계적 검증 등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대상지에는 간선도로(양화로), 집산도로(어울마당로),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다양한 도로 유형이 포함되어 있었다. 관찰조사 결과 이면도로에서는 좁은 보도 폭으로 인한 보행 방해가, 간선도로에서는 교통시설 인근 집중 주정차로 인한 교통약자 접근성 저해가 주요 문제로 나타나 도로 기능별 불법주정차

양상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다양한 지역에서 도로 기능별 체계적 비교를 통해 맞춤형 주차 인프라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동킵보드 주차 행태를 관찰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주차 유형, 위치, 체류시간, 공간적 분포 등 다각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규명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 결과가 전동킵보드 주차 개선 정책 수립 및 관련 제도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준현·이수기. 2024. 「서울시 전동킵보드 무단 주정차 유형별 영향요인 분석」. 국토계획 59(2): 104-120.
- 김수재·이경재·추상호·김상훈. 2021. 「공유 전동킵보드 이용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ITS학회 논문지 20(1): 40-53.
- 송정은·송윤아·이준기. 2023. 「킵보드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도착지 중심 스테이션 증설 알고리즘」.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8(2): 131-142.
- 안다운·이경환·고은정. 2021. 「공유 전동킵보드 이용환경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서울시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7(7): 3-11.
- 안다운·이경환. 2024. 「서울시 전동킵보드 견인 밀집구역의 지역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0(8): 171-181.
- 임동빈. 2023. 「서울시 개인형 이동수단(PM) 불법 주차의 시공간적 특성 분석: 마포구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상민·박기준·송기욱. 2021. 「계획된 행동 이론을 활용한 창원시 불법 주차의식 구조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5): 2473-2482.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Bai, Shunhua and Junfeng Jiao. 2020. "Dockless e-scooter usage patterns and urban built environments: A comparison study of Austin, TX, and Minneapolis, MN." *Travel Behaviour and Society* 20: 264-272.
- Berg Wincent, B., Jenelius, E., and Burghout, W. 2025. "Shared e-scooter parking regulation: Effects on rider attitudes, perceptions, and use."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199: 104527.
- Brown, A., Klein, N. J., Thigpen, C., and Williams, N. 2020. "Impeding access: The frequency and characteristics of improper scooter, bike, and car parking." *Transportation Research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4: 100099.
- Fang, Kevin, Asha Weinstein Agrawal, Ashley Hooper, Jeremy Steele, and John Joseph Hunter. 2018. "Where Do Riders Park Dockless, Shared Electric Scooters? Findings from San

- Jose, California.” *MTI Report* 1713-WP2. San José, CA: Mineta Transportation Institute.
<https://transweb.sjsu.edu/sites/default/files/1713-WP2-Scooter-Parking.pdf>
- Hemphill, R., MacArthur, J., Longenecker, P., Desai, G., Nie, L., Ibarra, A., and Dill, J. 2022. “Congested sidewalks.” *Journal of Transport and Land Use* 15(1): 481-495.
- James, O., Swiderski, J. I., Hicks, J., Teoman, D., and Buehler, R. 2019. “Pedestrians and e-scooters: An initial look at e-scooter parking and perceptions by riders and non-riders.” *Sustainability* 11(20): 5591.
- Klein, N., Brown, A., & Thigpen, C. 2023. “Clutter and Compliance: Scooter Parking Interventions and Perceptions.” *Active Travel Studies* 3(1). (DOI: <https://doi.org/10.16997/ats.1196>)
- Portland Bureau of Transportation. 2018. *New Mobility – Shared Electric Scooters* (TRN-15.01). Santa Monica: City of Santa Monica. 2024. *Second Shared Mobility Device Pilot Program Administrative Regulations*.
- Su, D., Wang, Y., Yang, N., & Wang, X. 2020. “Promoting considerate parking behavior in dockless bike-sharing: An experimental study.”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140: 153-165.
- Wei, W., Gu, C., & Yang, C. 2022. “Examining the Influence of Moral Norms on Dockless Shared Bicycle Users' Parking Behavior—An Exploratory Study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20): 13542.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

서평

유산 넘어 콘텐츠로: 과거로부터의 선물과 도시의 미래
『K-헤리티지, 매력 도시 디자인』, 이창근, 2026, 미다스북스
서봉만

유산을 넘어 콘텐츠로: 과거로부터의 선물과 도시의 미래

『K-헤리티지, 매력 도시 디자인』. 이창근. 2026. 미다스북스

서봉만*

1. 들어가며: 유산의 가치와 도시의 미래

AI와 탄소중립으로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은 요즘이다. 그 고민 사이로 지역과 도시의 새로운 미래 전략으로 문화유산과 콘텐츠를 탐색하는 논의도 활발하다. 이창근의 『K-헤리티지, 매력 도시 디자인』은 전략과 실행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유산과 콘텐츠를 활용한 산업화와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문화유산을 보존의 대상에 가두지 않고 경험과 산업, 그리고 도시 브랜드로 확장되는 자산으로 재정의하며, 그 확장의 회로를 ‘K-헤리티지’라는 개념으로 집약한다.

이 책의 중심 명제는 간결하다. 보존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저자에게 유산은 지켜야 할 과거의 흔적인 동시에, 오늘의 경험으로 다시 살아나 미래의 산업과 도시경쟁력으로 환류되어야 할 잠재적 자원이다. 이 명제는 “유산 → 데이터 → 경험 → 산업 → 다시 보존·재창조”로 이어지는 순환적 가치사슬의 형태로 구체화하며, 책 전체를 관통하는 분석의 골격을 이룬다. 저자는 K-헤리티지 가치사슬의 순환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술이 아닌 사람이 기획하고 창작하는 서사와 실행하는 사람의 전략적 사고를 잊지 않고 강조한다.

2. 논의의 구조: 유산에서 전략으로

책은 네 개의 부로 구성되며, ‘유산의 자산화 → 경험의 설계 → 산업 생태계로의 환류 → 문화의 전략화’라는 단계적 확장의 논리를 따른다.

첫째 파트 ‘유산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K-헤리티지의 개념과 가치사슬을 정초한다. 저자는 K-헤리티지를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의 경험으로 바꾸고, 그 경험을 미래의 자산으로 축적하는 구조”로 규정한다. 여기서

* 인천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선임연구위원(E-mail: bmseo@ii.re.kr)

디지털 기술은 유산이 품은 서사와 장소의 맥락적 의미를 재구성하고 유산의 의미를 현재의 언어로 번역하는 도구이다. 그 결과 관객은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된다. 관객의 경험 속에 포섭된 문화유산은 살아 있는 자산이 되고, 체류형 관광상품의 소비로 이어지고, 관광 지출과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만든다. 잘 설계된 경험을 통해 “장소가 사람을 소환하는 힘”을 갖는 것이 K-헤리티지가 도시를 움직이는 동력이며, 지역 브랜딩의 본질은 결국 장소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이야기로 현재와 연결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저자는 이 흐름의 출발점을 “유산의 아카이브화”에 두고, 아카이브를 경험가능한 콘텐츠로 번역하는 순간 산업의 문이 열린다고 본다. 국가유산은 국민의 일상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공 인프라로 자리매김된다.

둘째 파트의 핵심 명제는, 문화기술이 연구개발을 넘어 도시 운영과 산업 전략의 언어가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특히 문화기술이 콘텐츠의 제작,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개입하고 소비자가 체험하는 내용과 성격을 바꾸는 힘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문화기술은 콘텐츠와 소비자 간의 인터랙션의 성격을 ‘더 많은 기술’이 아닌 ‘더 깊은 참여’로 이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불러왔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 단발성 행사나 전시를 넘어서 산업화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조합과 인프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트코리아랩과 같이 예술의 창작과 제작 지원, 유통, 사업화, 창업으로 이어지는 예술 산업의 확장성을 실험하는 인큐베이팅 공간이자 허브의 조성하고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전과는 새로운 형태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서 문화에서 머무는 예술이 아닌 산업으로서 예술을 재생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저자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의 감동을 자산으로, 콘텐츠를 IP로, 도시를 브랜드로, 경험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제시하며 “문화는 소비가 아니라 전략이고, 유산은 미래 산업의 엔진”이라고 단언한다.

셋째 파트에서 저자는 헤리티지와 콘텐츠, 도시 경관과 상권, 시민의 일상과 관광객의 경험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도시는 무대가 되며, 전문가와 행정 담당자가 도시라는 무대를 기획하는 PD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제도적 차원에서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국가유산청 출범을 통해 국가유산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유산산업은 “유산이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가 경험이 되며, 경험이 다시 지역 경제와 브랜드로 환류되는 구조”로 규정된다. 국가유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는 실험의 무대를 제공하고, 민간은 창의적 해석과 기술을 적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는 민간과 지자체의 실험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저자는 여전히 유산을 알리는 행사나 전시가 아닌 ‘산업’ 활동의 일부로서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을 설계할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진다. 그리고 도시가 예술을 지속가능한 산업의 일부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큐레이션, 열린 참여구조, 브랜드 전략이 고루 맞물려 돌아가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저자는 제안한다.

마지막 파트에서 저자는 콘텐츠산업이 플랫폼과 팬덤 중심으로 재편되고 관광이 체험산업으로 진화한 상황을 진단하며, 예술·문화·유산 관련 사업을 콘텐츠·플랫폼·관광·산업 전략과 하나의 구조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문화정책이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작동해야 하며, 문화정책 예산을 ‘지원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보는 관점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 전략으로는 한국형 콘텐츠 IP 전략, 국가유산을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전략 자산으로 삼는 접근, 국가유산 마을기업 모델, 시민의 서사이자 도시 브랜드로 기능하는 축제 등을 제시한다. 저자는 국가유산과 순수예술이 AI 시대에도 대체 불가능한 원천 가치로 작동한다고 보며, K-헤리티지를 IP로 전환하고 다시 K-컬처로 확장하는 설계도, 곧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책은 “선언은 충분하고 남은 것은 실행”이라는 명제, 곧 문화는 전략이고 전략은 결과로 증명된다는 주장으로 매듭지어진다.

3. 비판적 검토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하듯이 유산의 산업화가 도시의 미래, 특히 소멸에 저항하는 지방 도시의 미래 전략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특히 유산의 산업화라는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화와 도시를 자본주의의 적극적인 요소로 포섭한 것은 이 책의 미덕이다. 그럼에도 세 지점에서 의문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첫째, 이 책의 핵심적인 가치사슬 구조는 공급자 관점에서 전개된다. “유산을 데이터로 만들고, 데이터로 경험을 설계하며, 경험을 산업으로 환류시킨다”는 정식에서 단계별 조작의 주체는 도시이고 기획자이며 기관이다. 정작 그 사슬의 종착점에서 경험을 수용하는 관객·소비자·시장은, 잘 설계된 공급에 반응하는 대상으로 다루어진다. 저자가 반복해 강조하는 ‘설계력’ 역시 철저히 공급자의 역량이다. 관객·소비자·시장 이 기술을 매개로 공급자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그 관계 역시 공급자가 주도하는 관계이다. 유산 산업화의 성공 사례는 어쩌면 소비자와 시장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저자는 공공이 실험과 초기 위험을, 민간이 확장과 고도화를 맡고 국가는 촉진자로 기능하는 분업 구조를 유산 산업화의 추진 방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은 사업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연한 입장이 필요하다. 사업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서는 민간이 실험과 초기 위험을 부담하고 공공이 확장과 고도화를 담당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물리적 인프라의 정비와 민간의 실험이 연계될 필요가 있는 경우, 민관협력 구조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촉진자 역할을 맡은 국가의 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여전히 유산 산업화는 단기적인 이벤트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이 지니는 소비 진작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산 산업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창업 기업의 발굴과 육성 그리고 혁신적인

공급 측면의 변화에 상응하는 소비시장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저자는 수원화성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총감독을 비롯해 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서 공공 주도의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유산 산업화를 해석해 내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유산을 매개로 한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다양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공의 주도적인 역할과 민간의 권유된 참여를 통해 산업화에 필요한 소비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요컨대 이 세 한계는 모두, 저자의 시선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산업으로 전환할 것인가'라는 공급의 문법에 정향(定向)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가치를 누가 포획하고, 공공과 민간이 어느 접점에서 책임을 주고받으며, 그 가치를 소비할 시장이 어떻게 길러지는가에 대한 해명이 보장될 때, 이 책이 표방하는 '전략으로서의 문화'는 비로소 선언을 넘어선 분석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의의와 과제

상기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K-헤리티지, 매력 도시 디자인』의 기여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 책은 그간 보존 행정의 범주에 간혀 있던 문화유산 담론을 도시브랜딩·관광·콘텐츠산업·국가전략의 언어로 끌어내어, 분절적으로 논의되어 온 영역들을 하나의 가치사슬로 묶어 내는 통합적 시야를 제공한다. 유산을 '면과 망'으로 바라보는 관점, 문화기술을 도시 운영의 언어로 재정의하는 시도, 문화 예산을 투자로 전환하자는 제안은 정책 담론에 유효한 의제를 던진다. 또한 추상적 당위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현장 사례를 자세하게 공유함으로써,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저자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결국 이 책이 도달한 지점은 하나의 완결된 이론이라기보다 건전한 미래지향적 문제의식에 가깝다. 저자가 선언한 대로 "남은 것은 실행"이라면, 실행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다음 과제는 공공 영역에서 진행되는 공급자의 변화에 상응하는 민간 영역의 혁신과 변화를 통한 수요의 형성이라는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다. 이 책은 그 빈자리가 어디인지를 역설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한국 문화유산 정책 담론의 진전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할 만하다.

『도시연구』 회보

- | 『도시연구』 발간연혁
-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활동
- | 『도시연구』 학술행사 보고

『도시연구』 발간연혁

발행일	통권	내용	비고
2007. 10. 15.	제1호	- 기획논단: 인천 경제 자유 구역(「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 방향」 외 3편) - 지역연구: 「버스-도시철도 간 물리적 환승 환경 평가 연구」 외 2편	
2008. 10. 15.	제2호	- 기획논단: 인천의 도시재생(「도시재생사업과 산업기능 확보방안」 외 2편) - 지역연구: 「소비자의 아파트 구매결정요인과 마케팅 전략」 외 1편	
2009. 10. 15.	제3호	- 기획논단: 국가경쟁력과 도시브랜드(「국가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의 도시브랜드 전략 방향」 외 3편) - 지역연구: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정태적·동태적 경영효율성 평가」 외 3편	
2010. 10. 15.	제4호	- 기획논단: 인천의 공간구조와 위상(「수도권의 공간구조 진단과 경인발전축의 정책방향 모색」 외 3편) - 지역연구: 「주거이동과 화물통행 패턴으로 본 인천의 공간구조」 외 2편	『인천연구』 제호 발행
2011. 10. 15.	제5호	- 기획논단: 인천광역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 전략(「보편적 복지 논쟁의 맥락과 쟁점」 외 3편) - 지역연구: 「도시립 보전관리를 위한 생태평가 방법의 적용」 외 1편	
2012. 9. 30.	제6호	- 기획논단: 도시재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인천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외 2편) - 일반연구: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비대칭성 검정」 1편	
2013. 9. 30.	제7호	- 기획논단: 해양도시와 해양문화(「인천의 해양도시적 성격과 해양역사상-고대를 중심으로」 외 1편) - 일반논문: 「인천시 육지지역 상록활엽수 식재현황 및 도입가능성」 외 2편	
2014. 9. 30.	제8호	기획논단: I. 원도심 재생 II. 해양 항만인프라 확충(「미국 보스턴 도시재생정책사례 및 시사점」 외 3편)	『IDI 도시연구』 제호변경

발행일	통권	내용	비고
		일반논문: 「새주소 지도를 이용한 인천도시공원의 입지적정성 평가」 외 2편	
2015. 9. 30.	제9호	- 기획논단: 지역자산의 가치와 미래(「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한 한남정맥의 환경적 가치 추정연구」 외 1편) - 일반논문: 「인천지역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분해」 외 4편	
2016. 9. 30.	제10호	- 기획논단: 도시와 가치 1 - 섬과 해양의가치화 방안(「인천 섬 갯벌에 대한 생태적 가치화 방안과 적용」 외 1편) - 일반논문: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한 인천광역시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 규명」 외 6편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8월 2일) - ISSN 변경
2017. 6. 30.	제11호	- 기획논단: 도시와 가치 2 -문화, 인물,예술(「인천 뷰티 라이프 스타일 산업 육성 방안」 외 1편) - 일반논문: 「인천시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요인」 외 6편	
2017. 12.30.	제12호	- 기획논단: 생활문화 활성화(「지역에 밀착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외 1편) - 일반논문: 「지방행정서비스와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외 6편	
2018. 6.30.	제13호	- 기획논단: 인구구조변화와 도시(「청년주거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별 사례연구」 외 1편) - 일반논문: 「인천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외 6편	
2018.12. 30.	제14호	- 기획논단: 기후변화와 도시(「정책통합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정책 변화 연구」외 4편) - 일반논문: 「동서독 지자체의 교류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외 3편	
2019. 6. 30.	제15호	- 기획논단: 사회혁신과 시민참여(「사회 혁신과 마을」 외 2편) - 일반논문: 「지방의원의 정치적 요인이 지역구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 분석」외 5편	
2019.12. 30.	제16호	- 기획논단: 평화교류시대와 도시정책(「인천 서해 공간의 평화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외 3편) - 일반논문: 「중국의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비교」 외 1편	
2020.6.30	제17호	- 기획논단: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 산업 정책의 제도화와 대안전략」 외 2편) - 일반논문: 「갈등의 공간적 전이와 다중스케일적 연구」 외 5편	

발행일	통권	내용	비고
2020.12.30.	제18호	- 기획논단: 여성과 도시(「코로나-19(COVID-19) 이후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 유형별 특성과 지원 방향 모색」 외 1편) - 일반논문: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 외 6편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11월 2일)
2021.6.30.	제19호	- 기획논단: 팬데믹과 도시 I(「복합적 차별과 코로나19 감염위험」 외 2편) - 일반논문: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외 4편	『도시연구』 제호변경
2021.12.30.	제20호	- 기획논단: 팬데믹과 도시 II(「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원순환 정책분석 연구」 외 1편) - 일반논문: 「테헤란로 오피스빌딩 입면 유형에 따른 전기에너지 사용량 특성」 외 7편	
2022.6.30.	제21호	- 기획논단: 이주민의 도시(「국제 이주자 경제 활동의 관계적 스케일」 외 1편) - 일반논문: 「마포·용산·성동(마용성) 현상의 이해」 외 6편	
2022.12.30.	제22호	- 기획논단: 초고령사회와 도시(「중고령자의 재취업 일자리 안정성과 영향요인 분석: 주된 일자리 경력특성을 중심으로」 외 1편) - 일반논문: 「자연복원 형태의 승기천 하수조 정비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 외 6편	
2023.6.30.	제23호	- 기획논단: 주거 안정과 주택정책(「일산신도시 도시설계 적용 특성 연구: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외 1편) - 일반논문: 「지방소멸 위기지역 유형화와 특성 분석」 외 6편	
2023.12.30.	제24호	- 기획논단: 도시와 대중교통(「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이용자 만족도 분석」 외 1편) - 일반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계층의 공공주택 입주 의향 분석: 수도권 무주택 청년계층을 중심으로」 외 7편	
2024.6.30	제25호	- 기획논단: 교육 대전환시대의 도시(「교육의 새로운 지평 탐색: 변혁의 시대 속에서 관광 분야의 전공선택 및 진로결정 효능감에 대한 통찰」 외 3편) - 일반논문: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군별 도시안전 위험요인 비교분석: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외 5편	
2024.12.30	제26호	기획논단: 도시정책과 빅데이터(「공간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천	

발행일	통권	내용	비고
		광역시 건물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공간분포 특성: 2013년과 2023년 변화를 중심으로」외 1편) • 일반논문: 「도심하천 둔치의 생물서식현황과 관리방안 제언: 대전광역시 갑천을 사례로」 외 6편	
2025.6.30.	제27호	• 기획논단: 도시와 기후재난(「사회적 결정요인 기반 열 건강 취약성의 공간 유형화와 도시개발 계획의 구조적 연계: 서울시 사례」 외 4편) • 일반논문: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공공공간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시 모아타운 5개소를 대상으로」 외 7편	
2025.12.30.	제28호	• 기획논단: 청년과 지역의 미래(「지방 빈곤청년 담론과 현실의 간극: 언론보도 토픽모델링과 당사자·활동가 인터뷰 분석」 외 2편) • 일반논문: 「(우수)건축자산 선정과 등록 기준의 쟁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세종시 건축자산 정책을 중심으로」 외 7편	
2026.6.30.	제29호	• 기획논단: 도시와 산업정책(「관광산업의 지역별 회복력 분석: 4R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외 2편) • 일반논문: 「공간 다이어트(Diet)를 위한 “도시비만지수(UOI)” 제안과 정책적 함의」 외 7편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활동

2026.1.1.~2026.6.30.

회차	일시	안건 및 결정사항
제1차 (임시)	2026.1.12.(월)	「제30회 도시연구세미나 발표 공모: 도시와 산업정책」 발표자 선정 심의
제1차 (정기)	2026.2.6.(금) 10:00~13:00	2026년 상반기 편집위원회 구성 - 학술지 운영체계 개편 및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윤리위원회 활동 보고 및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026년 상반기 도시연구 학술행사 개최 (기획책임: 정혜은, 민혁기 학술간사) 2026년 상반기(통권 제29호) 서평도서 및 필진 추천 2026년 하반기호(통권 제30호) 기획논단 주제선정 「편집 및 발간」 규정 개정
제2차 (정기)	2026년 6월 17일(수) ~ 6월 19일(금)	통권 제29호 기획논단/일반논문 게재편수 및 게재논문 확정

『도시연구』 학술행사 보고

2026.1.1.~2026.6.30.

회차	행사내용
제30회 도시연구세미나	[제30회 도시연구세미나] • 일시: 2026년 3월 27일(금) 10:00~16:00 • 주제: 도시와 산업정책- 전환기 도시경제의 지속가능성 탐색 • 인사말씀: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학술지 『도시연구』 편집위원장) [1부]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 세션 • 세션사회 : 민혁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학술간사) ■ 주제발표 1 : “노후 산업단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인천지역 사례 적용” • 발표 : 김민선(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강원대학교 RISE사업단 팀장) 이재수(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토론 : 서대현(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 주제발표 2 : “지역자산화가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형성에 미치는 로컬 커먼즈 연구” • 발표 : 문성남(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 토론 : 이기환(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 주제발표 3 : “전환기 도시경제의 지속성을 위한 기능적 공간조성 연구” • 발표 : 박지연(前,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 초청연구원) • 토론 : 김진희(인천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부연구위원) [2부] 전문가 및 중견연구자 세션 • 세션사회 : 정혜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학술간사) ■ 주제발표 1 : “혁신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신경건축 UX 공간전략” • 발표 : 장재범(브레인디자인경영연구소 대표) • 토론 : 안내영(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 주제발표 2 : “지역 특화자원 기반 산업단지-정주 연계 지역발전 모델 연구: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와 주변마을사례” • 발표 : 이민주(제주연구원 도민행복연구실 부연구위원) 정혜윤(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과장) • 토론 : 최덕철(성남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연구위원)

『도시연구』 규정

- |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 | 『도시연구』 논문심사 규정
- | 『도시연구』 연구윤리 규정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KOREAN JOURNAL OF URBAN STUDIES

2007년	3월	12일	제정
2008년	4월	25일	개정
2008년	8월	20일	개정
2011년	5월	6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2012년	12월	17일	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4월	4일	개정
2016년	6월	10일	개정
2017년	2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20일	개정
2021년	3월	2일	개정
2022년	8월	11일	개정
2026년	2월	11일	개정

I. 『도시연구』의 성격과 구성

1. 인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도시연구』라 칭한다.
2. 『도시연구』는 연구원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로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은 창의적인 연구 결과 및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동향·전망을 학술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을 말한다.
3.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도시연구』의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II. 논문투고 및 게재절차

1. 원고는 상시접수하며, 접수 일자(원고가 본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2. 논문은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3. 투고자는 온라인투고시스템 상의 투고신청서에 논문제목, 목차, 주저자의 이름, 소속 및 직급/직위, 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와 함께, 원고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 뒤에는 참고문헌과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4. 교신저자(해당 원고 관련 문의에 응할 수 있는 공동저자)가 별도로 있다면, 교신저자의 이름, 교신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 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한다.
5. 접수된 원고 중 본지 투고 규정 및 원고작성 방법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투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도시연구』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Ⅲ. 논문의 기본요건

1. 투고자는 『도시연구』의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 파일, 논문투고신청서, 문헌 유사도 검사결과 확인서, 연구 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논문투고 신청서에는 논문제목(한글·영문), 필자명(한글·영문), 소속기관과 직위(한글·영문), 주소(주택 및 직장), 전화번호(E-메일 주소 포함)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였는지 확인한다.
2.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출간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원고는 연구원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연구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다음의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논문의 내용은 제목(한글), 저자명(한글), 차례,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주제어, 영문초록(Abstract), 영문주제어(Keywords)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5. 주제어는 5개 이내로 한정한다.
6. 논문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한다.
7. 서평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40매 이내로 한정한다.
8. 원고 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초록 및 주제어는 모두 국문과 외국어(영어)로 표기해야 하며, 국문 초록은 600자(200자 원고지 3매) 이내, 영문초록은 200단어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10. 모든 원고는 본지가 제공하는 원고 작성용 한글 양식 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Ⅳ. 논문 구성요소별 작성요령

1. 저자표기 및 저자약력작성

- 1) 국문제목 밑에 국문저자명을 기재한다.
- 2) 저자가 1인일 경우, 국문저자명의 오른쪽 위에 *를 입력하고, 각주에 소속 및 직급/직위를 표기한다.
저자가 복수일 경우, 주저자가 맨 앞에 오도록 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어 구분한다(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 기입 가능)
- 3) 저자의 약력에는 저자의 현재 소속과 부서(또는 학과), 직위(또는 직급)를 순서대로 작성하고, 교신저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1인 저자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E-mail: paper@ii.re.kr)

(2) 2인 이상 저자(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은 경우)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교신저자(E-mail: paper@ii.re.kr)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3) 2인 이상 저자(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른 경우)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교신저자(E-mail: paper@ii.re.kr)

2. 내용목차의 번호는 I. 1. 1) (1) ①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3. 표와 그림에는 [표 1], [그림 1] 등과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표 제목은 해당 표의 상단 중앙에 맞추기로, 그림 제목은 해당 그림 하단에 중앙 맞추기로 표기해야 한다. 표와 그림에 있는 글자와 숫자는 선명해야 한다.

4. 본문의 인용문헌과 각주,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인용문헌

- (1) 본문의 인용문헌은 저자의 이름, 출판년도, 인용한 쪽을 적어 표시한다. 국문저자명은 성과 이름을 모두 밝히고, 영문저자명은 성만 표기하며, 중국과 일본 등 한자 표기 저자명은 국문저자명의 표기 방법에 준한다.
- (2)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며, 혼란을 주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3)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 (4)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年/月月/日日(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年/月月),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한다.
- (5) 표기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단독연구 : 손정목(2007)에 따르면 …, Smith(1992, 94)는…, 이들의 연구(김용창 1997; 송도영

2009, 96)는 …, …라고 보고 있다(윤호영 2001; 조한혜정 2011).

- ② 2인연구: 서현진·민병일(2001)에 의하면 …, Abrams and Jajodia(1992)는 …, …라고 주장하고 있다(Gilbert and Gubar 1978, 1-25; Murphy 1988, 39-52).
- ③ 3인 이상 연구 : 김만중 외(2001)는 …, Avram et al.(2009)는 …, 라고 지정한 바 있다(Farmwinkle et al. 1985, 233).
- ④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 …(동아일보 2017/2/15). …(월간경향 2009/2, 233)

2) 각주

- (1) 본문 중에 부연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 어깨에 일련번호(예: 1), 2), 3), …)를 붙이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 (2) 각주에는 가능한 한 인용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지 않는다. 자료출처는 본문에 인용표시를 한 뒤 참고문헌에 기재해야 한다. 본문에 인용표시를 하기 힘들 경우 각주에 출처를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인용자료를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참고문헌

- (1) 국문 참고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열거한 후 동양문헌을 기재한다. 그다음 서양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후, 신문기사, 인터넷 웹 검색자료를 기재한다.
- (2) 단행본의 경우 저자, 출판연도, 서명, 페이지(필요한 경우), 출판사의 순으로 기록하고, 국문 및 동양문헌의 서명에는 겹낫표(『』), 서양문헌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국문 보고서 및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제목에 홑낫표(「」)를 표기한다.
- (3)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순서(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에 따라 연대 뒤에 a, b, c …를 기입한다.
- (4)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 (5) 저자가 복수일 경우 모든 저자를 다 밝힌다.
- (6) 인터넷 검색 자료는 제작자, 제작연도, 주제명, 웹 주소와 검색 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웹에 공개되어있는 전자책은 서명 옆에 “[eBook]”을 표기한다.
- (7) 표기 예는 다음과 같다.

① 국문 단행본 및 보고서, 논문

김석철. 2011. 『건축과 도시의 인문학』. 서울: 돌베개.

홍익표·진시원. 2015. 『세계화 시대의 정치학』. 서울: 오름.

조영무·최용환·이준호. 2017.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경기연구원.

인천광역시. 2016. 「인천 미래 성장동력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

김미향. 2006. 「자아탄력성 증진 훈련이 중학생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옥련·허철수. 2011. 「청소년기 부모의 자녀교육과 갈등 척도 모형 연구」. 상담학연구 12(6): 2007-2028.

② 영문 단행본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③ 영문 논문

Jilberto, Alex E. Fernandez. 1991. "Military Bureaucracy, Political Opposition, and Democratic Trans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8(1): 32-65.

Partz, M., Mentro, J. P., Lauter, P., Scarcelli, T. A., Alexandrowicz, M. P., Banshi, P. P., ...Sauls, C. E. 2008. "A qualitative study of modern Native American dance." *Journal of Dance Methodology* 12(3): 12-21.

④ 번역서

베버, 막스(Weber, Max). 1990. 『유교와 도교』. 이상을 역. 문예출판사.

클레그 ·히긴스 ·스파이비(Clegg, Stewart R., Winton Higgins, and Tony Spybey). 1994. "경제문화: 포스트 유교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유식·김혁래·박길성·유홍준 편. 『신경제사회와의 이해』. 역사비평사. 195-210.

Weber, Max. 1951(1920). *The Religion of China*, translated by Hans H. Gerth. New York: Free Press.

⑤ 신문기사, 주간지, 월간지 등

이은상. "여성의 사표 신사임당." 동아일보. 1993.7.17: 5면.

안병만. "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과 시련." 월간중앙. 1991(8): 11-18.

⑥ 인터넷 웹 검색자료

"내향 재개발 지지부진 '상상플랫폼' 우선추진." 경인일보. 2016.10.3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device=pc&key=20161030010009866>(검색일: 2017년 7월 20일)

오동근. 1996. "한국 도시정책의 미래." <http://www.idi.re.kr/researchRPT/list.do?tab=7>(검색일: 1998년 10월 20일)

"연속간행물 내용목차 서비스." <http://www.oclc.org/oclc/promo/512alrt/7512alrt.htm>(검색일: 2003년 2월 10일)

김영범·신동호. 2001. 『북한 문예론』[eBook]. 서울: 톨스토이. <http://www.tolstoe.com/newebook/mall/ebookdetailview.asp?contentsID=154>(검색일: 2001년 11월 8일)

Philip B. Kurland and Ralph Lerner, eds. 1987. *The Founders' Constit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ttp://press-pubs.uchicago.edu/founders/>(accessed February 28, 2010)

Kirsi Peltonen, Noora Ellonen, Helmer B. Larsen., and Karin Helweg-Larsen. 2010. "Parental Violence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9(11): 813-822. doi: 10.1007/s00787-010-0130-8

5. 초록 작성법

- 1) 국문초록의 경우 국문제목-국문저자명-국문요약본-국문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 2) 영문초록의 경우 영문제목-영문저자명(성, 이름)-영문요약본-영문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6. 사사표기 방법

- 1) 사사(謝辭) 표기 및 연구비 출처는 논문 첫 페이지 제목 각주에 필자의 소속과 직위에 앞서 기재한다.
- 2) 논문의 투고접수일과 심사수정일, 게재확정일은 논문 첫 장 각주에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한다.

V. 기타사항

1. 본문 속에서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땐 풀어쓰고 그다음부터는 약어를 사용해도 된다.

예)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는 1979년 3월 창설되었다. EMS는 현재 유럽공동체의

...

2. 필자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을 지칭할 때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필자의 이름을 적어 밝혀야 한다.

3. 국문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1) 한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예) 지체주의(肢體主義)

- 2) 외래어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번역어를 사용하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번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 3)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마오쩌둥(毛澤東), 세보르스키(Adam Przeworski)...

- 4) 외국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필요 시 간략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예) 뉴욕, 치앙마이, 타간로크(Tagano, 러시아 남서부의 로스토프 주에 위치한 도시)

VI. 발간

1. 원고교정

- 1) 편집위원회는 오타자, 비문(非文), 논리 전개의 오류 등을 교정하거나,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게재 논문 및 순서 결정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심사가 모두 종료된 후, 다음의 주제 분류와 순서를 따르며, 같은 주제분류 내에서는 심사 결과 등급 순을 따라 게재순서를 정한다.

(1) 도시계획, 도시환경

(2) 문화관광

(3) 행·재정, 교육, 사회복지

(4) 지역경제

(5) 교통물류

(6) 동북아, 국제

- 2)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의 게재편수는 연간발간계획에 의거하며, 기획주제에 부합하는 일반논문을 기획논문으로 조정할 수 있다.
- 3) 발간계획의 게재편수를 초과할 경우, “게재”로 판정받았더라도, 논문 게재를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된 논문은 저자와 협의하여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3. 원고료 지급

- 1) 채택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단, 원고료는 실제 게재된 후에 지급하고, 게재 당시의 연구원 일반 예산-학술지 발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행 횟수와 시기

- 1) 본지는 1년에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2)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정한다.

5. 저작권

- 1) 『도시연구』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KOREAN JOURNAL OF URBAN STUDIES

2007년	7월	15일	제정
2010년	5월	20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2012년	12월	17일	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4월	4일	개정
2016년	6월	10일	개정
2017년	2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20일	개정
2018년	2월	1일	개정
2019년	2월	15일	개정
2020년	2월	7일	개정
2021년	3월	2일	개정
2022년	8월	11일	개정

I.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연구원 내·외 인사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도시연구 분야의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약간 명의 해외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학술간사와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II. 임무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편집, 발간 등 『도시연구』의 발행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또한 『도시연구』의 편집 및 발간 규정, 편집위원회 회칙 등 『도시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제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III.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의 선출기준

1. 편집위원장은 인천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인천연구원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의 구성은 특정 지역 및 전공분야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4. 학술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IV. 편집위원장 및 위원, 간사의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모집, 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발간 등 『도시연구』의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 편집위원은 『도시연구』 발행의 기획,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추천 및 추인, 심사 결과의 추인 등의 권한을

가진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개인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4. 학술간사는 기획논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공모전, 학술행사 등의 주제를 기획하고, 해당 분야 필진 추천 및 섭외를 담당하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투고원고 접수, 편집위원장이 최종 승인한 심사결과의 통보, 『도시연구』의 출간·배포, 원고 게재료 및 심사로 지급서류 작성 등 『도시연구』발간에 따른 제반 회계 및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V.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 위원장과 위원, 학술간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편집위원을 추천받은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편집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단 임기는 잔여임기에 한해 편집위원으로 활동한다.
3. 위원장의 부재가 생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며, 원장의 허락을 통해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단 임기는 잔여임기에 한해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한다.

VI. 편집위원회 회의

1. 편집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의 결석시에는 출석위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진행한다.
3. 편집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위임 포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해외 거주 편집위원은 회의 참석이 어려우므로 개의를 위한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VII. 회의비 지급

1. 편집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의견서를 제출한 외부 위원(인천연구원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시연구』 논문심사 규정

KOREAN JOURNAL OF URBAN STUDIES

2008년	9월	10일	제정
2011년	5월	6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2012년	12월	17일	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4월	4일	개정
2016년	6월	10일	개정
2017년	2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20일	개정
2017년	12월	4일	개정
2018년	11월	15일	개정
2020년	2월	7일	개정
2021년	3월	2일	개정
2021년	8월	4일	개정
2022년	2월	17일	개정
2024년	8월	22일	개정

I. 심사대상

1. 『도시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도시리포트 및 서평과 같은 비논문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한다.

II. 심사절차

1. 1차 심사: 투고된 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적합성 검토를 하여 투고된 논문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하면 1차 심사 전에 반려할 수 있다.
2. 재심사: 1차 심사 결과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1차 심사위원이 저자의 원고 수정본을 재심사한다.
3. 논문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 총평과 함께 심사 결과(A, B, C, D)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요구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 결과 통보 및 수정요구서’를 즉시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논문심사 종합판정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90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수정논문을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그 사유의 합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후 수정논문의 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
6. 심사위원 평가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되었을 경우, 필자가 수정한 논문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7. 재심사의 경우, 동일한 심사 절차 과정에 의해 심사를 진행한다. 단, 심사판정이 심하게 엇갈리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8.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의제기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의 동의를 얻어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원래 심사 결과를 적용한다.

Ⅲ. 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 중에서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인천연구원 직원이 투고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연구원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은 3인을 위촉하며, 논문의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각각에 대하여 익명으로 처리한다.
5.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경우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한다.
6. 논문을 심사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Ⅳ. 논문심사 기준

1.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되 본지의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에 맞춰 다음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본지 투고 규정 및 원고작성 방법의 준수 여부
 - 주제의 독창성
 - 연구 방법의 적절성과 연구자료의 신뢰성
 - 논문의 학술적 또는 정책적 기여도
 -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타 도시, 국가의 연구
 - 논문 및 체제의 일관성
 - 표·그림·사진·지도·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
 - 선행 연구의 검토
 - 국문·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 연구윤리 준수의 적절성
2.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Ⅴ. 심사위원의 익명성

1.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저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개진할 수 있다.

Ⅵ. 논문심사 판정 기준

1. 논문심사의 판정은 1차 심사결과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후재심’, ‘게재 불가’의 4가지로 판정하며, 2차 심사결과는 ‘게재’, ‘게재 불가’의 2가지로 판정한다.

■ 1차 심사

1) 게재가(평점 평균 3.3점 이상)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A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2인이 A로 평가하고, 1인이 B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2인이 A로 평가하고, 1인이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A로 평가하고, 2인이 B로 평가한 경우

2) 수정 후 게재(평점 평균 3.0점)

-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A로 평가하고, 1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각각 A, B,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B로 평가한 경우

3) 수정 후 재심사(평점 평균 2.0점 이상 2.7점 이하)

- 심사위원 3인 중 2명이 B로 평가하고, 1인이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각각 A, B,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A로 평가하고, 2인이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각각 A, C,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B로 평가하고, 1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B로 평가하고, 2인이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각각 B, C,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A로 평가하고, 2인이 D로 평가한 경우

4) 게재 불가(평점 평균 1.7점 이하)

-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C로 평가하고, 1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B로 평가하고, 2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C로 평가하고, 2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D로 평가한 경우

■ 2차 심사

1) 게재가(평점 평균 3.0점 이상)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A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2인이 A로 평가하고, 1인이 D로 평가한 경우

2) 게재불가(평점평균 2.0점 이하)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A로 평가하고, 2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D로 평가한 경우

※ 1차 논문심사 판정 기준표

유형 번호	평가 결과			총점	평균	판정	비고
1	A	A	A	12	4.0	게재가	게재 확정
2	A	A	B	11	3.7		
3	A	A	C	10	3.3		
4	A	B	B	10	3.3		
5	A	A	D	9	3.0	수정 후 게재	필자가 논문을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고 게재
6	A	B	C	9	3.0		
7	B	B	B	9	3.0		
8	B	B	C	8	2.7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필자는 논문을 수정하고, 수정논문과 수정 사항 개요를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3인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평가 결과 평점의 평균 3.0점 이상이면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후 게재
9	A	B	D	8	2.7		
10	A	C	C	8	2.7		
11	A	C	D	7	2.3		
12	B	B	D	7	2.3		
13	B	C	C	7	2.3		
14	B	C	D	6	2.0		
15	C	C	C	6	2.0		
16	A	D	D	6	2.0	게재불가	
17	C	C	D	5	1.7		
18	B	D	D	5	1.7		
19	C	D	D	4	1.3		
20	D	D	D	3	1.0		

※ 2차 논문심사 판정 기준표

유형 번호	평가 결과			총점	평균	판정	비고
1	A	A	A	12	4.0	게재가	
2	A	A	D	9	3.0		
3	A	D	D	6	2.0	게재불가	
4	D	D	D	3	1.0		

Ⅶ. 소요기간

1. 논문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후 10일 이내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투고논문이 『도시연구』의 성격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2주 내로 기간을 연장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1차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후로부터 2주 이내로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하에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거절, 심사 지연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본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재심사: 심사위원은 재심사를 의뢰받은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하에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연락 두절, 사망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본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논문 수정 보완: 1차 심사 결과 ‘게재 불가’를 제외한 수정 보완 요구 사항이 있는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 보완 의뢰를 받은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 논문은 수정결과표와 함께 기존 심사자 3인에게 확인 요청을 보내 원고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한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5. 논문 수정 확인: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다시 제출한 논문이 수정보완 요구대로 수정되었는지 확인한다. 1차의 경우 10일 이내에, 2차 이후에는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토의견서 작성이 지체될 경우, 투고자에게 일정을 통지하고 연장할 수 있다.

『도시연구』 연구윤리 규정

KOREAN JOURNAL OF URBAN STUDIES

2009년 4월 15일 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4월 4일 개정
 2017년 7월 20일 개정
 2019년 12월 20일 개정
 2021년 3월 2일 개정
 2022년 2월 17일 개정
 2022년 8월 11일 개정

I. 연구윤리 규정 제정 배경

제1조(제정 배경)

인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가 능동적으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술지 『도시연구』를 발간한다. 『도시연구』의 발간은 도시정책 관련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성과를 소개함으로써 지역 아카데미즘의 기초를 마련하고 인천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또한 『도시연구』 연구윤리 규정의 제정은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위하여 『도시연구』의 편집위원은 물론 연구논문의 저자와 평가자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수준을 명백히 밝혀줌으로써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함이다.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으로 지켜져 오고 있는 규정들을 정리한 것이지만, 모든 관련자에게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편집에 대하여 연구원이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2조(제정 및 적용)

이 규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을 준용한 것으로 연구원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성과물의 연구영역에 맞게 제정되었으며, 제정일로부터 연구원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성과물과 그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연구원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II. 연구논문 윤리규정

제3조(사회적 역할과 책임)

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 활동을 하여야 하며, 자연환경의 복원, 창출, 보호 관리 등의 연구활동이 사회 공익적 책임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 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4조(기본 연구윤리)

연구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활동 수행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제5조(보편성의 원칙)

연구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을 수 없으며,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6조(전문가로서의 품위유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제7조(법령의 준수)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명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8조(연구대상의 존중)

(자연 환경 연구) 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자연환경의 복원, 창출, 보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인간 대상 연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 통과를 권장하며,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서면 동의서 및 기관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연구 자료의 기록, 보존)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최초단계에서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보존한다.

제10조(저자 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 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

제11조(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제12조(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연구 및 지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연구의 독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자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

제13조(연구환경 조성)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 자유, 공정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적극 참여한다.

제14조(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 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한다)이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변조: 연구데이터, 실험과정 등을 조작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자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5. 학문 분야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Ⅲ. 윤리위원회**제16조(구성)**

윤리위원회는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해 편집위원 5인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 위원장 1인을 두며, 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윤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운영과 권한)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대상 논문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칙 위반보고가 있거나 제보가 있는 경우 보고자, 제보자에게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의혹이 있는 대상자에게 그에 대한 진술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제보나 보고가 없는 경우에도 윤리규칙 위반의 의혹이 있는 경우 그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의혹이 있는 대상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18조(절차)

투고논문이나 간행된 논문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 또는 부정행위 제보자(이하 ‘제보자’라 한다)가 위원장에게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성에 대해 검증하며, 예비조사에서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 위원장은 제보를 받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현저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수렴되면, 아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 1)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해당 연구자(이하 ‘해당 연구자’라 한다)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 2)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 3)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조사의 절차를 진행한다.
 - 4)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5)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본조사: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한다.
 - 1) 외부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위원회 소집 전에 제보자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알려서 제보자가 심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해 심사위원을 재위촉한다. 위원회에는 해당 논문과 제보내용,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논문의 연구윤리성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의견서를 통보하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제보자나 해당 연구자가 심사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 제기서류, 해당 연구자의 이의 제기서류를 위원들이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3. 판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재소집하여 1회에 한해 직접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내린다.

제19조(제척)

윤리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피조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자격이 일시 상실된다.

제20조(제재조치)

인천연구원 원장은 윤리규칙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투고 논문 및 그 저자에 대해서는 그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게재 이후 위반판정이 밝혀질 경우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공식 삭제한다.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3. 제재조치의 결과에 대하여는 대상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인천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보호)

윤리위원회 위원 기타 윤리규칙 위반 여부의 조사·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에는 조사의 대상이 된 의혹 내용이나 피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Ⅳ. 저자 윤리규정

제22조(표절, 위조, 변조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연구 업적의 명기)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논문의 순서는 저자의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하며 단순히 특정 직책 또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24조(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제25조(재투고)

『도시연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다만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연구의 방법’, ‘자료의 해석’, ‘논리전개방식’ 등 상당 부문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투고를 인정한다.

제26조(인용 및 참고 표시)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주석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디까지가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27조(기본자세)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논문 투고자의 인격과 양심 및 전문성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8조(형평의 원칙)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 투고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출신 등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소성을 배제하여 동등한 시각을 견지하여야 한다.

제29조(심사의뢰)

심사의뢰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 투고자와 친분이 있거나 혹은 적대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제30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투고자의 인적사항 및 심사위원 등에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VI. 논문심사자 윤리규정

제31조(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2조(저자의 독립성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되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33조(중복심사)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또는 중복심사중인 경우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4조(심사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심사자는 심사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전에 심사논문의 내용을 타 연구에 인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4월 15일 제정되었으며, 이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3년 9월 16일부터 발생한다.
3.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4년 4월 4일부터 발생한다.
4.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7년 7월 20일부터 발생한다.

5.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발생한다.
6.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21년 3월 2일부터 발생한다.
7.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22년 2월 17일부터 발생한다.
8.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에 따른다.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KOREAN JOURNAL OF URBAN STUDIES

편집위원장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김선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김윤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종형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민경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민혁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학술간사
박선주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덕상 인천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
서봉만 인천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유해연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윤갑식 동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윤혜영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순환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세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혜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학술간사
조성윤 인천연구원 환경안전연구부 연구위원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편집간사

김혜영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 전임행정원

통권 제29호 **도시연구** Korean Journal of Urban Studies

발행 2026년 6월 30일
발행인 최계운
발행처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98
전화 032-260-2775
홈페이지 www.ii.re.kr

e-ISSN 2765-7256

Korean Journal of Urban Studies

NO. 29

JUN 2026

Special Section

An Analysis of Regional Resilience in the Tourism Industry: Applying the 4R Framework

Kim, Ah-jin·Yoon, Tae-Hwan

The Impact of Urban Commercial District Structure on Tourism Performance in Incheon: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ists at the Administrative Dong Level

Ko, Hyeon-Jong·Jang, Ye-Won

Effects of the COVID-19 Social Distancing Policies on the Exit and Entry of Stores: A Case Study of Incheon, South Korea

Ok, Wooseok·Park, Han-jin·Kim, Min-woo·Park, Dong-hoon

A General Section

Propos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Urban Obesity Index” for Spatial Diet

Kwon, YongSeok

From Memorial Landscape to Cultural Capital: Recontextualizing Memorial Places in Central Berlin

Chung, Sungyou·Kim, Sujin

How is Incheon’s Urban Identity Forged in the Museum?: A Case Study of the Korea Emigration Museum

Jung, Ji-Eun·Son, Dong-Hyuk

The Effect of Household Income on Young Adults’ Social Networks through Leisure Activities: Regional Differences

Kim, Jimin·Oh, Daeun

A Study on Living Lab-Based Strategies for Cultural City Revitalization: Focusing on Uijeongbu

Kang, Bora·Bae, Young-Hyeon

Analyzing Life-Course Factors on Health Trajectories: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ituations in Childhood and Old-Age

Do, HwaJeong

The Role of Universities in Enhancing Regional Value: An Analysis of Regional RISE Master Plans

Lee, Suyeon

An Empirical Analysis of Shared E-Scooter Parking Behavior: A Case Study of the Area around Hongik University Station in Seoul

Ahn, Da-Eun·Lee, Kyoung-Hwan

Book Review

THE INCHEON INSTITUTE

98, Simgok-ro, Seo-Gu, Incheon, Korea 22711

phone 82-32-260-2775